

11-1352000-000526-10

정책보고서 2015-67



2014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강은나·이소영·오신희·기재량

【책임연구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 배치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기재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은 2000년 이후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겪으면서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약화, 더 나아가 경제의 저성장과 국가재정의 위기 등의 문제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해당 정책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에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에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적과 예산집행률을 분석하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회변화나 정책체감도, 그리고 전문가의 정책평가 등을 수렴하여 2014년도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과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주신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와 해당 부처의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을 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에 대한 의견을 주신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성과평가 개요	1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평가 대상	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41
제4절 평가 절차	6
제5절 평가 결과 활용	71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9· 1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1 2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1 7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11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9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 평가)	971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8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99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712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722
제4장 국민 및 전문가 평가	8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3
제2절 전문가 참여 평가	8
제5장 국제비교 평가	2
제1절 저출산 분야	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8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

제6장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592
제1절 총괄	297
제2절 저출산 분야	29
제3절 고령사회 분야	9
제4절 성장동력 분야	9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723
제1절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선방안	923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143
참고문헌	33
부 록	355

표 목차

〈요약표 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1
〈요약표 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일반과제 및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2
〈요약표 3〉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반과제 예산집행률	3
<요약표 4>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개선	0..... 1
〈표 1- 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4..... 1
〈표 2- 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3..... 2
〈표 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4..... 2
〈표 2-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5..... 2
〈표 2- 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7..... 2
〈표 2- 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9..... 2
〈표 2- 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0..... 3
〈표 2- 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1..... 3
〈표 2- 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실적	4..... 3
〈표 2- 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6..... 3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7..... 3
〈표 2-11〉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8..... 3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9..... 3
〈표 2-13〉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1..... 4
〈표 2-1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3..... 4
〈표 2-1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3..... 4
〈표 2-16〉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5..... 4
〈표 2-17〉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6..... 4
〈표 2-1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7..... 4
〈표 2-1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8..... 4
〈표 2-20〉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9..... 4
〈표 2-2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0..... 5
〈표 2-2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2..... 5
〈표 2-2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3..... 5
〈표 2-24〉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4..... 5
〈표 2-25〉 취학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6..... 5
〈표 2-26〉 드림스타트업 활성화 추진실적	7..... 5
〈표 2-27〉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8..... 5
〈표 2-28〉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9..... 5
〈표 2-29〉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0..... 6
〈표 2-30〉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1..... 6
〈표 2-31〉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3..... 6
〈표 2-3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4..... 6

〈표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5..... 6
〈표 2-34〉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6..... 6
〈표 2-35〉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실적	6..... 6
〈표 2-36〉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9..... 6
〈표 2-37〉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0..... 7
〈표 2-38〉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추진실적	0..... 7
〈표 2-39〉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4..... 7
〈표 2-4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5..... 7
〈표 2-41〉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8..... 7
〈표 2-42〉	중·고령자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2..... 8
〈표 2-4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3..... 8
〈표 2-44〉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5..... 8
〈표 2-4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6..... 8
〈표 2-46〉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0..... 9
〈표 2-4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4..... 9
〈표 2-48〉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5..... 9
〈표 2-49〉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7..... 9
〈표 2-50〉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9..... 9
〈표 2-51〉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0·0· 1
〈표 2-52〉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1·0· 1
〈표 2-53〉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3·0· 1
〈표 2-54〉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4·0· 1
〈표 2-55〉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6·0· 1
〈표 2-56〉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8·0· 1
〈표 2-57〉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9·0· 1
〈표 2-5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1·1· 1
〈표 2-59〉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2·1· 1
〈표 2-60〉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5·1· 1
〈표 2-61〉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7·1· 1
〈표 2-62〉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9·1· 1
〈표 2-63〉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0·2· 1
〈표 2-64〉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0·2· 1
〈표 2-65〉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5·2· 1
〈표 2-66〉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7·2· 1
〈표 2-67〉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9·2· 1
〈표 2-68〉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0·3· 1
〈표 2-69〉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실적	3·3· 1
〈표 2-70〉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6·3· 1
〈표 2-7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0·4· 1

〈표 2-72〉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4·4·1
〈표 2-73〉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6·4·1
〈표 2-74〉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7·4·1
〈표 2-75〉	교육분야 제도 개선 추진실적	9·4·1
〈표 2-76〉	주택분야 제도 개선 추진실적	0·5·1
〈표 2-77〉	금융분야 제도 개선 추진실적	1·5·1
〈표 2-78〉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추진실적	2·5·1
〈표 2-79〉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4·5·1
〈표 2-8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5·5·1
〈표 2-81〉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6·5·1
〈표 2-82〉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7·5·1
〈표 2-83〉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8·5·1
〈표 2-84〉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추진실적	9·5·1
〈표 2-85〉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9·5·1
〈표 2-86〉	2014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6·1
〈표 2-87〉	2014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2·6·1
〈표 2-88〉	2014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5·6·1
〈표 2-89〉	2014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6·6·1
〈표 2-90〉	2014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8·6·1
〈표 2-91〉	2014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9·6·1
〈표 2-9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1·7·1
〈표 2-93〉	2014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2·7·1
〈표 2-94〉	2014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3·7·1
〈표 2-95〉	2014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4·7·1
〈표 2-96〉	2014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5·7·1
〈표 2-97〉	2014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6·7·1
〈표 2-98〉	2014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7·7·1
〈표 3- 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8·1
〈표 3- 2〉	저출산 분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8·8·1
〈표 3- 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5·9·1
〈표 3- 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0·0·2
〈표 3- 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7·0·2
〈표 3- 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4·1·2
〈표 3- 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8·1·2
〈표 3- 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4·2·2
〈표 3- 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6·2·2
〈표 3-10〉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8·2·2
〈표 3-11〉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9·2·2
〈표 3-12〉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0·3·2

〈표 4-1〉 미혼남녀(만 20~39세) 응답자(300명) 특성	4	3	2
〈표 4-2〉 기혼남녀(만 20~54세) 응답자(400명) 특성	6	3	2
〈표 4-3〉 중·고령남녀(만 55~74세) 응답자(400명) 특성	7	3	2
〈표 4-4〉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일-가정 양립 변화에 대한 체감도	3		2
〈표 4-5〉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가족형성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4		2
〈표 4-6〉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임신·출산지원 대한 체감도	2	4	2
〈표 4-7〉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체감도	3	4	2
〈표 4-8〉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대한 체감도	4	4	2
〈표 4-9〉 미혼남녀(만 20~39세)의 최근 3년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체감도	5	4	2
〈표 4-10〉 미혼남녀(만 20~39세)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 1가지	1		2
〈표 4-11〉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육아 및 자녀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체감도	5	4	2
〈표 4-12〉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	6	4	2
〈표 4-13〉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체감도	6	4	2
〈표 4-14〉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체감도	7	4	2
〈표 4-15〉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일자리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체감도	7	4	2
〈표 4-16〉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체감도	8	4	2
〈표 4-17〉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에 대한 체감도	8	4	2
〈표 4-18〉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변화에 대한 체감도	9	4	2
〈표 4-19〉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0	5	2
〈표 4-20〉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도	0	5	2
〈표 4-21〉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결혼할 의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1	5	2
〈표 4-22〉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2	5	2
〈표 4-23〉 기혼남녀(만 20~54세)의 희망자녀수 변화 정도	3	5	2
〈표 4-24〉 임신·출산 지원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		2
〈표 4-25〉 돌봄 지원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4	5	2
〈표 4-2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		2
〈표 4-27〉 저출산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6	5	2
〈표 4-28〉 중·고령자(만 55~74세)의 중·고령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7	5	2
〈표 4-29〉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		2
〈표 4-30〉 노후 건강 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		2
〈표 4-31〉 활발한 노후생활 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	2	
〈표 4-32〉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	2	
〈표 4-33〉 고령사회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0	6	2
〈표 4-34〉 저출산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4	6	2
〈표 4-35〉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5	6	2
〈표 4-36〉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7	6	2
〈표 4-37〉 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8	6	2

〈표 4-38〉	성장동력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9·6·2
〈표 4-39〉	성장동력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0·7·2
〈표 5- 1〉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5·7·2
〈표 5- 2〉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6·7·2
〈표 5- 3〉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국제비교	7·7·2
〈표 5- 4〉	GDP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2011) 국제비교	8·7·2
〈표 5- 5〉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국제비교	9·7·2
〈표 5- 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국제비교	0·8·2
〈표 5- 7〉	고령사회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1·8·2
〈표 5- 8〉	중·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 비교	2·8·2
〈표 5- 9〉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국제 비교(2014년 기준)	3·8·2
〈표 5-10〉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4·8·2
〈표 5-11〉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5·8·2
〈표 5-12〉	고령자 고용률(65세 이상) 추이 국제 비교	5·8·2
〈표 5-13〉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국제 비교	6·8·2
〈표 5-1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국제 비교	7·8·2
〈표 5-15〉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 국제비교	8·8·2
〈표 5-16〉	인구 10만 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9·8·2
〈표 5-17〉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0·9·2
〈표 5-18〉	여성고용률 국제 비교	1·9·2
〈표 5-19〉	국가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 현황(2012)	1·9·2
〈표 5-20〉	사고성 사망만인을 국제 비교	2·9·2
〈표 5-21〉	국가별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3·9·2
<표 5-22>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중	3·9·2
〈표 6- 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일반과제 및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	8·9·2
〈표 6- 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반과제 예산집행률	8·9·2
〈표 6- 3〉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가정양립(중영역) 평가 종합	1·0·3
〈표 6- 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평가 종합	5·0·3
〈표 6- 5〉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8·0·3
<표 6- 6>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종합평가	2·1·3
<표 6- 7>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종합평가	5·1·3
<표 6- 8>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종합평가	8·1·3
<표 6- 9>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종합평가	2·2·3
<표 6-10>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경제제도 개선(중영역) 종합평가	4·2·3
<표 6-1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종합평가	5·2·3
<표 7- 1>	20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복지·사회」 분야 평가지표	2·4·3
<표 7- 2>	저출산·고령화 정책 세부 평가기준	3·4·3
<표 7- 3>	저출산·고령화 관련 '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과제	4·4·3
〈표 7- 4〉	2015년('14년 실적) 및 2016년('15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 「문화·여성」 분야 평가지표	4·4·3

<표 7- 5> 광역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화정책 자체사업 현황(2014년)	5·4·3
<표 7- 6> 2014년도 시도별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현황	6·4·3
<표 7- 7>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개선	2·5·3

그림 목차

[그림 1- 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6·1
[그림 2-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1·2
[그림 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4·3
[그림 2-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6·5
[그림 2- 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1·7
[그림 2- 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6·9
[그림 2- 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2·1·1
[그림 2- 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1·2·1
[그림 2- 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7·4·1
[그림 2- 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2·5·1
[그림 3- 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3·8·1
[그림 3-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4·8·1
[그림 3- 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5·8·1
[그림 3-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5·8·1
[그림 3- 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6·8·1
[그림 3- 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9·8·1
[그림 3- 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0·9·1
[그림 3- 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 수(개소)	1·9·1
[그림 3- 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1·9·1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2·9·1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2·9·1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	3·9·1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4·9·1
[그림 3-1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	4·9·1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명)	6·9·1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7·9·1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8·9·1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8·9·1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고용률(%)	1·0·2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2·0·2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3	0	2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4	0	2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4	0	2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5	0	2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 수(만명)	8	0	2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소득보장률(%)	9	0	2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천명)	0	1	2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0	1	2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2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명)	2	1	2
[그림 3-3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3	1	2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5	1	2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 명당)	5	1	2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6	1	2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개소)	7	1	2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0	2	2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0	2	2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명)	1	2	2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2	2	2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2	2	2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3	2	2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4	2	2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5	2	2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6	2	2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개)	7	2	2
[그림 4- 1]	일-가정 양립제도 변화에 대한 취업 및 미취업자 체감도	0	4	2
[그림 4- 2]	임신·출산지원 변화에 대한 연령군별 체감도	2	4	2
[그림 4- 3]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관련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도	1	6	2
[그림 4- 4]	기혼남녀(만 20~54세)의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도	2	6	2
[그림 4- 5]	중·고령자(만 55~74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도	3	6	2
[그림 7- 1]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점검과정	1	3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2005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4년도 시행계획 기본과제의 추진실적(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과 함께 45개 핵심과제(저출산 18개, 고령사회 17개, 성장동력 10개)의 분야별 성과지표의 달성도 평가
- 국민 및 전문가를 통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한계점 및 개선방향 제시

〈요약표 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구분	평가대상 과제 수	최종 평가 과제 수	기 종료(완료)	성과지표 없는 과제
전체	238	224	8	6
저출산 분야	100	91	4	5
고령사회 분야	84	80	4	—
성장동력 분야	54	53	—	1

- 주: 1) 저출산 분야 과제 내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중 1개는 '15년 추진과제로 '14년 추진계획이 없음
 2) 고령사회 분야 과제는 2014년 시행계획상 총 86개이나, 과제번호 "2-43~46"에 해당하는 과제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과제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3개 과제가 아닌 1개 과제로 간주하여 총 과제 수는 84개임
 3) 성장동력 분야 내 성과지표 없는 과제 1개는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산출된 수치임

2. 주요 연구결과

가. 기본 및 핵심과제 평가 결과

- 2014년도 전체 평가대상 224개 과제(238개 중 완료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14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 수는 185개로 82.6%를 차지
-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를 포함하면 전체의 90.6%에 이르며, 목표달성도가 70% 미

만인 과제는 13개(5.8%)로 나타남

- 저출산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특수용도용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 핵심과제 44개 중 목표치에 미달한 과제는 저출산 분야 7개, 고령사회 분야 5개, 성장동력 분야 3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목표달성률 90% 미만인 과제는 총 6개 과제에 불과함

○ 목표달성률이 90% 미만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60.5%),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76.7%),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85.8%)이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76.7%),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47.4%), 성장동력 분야는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80.3%)로 나타남

〈요약표 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일반과제 및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분야	일반과제 추진실적(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13 (5.8)	8 (3.6)	18 (8.0)	185 (82.6)	224 (100.0)	6 (13.6)	9 (20.5)	29 (65.9)	44 (100.0)
저출산 분야	6 (6.6)	4 (4.4)	6 (6.6)	75 (82.4)	91 (100.0)	3 (16.7)	4 (22.2)	11 (61.1)	18 (100.0)
고령사회 분야	6 (7.6)	4 (5.0)	6 (7.5)	64 (80.0)	80 (100.0)	2 (12.5)	3 (18.8)	11 (68.8)	16 (100.0)
성장동력 분야	1 (1.9)	-	6 (11.3)	46 (86.8)	53 (100.0)	1 (10.0)	2 (20.0)	7 (70.0)	10 (100.0)

주: 1) 핵심과제 수는 45개이나 '노후생활 설계 강화(고령사회 분야)'의 과제 실적 산출 불가로 평가대상 과제는 총 4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 시 시행계획 상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41-①, 2-41-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일반과제 158개(238개 중 완료과제, 비예산과제 등 80개 제외) 과제 중 예산집행률이 100% 이상인 과제는 77개(48.7%), 90% 이상인 과제는 138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함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저출산 분야 과제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 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이며, 고령사회 분야 과제에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임

〈요약표 3〉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반과제 예산집행률

(단위: 과제 수, %)

구 분	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전 체	5 (3.2)	2 (1.3)	13 (8.2)	61 (38.6)	77 (48.7)	158 (100.0)	68	12
저출산 분야	3 (4.5)	— —	7 (10.6)	25 (37.9)	31 (47.0)	66 (100.0)	27	7
고령사회 분야	2 (3.8)	1 (1.9)	3 (5.7)	23 (43.4)	24 (45.3)	53 (100.0)	27	4
성장동력 분야	— —	1 (2.6)	3 (7.7)	13 (33.3)	22 (56.4)	39 (100.0)	14	1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나. 국민의 정책체감도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 평가

○ 조사대상 (총 1,100명)

— 미혼남녀(만 20~39세, 300명), 기혼남녀(만 20~54세, 400명), 중·고령남녀(만 55~74세, 400명)

○ 표집방법

— 시도별 × 성별 × 연령대별 비례할당 (셀별 할당): 2010년 인구총조사 중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별 대상자를 할당(기혼의 경우 20대의 표본 확보를 위해 40명 임의할당)

○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전화조사, 2015년 8월 18일 ~ 28일

□ 저출산정책 평가 결과(미혼자 조사)

○ 결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미혼자의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높지 않음

○ 결혼정책과 관련한 미혼자의 체감도 혹은 인식변화에서는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2.5%,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하기 쉬워진다는 인식이 50.5%로 높게 나타남

— 결혼지원을 위한 정보 접근성의 증가(38.9%),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13.7%), 결혼비용 부담 경감(9.8%) 등의 변화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16.9%), 유연근무제의 활성화(15.1%), 직장과 결혼생활의 용이성(11.2%)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수준은 낮음
- 주거지원 정책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결혼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는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정책 평가 결과(기혼자 조사)

- 기혼자의 저출산 분야 정책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생활 및 준비에 관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4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의 배려분위기 개선(33.8%)이 다음으로 높게 분석됨
- 주택 이외의 결혼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8.3%로 낮고, 출산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도 높지 않은 수준임
- 결혼을 위해 필요한 비용(주택 및 기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지난 3년간 크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돌봄기관 및 서비스 증가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기혼자의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저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이 기혼자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고령사회정책 평가 결과

- 저출산과 달리 고령사회 영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중·고령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건강과 여가문화 접근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정부지원 노후소득 비중의 증가나 교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임. 그러나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고령사회정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과제는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78.0%),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서비스 증가(70.1%), 만성질환 관련 보건의료 여건 향상(62.7%), 여가·문화생활 기회 증가(62.1%) 등으로 나타남

- 중·고령자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22.6%), 은퇴 계속고용 또는 재취업 기회 증가(23.6%), 정부지원일자리 증가(28.2%) 등의 긍정적인 평가는 낮은 편임
-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 일자리 정책과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과 문화여가정책, 그리고 주거와 이동의 안전정책이 유의하게 나타남

다. 전문가 참여 평가 결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

- 조사대상: 저출산 분야 26명, 고령사회 분야 31명, 성장동력 분야 21명 / 총 78명
-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
- 조사내용: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정책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3.09점(22개 과제별 평균의 단순평균)으로 보통(3.0점)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
- 중영역별로 일·가정양립 일상화 영역은 2.81점으로 보통(3.0점) 이하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3.06점),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3.25점) 순으로 높아짐
 -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4.13점)이고 그 뒤를 이어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3.69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3.53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3.48점) 등임
 -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2.08점), 유연근로제 확산(2.40점),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2.52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2.64점) 등임

□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 정책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2.96점(18개 과제별 평균의 단순평균)으로 보통(3.0점)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
- 중영역별로 안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3.09점)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2.90점),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조성(2.80점) 순서로 낮아짐
 -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4.10점),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3.68점),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3.48점),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3.30점) 등임

- 상대적으로 평가 결과가 낮은 정책은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2.29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2.30점), 노후설계 기반 조성(2.52점),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2.58점), 고령자 고용연장(2.69점) 등임

□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분야 정책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3.07점(16개 과제별 평균의 단순평균)으로 보통(3.0점)수준으로 평가됨
- 중영역별로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3.19점)가 가장 높고, 차례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3.00점), 고령친화산업 육성(2.69점)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3.45점),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3.45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3.45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3.32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3.27점) 등임
 - 성과가 낮게 평가된 정책은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2.54점),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2.57점), 외국국적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2.58점), 미래재정위험대비 중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2.81점),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2.88점) 등이 있음

라.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2009년부터 각종 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행정자치부(前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음(이삼식 외, 2014, p.398)
-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추진’ 지표의 평가방식은 시·도별로 우수 사업을 추천 받아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에서는 시·도별로(시·군·구 포함)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정성평가를 실시함

-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 및 전파가능성의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평가하게 됨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스템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평가기준에 제시된 평가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세부 평가내용 중 어느 세부 항목을 보다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침 부족
- 우수사례 제출 양식의 비통일성 및 평가항목과 보고서 내용간의 연관성 부족
- 평가 항목은 총 네 개의 지표(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전파가능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독창성과 활용·전파가능성 간의 개념적 충돌이 발생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광범위성으로 저출산과 고령사회라는 광범위한 영역 내에서 특정 우수사례를 제출하기에 선택적 어려움이 있음
- 기본계획 내 정책 범위와 지자체 정책간의 불일치성
- 매년 신규 사업 제출에 대한 압박과 피로감 누적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3. 결론 및 시사점

가. 종합평가 결과

- 저출산 분야의 정책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국민 인식 조사, 전문가 조사, 국제비교 등을 통한 평가 결과 간에 다소 간극이 있음
- 결과적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정부가 수립한 정책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국민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변화수준은 높지 못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문가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는 과제와 지표가 상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성과지표 상으로는 달성률이 100%를 상향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평가의 한계가 있다는 점임
 - 그러므로 저출산 분야의 세부 정책들이 국민의 욕구를 토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상관성이 있는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세부 정책들의 목표가 달성되어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와 연동될 수 있도록 정책별로 종합 점검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과제 및 핵심과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률로 평가한 정부의 결과는 매우 양호한 반면, 국민의 체감도 평가와 전문가 정책평가는 대체로 미흡한 수준임
-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용과 일자리,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낮은 반면, 건강보장과 관련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결과는 2013년도 평가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라 할 수 있음
 - － 국민의 주관적 평가는 장기요양보험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시설 강화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 정책, 그리고 고령자 문화여가 기회 증진에 대해 높게 평가함
 - － 전문가의 경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며(긍정적 평가 10% 미만), 그 외 노후설계 기반마련, 학대노인 보호 강화, 고령자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20% 미만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균형적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중·고령자의 고용과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 고령사회 전문가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노인보호, 그리고 고령자 여가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성장동력 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평가의 목표달성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만 전문가 및 국제비교 평가 결과는 정부추진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평가 평가에서는 외국근로자 활용 과제와 고령친화제품 지정 및 표시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낮은 편이었으며, 그 밖에 고령사회 대비 재정이나 금융시스템 개선이나 고령친화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세부 정책들이 정합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나. 성과지표 진단과 개선방안

□ 과제명과 성과지표간의 불일치

- 과제명에 내포되어 있는 과제목표나 내용과 성과지표간의 관련성이 낮은 과제가 상당수 발견되며,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변경 필요

□ 목표치 설정의 보수성

- 일부 과제 경우, 연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목표 설정단계에서 목표달성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의 수요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급 중심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가 건수, 명수로 제시된 일부 과제의 경우, 전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원건수나 명수 중심의 성과지표보다는 전체 수요 대비 이용률/수혜율, 전년 대비 증가율 등으로 변경하여 해당 과제의 규모나 포괄성, 변화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과제 안정화 및 성숙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 필요

- 기본계획 이행 후반기 사업의 경우, 달성이 완료되거나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의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함

□ 단순·편의적인 성과지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일반과제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나 목표치가 일회성 행사나 수행 여부로 평가되고 있음. 여타 일반과제 성과지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 실적이나 수요 대비 공급, 전년도 대비 증감률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과제명-과제내용-성과지표-목표치 간의 정합성 점검시스템 마련

- 위와 같이 각 부처별 일반과제의 성과지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과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과제별 검토 작업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각 부처에 전달하여 과제별 수정·보완 작업을 걸쳐 최종확정 과정 필요

다.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개선방안

□ 평가항목의 개선

- 지역적합성 관련 지표 보완 및 기존의 독창성과 활용·전파가능성의 배점 비중 약화
- 우수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기반 구축 등 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필요
-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효과적이고 우수한 사업의 지속수행과 내실

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기존에 제출한 사업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우수 사례로 제출가능하다는 지침 마련

□ 우수사례 보고 양식의 개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우수사례 보고 양식을 통일하되, 각 평가항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균형있는 평가체계 마련

- 현재의 정성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평가 방식을 도입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평가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범위와 역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중앙부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점 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책실행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효과적임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평가와 컨설팅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자체 평가대상 우수사례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제공 필요
-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전반에 걸친 컨설팅 실시

<요약표 4>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개선

문제진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일부 평가항목간의 상충성 - 매년 신규 사업 제출에 대한 압박과 피로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반영도, 욕구반영도 등의 평가 항목 추가 - 독창성과 활용·전파가능성 항목 배점 약화 - 평가대상 사업에 계속(기존)사업 허용 지침 마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평가방식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평가 내 타 평가지표와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정책을 하나의 '대지표'로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제출 양식의 비통일성 - 평가항목과 보고서 내용간의 연관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보고 양식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광범위성 - 기본계획 내 정책 범위와 지자체 정책간의 불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범위 및 평가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컨설팅단(자문단) 운영

*주요용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

제 1 장

성과평가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평가 대상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제4절 평가 절차

제5절 평가 결과 활용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2005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따른 연도별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였음(이삼식 외, 2014, p.3)
 -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에 성과지표 간명화 및 지수화 작업을 실시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 의거하여 2011년 이후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음
 - 2011년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마련
 - － 시행계획 상 과제를 기본과제와 핵심과제(45개)로 구분
 - － 기본과제의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는 해당 부처(부서)에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접 설정
 - －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제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2015년의 연도별)는 전문가에 의해 설정되고 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 2012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년도(2011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2013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차년도(2012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2014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차년도(2013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4차년도(2014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함
-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상 총 224개 일반과제 및 45개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제2절 평가 대상

□ 2014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대상 평가

- 중앙정부(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3대 분야(저출산 분야 100개 과제, 고령사회 분야 84개 과제, 성장동력 분야 54개 과제) 23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미 사업이 종료 또는 완료, 성과지표가 없는 14개 과제를 제외한 224과제가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대상이 됨

〈표 1-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계획)

구분	평가대상 과제 수	최종 평가 과제 수	기 종료(완료)	성과지표 없는 과제
전체	238	224	8	6
저출산 분야	100	91	4	5
고령사회 분야	84	80	4	—
성장동력 분야	54	53	—	1

- 주: 1) 저출산 분야 과제 내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중 1개는 '15년 추진과제로 '14년 추진계획이 없음
 2) 고령사회 분야 과제는 2014년 시행계획상 총 86개이나, 과제번호 "2-43~46"에 해당하는 과제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과제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3개 과제가 아닌 1개 과제로 간주하여 총 과제 수는 84개임
 3) 성장동력 분야 내 성과지표 없는 과제 1개는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산출된 수치임

- 핵심과제는 총 45개로 저출산 분야 18개 지표, 고령사회 분야 17개 지표, 그리고 성장동력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본 성과평가의 대상에서는 제외됨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추진실적 평가와 정책효과성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추진실적 평가(output evaluation)

○ 연도별 시행계획 상 과제 평가

-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부처에서 과제별로 설정한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에 근거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 평가(기술적 분석)
- 2013년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2013~2014년 성과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핵심과제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된 핵심과제(45과제)의 달성도를 각각의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연차별 및 2015년도(제2차 기본계획 종료연도) 목표치에 대비하여 평가
-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그리고 연도별 목표치는 제9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2011.12)에서 심의·확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과 2014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핵심지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음

□ 정책효과성 평가(outcome evaluation)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혼·출산·양육 및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국민 인식이나 행태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 정도를 평가
 - 일반국민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 그리고 사회환경 변화 측정
 - 각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 평가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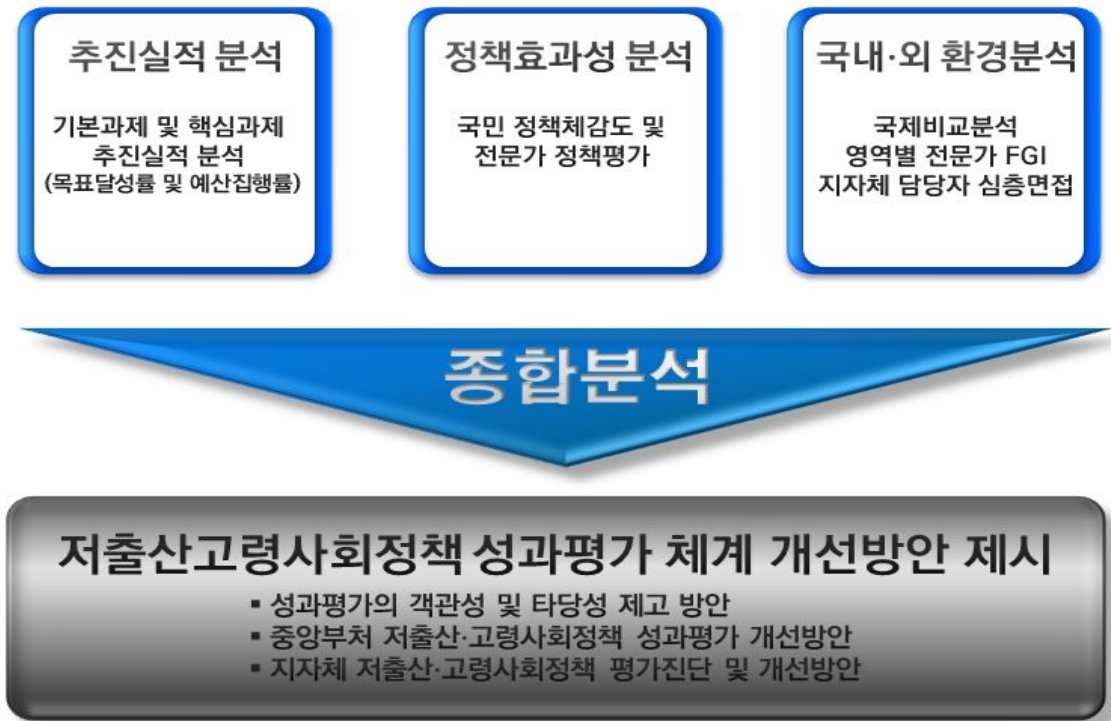
- 추진실적평가(기본과제 평가와 핵심과제 평가)와 효과성 평가를 연계하여 분석하며 각 과제별 성과와 한계점 도출
- 국제비교분석
 - OECD 주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대응 노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수준) 비교 분석
-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성과평가 개선방향 도출

□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성과평가 지표, 측정방식 등 정책성과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제고방안 제시
 - 성과지표 수정·보완, 정책 변화속도, 과거 목표치 달성도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 목표치 현실화(수정·보완) 등 방안 제안

-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방식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제시

[그림 1-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제4절 평가 절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 6단계를 거쳐 실시
 - 1단계: 평가지침 및 추진실적 자료 요청
 -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일정, 평가방법, 성과지표 등을 수록한 지침을 해당 부처에 통보
 - 2단계: 기본과제 및 핵심과제 추진실적 제출
 - － 기본과제는 각 부처에서 2014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2014년도 과제별 목표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 예산계획, 집행액, 집행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 핵심과제는 성과지표와 산식, 목표치와 실적치, 실적에 대한 근거수치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3단계: 기본과제 및 핵심과제 추진실적 검토

- 성과평가 연구기관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을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문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
- 4단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평가 연구기관에서 수정·보완이 완료된 추진실적(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을 분석·평가
 - 영역별 핵심성과지표의 값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 5단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평가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6단계: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토록 함
- 6개 단계 중 1~2단계와 5~6단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각 정책 내지 사업들을 수행한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3~4단계를 수행함

제5절 평가 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시행계획의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국회에 보고
- 평가결과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환류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예산배분 효율화,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에 활용 가능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평가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
- 기타 활용
 -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평가체계 개선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

제 2 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목표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함(3개 중영역)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1] 육아휴직제도 개선(세부영역)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현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였고, 경력단절 방지 목적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

○ (성과)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74.6%로 당초목표치(72.3%) 초과 달성(사업예산 740,093백만원 중 100.0% 집행)

* 실제 집행액은 740,062백만원이나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로 계산됨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 수당의 단계적 인상(1-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함

— 육아 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수준을 인상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함

— 모성보호 홍보자료 배포

○ (성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인원이 5,039명으로 당초목표치(4,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3,666백만원 중 99.7% 집행)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1-3, 고용노동부) 【완료 과제】

○ (사업내용)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확대함

○ (성과)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3년 12월 국회 통과('14.1월 시행)하여 완료된 과제임

〈표 2-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¹⁾	72.3	74.6	103.2	72.2	71.5	99.0	740,093	740,062	100.0 ²⁾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1-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원(명)	4,000	5,039	126.0	2,700	3,052	113.0	13,666	13,627	99.7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1-3)	해당 없음	완료 과제								

주: 1)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수/육아휴직급여 수급근로자수)×100

2)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세부영역)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활성화(1-4,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
 - －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함
- (성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은 1.26%(출산전후휴가자 대비)로 당초목표치(1.0%) 초과달성(사업예산 2,555백만원 중 100.0% 집행)
 - * 실제 집행액은 2,554백만원이나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로 계산됨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1-5,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근로자가 필요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도입근거를 마련
- (성과) 근로시간 단축 법안 추진을 위하여 노사정간 대화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임. 그러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14.10월)하고 논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비예산사업)
 - － 노총·중기·경총·상의 및 여야의원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2.14~4.23)하고, 중소기업·노동계·경영계 간담회(1~2월, 5.20, 9.14, 9.17, 10.1) 등을 통해 노사정간 대화 및 공감대 형성 노력
 - －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새로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추진의 필요성 설득(8월~11월)

- (목표달성 부진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방향에 대해 노사 모두 공감하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 제도 개선 세부방안 등에 이견이 있어 법 개정 지연

〈표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1-4) 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²⁾	1.0	1.26	126.0	0.7	0.81	115.7	2,555	2,554	100.0 ³⁾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1-5)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0.0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0.0	비예산		

주: 1) '13년도 사업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임

2)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출산전후휴가자수×100

3)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세부영역)

□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1-6, 고용노동부) 【완료 과제】

- (사업내용) 조산의 위험이 크고 출산 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다태아 산모에게 출산전후 휴가 기간 확대
- (성과) 다태아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3.12월 국회 통과로 과제 기 완료('14.1월 시행)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1-7,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휴직으로 인한 기회비용(소득감소)을 줄여 여성의 육아부담 축소
- (성과) 남성육아휴직제도 도입('14.10월)으로 당초목표(제도도입 여부) 달성(사업예산은 과제 1-1에 포함)
 -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1-8,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가족돌봄휴직의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시에 가족돌봄휴직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감독 시 가족돌봄휴직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당초목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달성(비예산 사업)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요건 개선
 - (성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 인원수가 315명으로 당초목표치(3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247백만원의 99.9% 집행)
 - 근로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원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상반기, 하반기 총 913개소 실시

〈표 2-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1-6)	해당 없음	완료 과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1-7)	남성육아휴직 제도 도입	제도도입	제도도입	100.0	-			(1-1)과제에 포함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1-8)	가족돌봄휴직 실행상황 점검	점검실시	점검완료	100.0	-			비예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지원 인원 수(명)	300	315	105.0	355 (20% 증가)	286 (3.4% 감소)	80.6	1,247	1,246	99.9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1] 유연근로제 확산(세부영역)

-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0, 인사혁신처)
 - (사업내용)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제고 및 홍보·교육 강화

○ (성과)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16.1%로 당초목표치(15.0%) 초과달성(비예산 사업)

- 중앙부처 50개 기관 150,493명(교원·교대·현업근무자 등 제외) 중 24,259명이 유연근무제 이용

□ 시간제 근무 활성화(1-11,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출산·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여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근무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실시

○ (성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이 1,005명으로 당초목표치(584명)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근거 마련('13.12월)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본격 채용('14.3월~)
-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진행 중

□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1-1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전환하는 사업주에게 노무비 등 지원

- (신규창출 지원) 적합한 직무 발굴,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새로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노무비 일부 지원

-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 월 60만원)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무비 등 지원

- 전환 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

-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 지원)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로자 1인당 임금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컨설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전환하려는 사업주에 대해 적합한 직종(직무) 발굴, 직무재설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성과)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은 5,622명으로 당초목표치(5,030명)를 초과달성하였고(사업예산 22,732백만원의 71.1%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은 2,433명으로 당초목표치(30,600명)의 8.0% 달성(사업예산 8.544백만원 중 19.8% 집행)

- (예산집행 부진사유: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인원) 당해연도 목표치는 초과달성하였지만, 전일제·장시간 근로 중심 관행으로 인해 다양한 규모 및 업종·직종까지 확산하기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됨. 또한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거나, 지원절차상(승인-채용-지원) 시차가 발생(6개월~1년)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원실적이 부진하였음
-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상용형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4~'17년 한시사업)은 지원금액이 적어 일자리 창출 유인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5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사업의 간접노무비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음

〈표 2-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0)	유연근무제 이용률(%) ¹⁾	15.0	16.1	107.3	5.0	14.8	296.0	비예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1-11)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연도별 채용목표인원(명) ²⁾³⁾	584	1,005	172.1	70	78.8	112.6	비예산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1-12)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명) ⁴⁾	5,030	5,622	111.8	20	49.4	247.0	22,732	16,159	71.1
	사회보험료 지원인원(명)	30,600	2,433	8.0	-	-	-	8,544	1,688	19.8

주: 1)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대상인원)×100

2) '14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목표치는 5%였으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목표치를 수정함

3) '13년 성과지표는 시간제 근무 운영성과 만족도(기관인사담당자 등 대상 설문조사)

4) '13년 성과지표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사업장 증가율(%)

[2]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세부영역)

□ 유연근무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1-13,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유연한 근로형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무료교육을 실시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가 양득' 캠페인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근로문화 개선 분위기 확산 및 참여유도를 비롯하여 유연근무제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 추진
 - 지역별(8회) 채용박람회 개최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여건 조성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 워크넷 구축('14.3월) 및 온·오프라인 대체인력뱅크 서비스

실시('14.4월)

- 시간선택제 방송, 전문가 기고 및 기획기사 편성 및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

○ (성과) 스마트워크 및 대체인력뱅크를 3개소 설치하여 당초목표(3개소) 달성(비예산사업)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1-14, 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거주지 인근, 주요 출장지 및 교통요지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언제·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확산으로 출퇴근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과 삶의 조화 및 출장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근·출장 수요에 대응하여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이용률 대폭 증가로 인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및 이용기관 지속 확대

—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교육 및 제도개선 등 이용 활성화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직원 체험근무(공무원 131명, 공공기관 142명)
-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개정('14.4월)

○ (성과) 스마트워크 이용자 만족도는 87.8점으로 당초목표치(85.3점) 초과달성,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은 96.1%로 당초목표치(58.0%) 초과달성(사업예산 3,545백만원 전액 집행)

□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 센터 모델 개발(1-15, 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

○ (사업내용)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중소기업 중앙회 등)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육아기 여성 등에게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성과)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1건 제시로 당초목표(서비스모델 1건 제시) 달성

—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협동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예산 2,145백만원의 79.1%를 집행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예산 1,000백만원 전액 집행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유연근무제 개념 및 필요성 홍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새일센터가 참여하여 여성대상 취업지원 사업 홍보, 경력단절 여성지원서비스 안내 및 취업상담 실시

- (성과)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211개 기업에 실시하여 당초목표(90개)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표 2-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1-13)	스마트워크 및 대체인력뱅크 설치 개소 수(개소) ¹⁾	3	3	100.0	3	3	100.0	비예산		
					210	186	88.6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1-14)	스마트워크 이용자 만족도(점)	85.3	87.8	102.9	85	85.1	100.1	3,545	3,545	100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58.0	96.1	165.7	55	61.9	112.5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 센터 모델 개발(1-15)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제시(건) ²⁾	1	1	100.0	-			2,145	1,696	79.1
								1,000	1,000	100.0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컨설팅 기업 수(개소)	90	211	234.4	50	134	268.0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위쪽부터 순서대로 간담화·워크숍 개최 실적(회)과 중소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장 개소 수(개소)임

2)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과제로 고용노동부 집행액 1,696백만원, 미래창조과학부 집행액 1,000백만원임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세부영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1-17-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맞춤서비스 제공 및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전반의 정보 제공 등

- 재정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무상 및 용자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에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지원
-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지원

- (성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수는 93개소로 당초목표(80개소) 초과달성, 용자지원 사업장 수는 4개소로 당초목표치(8개소)의 50.0% 달성, 인건비지원 사업장은 334개소로 당초목표치(305개소) 초과달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장 수는 90개소로 당초목표치(70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80,280백만원 전액 집행)

- (목표달성 부진사유: 용자지원 사업장 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용자지원 사업장 개소 수 부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1-17-②,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1-18, 보건복지부)

- (사업목적) 보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일하는 여성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의무이행 부과로 직장어린이집 조기 설치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조기설치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설치 독려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14.1~12월)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정부포상('14.12월)
- (성과)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14.1월, 1회)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1회)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1-17-①)	설치지원 사업장 수(개소)	80	93	116.3	60	80	133.3	80,280	80,280	100.0
	융자지원 사업장 수(개소)	8	4	50.0	6	11	183.3			
	인건비지원 사업장 수(개소)	305	334	109.5	282	299	106.0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사업장 수(개소)	70	90	128.6	69	75	108.7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운영지원 확대(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1-18)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회)	1	1	100.0	명단 공표	관보, 홈페이지 게시물	100.0	비예산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 설치 독려(회)	1	1	100.0	설치독려 (1회)	설치독려 공문서	100.0	비예산		

[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세부영역)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1-19,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대 추진 및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한 홍보 강화·인식개선, 기업의 규모·업종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인증기준 개선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 가족친화제도 기업경영층 인식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제3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 워크숍, 국회토론회, 중소기업 CEO좌담회, 가족친화 담당자 현장탐방, 운영위원회 개최 등 가족친화 포럼 운영

-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일·가정양립 중심 지표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 (성과) 가족친화 포럼을 8회 개최하여 당초목표치(4회) 초과달성 및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를 17회 개최하여 당초목표치(12회) 초과달성(사업예산은 과제 1-21에 포함)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 홍보
 - 인증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제공
 - 제3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여성가족부·KBS 공동주최)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일간지 광고, 가족친화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성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7건을 지원하여 당초목표치(5건) 초과달성(사업예산은 과제 1-21에 포함)
-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1-21,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가족친화기업 인증신청, 인증심사 등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운영하고,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교육 등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추진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친화컨설팅 및 가족친화교육 실시
 - (성과)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수가 총 598개소로 당초목표치(400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1,169백만원 전액 집행)

〈표 2-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1-19)	가족친화 포럼 활동 횟수(회)	4	8	200.0	4	8	200.0	(1-21)과제에 포함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횟수(회)	12	17	141.7	12	12	100.0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인센티브 추가 제공건수(건)	5	17	340.0	10	45	450.0	(1-21)과제에 포함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1-21)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업 수(개소)	400	598	149.5	160	402	251.3	1,169	1,169	100.0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세부영역)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재해를 감소 등 추진

－ (지도·감독) 6개청 및 대표지청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은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시간 감독 실시

- 근로시간 통계,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장시간 근로 업종 및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시간 감독계획 수립·실시

－ (지원정책) 기업의 자발적인 장시간 근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설비투자, 인건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교대제 개편 지원) 컨설팅, 인건비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공감대 확산)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범국민 홍보 일가양득 캠페인 개최, 기획기사 연재 등을 통한 확산 추진

－ (제도개선) 근로시간 총량규제의 적용범위는 보다 두텁게 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탄력성·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노총·중기·경총·상의 및 여야의원 등이 참여하는 소위 구성 및 중소기업·노동계·경영계 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안 추진을 위한 노사정 대화 및 공감대 형성
- 근로시간 단축 법안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새로 구성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추진의 필요성 설득

○ (성과)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단축하여 당초목표치(2,030시간)의 98.7% 달성(사업예산 5,370백만원 중 99.2% 집행)

□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1-23,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하여 가족사랑의 날 추진

－ 공공부문의 ‘가족사랑의 날’ 실천촉구 및 유관부처 협조 요청 국무회의 보고

－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협력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한 ‘가족사랑의 날’ 이벤트 및 할인혜택 정보 제공

- 모션그래픽 형식의 ‘가족사랑의 날 실천’ 홍보영상을 옥외 전광판을 통해 상영
- 가족사랑의 사진공모전 개최 및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 ‘가족사랑의 날’ 라디오 캠페인 송출
- (성과) 가족사랑의 날 시행률은 100.0%로 당초목표치(90.0%) 초과달성(사업예산은 과제 1-21에 포함)
 - 2014년 현재 전체 중앙부처 수는 46개로 모든 중앙부처가 가족사랑의 날 시행 중
-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1-24, 인사혁신처)
 - (사업내용) 가족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일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의 초과근무 관리 강화 대책 이행 여부 점검·평가
 - 초과근무 감축은 인위적 감축에 따른 외부평가가 아닌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감축이 필요한 바, 기관별 자체평가 필요
 - (추진내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하여 부처별 점검을 실시하고,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협의 진행(비예산사업)
-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1-25, 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출산장려 관련 평가지표를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평가함으로써 국가 주요 시책의 정책성과 제고
 - 자치단체 합동 평가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의 지속 반영 및 평가
 - (추진내용) 저출산·고령화 관련 평가 실시 및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예산사업)
 - 6개 지표 33개 세부평가지표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평가
 - 저출산·고령화 시책평가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 지급('14.12월)
 - (성과지표 부재 사유)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은 매년 지표선정 계획에 따라 지표개발 TF 심의를 거쳐 최종규모 및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계획 상 통일된 성과지표 및 목표에 대한 사전 설정이 어려움

〈표 2-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시간)	2,030	2,057	98.7	2,065	2,071	99.7	5,370	5,324	99.2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1-23)	가족사랑의 날 시행률(%) ¹⁾²⁾	90.0	100.0	111.1	35.0	35.7	102.0	과제 1-21에 포함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1-24)	해당 없음	-			-			비예산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1-25)	해당 없음	-			-			비예산		

주: 1) '13년 사업명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여가부)'이고, 성과지표는 '가족사랑의 날 대국민 인지도'임
 2) 가족사랑의 날 시행률은 '가족사랑의 날 시행 중앙부처 수/전체 중앙부처 수'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4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1]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세부영역)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1-26,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이용시 신혼부부에게 혜택(소득요건 완화) 부여
- (성과) '14.3월 신혼부부 대상 기금대출 업무 매뉴얼(제516조, 제539조 공유형 모기지 소득 기준)을 개정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원으로 자격요건 완화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업무 매뉴얼을 대출업무 시행세칙으로 명칭을 변경함('15.7월 이후 적용)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1-27,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지원
- (성과)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우선입주를 시행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12.3월 LH 내부 관련규정 개정 후 우선입주 지속시행 중이며, '14.12월 현재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미발생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1-28,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젊은 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
 - 공급물량 중 8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
 - '17년까지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14만호 공급
- (성과) 행복주택 26,258호를 공급하여 당초목표치(26,000호) 초과달성(사업예산 429,460백만원 중 92.7% 집행)
- (세부실적)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요조사를 통하여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및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거쳐 3만 6천호 사업지구(55곳) 확정
 -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마련하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 문화·복지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 전국순회설명회, 홍보물 제작, TV·라디오·신문·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표 2-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1-26)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100.0	100.0	100.0	100.0	100.0 (4.10, 6.12, 9.11 개정)	100.0	비예산		
미입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1-27)	신혼부부 우선입주 시행(%)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예산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1-28)	행복주택 공급률(%) ¹⁾²⁾	100.0 (26,000호)	101.0 (26,258호)	101.0	-			429,460	398,251	92.7

주: 1)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사업승인 호수/목표 호수×100

2) 2014년 주택 26,000호를 사업승인 목표 호수로 하였고 26,258호 사업승인 완료

[2]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세부영역)

□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29, 교육부)

- (사업내용) 기혼자 학생의 가정생활을 위한 대응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립대학 기숙사 내 기혼자 숙소 확대
- (성과) 3개 대학에 고시 완료하여 당초목표치(3개교) 달성, 3개 대학에 협약 체결 및 착공을 실시하여 당초목표치(4개교)의 75.0% 달성(비예산 사업)
 - － (목표달성 부진사유 및 향후 계획) 기숙사 신축에 대한 주민 반대로 1개 대학 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15.9월 중 협약 체결 예정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1-30, 교육부)

- (사업내용) 저소득층 기혼자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지원 장학금 지원시 우대
- (성과) 기혼자 가구 장학금 우대 시행 사업 2건 시행으로 당초목표치(2건) 달성(비예산 사업)
 - － 기혼자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시 우대하도록 시행계획에 반영
 -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기혼자를 우대 지원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은 장학생 선발시 동일 순위일 경우 기혼학생을 우선선발 함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학생 부부를 위한 국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29)	시설사업 기본 계획 및 고시 실적(개교)	3	3	100.0	4	4	100.0	비예산(민간자본)		
	협약 체결 및 착공 실적(개교)	4	3	75.0	17	17	100.0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1-30)	기혼자 가구 장학금 우대 제도개선 시행 사업수(건)	2	2	100.0	2	2	100.0	비예산		

[3]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세부영역)

□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1,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혼례종합정보센터(www.weddinginc.org)를 통한 공공시설 결혼예식장 개방 확대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시민단체와 연계, 예비부부·부모 대상 혼례교육 실시 및 검소한 결혼식 모형 보급·확산
 -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시설 결혼식장 개방(157개소, 11월)
 -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서명운동 추진(1,626명, 11월)
 - 결혼당사자 중심의 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혼례교육(7,213명, 11월)
 - 방송과 협력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의 사회공감대 확산, 생활개혁실천협의회 등 시민 단체와 캠페인 전개
 - ‘나만의 아름다운 작은 결혼식 모형’ 발굴 및 보급(25쌍 시연)
- (성과) 결혼준비교실 이용자 수는 52,939명으로 당초목표치(51,200명) 초과달성, 남성대상 교실 이용자 수는 62,724명으로 당초목표(60,800명) 초과달성(비예산 사업)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2,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가족유형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2,038,437명으로 당초목표치(1,738,000명) 초과달성,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수는 152개소로 당초목표치(152개소) 달성(사업예산 17,392백만원 중 99.6% 집행)

〈표 2-11〉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1)	결혼준비교실 이용자 수(명)	51,200	52,939	103.4	29,400	24,175	82.2	비예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일부)		
	남성대상교실 이용자 수(명)	60,800	62,724	103.2	55,000	59,084	107.4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2)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명)	1,738,000	2,038,437	117.3	1,526,000	1,834,447	120.2	17,392	17,316	99.6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수(개소)	152	152	100.0	149	151	101.3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1]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세부영역)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1-3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분만 취약지 유형에 따른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분만 취약지를 분만 산부인과 설치 가능 여부로 구분하여 산부인과(분만실) 설치·운영 지원 및 산부인과 외래 운영 지원 등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지원

○ (성과)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에 설치한 분만 산부인과가 11개소로 당초목표치(10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9,750백만원 중 91.8% 집행)

- 분만 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7개소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5개소 설치·운영 및 기존 사업기관 11개소 운영비 지원
 - 취약지 산부인과는 외래 산부인과 운영, 24시간 분만,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수행
 - 외래 산부인과는 산전 진찰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순회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형태의 산전 진찰 분만 연계, 산후관리 및 이송지원 등 수행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1-34,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하는 기존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

○ (성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50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당초목표치(50병상) 달성(사업예산 10,708백만원 전액 집행)

- 기존 28개소(270병상)에 대한 운영비 지원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강화(1-33)	분만 산부인과 누적설치 개소 수(개소)	10	11	110.0	9	9	100.0	9,750	8,948	91.8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1-34)	계획 대비 실제 설치 병상 비율 (%) ¹⁾²⁾	100 (50병상)	100 (50병상)	100.0	50병상	50병상	100.0	10,708	10,708	100.0

주: 1) 실제 설치 병상 수/계획 설치 병상 수×100

2) 계획 설치 병상 수 50개소 모두 설치

[2]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세부영역)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강화(1-35,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난임가정에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13년 4회에서 '14년 6회로 확대
- (성과)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83,690건 지원하여 당초목표(76,000건) 초과달성(사업예산 85,694백만원 전액 집행)
 - (세부실적)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강화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의학적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방안 검토 등 연구용역 실시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 강화 및 시술 전반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모자보건법」 상임위 상정)
 - 난임부부 가이드북 제작·배포,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36, 보건복지부) 【완료 과제】

- (사업내용) 산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보험 부가급여 형태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
- (추진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존 50만원에서 다태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하고('12.7월),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13.4월)하여 과제 완료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7, 질병관리본부)

- (사업내용)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지원백신: B형간염, BCG(피내용),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 Hib, 일본뇌염 생백신('14.2월) 폐렴구균('14.5월)

-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으로 무료접종 실시
-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항목 확대(일본뇌염 생백신, 폐렴구균 추가)
-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를 위한 사업 세부계획 마련

○ (성과)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2.8%로 당초목표치(91.0%) 초과달성(사업예산 388,811백만원 중 99.9% 집행)

□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새아기 장려금) 도입(1-38, 기획재정부)

- (사업내용)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 지급
-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및 신청·지급 등 절차 연계

○ (성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1-3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생영유아·모성의 건강보장
- (성과) '15년 신규 사업으로 7.1일부터 시행
 -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 전 사업효과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14.1~11월)
 - 고위험 임신부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및 수행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4~10월)
 -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 조사('14.1~11월)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결위에서 '15년 예산 반영

□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1-40,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성과)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14년도에는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 이로 인해 '14년도 목표 미달성(사업예산 5,000백만원의 1.0% 집행)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추진타당성 확보('14.11월) 및 '15년 사업예산 확보('14.12월)
 -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예비타당성 결과가 '14.11월에 통보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협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5.10.30부터 사업 시행

□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및 출산비용을 지원함

- (교육지원) 저학력·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 (출산비용 지원) 출산 및 유산·사산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성과) 교육이수 인원은 50,187명으로 당초목표치(63,000명)의 79.7%를 달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은 610명으로 당초목표치(700명)의 87.1% 달성

- 교육이수자 지원예산(1,116백만원)의 78.0%(87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예산(956백만원)의 64.0%(610백만원)을 집행함
-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교육지원은 이용 여성장애인의 감소에 따라 사업운영을 축소하였고,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을 감소 추세에 따른 것임

〈표 2-13〉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1-35)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 건수(건) ¹⁾	76,000	83,690	110.1	34,000	34,264	100.8	85,694	85,694	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36)	해당 없음 ²⁾	완료 과제			관련고시 개정	관련고시 개정완료	100	완료 과제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7)	영유아 완전 접종률 (%) ³⁾	91.0	92.8	101.9	90%	98.3%	109.2	388,811	388,608	99.9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새아기 장려금) 도입(1-38)	개정안 마련 ⁴⁾	1	1	100.0	-			비예산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1-39)	고위험 임신부 지원 지침 마련 ⁵⁾	-			-			-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1-40)	지원 아동수(명) ⁶⁾	36,301	-	0.0	-			5,000	48	1.0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	교육이수 인원(명)	63,000	50,187	79.7	-			1,116	874	78.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명)	700	610	87.1	-			956	610	64.0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건수(건)

2) '13년 성과지표는 1일 사용한도 폐지 및 이용기관 확대(관련 고시 개정)

3) '13년 성과지표는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율임. 영유아완전접종률은 (기본접종 3종(B형간염3차, DTaP3차, 폴리오3차) 완전접종자 수/접종대상자 수)×100

4)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법안 통과여부

5) '15년 신규 사업으로 '15.7.1부터 시행

6) 예비타당성 결과가 '14.11월에 지연 통보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협의 등의 준비기간으로 '15.10.30부터 사업 시행

[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세부영역)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42,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 안전한 약물사용 관련 무료 상담, 약물 상담사례 DB 구축·운영
 - 지역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거점 지역센터 미팅 개최(2회)
 - 전문 의료인 대상 「임산부 약물상담 전문가 과정」 실시(2회)
 - 마더세이프와 함께하는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 제작·배포
 - 권역별 의료인 교육,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강좌, 「생식발생독성연구 및 마더리스크 최신 동향」 심포지엄 개최
- (성과)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가 9,382건으로 당초목표치(8,200건) 초과 달성(사업예산 267백만원 전액 집행)

□ 영유아 건강관리(1-4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선천성 장애 여부를 파악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사망과 영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신생아기 조기검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 등 지원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선천성 난청조기 진단 및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추진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 관리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사업
- (성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의 장애 예방률을 98.3%로 유지하여 당초목표치(98.2%) 초과 달성(사업예산 13,050백만원 전액 집행)

□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1-44,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 도모
 - 영양플러스사업 현황조사 및 월별 실적 관리 등 실시
- (성과) 2014년도 수혜 받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수는 88,836명으로 당초목표치(95,000

명)의 93.5%를 달성하였고, 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90.4점으로 당초목표치(91.5점)의 98.8% 달성(사업예산 18,060백만원 전액집행)

- '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적극적 대상자 확대추진 미흡

〈표 2-1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42)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 건수(건)	8,200	9,382	114.4	8,500	8,157	96.0	267	267	100.0
영유아 건강관리(1-43)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장애 예방률 ¹⁾	98.2	98.3	100.1	98.2	98.3	100.1	13,050	13,050	100.0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1-44)	해당년도 수혜받은 모든 대상자 수(명) ²⁾	95,000	88,836	93.5	-			18,060	18,060	100.0
	사업참여자 만족도 점수(점)	91.5	90.4	98.8	-					

주: 1)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없는 PKU 환아 수/전체 PKU 환아 수×100)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포괄보조)으로 이관됨

[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세부영역)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강화(1-45,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은 한 아기는 12일, 쌍둥이는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임
- (성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은 15.1%로 당초목표치(14.0%) 초과달성(사업예산 38,825백만원 전액 집행)

〈표 2-1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1-45) ¹⁾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¹⁾²⁾	14.0	15.1	107.9	14.0	13.5	96.4	38,825	38,825	100.0

주: 1) '13년 사업명: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강화

2)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연간수혜자 수/연간출생아 수×100(%)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세부영역)

□ 보육·교육비 지원확대(1-4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 전 계층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
 - 지방의 보육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14년부터 국고보조율 15%p 인상(지방 50% → 65% 인상)
 - 서울의 국고보조율은 30%에서 35%로 인상
 - 보육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보육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 저소득층 보육료 외 시설이용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14.5월)
- (성과) 보육료 지원 만족도는 67.9%로 당초목표치(60.0%) 초과달성(사업예산 5,051,939백만원 전액 집행)

□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1-47-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3~5세 아동에게 수준 높은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제공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 공통교육과정 적용 및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대상 3~5세 누리과정 등 컨설팅을 시행하여 누리과정의 현장적용상의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를 통한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동 활용, 복지부·교육부로 이원화된 현 관리·감독 체계 유지
- (성과) 3~5세 누리과정 연수교사 수는 112,820명으로 당초목표치(104,872명) 초과달성(사업예산 451,000백만원 전액 집행)

□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1-47-②, 교육부)

- (사업내용)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전 계층에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 (성과) 만3~5세 취원율은 92.4%로 당초목표치(91.0%) 초과달성(사업예산 3,416,621백만원 전액 집행)
- 만3~5세 누리과정 전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13년 대비 유치원 취원율이 0.3%p 증가하는 등 유아의 교육기회는 확대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은 경감됨

〈표 2-16〉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보육·교육비 지원확대(1-46)	보육료 지원 만족도(%)	60.0	67.9	113.2	55.0	62.9	114.4	5,051,939	5,051,939	100.0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복지부)(1-47-①)	3~5세 누리과정 연수 교사 수(명)	104,872	112,820	107.6	89,872	96,448	107.3	451,000	451,000	100.0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교육부)(1-47-②)	만3~5세아 취원율(%) ¹⁾²⁾	91.0	92.4	101.5	24,964	26,495	106.1	3,416,621	3,416,621	100.0

주: 1) 성과지표 측정산식인 만3~5세아 취원율은 (취원아 수/취원대상아 수)×100임

2) '13년 성과지표는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비(원)

[2] 양육수당 지원 확대(세부영역)

□ 양육수당 지원 확대(1-4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성과)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는 74.0점으로 당초목표치(74.0점) 달성(사업예산 1,887,141백만원 전액 집행)
 - 지방의 보육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14년부터 국고보조율 15%p 인상(지방 50%→65% 인상)
 - 서울의 국고보조율은 30%에서 35%로 인상
 -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보육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1-4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성과) 국내입양비율은 64.3%로 당초목표치(61.0%) 초과달성(사업예산 29,534백만원 중 83.6% 집행)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만14세 미만까지 지원

〈표 2-17〉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양육수당 지원 확대(1-48)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¹⁾	74.0	74.0	100.0	85.0	93.7	110.2	1,887,141	1,887,141	100.0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1-49)	국내입양비율(%) ²⁾	61.0	64.3	105.4	—			29,534	24,687	83.6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양육수당 수혜율(%) =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수) × 100

2)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국내입양아 수/(국내입양아 수+국외입양아 수) × 100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세부영역)

□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50, 교육부)

- (사업내용)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장학금 지원시 우대
- (성과) 제도개선 사업 개수 3개로 당초목표치(3개) 달성(사업예산 122,500백만원 중 79.0% 집행)
 - (예산집행 부진사유) 2학기 성적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미달 및 휴학 등으로 1학기 지원대상 24,831명 대비 4,954명 감소함

□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 후 재고용(1-51, 인사혁신처)

- (사업내용)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 퇴직 후 재고용 추진
 - 희망자에 한하여 재고용여부 심사 및 재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
- (사업 미추진 사유) 국가재정부담, 높은 청년실업과 부정적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52, 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 혜택 부여(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 단, 감면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시 감면세액 추정
- (추진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모든 감면은 일몰제로 운영 중이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

한 취득세 감면은 '12년에서 '15년으로 일몰기간을 연장함(비예산사업)

－ 따라서 다자녀가구 감면 사항과 관련하여 일몰기간 종료시점에 검토할 예정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3,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 지원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겐 혜택부여

○ (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6항) 개정('14.12.26) 및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명칭변경)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업무 매뉴얼에서 대출업무 시행세칙으로 변경('15.7.1 이후 적용)

〈표 2-1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50)	제도개선 사업개수(개)	3	3	100.0	2	2	100.0	122,500	96,728	79.0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 후 재고용(1-51)	해당 없음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52)	해당 없음 ¹⁾	-						비예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 개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예산		

주: 1)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15년까지 적용되므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이 없음

[4]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세부영역)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4, 교육부)

○ (사업내용)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

－ 공교육 내실화 정책 지속 추진 및 영유아 사교육 경감 등 사교육 수요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14.3.11)

-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6회)
- 지역별 정책(매뉴얼)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학교 현장 보급(7회)
- 동법 시행령 제정('14.9.12 시행)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14.12.18)
- 불법·탈법 운영 학교 지도·점검('14.1월~)
- (성과)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를 실시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20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총사교육비가 '11년부터 3년 연소 감소추세 유지('14.2.28)

〈표 2-1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4)	'사교육비 의식 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회)	1	1	100.0	1회	1회	100.0	비예산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세부영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5,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보육인프라 확보 및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국공립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 (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를 설치하여 당초목표치(171개소) 달성(사업예산 64,800백만원 중 87.1% 집행)
 - 기업 사회공헌 연계, 신축 이외에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 적극 추진
 - (예산집행 부진사유)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50:50)에 따라 지자체 부담이 소요되어 국비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게 신청하는 경우 발생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6,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창업농·후계인력 등 젊은 세대가 육아 걱정 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 포함) 설치 및 운영지원
- (성과)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이동 놀이버스 시설 3개소를 지원하여 당초목표치(10개소) 30% 달성(사업예산 1,482백만원 중 40.7% 집행)
 -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향후계획)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신청 부족으로 '15년도 신규설치 예산을 7개소로 조정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등 지역수요가 충분한 사업을 반영하는 등으로의 제도 개선

〈표 2-20〉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 수(개소)	171	171	100.0	96	97	101.0	64,800	56,462	87.1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6)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이동 놀이버스 지원 시설 수(개소)	10	3	30.0	10	6	60.0	1,482	603	40.7

[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세부영역)

□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1-57,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시설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통과시 인증 부여
 - 인증참여 및 획득 어린이집의 지속 증가로 보육서비스 질 관리 기반 마련 및 시설 전반 질적 수준 향상
 - 평가인증 심의기준 강화, 확인점검 확대 등으로 인증을 받은 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 유지·향상 독려
 - 평가인증 지표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제도 정착 및 보육서비스 질 개선 ('14.5월,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111.0%로 당초목표치(105.0%) 초과달성(사업예산 8,600백만원 전액 집행)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배정 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정하도록 추진
 - 교사연수, 품질관리 컨설팅, 교사 자율모임 등 사후 품질관리 실시
 - 공공형 어린이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86,912명으로 당초목표치(78,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72,054백만원 중 98.9% 집행)

□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운영하여 자격관리 지원

-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업무경력요건 및 기간 강화, 이수 교과목 상향 조정, 보육실 습 요건 내실화 등으로 전문성 강화('14.3월~)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증 발급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교육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13.7월~'14.2월)

○ (성과) 원장·보육교사 84,167명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당초목표치(52,000명) 초과달성 (사업예산 3,270백만원 중 99.8% 집행)

□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1-60, 교육부)

- (사업내용) 누리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체계 구축 및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통해 유치원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성과) 사립유치원 평가 실시율은 19.5%로 당초목표치(34.2%)의 57.0% 달성(사업예산 2,900백만원(공·사립 포함) 전액 집행)
 - (목표달성 부진사유) 평가는 3년('14~'16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도 여건에 따라 연도별 평가 유치원 수는 변동 가능함

〈표 2-2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1-57)	평가 인증률(%) ¹⁾	105.0	111.0	105.6	90.0	98.1	109.0	8,600	8,600	100.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8)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명) ²⁾	78,000	86,912	111.4	70,000	85,000	121.4	72,054 ³⁾	71,233	98.9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9)	보수교육 인원(명) ⁴⁾	52,000	84,167	161.9	52,000	65,667	126.3	3,270	3,263	99.8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1-60)	사립유치원 평가 실시율(%) ⁵⁾	34.2	19.5	57.0	36.8	38.2 ⁶⁾	103.8	2,900	2,900	100.0

주: 1)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평가인증 통과시설/전체어린이집

2)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 현황임

3) '14년 시행계획 기준 예산은 국비만 포함된 예산임

4)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시·도별 보수교육 인원 및 온라인 보수교육 인원

5) 사립유치원 평가실시율은 (3년 주기 1년차('14년) 평가실시 사립유치원 수/총 사립유치원 수)×100

6) '13년 유치원 평가실시율((2주기 3년차('13년) 평가실시 유치원 수/총 유치원 수)×100)은 국공립을 포함한 유치원 평가실시율이며, '13년 사립유치원 평가실시율은 20.5%, 달성률은 55.7%임

[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세부영역)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1-61,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시간연장형(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 확대하여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 (성과) 시간연장형(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어린이집을 9,215개소 확충하여 당초목표치(9,300개소)의 99.1% 달성(사업예산은 114,338백만원이었으나, 114,388백만원으로 초과집행)
 - (예산 초과집행 사유) '14년도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액은 50,766백만원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제공을 위해 54,882백만원으로 증액함

□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1-62, 교육부)

- (사업내용)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
 - 방과후 과정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 (성과)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이 99.1%로 당초목표치(99.0%) 초과달성(사업예산 30,298백만원 전액 집행)

□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1-6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시설양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저소득,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계층의 우선입소 조치 강화
- (성과)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완료('14.4월)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직장·부모협동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상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 저소득층, 맞벌이 등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필요한 계층이 입소 순번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입소 가능하도록 입소순위 공개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4,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보호자의 시간선택제 근로, 병원 이용 등의 사유발생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월 40시간 제공함(시간당 보육료 4천

원 중 50% 지원)

○ (성과)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은 97개소로 당초목표치(50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7,600백만원 중 79.4% 집행)

－ (예산집행 부진사유) 당초 12개월('14.1월~12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14년 4월에 1차 공모가 완료되었고, 7월에 사업 확대(기본형 외 일반형 추가)에 따른 2차 공모를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이 지연됨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5,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지원을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자녀의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 제공 및 부모의 육아정보 교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설치·운영

－ 가족품앗이 실무자 기본교육, 우수사례 공유, 품앗이 지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영·관리 내실화 도모

○ (성과) 공동육아나눔터는 84개소로 당초목표치(76개소) 초과달성,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이용자수는 216,526명으로 당초목표(170,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092백만원 중 99.6% 집행)

〈표 2-22〉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집행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1-61)	시간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수 합계(개소)	9,300	9,215	99.1	8,700	9,258	106.4	114,338	114,388	100.0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1-62)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 ¹⁾	99.0	99.1	100.1	99.0	99.0	100.0	30,298	30,298	100.0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1-63)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적용 ²⁾	완료	완료	100.0	입소우선순위 개선방안 마련 및 지침 반영	지침반영	100.0	비예산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4)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개소) ³⁾	50	97	194.0	시범 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100.0	7,600	6,032	79.4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5)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개소)	76	84	110.5	80	72	90.0	1,092	1,088	99.6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이용자수(명)	170,000	216,526	127.4	80,000	164,589	205.7			

주: 1)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전체 유치원×100

2) '13년 성과지표는 실수요자 계층을 위한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수립 3) '13년 성과지표는 시범사업 실시여부

[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세부영역)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6,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아이돌보미가 취업부모의 자녀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비용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시간제 돌봄)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돌봄)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1세(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 (성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건수는 3,985,666건으로 당초목표치(2,200,000건) 초과달성,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는 88.5점으로 당초목표(88.4점) 초과달성(사업예산 120,096백만원 전액 집행)

□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67,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차등지원
 - 등·하교 동행, 식사 및 간식, 학습지도 등 돌봄 제공
- (성과)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 수는 23,930명으로 당초목표치(20,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은 과제 1-66에 포함)

〈표 2-2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 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6)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건)	2,200,000	3,985,666	181.2	200만	291만	145.5	120,096	120,096	100.0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점)	88.4	88.5	100.1	87.5	90	102.9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67)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이용 아동수(명)	20,000	23,930	119.7	-	-	-	(1-66)과제에 포함		

[5]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세부영역)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1-68,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모든 취업부모 중 가정 내 개별 양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성과)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인원은 1,207명으로 당초목표치(1,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은 과제 1-66에 포함)

－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및 지원가구 확대(만24개월 이하)

〈표 2-24〉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8)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인원(명)	1,000	1,207	120.7	500	869	173.8	(1-66)과제에 포함		

[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세부영역)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상담·급식·학습지도, 지역 사회연계 등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 정부지원 강화를 통한 돌봄인프라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의무화
- － 우수인력 양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서비스 질 제고
- －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정부적 통합 돌봄지원·관리체계 구축

○ (성과) 방과후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85.8점으로 당초목표치(85.7점) 초과달성(사업예산 272,296백만원 중 97.6% 집행)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70,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부모의 맞벌이·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나홀로 청소년들이 비행·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제공

- －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 대상 발굴 및 종합서비스 지원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14.1~12월)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현장점검 및 컨설팅(연중수시)
- － 지역자원 연계 사업 운영
- － 범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사업 추진(연중)
- －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 공무원 워크숍('14.12월)

- (성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는 청소년이 84.1점, 학부모가 83.9점으로 당초목표치(각각 84.1점, 83.9점) 달성(사업예산 30,397백만원 중 98.3% 집행)

□ 초등 돌봄교실 확대(1-71, 교육부)

- (사업내용)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제공, 추가 돌봄 대상 학생을 위하여 오후 10시까지 초등돌봄교실 운영
- (성과) 초등돌봄교실 수는 10,966개로 당초목표치(11,000실) 99.7% 달성(사업예산 282,384백만원 전액 집행)
 - '14년 1~2학년 대상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른 '13년 상반기 단순 희망에 따른 예측 수요(16,600실) 대비 실제 이용수요(11,000실)는 감소함에 따라 목표치 조정('14년 성과 목표 설정 시 방과후 돌봄 실수요 조사에 따라 조정하기로 명시함)
 -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전원 수용(221,310명)하였으며 학생·학부모 만족도는 92.5%를 달성하여 양적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1-72, 교육부)

- (사업내용)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 정착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 (성과)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는 538,108개로 당초목표치(60만개)의 89.7% 달성(사업예산은 지방비 100%임)
 - (목표달성 부진사유) 시·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사업비가 '13년 2,096억원에서 '14년 1,369억원으로 감축되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감소했으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13년 323,888개에서 '14년 294,396개로 감소함
 - 한편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학생 80.7점, 학부모 79.7점으로 '13년 대비 각각 2.0%p, 1.6%p 증가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73,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 지원
 -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 (성과) 학교 등 과건예술 강사 수는 7,679명으로 당초목표치(7,1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77,381백만원 전액 집행)

〈표 2-25〉 취학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9)	방과후 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¹⁾	85.7	85.8	100.1	84.5	85.6	101.3	272,296	265,798	97.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70)	청소년만족도(점)	84.1	84.1	100.0	83.9	83.9	100.0	30,397	29,867	98.3
	학부모만족도(점)	83.9	83.9	100.0	83.5	84.2	10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수(명)	-	-	-	8,000	8,200	102.5	-	-	-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1-71)	초등 돌봄교실 운영 교실수(실) ²⁾	11,000	10,966	99.7	7,400	7,439	100.5	282,384	282,384	100.0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1-72)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만개) ³⁾	60	53.8	89.7	60	57	95.0	해당 없음(지방비 10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73)	학교 등 과건 예술강사 수(명) ⁴⁾	7,100	7,679	108.2	80	89.2	111.5	77,381	77,381	100.0

주: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 보고서

2) 2014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14년 성과목표는 16,600실이었으나 방과후 돌봄 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예 정임을 명시한 바 있음. 2014년 1~2학년 대상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단순 희망 예측 수요(16,600실) 대비 실제 이용수요(11,000실)는 감소하여 목표치 수정

3) 교과 프로그램 수+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4) '13년도 성과지표는 수혜자 만족도(점) ((Σ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은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1]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세부영역)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1-74,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통합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전달체계)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보건소·학교·사회복지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 지원
 - (서비스 내용)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제공(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 (성과)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은 25.5%로 당초목표치(23.0%) 초과달성(사업 예산 65,236백만원 전액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수 420,596명 중 107,127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 취약계층 아동의 25.5%가 이용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통계, '14년 말 기준)
 -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 시·군·구를 219개로 확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보호 실시
 - 맞춤형 사례관리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

〈표 2-26〉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1-74)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¹⁾	23.0	25.5	110.9	17	22.1	130	65,236	65,236	100.0

주: 1)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은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취약계층 아동 수)×100(%)

[2]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세부영역)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1-75,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 청소년전화, 문자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사회안전망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의 보호지원 확대

○ (성과)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변화정도는 16.9p로 당초목표치(16.8p) 초과달성(사업예산 24,498백만원 중 97.3% 집행)

〈표 2-27〉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1-75)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변화정도(p)	16.8	16.9	100.4	12.0	16.7	139.2	24,498	23,830	97.3

[3]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세부영역)

□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6,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아동(후원자·보호자)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18세 미만까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월 3만원 한도)하여 주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 시설 생활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
 - (사용용도)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 취득 비용·취업훈련·창업지원금·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 (가산금리) 고시금리+장려금리(아동적립예금 1.0%, 매칭펀드 0.6%)
- (성과) 퇴소아동 자립률은 77.4%로 당초목표치(76.5%) 초과달성(사업예산 16,038백만원 중 97.6% 집행)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77, 1-85-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청소년 전화, 문자상담, 사이버 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 상담 제공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동반자를 통해 심리, 정서 서비스 제공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 지원
- (성과) 서비스 수혜 청소년 수는 14,953명으로 당초목표치(13,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5,824백만원 중 99.6% 집행)

〈표 2-28〉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6)	퇴소아동 자립률(%) ¹⁾	76.5	77.4	101.1	77.0	76.5	99.4	16,038	15,657	97.6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77, 1-85-①)	서비스 수혜 청소년 수(명)	13,000	14,953	115.0	-			5,824	5,802	99.6

주: 1) (취업자+대학진학자)/퇴소아동 수×100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1]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세부영역)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1-7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발달·정서행동문제 및 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
 - 발달검사·발달지체 위험 영유아 중재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진단 및 조기개입 서비스,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치료,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 아동 심리검사·상담·교육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 실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 성과평가
- (성과) 취약계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지원 아동 수는 71,455명으로 당초목표치(71,455명) 달성(사업예산은 43,922백만원이었으나 46,203백만원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105.2%임)
 - (예산 초과집행 사유) 이용자 증가로 인해 예산 추가 집행(포괄보조사업으로 조정가능)
 -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한 유형으로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를 개발, 공모 신청 후 성과목표 및 예산이 결정되고, 지자체 자체 예산 편성으로 운영됨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1-7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취학 전 아동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로 국가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하고, 아동기 지적환경 격차를 개선하여 출발기회의 형평성 도모

-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대여), 독서관련 부모교육 등 방문서비스 제공
- (성과) 취학 전 아동 도서바우처 이용자 수는 160,790명으로 당초목표치(165,000명)의 97.5% 달성(사업예산 17,282백만원 중 97.4% 집행)
- '15년도 사업 폐지 계획에 따라 '14년도 예산 축소 운영

〈표 2-29〉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1-78) ¹⁾	취약계층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아동 수(명)	71,455	71,455	100.0	26,232	47,296	180.3	43,922	46,203 ²⁾	105.2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1-79)	취학 전 아동 도서바우처 이용자 수(명)	165,000	160,790	97.5	205천명	260천명	126.8	17,282	16,835	97.4

주: 1) 아동발달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사업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되므로 '14년도 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예산은 미정이었음. 본 서비스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자체 공모('14.2월) 이후 확정되었고, 지자체 자체에 산편성으로 운영됨

2) 이용자 증가로 인하여 예산 추가집행(포괄보조사업으로 조정 가능함)

[2]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세부영역)

□ 휴먼네트워크 확대(1-80,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저소득·소외계층에게 역할 모델 제시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멘토링 수행기관간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교육사업, 멘토링 포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멘토링 지원
- (협력체계 구축)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협력·지원 체계 강화 및 확대, 지역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전달체계 확대, 다양한 직업군 멘토폴 구성 및 협력기관 연계
- (멘토링 전문성 강화) 멘토링 코디네이터 기본·심화 교육과정, 멘토 교육과정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인 및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도구 개발' 조사연구 실시
- (홍보 및 사회적 붐 조성) 멘토링 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멘토링 사례공모전 실시, 멘토링 협력기관과 코디네이터 및 멘토·멘티 간 만남의 장 마련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격려를 위한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 (성과) 멘토링 시스템 상 협력기관 수는 누적 756개소로 당초목표치(600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1,06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30〉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휴먼네트워크 확대(1-80)	멘토링시스템 상 협력기관 수(누적 개소)	600	756	126.0	300	505	168.3	1,060	1,060	100.0

[3]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세부영역)

□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81,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

- 방과후, 주말 등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중소규모의 청소년 시설 지속 확충
- 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소년 활동 공간 제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 (성과)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연인원)은 41,311,665명으로 당초목표치(38,750,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74,244백만원 전액 집행)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82,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 개발, 인성·사회성 함양 제고를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

- 청소년 자원봉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청소년의 나눔 인성 함양
-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침 수립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 2014년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개최,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연계서비스 실시, 청소년 자원봉사사이트 안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성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수혜 청소년 수는 425,635명으로 당초목표치(288,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960백만원 전액 집행),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3,183,810명으로 당초목표치(2,840,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78백만원 전액 집행)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3,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국제적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 교류 참가국과의 우호·협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국제교육 지원

- (국가 간 약정 및 합의에 의한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개최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국제회의·행사 파견
- (국제행사·회의 개최 및 지원) 국제청소년포럼,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스카우트연맹 야영대회,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 등

○ (성과)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만족도는 81.8점으로 당초목표치(83.0점)의 98.6% 달성(사업예산 4,519백만원 중 98.8% 집행)

□ 문화바우처 지원(1-84,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비용 지원을 통한 문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문화누리카드를 신청자 전원에게 발급하고 이용기간 단축으로 문화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 '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로 통합됨

- 가맹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카드 이용여건 개선 및 다변화

○ (성과)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는 1,480,000명으로 당초목표치(1,400,000) 초과달성(사업예산 71,614백만원 중 95.5% 집행)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5-②)

○ (사업내용)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지방 강소기업 등의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지방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

○ (성과)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86.1점으로 당초목표치(91.0점)의 94.6% 달성(사업예산 4,962백만원 중 93.3% 집행)

〈표 2-31〉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81)	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자 수(연인원)	38,750,000	41,311,665	107.3	38,000천명	45,064천명	118.6	74,244	74,244	100.0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82)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수혜 청소년 수(명)	288,000	425,635	147.8	285,600	572,863	200.6	960	960	100.0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인원(명)	2,840,000	3,183,810	112.1	2,750천명	2,907,459	105.7	178	178	100.0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3)	참가자 만족도(점)	83.0	81.8	98.6	81.5	83.6	102.6	4,519	4,463	98.8
문화바우처 지원(1-84)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명)	1,400,000	1,480,000	106.0	-	-	-	71,614	68,418	95.5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5-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¹⁾	91.0	86.1	94.6	91	87.5	96.2	4,962	4,628	93.3

주: 1) 7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1]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세부영역)

□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1-8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수요자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아동 안전교육 활성화
 - － 교사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대처능력 향상
 - － 어린이집 아동 등 유아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 아동은 성인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인식도 향상 교육의 홍보 강화
- (성과) 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 수는 53,360명으로 당초목표치(32,000명) 초과달성, 예방사업전후 인식도 점수는 97.7점으로 당초목표(80.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1,003백만원 중 97.6% 집행)

□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1-87-①, 국민안전처)

- (사업내용)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성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률은 94.0%로 당초목표치(95.0%)의 99.0% 달성(사업예산 19,000백만원 중 99.0% 집행)

□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1-87-②, 교육부)

○ (사업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통안전망 구축 도모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보행안전도우미(Walking School Bus) 시범학교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가정책조정회의('14.3.20)에서 확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 추진

○ (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23회로 당초목표치(414회)의 79.2% 달성(사업예산 55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3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아동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1-86)	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32,000	53,360	164.2	31,000	32,368	104.4	1,003	979	97.6
	예방사업전후 인식도 점수(점)	80.0	97.7	122.1	75	97.7	130.3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국민안전처)(1-87-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률(%) ¹⁾	95.0	94.0	99.0	95.0	98.5	103.7	19,000	18,816	99.0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교육부)(1-87-②)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414	523	79.2	-			550	550	100.0

주: 1) (국비집행실적/전체국비)×100%

[2]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세부영역)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1-88,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성범죄·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

○ (성과) CCTV 설치율은 113.8%로 당초목표치(95.0%) 초과달성(사업예산 77,381백만원 전액 집행), 통합관제센터 구축률은 100.0%로 당초목표치(95.0%) 초과달성(사업예산 18,718백만원 전액 집행)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9,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지역주민과 학교장 등에 우편고지

- 성범죄자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및 취업 제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범죄 동향 분석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홍보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전예방과 제도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송출
- (성과) 성범죄자 알람사이트 연간 접속자 수(연간)는 4,805,000명으로 당초목표치(2,827,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6,310백만원 중 94.2% 집행)

□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1-90,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및 피해자 상담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성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
- (성과) 통합지원센터 수혜자 수는 28,487명으로 당초목표치(24,500명) 초과달성, 이용자 만족도는 85.0점으로 당초목표(79.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17,896백만원 전액 집행)

〈표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1-88)	CCTV 설치율 (%)	95.0	113.8	119.1	95.0	107.0	112.6	77,381	77,381	100.0
	통합관제센터 구축률 (%)	95.0	100.0	105.0	90.0	100.0	111.1	18,718	18,718	100.0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9)	성범죄자 알람사이트 연간 접속자수(명, 365일)	2,827,000	4,805,000	170.0	2,356천	2,946천	125.0	6,310	5,946	94.2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1-90)	통합지원센터 수혜자 수(명) ¹⁾	24,500	28,487	116.3	23,800	27,450	115.3	17,896	17,896	100.0
	이용자 만족도(점)	79.0	85.0	107.6	77	82	106.5			

[3]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세부영역)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1-91,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도모를 위하여 학대피해 아동 보호지원
 - 아동복지법 개정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및 재학대 발생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성과) 아동보호서비스 제공률은 1.3%로 당초목표치(0.7%) 초과달성(사업예산 1,769백만원 전액 집행)

〈표 2-34〉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주: 1) (피해아동보호건수+학대발생 예방 교육, 모니터링이 제공된 잠재위험 또는 일반사례건수)/추계아동인구 수×1000임

2) '13년 성과지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일반사례+잠재위험사례)

[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세부영역)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1-92, 교육부)

○ (사업내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피해지원 전문기관 설립 추진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지원

○ (성과) 예방교육 만족도는 80.6%으로 당초목표치(72.5%) 초과달성(사업예산 5,864백만원 전액 집행)

□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1-93, 경찰청)

○ (사업내용) 재향경우회·대한노인회 소속 노인전문인력을 선발, 취약시간대 학교주변 놀이터 등 집중순찰로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 급증하는 성·학교폭력, 유괴·실종, 학대 등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 참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아동·학부모에 대한 안심서비스 강화

○ (성과) 아동안전 지킴이는 6,470명으로 당초목표치(6,470명) 달성(사업예산 24,009백만원 중 99.9% 집행)

〈표 2-35〉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주: 1) '13년 과제명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아동안전 지킴이)으로 성과지표는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만족 응답 비율)'임

[5]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세부영역)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1-94,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해소 및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 운영을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강화

- 학령전환기(초4년·중1년·고1년/156만명)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온라인 진단조사, 발굴 및 위험수준별 상담·치료 연계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대상 기숙형 치유폭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치료 매뉴얼 보급
-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로 전문적 치유서비스 적기 제공
- 상설 인터넷치유기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건립·운영('14.8월~)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안정적 운영

- 청소년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및 규제 논의 창구 단일화
- 부모요청시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가능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추진
-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위반행위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성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은 70.2%로 당초목표치(70.0%) 초과달성(사업예산 4,588백만원 중 97.1% 집행)

□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5-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도모

- 청소년 흡연·음주 등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제도개선
- 상습 흡연·음주, 위기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치료지원
- 담배·주류 불법판매업소 모니터링 및 종사자 대상 교육

○ (성과)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 지원 건수가 15,290명으로 당초목표치(7,7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40백만원 전액 집행)

□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5-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 (성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청소년흡연율은 9.2%로 당초목표치(11.1%) 초과달성(사업예산 11,560백만원 중 99.6% 집행)

□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5-③,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주류 판매 및 음주 제한 구역 설정, 광고 규제 등 추진
 -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 폐해 예방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중독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성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월간 음주율은 16.7%로 당초목표치(15.0%)의 98.0% 달성(사업예산 8,176백만원 전액 집행)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6,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내용) 식품안전·영양관리 전문 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 위생 및 영양관리 필요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91.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필요
- (성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는 89.6점으로 당초목표치(87.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24,023백만원 중 79.3% 집행)
 - (예산집행 부진사유) 지자체장의 교체('14.6월) 및 기초연금 시행('14.7월)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어 지자체별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14년 신규 설치된 센터(54개소) 중 다수(28개소)가 11월 이후 설치되어 운영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단축되었음
 - (향후 계획)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수요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지자체에 센터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16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실적을 반영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1-97,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공공개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

- (성과) 서비스 효과율은 71.0%로 당초목표치(32.1%) 초과달성(사업예산 6,500백만원 전액 집행)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치료·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 인력이 배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 수 130개소 확대

〈표 2-36〉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1-94)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 ¹⁾	70.0	70.2	100.3	70	69	98.6	4,588	4,453	97.1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여성가족부, 1-95-①)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 지원 건수(명)	7,700	15,290	198.6	7,500	7,733	103.1	140	140	100.0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1-95-②)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청소년흡연율(%) ²⁾	11.1	9.2	117.1	11.2	9.7	115.5	11,560	11,509	99.6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1-95-③)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월간음주율(%) ³⁾	15.0	16.7	98.0	19.5	16.3	119.6	8,176	8,176	100.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6)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점) ⁴⁾	87.0	89.6	103.0	85	86.8	102.1	24,023	19,058	79.3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1-97)	서비스 효과율(%) ⁵⁾	32.1	71.0	221.0	31	39.6	127.7	6,500	6,500	100.0

주: 1) 인터넷 치유학교 참가 후 중독 개선을 측정

2)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조사대상 청소년

3)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조사대상 청소년

4)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5) (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점수-6개월 이후 SDQ-Kr점수)가 호전된 아동·청소년 수/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1]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세부영역)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요보호아동, 빈곤아동 중심의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추세에 맞추어 아동에 대한 종합적 정책 마련 필요
- －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취약한 부문 및 지표를 발굴하고 핵심 정책과제와 개선목표를 설정
- (성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14.12.29)했으나, 당초목표(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는 미달성(비예산사업)
- － (목표달성 부진사유) 최종 정책 과제 확정을 위한 부처 간 조율 등 다소 지연

- '15.5.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완료

□ 청소년정책 14년 시행계획 수립(1-99,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수립·추진하도록 함
- (성과) 범정부 차원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14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37〉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8)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¹⁾	계획수립	아동정책실무 위원회 심의(12.29)	0.0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100.0	비예산		
청소년정책 14년 시행계획 수립(1-99)	시행계획 수립여부 ²⁾	수립	수립	100.0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100.0	비예산		

주: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회 구성

2) '13년도 성과지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임

[2]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세부영역)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1-100, 보건복지부) 【완료 과제】

- (사업내용) 현실성 있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성과)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 주기의 조사로서 '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과제완료)
- 아동종합실태조사 정기적 실시(매 5년)
 - 아동의 건강, 영양, 정서, 안전 등 전 부분 및 가구소득별, 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태 포함
 - 현재 아동복지 관련 통계의 미흡한 항목,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 통계 생산 추진

〈표 2-38〉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1-100)	아동종합 실태조사 실시여부	완료 과제			실시 여부	실시	100	완료과제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정책범위를 소득과 건강보장 중심에서 주거, 노후설계 등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고령사회 대응 시스템 구축을 도모함
- 고령사회분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1] 고령자 고용연장(세부영역)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을 통한 장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제도를 도입한 사

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감액분 일부 지원

- (정년연장형)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
- (재고용형)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이하 감액분 지원
- (근로시간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 (세부실적)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3년 8.3%에서 '14년 9.9%로 증가하였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년 18.5%에서 '14년 23.2%로 증가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99개 사업장에 12,494백만원 지원
- 지방관서 임금결정현황조사 사업장 정년현황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조사('14.4~12월)
-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집중홍보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리플렛 제작 배포('14.3월), 정년연장 정부지원 안내서('14.6월) 제작·배포
 - 20인 이상 사업장(92,000개소)에 임금피크제 등 정부지원제도 안내문 배포('14.11월)
 - 공공기관(5개소) 임금피크제 간담회('14.3월), 임금피크제 등 정부지원제도 6개청 현장순회 설명회('14.7~8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60세 정년 안착 순회 9개 주요 도시 설명회('14.8~9월) 등 개최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개선(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14.12월)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외 사업주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고시 개정 '14.12월): 60세 이상 정년 연장시 연간 840만원 → 1,080만원

○ (성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근로자 수 증가율은 14.6%로 당초목표치(20.0%)의 73.0% 달성(사업예산 29,066백만원 중 43.0% 집행)

-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되어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임금피크제 지원금 개편 예정)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2-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정년폐지·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촉진
 - 정년연장지원금으로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에 따라 1~2년 지원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으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지원
- (성과) 당해연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 인원이 10,527명으로 당초목표치(12,000명)의 87.7% 달성(사업예산 57,705백만원 중 53.9% 집행)
 -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14년부터 지원금 지원대상 제한 및 지원요건 강화(기존의 전체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정년규정 변화 등)로 인하여 달성을 저조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대책 마련
 -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시행
 -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라운드 연착륙을 지원하고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11.12월 국무회의 보고)
 - 주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년제 개선 검토('12.10월 국무회의 통과)
 - 관계부처 합동 「장년고용 종합대책('14.9월)」을 발표, 장년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대책 마련
 - 생애경력설계 등으로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맞춤형 재취업 등 일자리 단계별(재직-재취업-은퇴) 대책 추진
 -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지원 확대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제작·보급('14.3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240개소) 및 업종별(조선업, IT제조업, 유통업) 임금모델 개발·보급,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등
- (성과) 60세 정년 의무화가 노·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제작하여('14.3월) 당초목표를 달성(비예산사업)

□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2-4,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의 근거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당초 목표였으나, 달성하지는 못하였음(비예산사업)

－ (목표달성 부진사유) '13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정년 연장 관련 사항만 통과되고, 본 과제 관련 내용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시행령 입법이 지연됨

〈표 2-39〉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수 증가율(%) ¹⁾	20.0	14.6	73.0	20.0	0.0	0.0	29,066	12,494	43.0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개선(2-2)	당해연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인원 수(명)	12,000	10,527	87.7	6,930	9,814	141.6	57,705	31,128	53.9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제작 여부 ²⁾	제작 완료	제작 완료	100.0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100.0	비예산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2-4)	개정안 시행령 마련 ³⁾	입법 예고	－	0.0	완료과제			비예산		

주: 1) (당해연도 수혜인원 - 전년도 수혜인원)/(전년도 수혜인원)×100

2) '13년 당시 성과지표는 정부대안 보고서 제출이었음

3) '13년 당시 완료과제였음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세부영역)

□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2-5,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대량 퇴직에 대비하여 중장년층 위주의 전직지원기관을 육성하여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베이비붐 등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창업, 생애설계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 중장년 퇴직자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지원, 동행면접 등

○ (성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자 수가 36,164명으로 당초목표치(20,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4,958백만원 중 100.0% 집행)

* 실제 집행액은 14,955백만원이나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로 계산됨

－ '14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증설(25개소 →28개소)

□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2-6,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직업 훈련 참여가 미흡하고,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 특화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육성하여 준·고령자의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50세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고용센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직업 능력이 더 낮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등 54개소)

— 고령자 민간취업기관 운영 내실화 및 기능강화

- 「상담-훈련-취업지원」을 연계한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점진적으로 모든 기관으로 확대 실시(’13년 21개소 84개 과정 → ’14년 50개소 83개 과정)

- (성과)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이 44.8%로 당초목표치(35.0%) 초과달성(사업 예산 4,125백만원 중 99.9% 집행)

□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2-7, 여성가족부) 【완료과제】

- (사업내용) 중·고령 여성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중·고령 여성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성과) 동 과제는 완료과제로 중·고령 여성(취약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됨

〈표 2-4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2-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자 수(명)	20,000	36,164	180.8	7,200	21,357	296.6	14,958	14,955	100.0 ²⁾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2-6)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35.0	44.8	128.0	40.0	39.8	99.9	4,125	4,121	99.9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2-7)	해당 없음	완료 과제			880 ¹⁾	1,257	142.8	완료 과제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중·고령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참여인원 수(명)

2)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3]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세부영역)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일자리의 양적 확충 외에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업무내용·근로조건 등이 다양하고 정부 재정여

달성(사업예산 84,459백만원 중 74.1% 집행)

- (예산집행 부진사유) 국비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해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예산집행률은 미흡하나 성과지표 달성률이 높은 것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비율이 점차 차등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1인당 지원비율이 다소 하락되었으나 지원인원 수 하락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2-11, 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마을주민들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
- (성과) 지속가능일자리 수 창출률은 51.2%로 당초목표치(40.0%) 초과달성(사업예산 19,735백만원 중 93.2% 집행)
 - '14년 387개 마을기업 육성(신규 178, 재지정 209) 지원: 10,117개 일자리 창출, 매출 737억원 달성

□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2,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과 농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 육성(일자리 창출)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2009년 종합대책 수립 후 다양한 정보 제공, 교육, 자금 등의 정책적 지원 수행
 - 귀농·귀촌 민간전문교육기관 공모·선정(36개 기관 44개 과정, 25억원) 및 운영('14.2~11월, 계획 2,350명, 실적 2,450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173건 848억원('14.11월 기준)
 - 귀농인의 귀농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창업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농업창업자금 사용기회 확대,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 2014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총 40개 시·군(신규 8개 시·군 포함, 40억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 2개 시·군(강원 홍천, 전남 구례)
 - 제4회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개최('14.6월, 서울무역전시장)
 - 주요 박람회 귀농·귀촌 정책 안내 부스 참가 및 정보 제공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14.12월)
 -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
 - 단순 정보 제공 이외에 '지역맞춤형 상담의 날' 운영, '소그룹 강의' 등 귀농·귀촌 희망

자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정보 제공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14.4월~)

- 귀농·귀촌 관련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 개최('14.4월) 및 개선 추진(소규모 비닐하우스 기준조건 완화 등 총 9건)

○ (성과) 귀농·귀촌 가구 증가율은 88.0%로 당초목표치(130%)의 67.7% 달성(사업예산 28,940백만원 중 96.5% 집행)

－ (목표 달성 부진사유)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가구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목표설정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경기변화 등에 따라 귀농·귀촌 가구 수의 편차가 발생함

－ (향후 추진 계획) 제대군인 대상 귀농·귀촌 교육시설 등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3, 중소기업청)

○ (사업내용)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한 성공적인 창업 지원

－ 퇴직시니어를 대상으로 경영 지식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 인프라 확충

○ (성과)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은 27.1%로 당초목표치(20.0%) 초과달성(사업예산 4,73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41〉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8) ¹⁾	4개 돌봄분야 일자리 합계(명)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인활동지원)	63,470	68,829	108.4	46,054	84,133	182.7	917,294	889,893	97.0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2-9)	1) 지원예산액(억원) 2) 전문인력 확보(명)	1) 22 2) 4,000	1) 7 2) 3,800	1) 31.8 2) 95.0	1) 30 2) 4,006	1) 30 2) 3,990	99.6	2,173	700	32.2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7) ²⁾	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 중 고령자 채용률(%) (일반인력/전문인력 모두 포함)	25.0	24.7	98.8	25.0 (일반) 12.0 (전문)	26.6 (일반) 12.8 (전문)	106.4 (일반) 106.6 (전문)	84,459	62,549	74.1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2-11)	지속가능일자리 수 창출률(%) ³⁾	40.0	51.2	128.0	20.0	22.6	113.0	19,735	18,395	93.2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2)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⁴⁾	130.0	88.0	67.7	130.0	182.0	140.0	28,940	27,940	96.5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3)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	20.0	27.1	135.5	10.0	24.4	244.0	4,730	4,730	100.0

주: 1)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전체 사업 예산 명시 2) '13년 성과지표는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지속가능일자리 수 = ∑(마을기업 일자리 수) + ∑(사회적기업 전환 일자리 수)
4) (귀농·귀촌 가구 수 - 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100

[4]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세부영역)

□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4,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내용) 퇴직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을 살려 첨단기술정보(논문, 특허 등) 및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산·학·연 연구활동주체에 제공하고, 국·공립과학관에서 전시주제 심층해설 지원, 초·중고 과학교실, 방과후 학교 지식 기부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교육을 지원하며, 퇴직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인력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등을 지원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 ReSEAT 프로그램 인력풀 구축: 활용인원 230명(정보분석 200명, 과학관 큐레이터 30명)
- 과학기술정보분석(첨단정보분석, 수요자 맞춤형 정보분석), 과학관 큐레이터(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과학꿈나무 지식멘토링)

- 퇴직과학기술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 '14년 80개사에 퇴직과학기술자 지원
- (지방 균형발전 기여도 확대) 수도권 소재기업보다 지방 소재기업의 취업률이 높아 지방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확충에 기여

-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 (인력DB 구축) 2,251명 기본정보 등록, 1,698명 이력 등록
- (일자리·일거리 매칭) 고경력과학기술인 Match-Making을 통해 247건 일자리·일거리 연계
-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포털 고도화) 일자리·일거리 자동추천 등 신규기능 개발 및 기존 포털의 메뉴구성, 디자인, 사용자 UI 등 접근성 향상

○ (성과) 과학기술 분석물 다운로드 수가 38,431건으로 당초목표치(35,112건) 초과달성,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이용자수는 200,423명으로 당초목표치(246,477명)의 81.3% 달성, 산·학·연 교류 횟수는 706건으로 당초목표치(701건) 초과달성,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참여자·이용자 만족비율이 89.4%로 당초목표치(80.0%) 초과달성,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 혁신역량 확충사업 관련 좋은 일자리 창출비율은 94.3%로 당초목표치(80.0%) 초과달성, 중소기업기술개발 역량확충 실적은 94건으로 당초목표치(59건) 초과달성(사업예산 3,514백만원 전액 집행)

- (목표 달성 부진사유: 과학관 전시주제심층해설 이용자 수)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등으로 과학관 관람객이 상당수 줄어 전시해설 이용자 수도 감소하였음. 과학관 관람객 수에 의존하는 불가피함이 있음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5-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교사, 사회단체 상담 전문가 출신 등 고령자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취업애로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 등의 업무 수행
 - 퇴직 전문 인력을 통한 전국 49개 고용센터에서 청소년 직업진로개발 및 취업애로 중·고령 구직자 종합상담
 - 자격: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노동·고용분야 관련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의 상담 업무 등 경력자(해당 경력 5년 이상), 만55세 이상
- (성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채용인원이 105명으로 당초목표치(1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913백만원 중 92.1% 집행)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5-②, 교육부)

- (사업내용) 시·도별, 학교별로 지역사회 인사 위주로 진로코치 선발 및 연수,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의 진로코치를 연계하여 직업정보 및 직업현장 경험 공유
- (성과) 커리어 코치 전국 선발 인원 수는 64,490명으로 당초목표치(15,000명) 초과달성(시·도별 자체적으로 사이버연수를 실시하여 예산 미편성)

□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6, 중소기업청)

- (사업내용) 행정·유통분야 퇴직인력 및 청년인력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조직육성 및 시장활성화 자생력 제고
- (성과) 퇴직 및 청년 인력 지원실적이 75명으로 당초목표치(63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800백만원 전액 집행)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7,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대·중소기업 연계 매칭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퇴직 중견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 도모
- (성과)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채용 지원자 수는 780명으로 당초목표치(595명) 초과달성(사업예산 4,785백만원 전액 집행)
 - 연 6회 사업공모를 통하여 1,011개사 1,799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 선정된 지원 대상 중 638개소 780명 지원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8,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사회적 네트워크 향상과 경력개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온라인의 특성상 대부분 청년여성이 활동하고 있어 업무경험이 있는 중·고령 여성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필요
 - 경험이 풍부한 중·고령 여성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여성들의 진로상담 및 고충해결 기여
- (성과) 사이버멘토링에 가입한 50대 이상 여성멘토 수는 64명으로 당초목표치(60명) 초과 달성(사업예산 95백만원 중 80.0% 집행)
 - (예산 집행 부진사유) 조달청을 통한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발생

□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2-1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베이비붐 세대 대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NPO 기관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은퇴한 중·고령자의 유효수요를 사회참여에 적극 활용
 - 참여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소양 5H), 현장실습(기관별 직무교육 포함) 및 지원, 연계·사후관리,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구축
- (성과) 사회참여 실습 연계율이 88.2%로 당초목표치(80.0%) 초과달성(사업예산 790백만원 중 99.1% 집행)

□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20, 교육부)

- (사업내용)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인력들의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세대 간 지식·지혜 나눔을 실현하고, 지역과 학교 중심의 교육기부 수요-공급 연계를 통해 교육기부 의사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이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2014년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개최 등 교육기부에 대한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은퇴 인력들의 교육기부참여 인식과 공감대 형성
 - 52개 기업 등 198개 기관 참여,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12만 여명 관람('14.9월)
 - 대학생 교육기부단 프로그램 운영 시 퇴직교원이 전문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전문 은퇴인력들의 교육기부 참여 확대
 - 교육기부 수요자(수혜자)와 공급자(교육기부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주는 온라인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구축 및 적극적 활용
 - '14년 631개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및 매칭(314,600여명 수혜)
- (성과)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이 381명으로 당초목표치(395명)의 96.5% 달성(사업예산 4,414백만원 전액 집행)

□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2-21, 인사혁신처)

○ (사업내용)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 일자리, 여가생활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봉사·재능나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정보 제공 강화

- 업무담당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 퇴직공무원 봉사단체(상록자원봉사단) 커뮤니티 구축('14.12월)
- 온라인 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인력풀 등록 기능 확대(7,640건)
- 정부인사시스템 추가 연계를 통한 인력풀 확대(213개 지자체)
- 통합검색 기능 구축을 통한 정보검색 기능 강화

○ (성과) 일자리 수집 확대율은 30.0%로 당초목표치(30.0%)를 달성,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는 31,881명으로 당초목표치(18,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00백만원 중 80.0% 집행)

- (예산 집행 부진사유)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표 2-42〉 중·고령자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4)	분석물 다운로드 수(건)	35,112	38,431	109.5	24,518	32,405	132.2	2,014	2,014	100.0
	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이용자 수(명)	246,477	200,423	81.3	218,410	261,448	119.7			
	산·학·연 교류 횟수(건)	701	706	100.7	650	658	101.2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80.0	89.4	111.8	-	-	-			
	좋은 일자리 창출 비율(%)	80.0	94.3	117.9	-	-	-	1,500	1,500	100.0
	중소기업기술개발 역량확충 실적(건) ¹⁾	59	94	159.3	-	-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고용노동부, 2-15-①)	취업지원 병역상담원 채용인원(명)	100	105	105.0	100	100	100.0	913	841	92.1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교육부, 2-15-②)	커리어 코치 전국 선발 인원 수(명)	15,000	64,490	429.9	7,000	80,590	1,151.3	- ³⁾	-	-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6)	상인조직 역량강화(퇴직 및 청년 인력 지원실적(명))	63	75	119.0	150	133	88.7	1,800	1,800	100.0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7)	대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자 수(명)	595	780	131.1	590	541	91.7	4,785	4,785	100.0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8)	사이버멘토링에 가입한 50대 이상 여성멘토 수(명)	60	64	106.7	60	62	103.3	95	76	80.0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2-19)	사회참여 실습 연계율(%)	80.0	88.2	110.3	75.0	82.1	109.5	790	783	99.1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20)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명) ²⁾	395	381	96.5	17개 시도의 추진체계 운영활성화	완료	100.0	4,414	4,414	100.0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2-21)	일자리 수집 확대율(%)	30.0	30.0	100.0	30	30	100	100	80	80.0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명)	18,000	31,881	177.1	-	-	-			

주: 1) 전년도 퇴직과학기술자 지원 인원 수×0.7건 2) '13년 성과지표는 지역별 교육기부 추진체계 운영이었음 3) 사·도별 자체 사이버 연수 실시로 예산 미편성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세부영역)

□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2-2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고령자고용지원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를 홍보하고, 장년 고용의 필요성 및 청·장년층 세대간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실시
 - 2014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식, 2014 베이비부머 일자리 박람회(15개 주요 그룹, 협력사 120개사, 구직자 5,000명 참여), 2050 함께 일하기 토론회 개최('14.9월)
 - 60세 정년연장 및 장년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집중
- (성과) 고령자 고용강조 주간 운영 기념식 1회 개최('14.9월)로 당초목표치(1회) 달성(사업예산 555백만원 중 91.4% 집행)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23,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모집·채용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 홍보, 사전적 예방·홍보 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 모니터링 실시 결과, 188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등 조치(경고 87건, 시정지시 101건)
 - 외국사례, 인권위 결정례 등을 토대로 연령차별 판단자료 지방관서배포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 연령차별 금지제도 홍보 등 적극 추진
- (성과) 모니터링 실시건수는 8,587건으로 당초목표치(10,000건)의 85.9% 달성(사업예산: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 공동 활용)

〈표 2-4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2-22) ¹⁾	고령자 고용 강조주간 운영(기념식 실시)	기념식 실시	기념식 실시(9.23)	100.0	기념식 1회	기념식 1회	100.0	555	507	91.4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23)	모니터링 실시 건수(건)	10,000	8,587	85.9	10,000	7,365	73.6	장년 고용 캠페인 예산 공동활용	장년 고용 캠페인 예산 공동활용	-

주: 1) '13년 성과지표에는 주요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 건수, 장년고용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이 추가로 있었음(100.0% 달성)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세부영역)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2-24,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전망, 제도, 기금운용 개선 방향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을 수립·추진

－ '14년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시행 첫 해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경력 단절 전업주부 연금 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추진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국회 통과 '14.12월)하여 추진기반 확립

- 전업주부 추후납부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전문가 협의 실시 및 입법예고 완료('14.1월 / '14.10~11월)

－ 제4차 재정계산('18년) 전까지 장기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 마련

- 외국의 재정목표 설정 사례 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10회)를 실시하여 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성과)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 국민대상 여론조사 실시('14.4월),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및 자문회의('14.9월), 재정목표 및 지표 관련 전문가 포럼('14.6월), 재정목표 설정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초목표치(여론조사 실시) 달성(비예산사업)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2-25,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계기 마련 및 국민의 높은 신뢰 달성으로 든든한 전국민 연금체계 달성

－ 국민 신뢰제고 및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가입자 2,118만명('14.11월 기준) 돌파

－ 영역별·생애주기별 노후설계 대외교육의 활성화와 강의 콘텐츠 및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노후준비 인식 확산

- 고객맞춤형 노후설계 표준콘텐츠 개발로 고객만족도 향상

- * 상담용 표준콘텐츠 One-Paper 개발(162종), 교육콘텐츠(2,287종) 주제별 모듈화

－ 대중교통매체, TV정보 프로그램 참여, 인터넷 활용 홍보 등 국민연금 이해증진 및 오해 해소 홍보 강화

- SNS 채널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홍보활동 전개로 젊은 층에 대한 소통 강화 및 효율적 언론 홍보를 통한 제도 신뢰 제고
- 「국민연금 바로알기-평생월급 국민연금」 가두캠페인 및 인터넷 활용 캠페인 추진으로 국민 참여 확산
-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강화 및 각종 단체와 공동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와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
- 100개 지사가 전국 320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 협의, 분과)에 참여하여 지자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 (성과) 홍보 효과도 조사에서 76.1점으로 당초목표치(76.1점) 달성(비예산사업)

〈표 2-44〉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2-24)	국민연금 재정목표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실시	100.0	계획 수립	계획 수립	100.0	비예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2-25)	홍보효과도 조사(점)	76.1	76.1	100.0	75.4	74.8	99.2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제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이었음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세부영역)

□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특수고용관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실제 근로여부, 소득확인 등이 곤란하여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보험료 전액 부담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누락, 소득 축소 신고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장가입자로 특별 적용하여 연금수급권 확보가 필요함. 타기관의 공적자료 추가 입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특수고용관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충을 도모

- (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추진 관련 소득신고자 수 대비 가입대상자 수(과세자료 보유자 수) 비율이 65.4%로 당초목표치(65.0%)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778천명 중 소득신고자는 509천명으로 65.4%가 국민연금에 가입 하였으며, 이는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률인 9.7%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비율임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7,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영세사업장 저

소득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소득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을 지원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상향(130만원 → 135만원 미만)하여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 된 여성들이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4.10~11월) 및 총리실 규제심사 완료('15.1.9)

○ (성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수가 81만명으로 당초목표치(79만명) 초과달성(사업예산 449,438백만원 중 98.9% 집행)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8,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개발 확대에 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기준소득금액 이하: 본인 보험료의 1/2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13년, 79만원 → '14년, 85만원)으로 보험료 지원액 확대(월 최대 지원액 '13년, 35,550원 → '14년, 38,250원)
 - 기준소득금액 초과: 월 38,250원 정액 지원
 - 농어업인 318천명에 대해 1,403억원 연금보험료 지원
 - '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협업농까지 지원함으로써 여성지원 비율 증대

○ (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이 9.0%로 당초목표치(7.0%) 초과달성(사업예산 140,308백만원 전액 집행)

〈표 2-4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6)	과세자료 보유자 수 대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수 비율(%) ¹⁾	65.0	65.4	100.6	62.0	64.8	104.5	비예산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7)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수(만명)	79	81	102.5	89	79	88.2	449,438	444,623	98.9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8)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²⁾	7.0	9.0	128.6	10.0	14.6	146.0	140,308	140,308	100.0

주: 1) 보유자 및 신고자는 국세청 업종 코드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캐디,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임

2) '13년 성과지표는 '연금보험료 지원액 증가율'로 계산됨

[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세부영역)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9,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이행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운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유도
 - 퇴직연금 전문가 양성과 퇴직연금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 퇴직연금 교육 353회, 27,903명, 퇴직연금 컨설팅 112개소
- (성과) 퇴직연금 가입률이 16.3%로 당초목표치(15.4%) 초과달성, 퇴직연금 교육을 353회 실시하여 당초목표치(150회) 초과달성(사업예산 1,300백만원 중 95.1% 집행)

□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2-30,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DC, IRP)에 대한 별도의 예금 보호한도 적용 추진
 -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퇴직계좌(IRP)의 적립금을 보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과 일반 금융상품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
 - 퇴직연금 적립금은 장기간 예치·운용되고 중도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보호한도로는 퇴직연금 수급 안정성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보호한도 적용 필요
- (성과)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14년 말 개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15년 2월에 개정을 완료함(비예산사업)
 - (목표달성 부진사유) 법제처 심사 과정 중 조문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의견조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됨

□ 개인연금 활성화(2-31,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의 가입률·유지율 제고 및 활성화 유도
- (성과) 개인연금 가입률·유지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당초목표를 달성(비예산사업)
 - 개인연금의 가입률 제고(가입절차 단순화, 온라인상품 판매수수료 인하 등) 및 유지율 제고(보험료 납입유예제도 신설, 계약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등) 방안 마련 및 시행
 - 개인연금 가입자 수: 15,744천명('13년) → 16,244천명('14년)

- 개인연금 10년차 유지율: 54.0%('13년) → 57.5%('14년)

□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2-32,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연금 내역을 일시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 포털 구축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 연계로 연금 수급액 등 노후 준비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고도화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지속 추진
 -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13.5월) 보건복지위원회 계속 심사 중
 - '내연금 사이트'를 통한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03만명('14.1~11월)으로 체계적인 노후설계 지원
 -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를 오픈('09.12)하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정보는 실시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
 - 사적연금정보는 '14년부터 금융회사 및 협회 등이 참여한 TF에서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15.6월, 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오픈)
- (성과) 노후준비 인식도(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가 92.5%로 당초목표치(87.5%)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2-33,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품 개발 확대 유도
 -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한 '개방형 판매채널 구축' 및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소비자를 위한 객관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도입
 - (개방형 판매채널 구축) 소비자 주도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한 개방형 원스톱 쇼핑채널 도입
 - 펀드온라인코리아(주)(일명 '펀드슈퍼마켓')는 본인가(4.16)를 거쳐 국내 최초 펀드 판매 전문채널로 영업을 개시(4.24)
 -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을 통해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기본방향 마련

- 우선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성과) 금융상품 개방형 판매 채널 구축을 완료하여 당초목표를 달성,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및 독립투자자문 등록요건 단위 신설은 목표 미달성(비예산사업)

- (목표 달성 부진사유: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및 독립투자자문 등록요건 신설) 당초 계획 수립 당시 펀드에 국한된 자문업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범정부적 정책*추진과정에서 취급대상 상품범위가 당초 계획대비 대폭 확대(펀드 → 펀드, IRP, 개인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됨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 마련이 다소 연기됨

* 사적연금 활성화대책('14.8월, 기획재정부(주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IRP 및 개인연금 등에 대해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도입기로 함

* 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월, 기획재정부(주관), 전 부처 합동):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16년 도입예정(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동주관))에 자문 추진

□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2-34,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고령층에 대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맞춤형 급부제공을 통해 100세 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

- (위험률 할증) 위험률을 충분히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령층 특화상품 개발을 유도
-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제공

○ (성과) 보험업 감독 규정(제7-73조④) 개정을 통해 위험률 할증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당초 목표 달성,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을 출시('14.7월)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추가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낮게 하여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개발(안) 마련(사망보험금 선지급 연금보험 개발)

□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2-35,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노후 건강보장 여건 마련을 위한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 (연금의료비저축 도입) 노후 의료비 대비 위해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 (고령층 보험금 청구 지원) 고령층의 보험금 미청구 사례 방지를 위해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

○ (성과) 연금의료비 저축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14.4월)하여 당초목표치(보험상품 출시) 달성, 보험상품약관 및 법령개정('14년 9월 입법예고)을 통해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도입 등 고령층 보험금 청구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리청구 지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당초목표치(제도개선 반영) 달성(비예산사업)

〈표 2-46〉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9)	퇴직연금 가입률(%)	15.4	16.3	105.8	10	13.4	134.0	1,300	1,236	95.1
	교육실시 횟수(회)	150	353	235.3	150	244	162.7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2-30) 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개정	—	0.0	—	—	—	비예산		
개인연금 활성화(2-31) ²⁾	개인연금 가입률·유지율 제고방안 마련	제고방안 마련	제고방안 마련	100.0	—	—	—	비예산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2-32)	노후준비 인식도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	87.5	92.5	105.7	82.0	90.0	109.8	비예산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2-33)	금융상품 개방형 판매채널 구축	구축	구축	100.0	—	—	—	비예산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도입	—	0.0 ³⁾	—	—	—			
	독립투자자문 등록요건 단위신설	신설	—		—	—	—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2-34)	위험률 할증관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 개선	100.0	—	—	—	비예산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출시	출시 ('14.7)	100.0	—	—	—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2-35)	연금의료비 저축 보험상품 출시	출시	출시 ('14.4)	100.0	—	—	—	비예산		
	고령층 보험금 청구지원 제도 개선	제도개선	제도 개선	100.0	—	—	—			

주: 1) 실적 부진 사유: 법제처 심사 과정 중 조문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의견조율 등에 상당기간 소요

2) '13년 성과지표는 사업비 체계 개편 방안 마련, 위험률 및 통계제공여부로 100.0% 달성함

3) 독립투자자문업 도입은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의 핵심과제이므로 목표달성률 계산시 1개의 지표로 고려함, 범정부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취급대상 상품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 마련이 다소 연기되었음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1]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세부영역)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3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전문가 검증을 통한 근거 중심의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 일반국민의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 콘텐츠 신규 개발, 콘텐츠 보강 및 현행화

- 노인건강정보 콘텐츠 9종, 증상 및 징후 콘텐츠 10종 등 신규개발
- 기 개발된 300여종의 건강정보 콘텐츠의 현행화 및 재인증

－ 국가건강정보포털 기능 개선 및 운영

- 1,200종의 건강정보에 포함된 약 3,000종의 2D/3D 이미지 및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자막 등 제공하여 웹 접근성 품질 개선

- (성과)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만족도(점)가 93.0점으로 당초목표치(92.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437백만원 중 98.6% 집행)

□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2-37, 보건복지부) 【완료과제】

-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건강 위험군 대상 건강검진결과상담 제공
 - 의과학적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진제도 개선안 마련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결과 상담 및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2-3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토록 개선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보건소의 특성과 업무역할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인력교육과정 개설·운영
 - 중앙정부 중심 교육에서 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 대상자 중심의 ‘생활터’, ‘생애과정별’ 건강증진사업 실시
 - 중앙집중식 분절적·개별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
 - 영유아에서 고령자에 이르는 생애과정별 접근전략, 학교·일터·경로당 등 생활터에서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 (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결과 63.4%로 나타나 당초목표치(63.0%) 초과달성(사업예산 193,592백만원 중 98.9% 집행)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2-3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연·절주·식이·운동 등의 영역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성과) 건강관리서비스 만족도가 78.4점으로 당초목표치(72.0점)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40, 질병관리본부)

○ (사업내용) 지역기반 보건교육 활성화(1차 예방),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2차 예방)

－ 의료기관 참여, 환자 등록, 질환 교육현황

- 환자 등록률: 외래실인원 대비 62.1%
- 의원 참여율: 대상기관 대비 71.3%
- 약국 참여율: 대상기관대비 97.6%
- 교육 이수자 수: 고혈압 1차(24,432명), 고혈압 2차(20,650명), 당뇨병 1차(17,269명), 당뇨병 2차(15,696명), 영양교실(6,676명)

○ (성과) 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율이 56.4%로 당초목표치(59.0%)의 95.6% 달성(사업예산 20,488백만원 중 92.5% 집행)

□ U-health 서비스 확충(2-41-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원격의료, 진료정보교류 등을 포괄하여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재외국민 건강증진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U-health 서비스 활성화

－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조성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의료 행위, 간호용어, 진료용 그림 등 19만 여개
- 의료인 임상지원 및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서비스 모델(CCM) 개발: 외상영역별 clinical template, 외상영역별 SDE Form 등
- － 의료취약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제도화 추진(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4월)
-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의료인간 원격의료사업 확산('13년 72개소 → '14년 152개소 확대)
- 보건소 및 참여 희망 일반의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14.9월~)

○ (성과) 취약지역 원격의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이상 92.0%로 당초목표치(90.0%)를 초과달성하였지만, 진료정보 교류관련 KS 표준 확정은 목표치 1건에 대하여 달성하지 못함(사업예산 1,638백만원 전액 집행)

－ (목표달성 부진사유: KS표준 확정) 국가기술표준원에 KS표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심의위원회 결과,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등 사회적 합의와 현장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

을 작성하여 재신청할 예정

□ U-health 서비스 확충(2-41-②,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국내외 시장 확산 기반 마련, 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대사증후군 등 5대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 의료 실시
 - U-health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장탐색
 - 유전자 기술 기반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임상-유전체 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 중: 유전체 인프라 구축, 임상-유전체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맞춤치료 임상적용 연구, 질병 예측 모델 개발 등
- (성과) 지원금액 10억원 당 특허건수가 0.25건으로 당초목표치(0.25건) 달성(사업예산 6,000백만원 전액 집행)

□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42,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담배·주류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및 오토문구사용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등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위해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14.1월)
 - 신종 담배에 대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14.5월)
 - 담배 소비 감소 및 금연 유도를 위해 담배가격 인상('14.12월)
 - 경고그림 도입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국회 제출('14.10월)
 - 주류 광고 제한을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2월 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
- (성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당초 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추진상 애로사항) 국회 일정 등의 사유로 담배가격 인상은 통과되었으나, 경고그림 도입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표 2-47〉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2-36)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만족도(점) (용이성, 유익성, 구체성 평가값의 평균)	92.0	93.0	101.1	80	92	115.0	437	432	98.6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2-37) ¹⁾	해당 없음	완료과제			개선안 마련	개선안 마련	100.0	완료 과제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2-38)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체감도(%)	63.0	63.4	100.6	-			193,592	191,414	98.9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2-39) ²⁾	건강관리서비스 만족도(점) (바우처 수혜자 대상)	72.0	78.4	108.9	75	76	101.3	비예산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40)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율(%), 실시지역, 추정환자 수 대비)	59.0	56.4	95.6	70	82.1	117.2	20,488	18,956	92.5
U-health 서비스 확충(보건복지부, 2-41-①)	취약지역 원격의료 이용자 만족도(%) ³⁾	90.0	92.0	102.2	90	미실시 (예산미 확보)	0	1,638	1,638	100.0
	진료정보 교류관련 KS 표준 확정(건) ⁴⁾	1	0	0.0	-	-	-			
U-health 서비스 확충(산업통상자원부, 2-41-②)	지원금액 10억원 당 특허건수(건) ⁵⁾	0.25	0.25	100.0	완료과제			6,000	6,000	100.0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4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개정안 공포	개정안 공포	100.0	국회 제출	의원 발의안 법안 소위 논의	100.0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마련

2) '13년 성과지표는 바우처 사업지원실적으로 목표치 2,000건 중 1,789건으로 89.5% 달성

3) '13년 성과지표는 농어촌 원격 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13년 성과지표는 해외 원격의료 실시건수로 목표치 1,100건 중 524건 실시하여 47.6% 달성

5) (등록*1.0*SMART가중치 + 출원*0.5)/지원예산(10억원 당)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1] 노후설계 기반조성(세부영역): 해당과제 없음

[2]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세부영역)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2-4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지속 추진, 보급을 통해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역에 걸친 체계적 노후 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인프라 확산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노

후설계서비스 공급 토대 구축

-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생애주기별 노후상담 서비스 제공
- 민간 노후설계 서비스를 선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 (세부실적)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이비부머 224명을 노후설계 서비스 상담인력으로 양성,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베이비부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
- 4개 선도 지자체(전북 순창, 부산 부산진구, 광주 광산구, 인천 부평구)를 선정, 지자체를 통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사업 실시
 - 선정된 지자체 중심의 지역주민 등 1,625명에게 노후준비 영역별 노후설계 교육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4개 지역 5,134명에 대한 노후준비진단서비스, 노후설계 리플렛 제작 배포(2만부) 및 매체를 통한 지역별 노후설계 홍보 등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안에 이견이 있는 야당 의원실을 상대로 법안 설명 등 설득작업 실시 및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논의('14.11월)

○ (성과)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2.0점으로 당초목표치(70.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50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48〉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2-43)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점)	70.0	82.0	117.1	-	-	-	500	500	100.0
	— ¹⁾	-	-	-	1회	1회	100.0			
	— ²⁾	-	-	-	국회 제출	개정 법률안 발의	100.0			
	— ³⁾	-	-	-	30만명	71,371명	23.8			
	— ⁴⁾	-	-	-	1,000	1,017	101.7			
	— ⁵⁾	-	-	-	20,000	21,534	107.7			

주: 1) '13년 성과지표는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입법(법적근거 마련)

2) '13년 성과지표는 고령자 복지 진흥원(가칭) 설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3) '13년 성과지표는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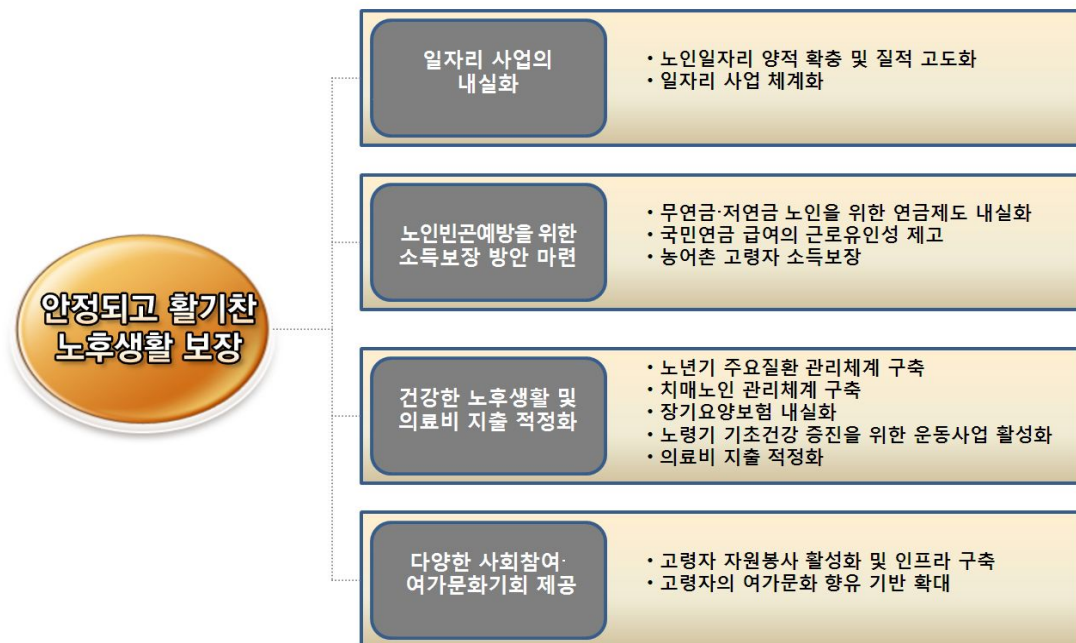
4) '13년 성과지표는 지자체 교육 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자 수(명)

5) '13년 성과지표는 찾아가는 노후 생애관리서비스 이용자 수(명)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세부영역)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2-44~4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 ① 공공분야는 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 등 공익적 활동에 9개월 간 참여하고 월 20만 원 보수 지급(지자체) ② 민간분야는 시장형 사업단 또는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취업 지원(노인인력개발원)
 - 공공분야 일자리 대폭 확충

- 공공형 일자리 확대(212천개 → 248천개)를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및 노후 소득 보전
 - 특히, 공공형 일자리 중 연중(12개월) 일자리를 대폭 확대(3천개 → 25천개, 733% 증가)하여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입원환자 재활지원,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특수아동 학교생활 지원 등
- － 시장형(민간)일자리 확충(28천개 → 32천개, 14.3% 증가)을 통해 역량있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 시니어인턴십 지원(5천명),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지원(20개소),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 지원(10개소) 등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시장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해 민관 협업에 기반한 노인이 실제 생산적인 활동을 하며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LH시니어사원, 문화국민유산신탁, 세탁기코디 사업, GS슈퍼마켓 연계사업 등
- －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14년 신규, 3만명)을 실시하여 전문직 퇴직노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노인취업교육센터’ 지정·운영(4개소)을 통해 노인의 민간 취업 역량 제고
- (노인취업교육센터) 경기복지재단,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전북 노인일자리센터
 - 제빵, 바리스타, 노노케어 등 2~4주의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실시
- (성과) 노인일자리 창출 수 합은 336천명으로 당초목표치(310천명) 초과달성, 사업참여자 만족도는 4.02점으로 당초목표치(4.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580,980백만원 중 99.2% 집행)

〈표 2-49〉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2-44~46)	노인일자리 창출수 합(천명)	310	336	108.4	230	262	113.9	580,980	576,389	99.2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4.0	4.02	100.5	4점 이상 유지	3.8	95.0			

[2] 일자리 사업 체계화(세부영역) : 해당과제 없음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세부영역)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2-47,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411만명에게 월 최대 약 9만 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2014년 5월 기초연금법 제정,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월 최대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 (성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435만명으로 당초목표치(447만명)의 97.3% 달성(사업예산 6,923,049백만원 중 99.1% 집행)
 - (진행상황)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 하향 조정, 선정기준액 조정, 이력관리제 도입 등 개선방안 추진 중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2-48,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주택연금 공급을 증대
 -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가입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
 - (가입자격 완화)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었던 일시적 2주택자('14.3월 시행) 및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14.11월 시행)의 가입 허용
 - (대상주택 확대) 가입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용도주택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14.3월 시행)
 -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율 인하
 - 가입비적 성격을 갖는 초기 보증료율을 2.0%에서 1.5%로 인하(단, 보증채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연보증료 인상 0.5% → 0.75%)하여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경감
- (성과) 일시적 2주택자 가입허용과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가입 허용 관련 주금공 내규 개정 및 시행('14.3월)으로 당초목표 달성, 초기보증료 인하 관련 상품모형안 마련 및 출시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초기보증료 인하 등 보증료 체계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규정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는 '14.12월에 완료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주요변수 재산정에 따른 연금지급액 조정과 일괄 시행으로 인해 '15.2월 신규 가입자부터 실시함

〈표 2-50〉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2-47)	기초(노령)연금 지급(만명)	447	435	97.3	405	405	100.0	6,923,049	6,860,533	99.1
주택연금제도 활성화(2-48)	주공공 내규 개정 및 시행여부 (일시적 2주택자 가입허용)	개정·시행	개정·시행	100.0	법안 개정 여부 ¹⁾	법안 개정 완료	100.0	비예산		
	주공공 내규 개정 및 시행여부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가입허용)	개정·시행	개정·시행	100.0						
	상품모형안 마련 및 출시여부 (초기보증료 인하)	마련·출시	마련·출시	100.0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주택연금공사법 개정

[2]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세부영역)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연금 신뢰도 향상
 -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방식 개선: 현행 연령별(61~65세) 연금액 감액방식을 소득수준별 감액 방식으로 개선
- (성과) 근로유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수행하여 당초목표를 달성(비예산사업)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방안 국회 논의('14. 4월, 6월, 11월, 12월)

□ 연기연금제도 활성화(2-50,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연기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제도 운용 활성화
 -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12년 7월 시행)
 - 신청대상 확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 60~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산율 인상: 연기기간 1년 당 6% → 7.2%
 - 연기연금 제도를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제도로 개선 추진
 - 연기연금 제도 개선 방안 국회 논의('14. 4월, 6월, 11월, 12월)
 - 연기에 따른 가산율 등 연기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성과) 부분연기연금 제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51〉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2-49)	국민연금법 개정	개정	개정	100.0	개정 추진	법안소위계류	100.0	비예산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2-50)	국민연금법 개정 (부분연기연금 제도화)	개정	개정	100.0	개정 추진	법안소위계류	100.0	비예산		

[3]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세부영역)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2-51,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전업 농 등의 영농규모화 추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65~70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 신청연령에 따라 6~10년간 ha당 월 25만원씩 분할 지급
- 경영이양 달성면적: 1,555ha, 경영이양 계획면적: 750ha
-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에 기여
 - 고령은퇴 농업인(23,560명) 1인당 연간 평균 2,399천원의 소득 보전
-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
 - 전업농 등(1,363명) 1인당 평균 1.04ha의 영농규모 확대
- 경영규모 확대(5~7ha)에 따른 전업농 소득증대에 기여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해 농기계 이용효율성 제고 및 노동력 투입시간 감소로 직접 생산비 2,106백만원 절감 효과

○ (성과)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이 207.3%로 당초목표치(100%)를 초과달성(사업예산 61,737 백만원 전액 집행)

□ 농지연금 활성화(2-52,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농지평가금액을 담보로 종신행 또는 기간형으로 매월 연금식 지원

- '14년 가입연령 완화 및 가입비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률 제고(신규가입자 전년 말 대비 42.9% 증가) 및 채무부담 완화
-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지급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 '14년까지('14.12월 기준) 3,960건 가입, 총 74,223백만원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부족자금 지원

○ (성과) 농지연금 가입률이 26.4%로 당초목표치(22.9%) 초과달성(사업예산 29,035백만원 전액 집행)

〈표 2-52〉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2-51)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 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면적) ×100	100	207.3	207.3	1,500 ha	1,952 ha	130.1	61,737	61,737	100.0
농지연금 활성화(2-52)	농지연금 가입률(%) (연도말 유지건수/총 목표농가 수)×100	22.9	26.4	115.3	13.9	17.4	125.2	29,035	29,035	100.0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1]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세부영역)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5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성질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14.7월 시행)

- 관련 학·협회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13.12월~'14.3월, 7차례) 개최, 임플란트 급여화 공개토론회 개최('14.2월),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개최('14.3월), 소비자단체 간담회 실시('14년. 4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14.3월, 5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개정

○ (성과)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54, 보건복지부) 【완료과제】

○ (사업내용) 노인 건강정책 제도 기반 개발

- 자립적 재가생활 연장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 노인가구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인식 강화 및 지원제도 마련
- 허약노인 발굴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55,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 출시를 의무화

○ (성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14.7월)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5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우울증 및 자살 위험군 등에 대한 선별 강화 및 사후관리

- 상담건수: '12년 251,917건, '13년 985,224건, '14년 1,063,319건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14.1월), 소위 계류중
 -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의무화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신설
- 4·16 세월호 사고시 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개입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 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체계 마련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및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시범사업 실시: '14년 농촌 3개, 도시 2개

○ (성과)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이 7.9%로 당초목표치(20.0%)의 39.5% 달성(사업예산 8,000백만원 중 99.1% 집행)

□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2-57,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의치(틀니) 지원 및 사후관리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완전·부분틀니)를 지원하고, 기 시술자의 사후 관리비용 일부 지원

○ (성과) 보건소 의치사업 연간 수혜인원(명)은 11,656명으로 당초목표치(11,619명) 초과달성(사업예산 26,834백만원 중 98.9% 집행)

- (추진상 애로사항) ‘보건소 틀니(의치)사업’은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02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12년 7월부터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원대상자 중복을 막는 등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 및 지원대상 감축

〈표 2-53〉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53)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임플란트) ¹⁾	개정 및 마련	개정 및 마련	100.0	100.0	100.0	100.0	비예산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54)	해당 없음	완료 과제			수립 완료	수립 완료	100.0	완료 과제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55)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³⁾	출시	출시('14.7)	100.0	10	8.5	85.0	비예산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56)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20.0	7.9	39.5	20	29.1	145.5	8,000	7,925	99.1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2-57)	보건소 의치사업 연간 수혜인원(명) ⁴⁾	11,619	11,656	100.3	84	93.2	110.9	26,834	26,542	98.9

주: 1) '13년 성과지표는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 시행 여부

2) '13년 성과지표는 노인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

3) '13년 성과지표는 전체 실손가입자 중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

4) '13년 성과지표는 구강보건사업 만족도

[2]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세부영역)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2-58,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치매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 제고

- 치매조기검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인운동 활성화를 통해 조기발견과 예방강화
 - (치매검진) 치매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저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안내문 발송

- (예방)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노인 건강 마일리지’ 모형 개발을 통해 노인의 운동 참여 및 지속적 실천 도모
- 약제비 지급 개선 및 치매거점병원 확대로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 (약제비) 치매환자의 치료·돌봄 강화를 위해 병원·약국 이용 후, 치료비 지급 절차 체계도 마련
- 전문인력 교육 강화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확립
- (전문인력) 직역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치매전문인력 교육 개선체계 마련
- (전달체계) 중앙에서 지역까지 표준화된 치매관리 정책을 전달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매 치료서비스 및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운영
-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정보 365 홈페이지, 치매환자돌봄(동행앱) 등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소통 확대
- (가족지원) 치매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치매상담 콜센터’ 개소·운영
- (홍보) 생활 속 치매예방을 통한 치매 발생요인의 선제적 관리
- (일상 속 홍보 강화) 고용부·고용노동지청(직장교육), 교육부·교육청(가정통신문, 보건소식지 등), 문체부·생활체육회(생애주기별 체육활동) 등에 치매예방수칙·운동법 홍보 협조요청
- (성과)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율이 16.9%로 당초목표치(10.6%) 초과달성(사업예산 54,140백만원 중 97.8% 집행)

〈표 2-54〉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2-58)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율(%, 만60세 이상 인구 대비)	10.6	16.9	159.4	11.0	18.2	165.4	54,140	52,965	97.8

[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세부영역)

□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2-5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의료, 건강서비스 및 주거지원·안전보장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 도모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실시 12개소

- (내용) 장기요양 재가노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 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실적) 전국 12개소,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대상자수 21,289명, 사례관리 3,918명 발굴

○ (성과)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례관리 대상자수가 3,918명으로 당초목표치(3,000명) 초과달
성(사업예산 920백만원 중 94.6% 집행)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2-60,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요양보호사 자질향상 및 소비자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경쟁유도를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도모, 결과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

－ 직무분석에 근거한 교육과정 및 지속적인 자격관리체계 마련으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도입추진

－ 임상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선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평가하여 우수 평가기관 공단
홈페이지 상시 게재 및 인센티브 제공

○ (성과) 장기요양(재가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실시('14.7~8월)

－ 치매특별등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교육 실시(보건복지부 고시 2014-163, '14.6.27)

－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4.9~12월)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수수료 인하 및 사진 매수 조정시행규칙 개정추진('15.1.16 공포)

－ '1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및 평가실시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2-61,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불법적 유인행위 금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13.8.13)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2월)

-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918개소, 부당청구 적발 177억원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62,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8년에 도입하였고,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사각지대 해소 도모

○ (성과) 치매등급을 도입하여 당초목표를 달성(비예산사업)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인 삶의 질 제고 및 가족 부담 경감에 기여
- 장기요양 5등급 만족도 조사 결과('14.11월), 수급자(보호자)의 83.0%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 85.0%가 가족 수발부담 감소 답변
- 장기요양수급자 중 치매환자가 '13년 18만명 → '14년 21만명으로 약 3만명 증가,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 보호범위 확대

〈표 2-55〉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지역밀착형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추진 (2-59)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적 (사례관리 대상자 수)	3,000	3,918	130.6	맞춤형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실적	100.0	920	870	94.6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2-60)	장기요양(재가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¹⁾	개정	개정	100.0	개정	개정	100.0	비예산		
장기요양보험 수급절서 확립 (2-61)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개정	개정	100.0	개정	개정	100.0	비예산		
	- ²⁾	-	-	-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100.0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62)	치매등급 도입 여부	도입	도입	100.0	-	-	-	비예산		
	- ³⁾	-	-	-	90	90.2	100.2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장기요양(입소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 '13년 성과지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3) '13년 성과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급여이용자 수/장기요양인정자 수×100)

[4]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세부영역)

□ 노인 운동 활성화(2-6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운동프로그램 실시

- 운동, 건강교육 등 종합 노인건강운동사업 운영 내실화
- 도심공원 건강교실 확대 운영
- 자조모임 운동교실 확대 운영

- 생활운동 실천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전국발표대회 개최, 건강개선 등 참여자 체험수기집 제작 배포, 노인표준운동프로그램 보급
- (성과) 노인건강운동교실 강습 실시 횟수가 241,934회로 당초목표치(237,620회)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사업)
- 4,013개 운영시설에서 80,036명에게 총 241,934회 강습 실시
- 노인의 생활운동 접근성 제고 및 지속 실천을 위해 강습유형(경로당 등 실내운동, 야외운동, 자조모임운동)을 다각화하고 경로당 외 노인복지관, 공원 등 운동 공간을 다양화함

□ 농촌생활 활력 증진(2-64, 농촌진흥청)

- (사업내용) 농촌생활 활력 증진을 위해 기초안전 생활화, 농작업 환경개선 활성화, 농업인 건강관리 습관화 등의 사업을 수행함
 - 농작업 안전 기초, 농약중독 예방, 농기계 안전 등 교육
 - 작업자세 및 동선 개선, 작업시간 관리 등
 - 건강검진, 근골격계 예방 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
 - 안전모델 마을 육성(42개소), 편이장비 개선 보급(185개소)
 - 안전교육(15회 1,050명), 농부중 예방 공동홍보(2종 1,650부)
 - 대내외 안전보건 전문가 풀 구축(중앙·도 9개소, 141명)
- (성과)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이 39.6%로 당초목표치(36.5%) 초과달성(사업예산 2,100백만원 전액 집행)

□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2-65,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설방문지도 서비스 제공, 게이트볼, 축구 등 전국규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내 어르신부 개최('14.8월)
 - 대축전 등록선수 20,879명 중 어르신 부문 17개 종목 5,586명 참가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광역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지도자: 1,080명
 - 17개 시도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 (성과) 지도자 배치율((배치인원/정원)×100)은 당초목표치(100%) 달성,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당초목표치(1회 개최) 달성(사업예산 30,856백만원 전액 집행)

〈표 2-56〉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노인 운동 활성화 (2-63)	노인건강 강습실시 횟수(회)	237,620	241,934	101.8	230,699	234,387	101.6	비예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사업)		
농촌생활 활력 추진(2-64)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	36.5	39.6	108.5	-	-	-	2,100	2,100	100.0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2-65)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지도자 배치율(%)	100.0	100.0	100.0	100.0	99.2	99.2	30,856	30,856	100.0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수(회)	1	1	100.0	1	1	100.0			

[5] 의료비 지출 적정화(세부영역)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2-6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이용 보장

－ 수입-지출구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을 강화하고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누수 방지('14.7월)

－ 지출구조 합리화

- (수가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 행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유형을 중심으로 수가 인상('14.8월)
-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에 따른 약품비 사후관리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성과) '14년 총 급여비 대비 적립금 규모가 29.2%로 당초목표치(22.0%)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2-67,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시설보강, 인건비, 전문인력 교육비, 의약품 구입비 등 기관 운영비 지원 및 사업 평가, 서비스 표준화,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원을 통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 지원(54개소, 기관 당 평균 5,000만원)

－ 적정수가 개발을 통한 의료비 절감 도모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 실시

－ 완화의료전문기관 사업설명회 개최('14.2월): 지원정책방향 및 정보, 실무경험 공유 등을 통한 완화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적용 건정심 보고('14.12월)
-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제화 등 검토

○ (성과) 시·도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개)가 950개로 당초목표치(900개) 초과달성(사업예산 2,72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57〉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2-66)	(적립금 규모/14년 총 급여비) ≥ 22% ¹⁾	22	29.2	132.7	2	20.4	1,020	비예산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2-67)	시·도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개)	900	950	105.6	900	868	96.4	2,720	2,720	100.0

주: 1) '13년 성과지표는 (당해연도 적립금/당해연도 총 급여비) ≥ 2%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

[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세부영역)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2-68, 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비 붐 세대 '드림 봉사단' 구성·운영,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봉사단체 지원 및 봉사자·단체 발굴 포상 및 시도별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한 활성화
 - －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수요가 많은 의료, 환경, 문화·예술,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봉사단 운영
- (성과) 베이비부머 봉사단 참가자 수는 480명으로 당초목표치(120명) 초과달성, 자원봉사 실제참여 인원(1회 이상 참여자 수)은 317만명으로 당초목표치(240만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50백만원 중 95.3% 집행)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마련(2-6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 마련 및 전문화
 - －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경로당 기반의 노인자원봉사클럽 확대
 - － 노인자원봉사클럽 구성 및 활동

－ 노인자원봉사 교육 실시

- 회원 소양교육(26,293명), 코치 양성교육(1,444명), 코치 간담회(2,183명) 실시

－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전국 242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 노인자원봉사 리더센터(13개) 운영 지원, 노인자원봉사 가이드북 제작
-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40개)
- 제8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14.11월, 1,300여명)

－ 고령전문인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 (성과)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자원봉사클럽 수(개)는 1,802개로 당초목표치(1,800개) 초과달성,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수(개)는 40개로 당초목표치(40개) 달성(사업예산 4,993백만원 전액 집행)

□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2-70,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내용) 과학기술계 고경력 인력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륜, 경험 및 지식을 사회에 환원

－ 과학기술계 원로(과학자, 공직자 등)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강, 과학관 전시품 해설·안내, 탐구활동 지도 등의 봉사활동 지원

- 과학특강, 과학관 해설봉사 등 7개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에게 과학기술헌문화 확산과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홍보

－ 2014년도에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 (성과)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횟수가 1,728회로 당초목표치(1,540회) 초과달성,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참가자 수는 10,033명으로 당초목표치(6,345명) 초과달성(사업예산 300백만원 전액 집행)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2-71-①, ②) 【완료과제】

- (사업내용-①, 보건복지부) 고령자 자원봉사자들 간에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공유와 우수사례 전파 등 노인자원봉사자 실적관리를 위한 정보망 연계 추진

- (사업내용-②, 행정자치부) 청소년의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실적 등 봉사참여자 편의성 확보방안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사업은 자원봉사실적 공유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1365 나눔포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VMS와 교육부의 NEIS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기 구축 완료

〈표 2-5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2-68)	베이비부머 봉사단 참가자 수(명)	120	480	400.0	80여명	80	100.0	150	143	95.3
	자원봉사 참여인원 (1회 이상, 만명) ¹⁾	240	317	132.1	-	-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2-69)	노인자원봉사클럽 수(개)	1,800	1,802	100.1	1,400	1,594	113.9	4,993	4,993	100.0
	프로그램 개발 수(개)	40	40	100.0	50	38	76.0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70)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횟수(회)	1,540	1,728	112.2	1,115	1,485	133.2	300	300	100.0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참가자 수(명)	6,345	10,033	158.1	-	-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보건복지부, 2-71-①)	해당 없음	완료 과제			100 ²⁾	100	100.0	완료 과제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행정자치부, 2-71-②)	해당 없음	완료 과제			완료과제			완료 과제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자원봉사 포상자 수로 목표치 200여명 대비 실적치 276명으로 138.0% 달성

2) '13년 성과지표는 (전문직 퇴직노인단체 DB 조직화) DB구축 조직화 단체 수(개)

[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세부영역)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72,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노인복지관 대상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예술강사 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과)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는 7,679명으로 당초목표치(7,1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2,470백만원 전액 집행)

— 190개 복지기관에 269개 프로그램, 예술강사 145명 파견, 6,353명 수혜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2-7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신축 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향상

○ (성과) 노인복지관 신축 지원이 13개소로 당초목표치(13개소) 달성(사업예산 4,697백만원 전액 집행)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2-74,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어르신 강사,

전문강사 파견),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운영,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운영

－ 어르신들 간 문화교류 및 창의적 문화활동 기회 제공(어르신문화대축제 및 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총 16회 개최)

－ 어르신 문화활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중앙일간지 및 공중파 보도 등 700회 이상)

○ (성과) 문화프로그램 수가 433개로 당초목표치(383개) 초과달성, 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13,366명으로 당초목표치(12,1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4,053백만원 전액 집행)

〈표 2-59〉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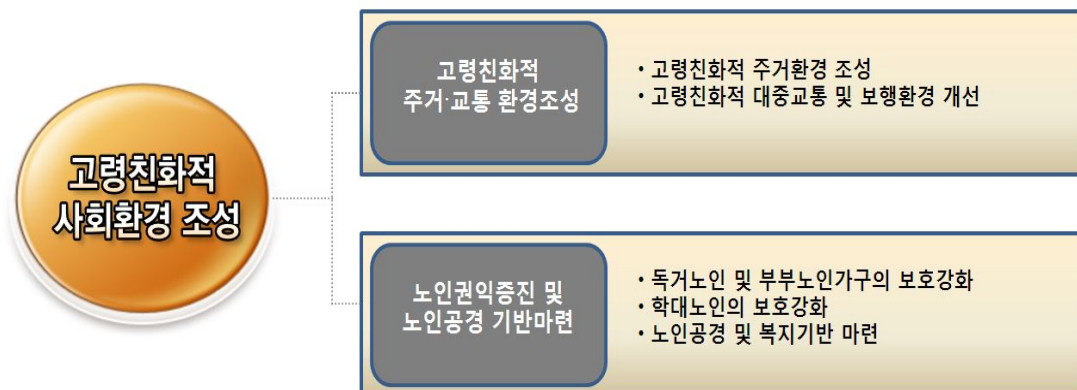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72)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¹⁾	7,100	7,679	108.2	4,500	6,396	142.1	2,470	2,470	100.0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2-73)	노인복지관 신축 (분권교부세 교부대상 시군구 현황)	13	13	100.0	13	13	100.0	4,697	4,697	100.0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2-74)	프로그램 수(개)	383	433	113.1	365	449	123.0	4,053	4,053	100.0
	수혜자 수(명)	12,100	13,366	110.5	12,000	13,833	115.3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수혜자 수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의 2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소영역)

[1]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세부영역)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75,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규건설과 아울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개조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성과)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비용 지원율이 100.0%로 당초목표치(90.0%) 초과달성(사업예산 2,600백만원 전액 집행)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개조 비용 융자·지원 시행 지속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76,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국가·지자체 등이 장기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구비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수도권 8% 이상, 지방 5%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 (성과)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관련 수도권 8%, 지방 5% 공급 완료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14년 주거약자용 주택 총 2,495호 공급('14.12.15 현재 사업승인, LH기준)
 - LH 국민주택 공급: 수도권 8.4%(1,866호/22,176호) / 지방 5.9%(629호/10,711호)

□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2-77,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요양형 주거 시설 확대 및 주거환경정비 활성화,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별로 차별화된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 사업 지원
- (성과) 사업추진실적은 75개소로 당초목표치(69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8,300백만원 전액 집행)
 - 50개 시·군에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75개소 지원으로 농촌고령자 삶의 질 향상
 -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6개소, 작은목욕탕 14개소

□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2-78, 농촌진흥청)

- (사업내용) 건강생활 프로그램 연중 운영과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장수환경 조성, 평생학습·사회활동 추구를 위한 활발한 뇌 활동 촉진 프로그램 운영, 노년기 활동에 적합한 생활환경 정비로 풍요로운 노후생활 유도, 농촌고령자를 위한 소득사업 발굴 등 생산적 활동 프로그램 도입

- 노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 좋은 식습관 유지 프로그램 추진
-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와 이웃과 같이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시니어 교양교육,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등
- 생활메모, 한자, 한글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 생활환경개선, 건강산책로, 휴식공원 등 자연친화적 환경정비
- 고령자에게 편리한 생활기반 조성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일거리 발굴로 심리적 안정
- 짚풀, 모시, 왕골, 나무 등 공예품 제작 및 전통문화의 전승 및 소득활동
- 작업부담이 적은 농산물, 원예, 원료작물, 가축 기르기 등 소일거리 지원

○ (세부실적)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을활동, 마을환경, 개인생활, 주거·대인관계, 농업환경으로 구분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균값 산출(100점 만점으로 환산)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통해 농촌노인 활력증진에 기여: 155개소
 - 농촌어르신 생활만족도 향상: '13년 78.7점 → '14년 79.3점
 -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횟수 증가(1인당): '13년 12.8회 → '14년 13.6회
- 건강한 노년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대표자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10회 431명
 - 사업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사항 파악 등 컨설팅: 5회
- 우수사례 발굴·홍보로 노년생활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 사업추진 우수마을 경진 및 시상(12월, 6마을)
 - 우수사례 기획 홍보(그린매거진, 월1회)

○ (성과) 사업참여자 생활만족도가 79.3점으로 당초목표치(75.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7,582백만원 전액 집행)

〈표 2-60〉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75)	주거약자 개조지원율(%) ¹⁾	90.0	100.0	111.1	100	100	100.0	2,600	2,600	100.0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76)	목표치(8%, 5%)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전체 임대주택 × 100 ²⁾	수도권 8% 지방 5%	수도권 8.4% 지방 5.9%	100.0	수도권 5%, 지방 3%	수도권 5%, 지방 3%	100.0	비예산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2-77)	사업추진실적(개소) ³⁾	69	75	108.7	50%	55%	110.0	8,300	8,300	100.0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2-78)	참여자 생활만족도(점)	75.0	79.3	105.7	—	—	—	7,582	7,582	100.0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세부지침 마련

2) '13년 성과지표는 수도권 5% 이상, 지방 3% 이상 공급

3) '13년 성과지표는 4개소 공동생활주택 공정률

[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세부영역)

□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2-79,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운송업체의 버스운행 감축 및 서비스 저하로 이동성 확보가 어려움

—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서비스 수혜 형평성 등을 확보

○ '05년 이전 개통된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 (성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14.12.31 공포)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사업 예산 36,413백만원 중 95.9% 집행)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설계 6~8개월, 공사 12~16개월의 절대기간 소요 필요로 예산 집행 100%에는 다소 한계 발생

□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2-80-①, 국민안전처)

○ (사업내용)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개선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인프라 구축

— 보차도 분리, 단절보도 연결, 보도 불법시설 정비 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행('14.1~12월)

- 15개 시·도 20개 시·군·구 20개소, 378억원 투자
- 공모사업 18개소('13년 계속 7개소, 신규 11개소), 일반사업 2개소
- 2015년 공모사업 대상지 10개소 선정('14.10월)
- (성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여건 개선 실적이 100%로 당초목표치(75%) 초과달성(사업예산 37,800백만원 중 75.3% 집행)
- (예산 집행 부진사유) 예산의 수시배정 방침에 따라 예산배정이 지연되고, 연말 세수 부족으로 일부 예산이 미배정되어 집행을 저조

□ 고령자 이동편의를 보행환경 개선(2-80-②, 경찰청)

- (사업내용)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통행이 잦은 도시·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도로 중 일 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노인 보행환경 개선, 보호구역 내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 교통시설개선 및 속도 제한(30km/h이하),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1m/s → 0.8m/s)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노인 교통안전 확보
- (성과) '11.1.24 이후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별도의 성과 지표에 의한 평가 불가
- 지자체 협조, 노인 보호구역 71개소 추가 지정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 개선사업 106개소 완료
- (추진상 애로사항)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신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예정보다 저조하 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81, 경찰청)

- (사업내용)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야광지팡이, 야광조끼 등 교통안전 용품 배 포, 노인배려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개
- 경로당·노인대학 등 노인시설 방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노인 201만명 대상 교통안전 교육 115,695회 실시
-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야광조끼 42,720점, 야광지팡이 27,544점 및 야광모자·헬멧 13,387점 등 교통안전 용품 배포
- 노인인구 및 운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1% 감소 (1,833명 → 1,813명)
- (성과) 고령자 교육인원 수(만명)가 201만명으로 당초목표치(200만명) 초과달성(사업예산 2,421백만원 전액 집행)

- (추진상 애로사항)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특히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보가 어려워 교통안전 교육 곤란

〈표 2-61〉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2-79)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속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개정	개정	100.0	1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100.0	36,413	34,937	95.9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국민안전처, 2-80-①)	보행환경 개선 실적/ 계획×100	75.0	100.0	133.3	10개소	10개소	100.0	37,800	28,450	75.3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경찰청, 2-80-②)	-	'11년 이후 지자체 이양 사업						-	-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81)	고령자 교육 참여인원(만명)	200	201	100.5	200	201	100.5	2,421	2,421	100.0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1]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세부영역)

□ 독거노인 보호 강화(2-82-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소득·주거·건강·사회적 접촉 수준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자에 대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8,000명이 독거노인 보호·지원
 - 요보호 독거노인 8만명의택내에 화재·가스·활동 센서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
 - 장기요양 등급외 A, B자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계속지원
- (성과) 독거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수혜노인 수는 305천명으로 당초목표치(300천명) 초과달성(사업예산 209,925백만원 중 90.5% 집행)

□ 독거노인 보호 강화(2-82-②,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손자녀의 학습부진, 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지원: 개인 및 가족상담 등 심리정서프로그램 지원
 - 학습정서지원: 가정방문을 통해 손자녀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생활가사지원: 조부모의 건강악화로 인한 일시돌봄 및 가사지원
 - 가족문화지원: 조손가족의 문화소외해소를 위한 문화체험활동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지원
- (성과) 조손가족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93.7점으로 당초목표치(90.0점) 초과달성(사업예산 6,052백만원 중 99.7% 집행)
 - 조손가족에 지원되는 키움보듬이, 배움지도사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도모

□ 농어촌 가사도우미(2-83,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의 가사활동 보조 및 생활불편 개선 도모
 -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보조하여 고령취약농가의 가사활동을 지원, 가구 당 연 최대 12일 지원(경로당 24일), 가사도우미 활동비(10천원/일)의 70% 국고 지원(30% 농협 부담)
 -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14년부터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1인가구 추가
 - 농촌 고령·취약 농가와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 가사생활 유지(10천 가구, 840백만원 지원)
 -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실적: '13년 2,366개소 → '14년 2,155개소(11월 기준)
 - 사업내실화를 위해 자원봉사 일환으로 활동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교통비, 중식비 등) 인상 반영('14년 10천원 → '15년 12천원)
- (성과)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가사도우미) 고객만족도가 88.7%로 당초목표치(91.0%)의 97.5% 달성(사업예산 84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62〉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독거노인 보호 강화(보건복지부, 2-82-①)	수혜노인 수(천명)	300	305	101.7	240	266	110.8	209,925	189,910	90.5
독거노인 보호 강화(여성가족부, 2-82-②)	조손가족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90.0	93.7	104.1	90	94	104.4	6,052	6,035	99.7
농어촌 가사도우미(2-83)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가사도우미)고객만족도(%) ¹⁾	91.0	88.7	97.5	91	91	100.0	840	840	100.0

주: 1) 5등급 척도에서 상위 2등급까지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학대노인의 보호강화(세부영역)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84,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일시적 보호서비스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노인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인력 전문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실시

• 상담원교육(2회), 중간관리자 및 최고관리자교육(각 1회)

－ 신고의무자에 노인학대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신고의무자 신고율 증가

• 신고의무자 증가율('13년 610건 → '14년 709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체 회의('14.12월)

－ 노인학대 조기발굴, 신속한 대응, 행위자처벌 강화,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의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14.10월)

•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내 관련 사항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또는 본회의 통과('14.12월)

－ 노인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한노인회와 MOU 체결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로 지정 및 운영('15.1.5 이후)

－ 노인학대 예방 홍보

• 노인보호전문기관 10주년 기념행사('14.10월)

• 노인학대 홍보: 언론보도(1,555회), 광고게재(92,649건)

○ (성과) 노인학대 종결률은 93.4%로 당초목표치(85.0%) 초과달성, 학대피해노인 정서적 안정 비율은 98.8%로 당초목표치(95.0%) 초과달성(사업예산 11,105백만원 중 99.7% 집행)

〈표 2-63〉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84)	노인학대사례 종결률(%) ¹⁾	85.0	93.4	109.9	86	90.5	105.2	11,105	11,072	99.7
	학대피해노인 정서적 안정 비율(%) ²⁾	95.0	98.8	104.0	85	98.0	115.3			

주: 1) 노인학대 종결실적/연간 전체신고건수×100

2) 우울감 감소노인 수/응급사례학대피해 노인 수×100

[3]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세부영역)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2-85,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버이날 기념행사, 효의 달 운영 및 효행자 발굴 포상 실시,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효행장려 활동 등 홍보
- (성과)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가 161명으로 당초목표치(171명)의 94.2% 달성(비예산사업)
 - 제42회 어버이날 효행자 발굴 및 포상 수여: 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5명, 대통령 14명, 국무총리 18명, 장관표창 120명
 - 효문화 진흥원 건립 지원: '12년 500백만원, '13년 6,710백만원, '14년 4,277백만원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8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포상하여 노인복지증진 향상 도모
 -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을 고려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시행
 - 이에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표창
- (성과) 우수 프로그램 포상 수는 19건으로 당초목표치(17건) 초과달성(비예산사업)

〈표 2-64〉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2-85)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명)	171	161	94.2	173	155	89.6	비예산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86)	우수 프로그램 포상 수(개)	17	19	111.8	16	14	87.5	비예산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 성장동력 분야 정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주요 전략임(3개 중영역)
-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가 향후 10년 안에 가시화될 전망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력·교육·주택·금융·재정 등 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세부영역)

□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여성고용차별 개선 및 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여

- 500인 이상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산업별 23개 부문 평균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산정(각 부문 평균치의 60% 미만 기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이행토록 지도)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업의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수행

○ (성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률이 35.50%로 당초목표치(36.65%)의 96.9% 달성(사업예산 720백만원 전액 집행)

- 남녀근로자현황 분석결과, 여성관리자 고용률(%)은 11.2('07) → 16.09('11) → 18.37('14)
 - (직급별) 임원급 여성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7.49%로 전년대비 0.16%p 증가하고, 999인 이하 사업장이 9.33%로 전년대비 0.15%p 증가하여 '06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
 - (직종별) 관리직 여성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9.62%로 전년대비 1.5%p 상승, 999인 이하 사업장이 각각 17.46%로 전년대비 1.28%p 상승
-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양성평등 컨설팅 실시(60개소)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 (사업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공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관리직에 여성임용 확대

-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차)
 - '12~'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관리자를 15% 이상 임용 추진
-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12~'16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을 15.1% 이상 임용 추진
- 중앙부처의 경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 초과달성도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부여점수 차별화(3~5점)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4.3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4년 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자치단체별·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 반영
- (성과)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11.0%로 당초목표치(10.9%) 초과달성,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1.6%로 당초목표치(12.6%)의 92.1% 달성(비예산사업)
 - (추진상 애로사항)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임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률이 일부 미흡한 것은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목표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고, 지자체 인사자율성 보장 등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3-3, 교육부)
 - (사업내용)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초·중등학교 여성교원 임용 확대를 통한 교직사회의 여성대표성 확보, 우수한 여성자원의 활용 및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대학) 3년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부) 매년, 대학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대학 등에 컨설팅 추진
 - '14.4월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현황 조사('14.9월)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14.6월)
 -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위한 위탁 계약('14.7~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위원회 개최('14.7월, 10월)
 - '14년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계획 심의, 평가결과 우수대학 지원 및 하위 대학 컨설팅 지원 방안 등 결정
 -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14.11월)
 -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결과 미흡대학(3개교)에 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14.12월)
 - (성과)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비율이 14.5%로 당초목표치(14.1%) 초과달성(사업예산 100백만원 전액 집행),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은 29.4%로 당초목표치(28.4%)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내용)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여대학(원)생 공학연구 팀제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진출 도모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의 교육훈련, 연구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의 경력개발을 촉진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의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 이공계 여성 경력 성공사례 활용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활용 강화
-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및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성과확산 등을 지원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

○ (세부실적)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4~’18)’ 수립
 - 여성과학기술인의 본격적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활동 강화 목표
-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을 기반으로 생애주기적 여성인재 육성·활용 확대
 -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강화,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상담, 정책제도 운영 및 조사연구, 정보운영·네트워크 지원 등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지위향상 및 여성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및 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 (성과) 여학생 이공계 인식 개선도(점)가 0.33점으로 당초목표(0.13점) 초과달성, 정부지원금 1억원 당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수(건)는 3.1건으로 당초목표치(2.8건) 초과달성(사업예산 10,707백만원 전액 집행)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
 - 공무원 및 사회 선도층 대상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일반국민 대상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
- (성과)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의 차원에서의 교육수료자 인원이 66,280명으로 당초목표치(59,8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6,800백만원 전액 집행)
 -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11,792명)
 - 대국민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진흥사업 추진
 - 양성평등 시범학교 지정·운영(초등학교 4개교)
 -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전시 및 작품 활용 38회

- 사이버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 및 교원, 일반인에게 양성평등의식 교육 기회 제공
 - 사이버교육 실시(52,285명)
 - 사이버교육 15개 과목 콘텐츠 개발
 - 교원 대상 원격교육연수원 운영(2,203명)
 - 원격교육연수원 3종 60개 차시 콘텐츠 개발

〈표 2-65〉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률(%) (여성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100	36.65	35.50	96.9	35.65	36.04	101.1	720	720	100.0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0.9	11.0	100.9	9.8	9.9	101.0	비예산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2.6	11.6	92.1	11.4	10.7	93.9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3-3)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비율(%)	14.1	14.5	102.8	13.9	14.1	101.4	100	100	100.0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	28.4	29.4	103.5	25.7	27.2	105.8	비예산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여학생 이공계 인식 개선도(점) ¹⁾	0.13	0.33	253.8	87	86	98.9	10,707	10,707	100.0
	정부지원금 1억원 당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수(건) ²⁾	2.8	3.1	110.7	150,000	174,537	116.4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교육수료자 인원)	59,800	66,280	110.8	58,000	60,404	104.1	6,800	6,800	100.0

주: 1)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식도 조사(5점 척도), (프로그램 참여 전 인식도 점수 - 프로그램 참여 후 인식도 점수)

2) 연구활동 = 논문발표(SCI급*1.2 + 비SCI급*0.8) + 특허(등록*0.6 + 출원*0.4) + 학회발표(국외*0.3 + 국내*0.2)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세부영역)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대학 내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의’ 체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젠더의식 강화, 개인별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문제 등에 사전 대처 역량강화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청년 여성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서포터즈 발대식 및 교육, 전국 심포지엄 개최
- 지역사회에 특화된 유망직종 발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14년부터 프로그램 모델 개편과 관련하여 ‘이공계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대학별 특화된 영역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많아 프로그램이 안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성과)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84.7점으로 당초목표치(85.0점)의 99.6% 달성(사업예산 880백만원 중 99.7% 집행)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 (직장체험)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 (강소기업 탐방) 청년에게 지방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능력 향상 도모

- (성과)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86.1점으로 당초목표치(91.0점)의 94.6% 달성(사업예산 4,962백만원 중 93.3% 집행)

- 129개 대학 등에서 청년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경력형성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 지원

- '14.12.26 기준 4,391명 실시로 목표인원 4,000명 대비 109.8% 달성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

- 새일센터 추가 지정: '13년 130개소 → '14년 140개소
- 여성 특화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 확대
- 새일센터를 통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강화

-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동행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
- 새일센터 등 이용이 곤란한 구직희망여성을 위해 온라인 취업 상담서비스 실시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636개 과정 운영)
- 새일센터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재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실시

- (성과)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수는 129,632명으로 당초목표치(126,015명) 초과달성(사업예산 57,186백만원 중 97.6% 집행)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응 프로그램인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실시
 - 결혼이민여성 특화 28개 과정 운영: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다국어상담원 양성과정 등
 - 장애여성 특화 2개 과정 운영: 도자악세사리창업, 리폼아티스트 양성과정
- (성과) 결혼이민여성 인턴연계실적이 644명으로 당초목표치(583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75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66〉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청소년·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여성가족부, 3-6-①)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5.0	84.7	99.6	85	85.2	100.2	880	877	99.7
청소년·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고용노동부, 3-6-②)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¹⁾	91.0	86.1	94.6	80% 이상	87.4%	109.3	4,962	4,628	93.3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수(명) ²⁾	126,015	129,632	102.9	58.9	51.4	87.3	57,186	55,841	97.6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결혼이민여성 인턴연계실적(명)	583	644	110.5	583	674	115.6	1,750	1,750	100.0

주: 1) '13년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및 만족' 비율

2) '13년 성과지표는 새일센터 취업률(%): 취업인원/구직등록인원×100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1]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세부영역)

□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법무부)

- (사업내용)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 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성과) 중국, CIS(구소련) 재외동포 자격 체류자 수는 210,929명으로 당초목표치(160,000명)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14년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4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규제완화 및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9월)
 -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
 - 기존 기술교육 대상자 외에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도 한국의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3-10, 법무부)

- (사업내용) 온라인을 통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점수제에 의한 거주(F-2) 자격 부여 제도 활성화
 -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휴넷코리아')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사증신청절차 간소화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 우수인재 등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제도 도입 및 활성화
 - 국내 체류 중인 우수인재 중 연령·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거주(F-2) 자격을 부여
 - 점수제에 의한 거주(F-2) 자격 부여 제도 홍보 활동 강화
 - '14.6월 우수인재 체류우대창구 확대 운영
 - 우대 대상 확대: 기존(E-1, E-3, E-4, E-5) + 관광유흥 종사자를 제외한 예술행행(E-6) 자격, 주무부처 추천을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 전담 체류창구 확대: 기존 9개(수도권 6, 지방 3) 사무소에서 24개(수도권 10, 지방 14) 사무소로 확대
- (성과)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건수는 76,555건으로 당초목표치(75,000건)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14.9월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대상 추가 확대
 -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표 2-67〉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중국, CIS 지역 재외동포 자격 채류자 수	160,000	210,929	131.8	150,000	176,748	117.8	비예산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3-10)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을 통한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건수	75,000	76,555	102.1	25,000	39,855	159.4	비예산		

[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세부영역)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3-11,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국내 고용시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국내채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상시 고충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및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
- (세부실적)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14년 외국인력 도입 인력 53,000명에 대해 연중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13.12),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외국인력 공급
 - (인력부족업종 지원) '뿌리산업', '제조업(5~300명)의 평균 인력부족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 고용을 허용하여 인력난 완화 지원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및 방문 통역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전화상담 305,732건, 내방상담 20,786건, 3자통화 17,275건, 번역상담 1,024건, 방문상담 127건
 - (채류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한국문화·생활법률교육, 컴퓨터제공, 문화행사 등 따뜻한 채류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고 사업주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 지원
 - (교육훈련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장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장 변경자의 인식전환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해소,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를 위해 교육을 통한 컨설팅 확대 실시
 - 사업장 변경자 교육 4,344명, 직업능력개발훈련 1,711명, 사업주교육 5,412명
 -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귀국 예정자에 대한 SMS 문자발송 등 귀국안내, 귀국설명회,

귀국 후 현지 정착지원을 위한 현지 맞춤훈련 등 운영

- (국내) 출국예정자 사전안내 42,917건(월1회 실시), 귀국준비 모니터링 47,903건, 귀국설명회 3,968명, (국외) 현지맞춤형 훈련 실시 942명 등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있는 고용센터(19개소)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NGO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운영(센터별 연 2회)
- (성과)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표 달성, 외국인력 상담센터 상담실적제고(건)는 344,944건으로 당초목표치(270,000건) 초과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개소)은 3,052개소로 당초목표치(3,000개소) 초과달성(사업예산 7,644백만원 중 97.6% 집행)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정비,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실태, 관련 업체의 기능자격 등 실태조사 및 분석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편의 증진을 위해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및 기능테스트 확대 등을 통한 선발기준의 다양화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
- 신규인력 배정방식은 점수제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법 준수 사업장을 우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유도
- (점수제 평가지표 개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최대 2년간 0.5점), 사업주 교육 이수사업장(0.2점)에 가점을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기업의 숙련인력 지원을 위해 자진 귀국자 중 귀국 후 6개월 후부터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도록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국가 확대
- (성과)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인원은 1,813명으로 당초목표치(1,300명) 초과달성,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국가 수는 14개국으로 당초목표(14개국) 달성(비예산사업)

〈표 2-68〉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3-11)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수립	수립	100.0	수립 ('14년)	수립 ('14년)	100.0	7,644	7,464	97.6
	외국인력 상담센터 상담실적제고(건)	270,000	344,944	127.8	220,000	318,599	144.8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개소)	3,000	3,052	101.7	3,000	3,017	100.6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인원(명)	1,300	1,813	139.5	3,800	3,963	104.3	비예산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국가 수	14	14	100.0	13	13	100.0			

[3]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세부영역)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전국 2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복지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취업연계, 자녀 보육·교육 등 사업 추진 시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세부실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각각 특성 및 욕구 등을 고려해 지역 복지자원·네트워크 연결, 조기정착 도모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50개 센터) 및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배치(55개 센터)
 - 기정착 결혼이민자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사업 추진으로 실생활 길잡이 상담지원(63개 센터)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 진단 및 지도를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실화(언어발달지도사 300명)
 - 외환은행나눔재단과 협력하여 언어발달교실 환경개선(총 10개소, 8~12월)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 시범사업 추진(6개소, 7~10월)
 - 대우증권과 협력하여 이중언어 경연대회 개최(11월)
- (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연인원)는 18천명으로 당초목표치(12천명) 초과달성(사업예산 87,834백만원 중 96.5% 집행)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②, 교육부)

-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학생 급증에 따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교 적응도 제고
 - 다문화 학생 수 증가 추이: '11년 38,678명 → '12년 46,954명 → '13년 55,780명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중도입국 학생 등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지정·운영 확

대로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도 제고

-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교과연계형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중등용 2종, KSL 진단도구 6종), 교원대상 다문화 연수를 강화하여 다문화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성과) 다문화 예비학교가 80개로 당초목표치(80개교) 달성, 교원대상 다문화 연수 참여인원(명)이 43,030명으로 당초목표치(6,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3,154백만원 전액 집행)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법무부)

○ (사업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등 20개국 외국어로 상담서비스 제공, 콜센터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 및 상담매뉴얼 정비

- '14.10월 민원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 확대

- 맞춤형 상담서비스: 입국초기 결혼이민자가 언어·문화 등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이 직접 상담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는 서비스
- (기존) 입국 후 6개월 이내 7개 국가 결혼이민자 → (확대) 1~2년차 결혼이민자, 유학생(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 '14.12월 외국인 관련 콜센터와 유기적인 협업 추진

- 여성가족부 운영 다누리콜센터와 결혼이민자 출입국민원 관련 전문상담 지원을 위해 상호 교육지원 및 3자 통역 확대, 한국소비자원과 외국인 소비자 피해 상담 다국어지원원을 위한 3자 통역 확대

○ (성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응답 건수는 1,381,364건으로 당초목표치(1,300,000건) 초과 달성(사업예산 3,019백만원 전액 집행)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교육부)

○ (사업내용) 국제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한국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유네스코 이념전파를 위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학교 간 협력활동 확산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 1998년부터 사업 추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에 참여 및 자국문화 소개

-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2,000여회 정규수업 실시, 국제이해 교육사례 개발회의 5회 및 교육사례개발 책자 1종 제작, 도서산간지역 학교 방문 홈스테이(Caravan), 자원활동가들 간의 문화 간 이해능력 증진과 의견 교환을 위한 갯투게더(Get-together) 실시

2회, 웹사이트 운영, 세계문화 자료실 운영, 운영가이드북 1종 및 최종보고서 제작 등
 -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사업’: 1961년부터 국내 사업 추진, 국내 국제이해교육, 지속가
 능발전교육 등 세계시민교육 확대

- 총회 개최, 가입학교 관리 및 신규학교 선발, 유네스코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지
 역 교사협의회 운영, 교육청 협력 사업, 국내외 교류, 유네스코학교 교사 국제교류 프
 로그램 실시 등

○ (성과)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 수는 279개로 당초목표치(300개)의
 93.0% 달성,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학교 수는 251개로 당초목표치(185개) 초
 과달성(사업예산 200백만원 전액 집행)

- 목표달성률은 90%를 상회하여 우수하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
 수는 참가신청 후 학교 개별 사정으로 인한 수업취소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은 미흡

〈표 2-69〉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3-13-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천명) ¹⁾	12	18	150.0	1,600	1,684	105.3	87,834	84,780	96.5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교육부, 3-13-②)	다문화 예비학교 수(개교) ²⁾	80	80	100.0	180	202	112.2	3,154	3,154	100.0
	교원연수 참여인원(명) (집합 및 온라인 연수 참여실적 합계) ³⁾	6,000	43,030	717.2	3,000	5,631	187.7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구축(3-1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응답 건수(건) (인입전화에 대한 상담원의 실제 응답 건수) ⁴⁾	1,300,000	1,381,364	106.3	3,000,000	2,350,213	78.3	3,019	3,019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 수 ⁵⁾	300	279	93.0	240	295	122.9	90	90	100.0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학교 수 ⁶⁾	185	251	135.7	150	186	124.0	110	110	100.0

주: 1) '13년 성과지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2) '13년 성과지표는 글로벌 선도학교 수(예비학교, 연구학교 포함)

3) '13년 성과지표는 교원 연수 인원(온라인)

4) '13년 성과지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처리 건수

5) '13년 성과지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사업실시 대상학교 수

6) '13년 성과지표는 유네스코 협동사업 사업실시 대상학교 수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1]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세부영역)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3-16-①, 교육부)

- (사업내용) 커리어넷을 통한 진로 심리검사(6종) 운영(초등학교 2종, 중·고등학교 4종), 진로결정·직업탐색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정보서 개발·보급
 - 진로와 직업에 대한 종합 정보서인 '미래의 직업세계'를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 보급
 - 직업인에 대한 동영상,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성과)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1권)를 개발하여 당초목표치 달성, 진로 적성검사 이용실적이 228만건으로 당초목표치(250만건)의 91.2% 달성(사업예산 4,000백만원 전액 집행)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3-16-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고용시장에의 원활한 진입과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재취업은 물론 적합한 진로탐색 및 다양한 직업정보 생성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 인식이 증가하는 바, 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정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
 - 직업심리검사의 개정을 통한 검사의 타당성 및 활용도 제고
 - 총 20종 검사(청소년 대상 10종, 성인 대상 10종)를 개발하여 전국 고용센터를 비롯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워크넷 등으로 보급
 - 웹 기반 검사 결과처리 프로그램 개발, 직업심리검사 전문가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등으로 활용도 강화
 - 진로·취업교육 전문가 양성 및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지도 저변 확대를 위한 직업·진로교육 확대 실시
 - 급증하는 진로지도 수요에 대응하여 대학 등 각급 학교, 유·무료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등 전문가 연수 실시: '10년 12,171명, '14년 14,322명
 -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진로 및 취업 역량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찾아가는 진로특강' 실시(약 50회 이상)
 -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진로지도 체계화
 - 중·장년층 이·전직 및 퇴직지원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취약계층 및 청년층 대상 취업지원 콘텐츠 개발·개정
 - 직업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정보전달 강화

-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흥미, 지식, 성격, 업무수행능력, 가치관 등) 및 향후 일자리 전망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 콘텐츠 확충
 - 청소년 및 구직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직업정보의 개발 및 기초직업연구 강화
- (성과) 직업심리검사 개발 검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건수는 9건으로 당초목표치(8건) 초과달성(사업예산 4,399백만원 전액 집행)

□ 학교 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3-17,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학교 진로·취업지원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학교의 노동시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도모하여 청년 실업문제의 사전적 예방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여, 기업 인사·노무 및 직업상담 경험, 직업상담사 등 일정자격을 가진 이들로 취업지원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학교와 매칭 서비스 제공(학교 측 대응투자 비율 40% 이상 조건화)
- (성과)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이 34.4%로 당초목표치(30.0%) 초과달성(사업예산 3,672백만원 전액 집행)
- 101개 대학에서 159명의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3-18, 교육부)

- (사업내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인 취업지원관을 채용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배치
- 2014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 계획수립('14.6월)
 - 학교의 취업 분야 및 중점 지원사업에 따라 취업지원인력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 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사업 통합운영
 - 2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운영계획(안) 발표('14.6월)
 - 취업지원관 매칭 시스템 구축 및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 권역별 워크숍 및 책임교사 연수('14.6월~7월)
 -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 교원 및 취업지원 전담인력 연수 실시
 - 취업지원인력 등록·심사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14.6월~)
- (성과) 취업지원관 채용규모가 714명으로 당초목표치(45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9,720백만원 전액 집행)

〈표 2-70〉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교육부, 3-16-①)	서책발간횟수(권)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	1	1	100.0	1	1	100.0	4,000	4,000	100.0
	진로 적성검사 이용 실적(만건)	250	228	91.2	250	282	112.8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고용노동부, 3-16-②)	직업심리검사 개발 검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건수(건)	8	9	112.5	6	10	166.7	4,399	4,399	100.0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3-17)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수혜비율(%) ¹⁾	30.0	34.4	114.7	29.0	31.0	106.9	3,672	3,672	100.0
	— ²⁾	—	—	—	57.5	58.3	101.4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3-18)	취업지원관 채용 규모(명) ³⁾	450	714	158.7	65	68.6	105.5	9,720	9,720	100.0

주: 1) 재학생의 1/4 이상이 진로·취업프로그램에 참여(프로그램 참여자 수/재학생 수×100)

2) '13년 성과지표는 지원대학 취업률(지원대학 총 취업률 합계/지원대학 수)

3) '13년 성과지표는 전체 학생 대비 취업희망자 비율(취업모니터링 조사)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세부영역)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3-19,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스펙과 관계없이 열정·잠재력을 가진 청년을 해당 분야 대표 멘토의 실무형 멘토링을 통해 인재로 양성,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 (청년인재 선발) 스펙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을 선발
- (멘토링)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통해 해당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멘토가 청년에게 실무 능력 중심의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청년인재은행) 멘토스쿨 수료자를 워크넷과 연계된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하여 취업을 지원
- (취업매칭) 기업 채용담당자 중심의 채용스킬 멘토링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매칭을 지원

○ (성과)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가 12개로 당초목표치(10개) 초과달성(사업예산 2,490백만원 중 90.3% 집행)

- 청년층이 선호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콘텐츠·IT 분야를 중심으로 ‘스펙초월 멘토스쿨’ 12개 과정(500명) 운영
 -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통해 부족한 스펙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한 다양한 우수사례 창출
 - 스펙초월 채용 및 우수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능력중심 채용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 계기 마련: 공익광고, 토론회, 기획방송 등

□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3-20, 교육부)

- (사업내용) 대학교육이 기업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퇴직인력 등 산업체 우수경력자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현장출신기술자 및 전문가 등을 배치, 교육활동에 지원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
 - LINC 사업 등을 통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
 -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통해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교육 확대, 산학공동연구, 취업 연계 등 강화
- (성과)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가 1,620명으로 당초목표치(1,620명) 달성, 산업체우수강사 채용인원은 1,505명으로 당초목표치(450명) 초과달성(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사업예산 9,720백만원 전액 집행)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3-21,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고용센터의 취업상담을 통한 구직활동을 지원받았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에 대하여 지원한도(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 훈련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 및 훈련장려금 지원(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훈련 직종별로 훈련비의 30~50%를 훈련생 부담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이상 수강한 경우 훈련장려금 별도 지원
 - 계좌제를 통한 훈련 지원,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 인정 및 정보 제공, 훈련상담 강화(취업지원서비스 우선제공),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수시과정 승인,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본격 제도 시행, 훈련기관 인센티브제 시행 등 실시
- (성과) 실업자 훈련 계좌 발급 대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자 비율이 92.1%로 당초목표치(90.0%) 초과달성(사업예산 285,389백만원 중 84.1% 집행)
 - (예산 집행 부진사유) 신규실업자 훈련인원 분야의 훈련인원 감소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69.4%) 전체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남(고용보험 가입이력 있는 전직실업자 훈련은 94.4% 집행)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지원, 다양한 근로자 개인지원방식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자금 또는 훈련비용을 대부
 - 신속한 훈련비용지원 등을 통한 사업주 훈련 참여 유도

- 훈련수요조사 등을 통한 훈련과정 편성 유도
- 집중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생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선정 유도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훈련 활성화

○ (성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은 29.0%로 당초목표치(31.7%)의 91.5% 달성, 사업주 훈련 참여자 만족도는 83.8점으로 당초목표치(82.9점) 초과달성,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참여 근로자 만족도는 81.9점으로 당초목표치(80.0점) 초과달성(사업주 직업훈련지원 사업예산 399,569백만원 중 92.7% 집행,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예산 84,465백만원 중 97.5% 집행)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3-23,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 기회 확대 및 직무능력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 ‘일-학습’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현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유형별로 70~100%, 학습조활동 지원, 우수활동 지원, 학습네트워크 지원, 컨설팅 등)

○ (성과)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는 78.8%로 당초목표치(81.0%)의 97.3% 달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는 86.0%로 당초목표치(80.6%) 초과달성, 학습조직화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는 84.8%로 당초목표치(80.0%) 초과달성,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사업참여 소기업 만족도는 83.9점으로 당초목표치(87.9점)의 95.4% 달성, 핵심직무능력향상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참여자 수료율은 91.3%로 당초목표치(88.0%) 초과달성

- (예산집행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사업예산 208,580백만원 중 79.4% 집행,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예산 31,090백만원 중 89.9% 집행,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예산 5,109백만원 전액 집행
- (예산 집행 부진 사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경우, 사업 내실화를 위한 엄격한 사업계획 심사 및 신규 공동훈련센터의 진입 저조에 따라 훈련참여자 수가 감소하였고,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의 경우, 소비위축과 기업의 투자감소로 중소기업 근

로자의 교육참여율이 낮아져 훈련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모집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임

□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4,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기업이 주도하여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원’, 우수기술·기능인, HRD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도입 및 중소기업 HRD 지원,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는 ‘산업현장교수 지원’ 수행
 - 기존의 체계적 현장 훈련지원 사업은 '14년부터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통합되어 지원
- (세부실적)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원 사업
 -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 평균 만족도 3.93점(5점 척도)
 - (모범사례·모형 발굴) SW-기계 등 성공사례 발굴·확산, 재학생 단계 확대(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도입(9개 특성화고)
 - 산업현장교수 지원
 - 고객발굴을 통한 목표 근접 달성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 지원요청으로 사업 성장 가능성 확인
 - 현장교수 확충 및 지역중심의 상시 지원체제 구축으로 현장중심형 고객 대응 강화
 - 월별 뉴스레터(리플렛, e-뉴스레터) 발간·배포를 통해 지속적 사업정보 및 산업현장교수소개 등 지속적 사업 확산 도모
- (성과)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 수는 2,079개소로 당초목표치(1,300개소) 초과달성, 산업현장교수지원 기업 수는 964개소로 당초목표치(1,300개소)의 74.2% 달성(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원 사업예산 43,374백만원 중 95.8% 집행, 산업현장교수지원 사업예산 12,715백만원 중 40.7% 집행)
 - (산업현장교수지원 목표달성 및 예산집행 부진사유) 훈련실시 이후에 지급되는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근로자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4년도 하반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3-25,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미취업 석사, 박사, 경력직(퇴직인력) R&D 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
- (성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력은 523명으로 당초목표치(500명) 초과달성(7,500백만원 전액 집행)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26, 외교부)

- (사업내용)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지식·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봉사단·전문가를 파견, WFK 봉사단 실질적 통합 지속 추진, 고령자 및 퇴직자 대상 봉사단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부응
- '09년 정부파견 봉사단 단일브랜드 World Friends Korea 출범
- '11년부터 외교부(KOICA)가 4개 부처 6개 사업 통합 시행 중
- 봉사단 통합 취지를 감안, 전반적인 ODA 전략에 따른 해외봉사사업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추진

- (성과) WFK 봉사단 파견인원 수가 4,720명으로 당초목표치(4,465명) 초과달성(사업예산 110,145백만원 중 99.6% 집행)

〈표 2-7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3-19)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개)	10	12	120.0	-	-	-	2,490	2,248	90.3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3-20)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명)	1,620	1,620	100.0	-	-	-	비예산		
	산업체우수강사 채용 인원(명)	450	1,505	334.4	-	-	-	9,720	9,720	100.0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3-21)	계좌발급 대비 내일배움카드제훈련 참여율(%)	90.0	92.1	102.3	68.0	91.3	134.3	285,389	239,977	84.1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2)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31.7	29.0	91.5	-	-	-	399,569	370,247	92.7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점)	82.9	83.8	101.1	76.0	76.3	100.4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참여 근로자 만족도(점)	80.0	81.9	102.4	80.0	85.5	106.9	84,465	82,335	97.5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3-23)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81.0	78.8	97.3	78.0	80.8	103.6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80.6	86.0	106.7	78.6	84.4	107.4	208,580	165,633	79.4
	학습조직화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80.0	84.8	106.0	79.6	85.5	107.4	31,090	27,945	89.9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사업참여 소기업 만족도(점)	87.9	83.9	95.4	-	-	-	5,109	5,109	100.0
	핵심직무능력향상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수료율(%)	88.0	91.3	103.8	-	-	-	(학습조직)	(학습조직)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수(개소) ¹⁾	1,300	2,079	160.0	2.7	2.8	103.7	43,374	41,562	95.8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4)	산업현장교수 지원기업 수(개소) ²⁾	1,300	964	74.2	65	199	306.2	12,715	5,177	40.7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3-25)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력(명)	500	523	104.6	-	-	-	7,500	7,500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26)	WFK 봉사단 파견인원 수(명)	4,465	4,720	105.7	-	-	-	110,145	109,658	99.6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의 모듈개발건수

2) '13년 성과지표는 (중소기업 HRD 자문지원) 지원기업 수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세부영역)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 교육부)

- (사업내용) 재직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도록 대학의 ‘후학업’ 교육여건 조성, 개별대학에서 학과개설이 어려운 분야의 분야별 대표대학 설치·운영, 고교 출신 기능·기술 인체가 국비 국외유학·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재직자 특별전형을 지속·확대하면서 내실화에 집중하고, 교육 수요가 적은 전문·희소분야에 대해서 대표대학 지정·운영
 -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 확대
 - (현) 특성화고 졸업자 → (확대)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위탁생과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능·기술인력에게 해외 연수·유학기회 제공
 - '14년 4월 선발공고 및 1명 선발
 - 고졸 국비유학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추진
- (성과) 전문·희소계열분야 지원 수는 10건으로 당초목표치(4건) 초과달성(사업예산 2,400백만원 전액 집행)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28, 교육부)

- (사업내용) 사회·경제적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성인친화형 대학 교육(조직·학사·인력 등) 역량 강화, 지역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의 대학 접근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산업·지역발전 견인, 맞춤형 실용·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 대학 모델 창출·확산으로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제고 및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기여
 - 고졸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 친화형 학과로 개편하여 성인반, 성인별도반, 통합반 등 개설·운영
 - (성인계속교육형)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의 재도약을 위한 융복합형, 취업·창업특화형 학과 개설·운영: 부동산 경영전공, 융합기술공과, 호텔관광·외식조리과 등
 - (후진학거점형) 고졸 선취업 재직자를 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시설농업학과, 금형설계공학과, 휴먼서비스경영학과 등
- (성과) 지원대학의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개)는 164개로 당초목표치(100개) 초과달성(사업예산 10,233백만원 전액 집행)

□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29, 교육부)

- (사업내용)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인생 100세 행복학습사회 건설, 지역 발전과 학습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특성화 평생교육 사업 확대
 -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지원을 통한 시·도 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13년 10개 → '14년 14개)
 - (평생학습도시) 시·군·구와 연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학습형 일자리 확대('14년 14개)
 -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14년 60개 시·군·구, 180개 센터)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14년 14개 시·도 운영)
- (성과)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이 43.4%로 당초목표치(38.0%) 초과달성(사업예산 5,001백만원 전액 집행)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 교육부)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 과제에 통합 운영(내용 동일)

□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3-31, 교육부)

- (사업내용) 국가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 운영·관리, 학습과정 평가인정 추진, 누적 학습결과의 활용 도모
 - 학습자가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학습계좌에 인적사항, 학력, 평생교육 이수실적, 특기사항 등 수록,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인정
 - 개인의 미래 학습설계, 학력 향상, 자격 취득 및 고용시장에서 기초정보로 활용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확대(프로그램 수 3,472개 증가)
 - 타 부처·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운영 확대: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국방부 군인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업무 협약
 -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연계 평가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온라인 학습과정 및 검정고시 평가시스템 개발,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 기능 가동,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완장치 마련 등

－ 평생학습계좌제 홍보 강화

- (성과) 학습계좌 개설 인원 수(누적인원)가 31,569명으로 당초목표치(30,000명) 초과달성,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평균 접속 수(건)는 3,356건으로 당초목표치(4,300건)의 78.0% 달성(사업예산 542백만원 중 98.3% 집행)

-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평균 접속 수 목표 달성 부진사유 및 추진방향)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학습계좌 개설 인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국방부, EBS 등 기관 단위 시스템 연계로 개인학습자의 학습 이력이 자동으로 연계됨에 따라 학습자 개인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 지표의 변경이 요구됨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3-32,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일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여 교육·훈련·자격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고, Work to School 및 School to Work 지원, 산업현장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 체계 구축, 일-훈련-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 산업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활용패키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제도 개편
-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출제기준 개정 및 자격검정의 출제와 검토위원의 현장전문가 비율을 확대하여 자격의 현장성 제고
-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산업별, 업종별 단체에 검정업무의 위탁 지속 추진

- (세부실적)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관련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 (NCS 질 관리) NCS가 산업계·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인 ‘NCS위키 시스템’ 운영
- － (직업교육) 특성화고(3개교) 및 전문대학(78개교)에 NCS 적용한 교과과정 도입, NCS 학습모듈 175개 개발(’13년 55개 → ’14년 175개)
- 특성화고 교원(17,000명) 및 전문대 교원(100명) 대상 NCS 연수 실시
- － (직업훈련) 폴리텍(34개 캠퍼스, 1,375개 과정, 49,760명 양성) 및 민간훈련(227개 기관, 1,052개 과정)에 NCS 적용, NCS 기반 직업훈련사업 통합심사기준 마련
- － (자격제도) 138개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출제기준을 NCS에 맞게 정비 완료,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4.5월 공포)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14.11월)
- － (기업 인사관리 활용)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활용, 일-학습병행제 참여 등을 통해 2,300여개 기업에서 NCS 활용

- (산업차원 모범사례 창출) SW분야 NCS 확산 모범사례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고용·교육·미래부), 사업주단체, 대·중견기업, 학교 및 유관기관과 MOU 체결
- (공공부문 모범사례 창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4년 상반기 공공기관 4개소(안전보건공단, 서부·남동발전,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NCS 시범적용 후 성과분석('14.8월)
- 사례집 발간 등 활용 모범사례 발굴·확산, 고교생 대상 NCS 전국투어 설명회 등 일반국민 홍보, NCS 및 학습모듈 통합 포털사이트(www.ncs.go.kr) 구축,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10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9개 SC 주관으로 일-학습병행 7대 분야 대상 新 직업자격 개발 완료('14.11월)

○ (성과) NCS 개발 개수가 288개로 당초목표치(241개) 초과달성, 활용패키지 개발 개수 역시 288개로 당초목표치(241개) 초과달성, 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 정비 종목 수는 138개로 당초목표치(139개)의 99.3% 달성(사업예산 32,091백만원 전액 집행)

〈표 2-72〉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	전문/희소계열 분야 지원 수(개) ¹⁾	4	10	250.0	4	4	100.0	2,400	2,400	10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28)	지원대학의 성인진화형 관련 학과 수(개)	100	164	164.0	100	138	138.0	10,233	10,233	100.0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29)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²⁾	38.0	43.4	114.2	36.6	40.1	109.6	5,001	5,001	100.0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	3-27 과제와 동일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3-31)	학습계좌 개설 인원 수(명)(누적인원)	30,000	31,569	105.2	5,000	15,614	312.3	542	533	98.3
	연간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월평균 접속 수(건)	4,300	3,356	78.0	650	3,971	610.9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3-32)	NCS 개발 개수	241	288	120.0	50	254	508.0	32,091	32,091	100.0
	활용패키지 개발 개수	241	288	120.0	40	254	635.0			
	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 정비 종목 수	139	138	99.3	80	105	131.3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전문·희소계열 특성화학과 구축 준비(공고) 분야 수

2) (형식교육참여자추정치+비형식교육참여자추정치-동시참여자추정치)/(만25세~만64세 한국성인수)×100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세부영역)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33,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성과)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이 35.2%로 당초목표치(32.3%) 초과달성(사업예산 91,400백만원 중 99.9% 집행)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34,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외국인, 고령·여성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및 밀집지역 순회 안전교육 실시
 - － 고령·여성근로자 다수근무사업장에 대한 직능단체 등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산재취약계층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자료 개발 보급
 - 외국인근로자 교육: 교재, 포스터, 스티커, 매뉴얼 등 56종
 - 고령·여성근로자 교육: 교재, 강의용 교안, OPL 미디어 등 26종
 - (성과) 취약계층 근로자 교육지원 수가 139,869명으로 당초목표치(80,000명) 초과달성(사업예산 967백만원 전액 집행)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35,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특검은 건설일용 근로자 포함)에 대해 소요비용 지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활동 비용 지원
 - (성과)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사업장 수는 8,721개소로 당초목표치(7,000개소) 초과달성,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근로자 수는 70,363명으로 당초목표치(70,000명) 초과달성,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금액(백만원)은 767백만원으로 당초목표치(770백만원)의 99.6% 달성
 - － (예산집행률)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사업예산 2,867백만원 대비 2,889백만원으로 초과집행,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사업 예산 4,532백만원 대비 4,539백만원으로 초과집행,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금액 사업 예산 770백만원 중 99.6% 집행

〈표 2-73〉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33)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 ¹⁾	32.3	35.2	109.0	27.8	35.6	128.1	91,400	91,285	99.9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34)	취약계층 근로자 교육지원 수(명)	80,000	139,869	174.8	71,500	138,368	193.5	967	967	10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35)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사업장 수(개소)	7,000	8,721	124.6	7,000	17,117	244.5	2,867	2,889	100.8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근로자 수(명)	70,000	70,363	100.5	70,000	75,889	108.4	4,532	4,539	100.2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금액(백만원)	770	767	99.6	770	766	99.5	770	767	99.6

주: 1) (지원전 재해율 - 지원후 재해율)/지원전 재해율×100

[2]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세부영역)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36,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심리불안 해소와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실시, 산재근로자 재활의욕 향상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심리불안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다차원심리검사 10,131명, 심리상담 4,154명(기초상담 3,878명, 집중상담 276명)

－ 요양단계별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운영(1,997명)

• 희망찾기 프로그램 운영(2,527명)

•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339명)

• 산재근로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2,010명)

• 진폐근로자 취미활동반 운영(1,124명)

○ (성과) 사회심리재활만족도는 84.0점으로 당초목표치(81.6점) 초과달성(사업예산 2,836백만원 중 99.2% 집행)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37,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원직장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훈련비용, 훈련수당 지원(직업훈련급여),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직장복귀지원급여)

- (성과)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53.9%로 당초목표치(52.5%) 초과달성(사업예산 16,840백만원 중 99.9% 집행)

〈표 2-74〉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36)	사회심리재활만족도(점) ¹⁾	81.6	84.0	102.9	55	63.9	116.2	2,836	2,813	99.2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37)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²⁾	52.5	53.9	102.7	49.6	58.2	117.3	16,840	16,832	99.9

주: 1) 만족도 조사점수(5점 척도)/5×100, '13년 성과지표는 주치의 소견, 다차원심리검사 등의 경로로 사회심리재활 필요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비율

2) 당해연도 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직업복귀자 비율, [(직업복귀자/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100], '13년 성과지표는 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직업복귀자 비율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의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1] 교육분야 제도 개선(세부영역)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3-38, 교육부)

○ (사업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영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대학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구조개선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자발적 구조개혁 유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 (지정현황) '15년도 경영부실대학 지정(7개교)

－ (이행점검) 경영부실대학('10년~'14년)의 구조조정 과제 이행점검

- 대학별 구조조정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서면 또는 현장)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 유도: 구조조정 노력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 대학 및 퇴출(폐교), 통폐합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에서 해지

－ (개선효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 '14년도 총 5개교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구조조정과제 도출
- 대학간 통폐합(8교→4교), 입학정원 감축(9,200여명), 학과개편(230개 학과→124개 학과) 및 학과폐지(143개 학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 투자(약 2,696억원), 대학재정 확충(약 1,466억원), 학과 특성화 유도 등
- 재학생 충원율 11.5% 상승, 전임교원확보율 9.1% 상승, 교육비 환원율 53.4% 상승, 취업률 15.8% 상승 등 지원대학의 핵심지표 평균값 상승

○ (성과)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는 90.1점으로 당초목표치(83.0점) 초과달성(사업 예산 1,000백만원 중 98.5% 집행)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3-39, 교육부)

○ (사업내용)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 중점 지원,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 '13년 ACE 사업 우수사례 공모 및 사례집 발간('14.2월)

-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포상(총 3개교)

－ ACE 사업 평가 실시 및 최종 지원 대학 선정('14.4~6월)

- 연차, 중간, 종합평가 및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13교 신규선정 포함 총 27교의 학부교육 선도모델 학교 지원

- '14년 ACE 사업 사업관리 설명회 개최('14.7월), '14년 ACE 사업 대학별 협약 체결('14.7월), '14년 ACE 사업 컨설팅 실시('14.8~9월), ACE 사업 소식지 창간('14.10월) 및 ACE 포럼 개최('14.11월)

○ (성과) ACE 사업 선정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52.36%로 당초목표치(58.0%)의 90.3% 달성(사업예산 57,272백만원 전액 집행)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40, 교육부)

○ (사업내용) 학령인구 지속적 감소, 개발사업지역 신설학교로의 학생이동 심화, 농산어촌·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급증 등의 문제를 종합 관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

- 시·도 교육청 적정규모 육성사업 추진 지원: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도심지역 소규모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공청회·홍보자료 제작 등)

- 학교급별 통폐합 학교 재정 지원

- 재정 투자심사 강화로 학교 신설수요 적정 관리

○ (성과) 통폐합 학교 수가 49개교로 당초목표치(50개교)의 98.0% 달성, 중앙투·융자심사 신청 건수 대비 적정·조건부 추진 건수 비율은 100.0%로 당초목표치(64.0%) 초과달성(사업예산 203,919백만원 전액 집행)

- 추진상 애로사항

-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심지역 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유지 및 도심 인근개발 사업 증가로 학교신설 수요 지속 발생, 소규모 사립학교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시·도 교육청 귀속으로 인해 법인해산에 소극적, 학교 통폐합 시 교육공무원(교장·교감)의 정원 감축으로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통폐합 추진이 어려움

〈표 2-75〉 교육분야 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3-38)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점)	83.0	90.1	108.6	79	82	103.8	1,000	985	98.5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3-39)	취업자/졸업대상자* *진학자, 입대자 등 취업 불가능자 제외	58.0	52.36	90.3	59	57	96.6	57,272	57,272	100.0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40)	통폐합 학교 수(개교)	50	49	98.0	60	58	96.7	203,919	203,919	100.0
	(중앙투융자심사 신청 건수/적정·조건부 추진 건수)×100	64.0	100	156.3	64	72.1	112.7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1] 주택분야 제도 개선(세부영역)

□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3-41,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필요
- (성과)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토대로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등

□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3-42,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주택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 및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지원
- (성과)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추진함으로써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76〉 주택분야 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3-41)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여부 ¹⁾	수립	수립	100.0	수립	수립	100.0	비예산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3-42)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 추진 여부	추진	추진	100.0	추진	추진	100.0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여부

[2] 금융분야 제도 개선(세부영역)

□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4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해외 및 대체투자 증대 등 기금의 투자다변화 지속추진, 기금규모 확대 및 투자다변화에 따른 기금운용 역량강화, 위험자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민간 전문가 중심의 「해외투자 종합계획 기획단」 을 구성하여 8차에 걸쳐 세부 과제를 검

토한 후 향후 5년간 ‘해외투자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14.12월)

－ 기금운용 역량강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해외투자 확대 지원을 위한 외환운용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강화
-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실을 리스크 관리센터로 승격(’14.1월), 국내자산 데이터 관리 표준화 및 해외자산 정보관리 기능 강화(’14.10월)

－ 기금운용 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성과유인 제고

- 기금운용의 공정한 성과평가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를 위한 보상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14.12월)

- (성과) 금융부문 기금투자액 대비 해외·대체투자액 비중이 26.4%로 당초목표치(24.0%) 초과달성(비예산사업)

〈표 2-77〉 금융분야 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43)	(해외·대체투자액/금융부문 기금투자액)×100	24.0	26.4	110.0	22	23.3	105.9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여부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1]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세부영역)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44, 기획재정부)

- (사업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금·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

－ (’11~’60 시안 보완) 장기재정전망 시안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점검·보완(’14.1~8월)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기재정전망과 연계강화를 위해 ’13~’17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고, ’17년부터는 전망모델에 따라 전망
- ’13년 실적치 등을 반영하여 세입·거시전망 전제 등을 수정
-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한 전망 반영

－ (기존 모델 보완) 총수입 산정방식, 총지출 분석범위 등 변경(’14.9~11월) 및 ’13~60 장기재정전망 초안 작성(’14.11월)

- 총수입은 국세수입 추계방식을 ‘GDP 대비 일정비율 유지’ 가정에서 ‘세목별 모델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변경
- 총지출은 ‘10개 분야 + 기타지출’에서 ‘10개 분야 + 사회보장지출 + 지방교부세 + 기타지출’로 변경

○ (성과) '14년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보완을 완료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78〉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44)	장기 재정전망보고서 보완여부 ¹⁾	보완	'14년 보완 완료	100.0	보고서 작성	'13 하반기 작성 완료	100.0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마련 여부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의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세부영역)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3-45,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평가를 수행, 근거 중심의 제품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사용정보 및 고령자인체 특성 정보를 축적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기반자료로 활용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표개발 및 사용성평가 실시('14.11월)

- 사용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제품 개선과제 도출
- 개선과제 극복을 위한 객관적인 실험 수행, 과학적 개선방안 제시: 고령자용 지팡이, 욕창 예방 방식, 높낮이 조절 세면대 3개 품목(7개 제품)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4.11월)

- 품목별 사용성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품개발에 반영, 제품개선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표 DB 구축 및 정보제공('14.12월)

- 사용성평가 대상 고령자 및 수발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 인체 치수, 품목별 제품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한 정량적 실험결과 DB 구축
- 고령친화제품 3개 품목에 대한 사용성평가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7개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제시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시스템 특허출원('14.12월)

○ (성과) 사용성 평가 품목 수가 3개로 당초목표치(3개) 달성(사업예산 865백만원 중 99.3% 집행)

□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3-46,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친화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보고서('14.12월)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계 및 산업별 전략품목 선정: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용품, 요양, 주거, 여가, 금융 9대 산업
- 건강상태별 고령친화산업 수요 파악

－ 고령친화제품 R&D 지원

-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R&D 사업 연구과제 연차 평가('14.10월)

- 2014년 연구과제 지원(신규 2과제, 계속 3과제): 고령친화용품 2과제, 고령친화식품 2과제, Active Aging 1과제 지원

- (성과) 고령친화제품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고령친화제품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1개 연구기관 지원) 당초 목표 달성(사업예산 1,500백만원 중 85.3% 집행)
- (예산 집행 부진사유) 1개 과제 관련 연구 중단에 의한 연구비 불용

〈표 2-79〉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3-45)	사용성평가 품목 수	3	3	100.0	3	3	100.0	865	859	99.3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3-46)	고령친화제품실태조사 실시	1	1	100.0	1	2	100.0	1,500	1,280	85.3
	고령친화제품 개발연구 (연구(전문)기관 지원실적)	1	1	100.0	1	1	100.0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세부영역)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47,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자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생활안전성 확보 및 고령자 삶의 질 제고
 - 가전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KS 표준 1종 제정('14.11월)
 - 가전제품 개폐장치 접근성 KS 표준 제정
 - 국민행복표준화 추진과제 KS 표준 2종 개정('14.11월)
 - 노약자·장애인용 전동휠체어의 이동기구 성능 및 안전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짐에 따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
 - 노약자·장애인용 화장실 등 비상벨 위치를 구체화하여 'KS P 1509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 개정
 -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 4종 제·개정
 - 고령자용 의류 및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축지도 표준 등 4종 제·개정
- (성과) 표준 제·개정 및 확인 수가 19건으로 당초목표치(16건) 초과달성(사업예산 100백만원 전액 집행)

□ 고령친화산업 국가 간 표준화 협력강화(3-48,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고령자·장애인 관련 기술위원회와 국제표준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관련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 국제표준화기구(ISO) TC159 SC 4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문, 손잡이) 접근성 NP 제안 승인
 - － 국제표준화기구 TC173 등 고령자·장애인 복지용품 관련 국제회의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동향 파악 및 아국 의견 개진
 - －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논의 및 국제문서 검토(전문위원회 5회, 국제문서 검토 45회)
 - － 동북아 국가 표준협력포럼 등 국제간 표준협력 강화('14.2월, 서울)
- (성과) 활동성과(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전문위원회+국가 간 협력)가 62건으로 당초목표치(55건)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 (추진상 애로사항)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환경·제품 설계에 대한 표준 니즈 발굴,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제조업계 적극적 참여 미흡, 국내 개발기술을 국제표준화 활동성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국책 R&D 사업과의 연계 부족

〈표 2-8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47)	표준 제/개정 및 확인 수	16	19	118.8	16	19	118.8	100	100	100.0
고령친화산업 국가 간 표준화 협력강화(3-48)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건) (Σ(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전문위원회+국가 간 협력))	55	62	112.7	50	54	108.0	비예산		

[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세부영역)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3-49,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활성화 및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 － 고령친화우수제품 확대품목 표준규격(안) 개발('14.10월)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 관리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14.11월)
 - － 고령친화우수제품 확대품목 단체표준제정 신청('14.11월)

- 욕창예방방석(비공기패드형), 고령자용 에이프런 등
- 확대품목 기술표준 예정고시('14.12월)
- (성과) 우수제품 확대를 위한 기준 개발 품목 수는 2건으로 당초목표치(2건) 달성(3-46과제에 예산 포함)
-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및 향노화산업 육성(3-50,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내수 위주의 국내 화장품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장품 인프라 구축 및 미래유망화장품개발 등 화장품 R&D 지원
 -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 해외시장 조사, 인허가 절차, 기술동향 분석 및 기업체 정보 제공
 -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및 기업체 제공
 - 국가별·인종별 화장습관, 색상선호, 피부고민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내기업이 해외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시 필요한 기반정보 제공
 - 미래 화장품 시장 선도 기술 육성을 통해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획득
 - 맞춤형 수출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GMP 전문 인력: 16회 869명 수료, 마케팅 전문 인력: 2회, 100명 수료
 - 수출 전략국 현지 판매거점 확보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시장 공략 등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미국, 베트남)
 - (성과)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 수가 3개국으로 당초목표치(3개국) 달성, 연간 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는 46.3건으로 당초목표치(27.7건) 초과달성(사업예산 17,576백만원 전액 집행)

〈표 2-81〉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3-49)	우수제품 확대를 위한 기준 개발 품목 수(건)	2	2	100.0	2	2	100.0	(3-46)과제에 포함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및 향노화산업 육성(3-50)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 수	3	3	100.0	3	4	133.3	17,576	17,576	100.0
	연간 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¹⁾	27.7	46.3	167.1	6.4	22.9	357.8			

주: 1) {(국내특허 출원 건수×0.3)+(국내특허 등록 건수×0.7)}+{(국외특허 출원 건수×0.3)+(국외특허 출원 등록건수×0.7)}×3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1] 국내 수요기반 확충(세부영역)

□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3-51,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산업계에 제품 홍보의 기회를 부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기능 및 사용방법 등 정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확충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홍보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유공자 발굴 및 포상
 -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 운영(관련 정책, 산업, 통계, 산업뉴스, 고령친화우수제품 정보DB 구축 등)
- (성과) 유공자 표창 건수가 12건으로 당초목표치(11건) 초과달성, 지역사회밀착형 체험관 운영이 8개소로 당초목표치(5개소) 초과달성(3-46과제에 예산 포함)

□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2,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고령자와 부양가족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을 설립하여 수요기반 확산 및 내수시장 활성화 촉진
- (성과) 연간 체험관 참관객 수는 166,558명으로 당초목표치(100,000명)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3개소(광주, 대구, 성남) 구축 및 운영
 - 체험관 참관객 수 166,558명, 교육훈련 참여자 수 25,666명, 제품 상담 건수 6,975건

〈표 2-82〉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3-51)	유공자 표창 건수	11	12	109.1	—	—	—	3-46과제에 포함		
	체험관 운영건수(개소)	5	8	160.0	5	5	100.0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2)	연간(1~12월) 체험관 참관객 수(명)	100,000	166,558	166.6	60,000	152,448	254.1	비예산		

[2]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세부영역)

□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53,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제공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해외 수출 지원
 -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 정보 자료수집 및 정보 제공(연간)

- 국내외 수출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 고령친화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협의체」 운영
 - 요양, 식품, 의료기기 분야 고령친화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고령친화제품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독일 REHACARE 2014 박람회 참가 한국관 운영(10개 산업체) → 한국관 상담 건수 총 117건, 예상 상담액 626천불
- (성과) 해외개척단(협의체) 운영 건수가 4건으로 당초목표치(4건) 달성, 수출정보 DB 구축 건수가 100건으로 당초목표치(100건) 달성(3-46과제에 예산 포함)

〈표 2-83〉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3-53)	해외개척단 (협의체 운영 건수)	4	4	100.0	3	4	133.3	(3-46)과제에 포함		
	수출정보 DB 구축 건수	100	100	100.0	100	100	100.0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소영역)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3-54,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내용)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이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성과) 고령친화용식품 제도화 마련 건수가 부재하여 당초목표치(1건) 미달성(비예산사업)
- (목표달성 부진사유) '14.11월에 고령친화용식품의 기준·규격(안)을 마련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위한 고령친화용식품 기준·규격(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14.12), 고령친화용식품은 시장성이 없으며, 식품유형 신설시 다른 식품유형의 식품은 고령자친화용식품을 표시·광고할 수 없어 다른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식품업계, 학계, 식품관련 연구소 등 전문가 50명)
- 식품관련 업체에서 고령자는 모든 종류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식품의 유형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시장성이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 제시
 - 식품관련 학계, 단체 등의 전문가는 식품유형으로 고령자용 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사례는 없으며, 식품유형을 신설하게 되면 다른 유형의 제품은 고령자용식품으로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규제를 발생할 수 있음을 표명

〈표 2-84〉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4			2013			2014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3-54)	고령친화식품 제도화 마련 건수 ¹⁾	1	—	0.0	1	1	100.0	비예산		

주: 1) '13년 성과지표는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험법 적용성 검토

제4절 실적평가 결과 종합

1. 목표달성도 평가

가. 총괄

□ 2014년도 전체 평가대상 과제(224개, 완료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14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 수는 185개로 82.6%를 차지

○ 총 203개 과제가 목표의 90% 이상 달성(90.6%)

— 18개(8.0%) 과제는 목표의 90~100% 미만 달성

○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13개(5.8%)이며,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으로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8개(3.6%)임

〈표 2-85〉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분야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6 (2.7)	2 (0.9)	5 (2.2)	8 (3.6)	18 (8.0)	185 (82.6)	224 (100.0)	14
저출산 분야	3 (3.3)	1 (1.1)	2 (2.2)	4 (4.4)	6 (6.6)	75 (82.4)	91 (100.0)	9
고령사회 분야	2 (2.5)	1 (1.3)	3 (3.8)	4 (5.0)	6 (7.5)	64 (80.0)	80 (100.0)	4
성장동력 분야	1 (1.9)	—	—	—	6 (11.3)	46 (86.8)	53 (100.0)	1

주: 1) 저출산 분야 기 종료 등 과제: 기 종료과제는 4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5개임(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중 1개는 '15년 추진과제

로 '14년 추진계획이 없음)

2) 고령사회 분야 과제는 2014년 시행계획상 총 86개이나, 과제번호 "2-43~46"에 해당하는 과제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과제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3개 과제가 아닌 1개 과제로 간주하여 총 과제 수는 84개임

3) 성장동력 분야 기 종료 등 과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로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산출된 수치임

4)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5)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41-①, 2-41-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2014년도 목표달성도는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당초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과제는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평가대상 53개 과제 중 86.8%, 저출산 분야의 경우 91개 과제 중 82.4%,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80개 과제 중 80.0%로 나타남

- 당초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과제의 비율은 성장동력 분야 98.1%, 저출산 분야 89.0%, 고령사회 분야 87.5% 순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4개(4.4%), 고령사회분야 3개(3.8%), 성장동력 분야 1개(1.9%)

나. 분야별 목표달성도

(1) 저출산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저출산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85.6%,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84.6%,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79.5% 순임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92.3%,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90.4%,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86.3% 순임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4.8%,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4.6%,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3.8% 순임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모두 85.7%임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100%,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85.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73.7%,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72.7% 순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100.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91.7%,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75.0%,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50.0% 순임

〈표 2-86〉 2014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저출산 분야	3 (3.3)	1 (1.1)	2 (2.2)	4 (4.4)	6 (6.6)	75 (82.4)	91 (100.0)	9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 (4.8)	—	1 (4.8)	—	1 (4.8)	18 (85.6)	21 (100.0)	4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 (14.3)	—	—	—	—	6 (85.7)	7 (100.0)	2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	1 (14.3)	—	—	6 (85.7)	7 (100.0)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	—	—	1 (14.3)	6 (85.7)	7 (100.0)	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 (2.3)	1 (2.3)	1 (2.3)	3 (6.8)	3 (6.8)	35 (79.5)	44 (100.0)	4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	—	1 (14.3)	—	6 (85.7)	7 (100.0)	—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9.1)	—	—	1 (9.1)	1 (9.1)	8 (72.7)	11 (100.0)	2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	—	—	—	7 (100.0)	7 (100.0)	2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1 (5.3)	1 (5.3)	1 (5.3)	2 (10.5)	14 (73.7)	19 (100.0)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1 (3.8)	—	—	1 (3.8)	2 (7.7)	22 (84.6)	26 (100.0)	1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	—	—	—	4 (100.0)	4 (100.0)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	—	—	2 (25.0)	6 (75.0)	8 (100.0)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	—	1 (8.3)	—	11 (91.7)	12 (100.0)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1 (50.0)	—	—	—	—	1 (50.0)	2 (100.0)	1

주: 1) 기 종료과제는 4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5개임(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중 1개는 '15년 추진과제로 '14년 추진계획이 없음)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1-87-①, 1-87-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과제별 목표달성도

○ 저출산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10개(91개 과제 중 11.0%)로 나타남¹⁾

- － 0% 달성 과제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1)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2장 1절 내용 참조

- 1~50% 달성 과제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 50~70% 달성 과제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 90~100% 미만 달성 과제는 6개로 총 91개 과제 중 6.6%를 차지함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초등 중일 돌봄교실 확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표 2-87〉 2014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3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1-6)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1-40)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9)
1~50% 미만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1-56)
50~70% 미만	2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1-12)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1-60)
70~90% 미만	4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29)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1-72)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1-87-①, 1-87-②)
90~100% 미만	6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1-44)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1-61) -초등 중일 돌봄교실 확대(1-71)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1-79)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3)
100% 이상	75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 수당의 단계적 인상(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1-4)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1-6)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1-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0) -시간제 근무 활성화(1-11) -유연근무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강화(1-13) -스마트 워크 도입 및 확산(1-14) -육아연계형 스마트 워크 센터 모델개발(1-15)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1-17-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운영지원 확대(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1-18)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 마련 지원(1-19)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1-21)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1-23)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1-26)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1-27)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행복주택 공급)(1-28)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1-30)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1)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1-33)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1-34)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1-35)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7)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새아기 장려금) 도입(1-38)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42) -영유아 건강관리(1-43)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1-45) -보육교육비 지원확대(1-46)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1-47-①, 1-47-②) -양육수당 지원 확대(1-48)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1-49) -돌짜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50)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3)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5)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1-57)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8)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9)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1-62) -실수요 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1-63)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4)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6) -방과 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67)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8)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7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73)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1-74)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1-75)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1-77)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1-78) -휴먼 네트워크 확대(1-80)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81)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82) -문화 바우처 지원(1-84)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5-①, 1-85-②)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1-86)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1-88)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9)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 확충(1-90)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1-91)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1-92)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1-93)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지원강화(1-94)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5-①, 1-95-②, 1-95-③)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6)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 중재(1-97) -청소년정책 14년 시행계획 수립(1-99)

주: 1) 기 종료과제는 4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5개임(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중 1개는 '15년 추진과제로 '14년 추진계획이 없음)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1-87-①, 1-87-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인 평균치임

(2) 고령사회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고령사회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9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83.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70.7% 순으로 나타남
 -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100.0%,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96.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78.0% 순임
 -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4.9%,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3.7%,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소영역)’ 100.0%,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83.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66.7%,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63.6% 순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자리 사업 내실화(소영역)’,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이 각각 100.0%,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적정화(소영역)’ 92.9%,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83.3% 순임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100.0%,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60.0% 순으로 나타남

□ 과제별 목표달성도

- 고령사회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 90% 미만인 과제는 10개(80개 과제 중 12.5%)로 나타남²⁾
 - － 0% 달성 과제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2)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2장 2절 내용 참조

- 1~50% 미만 달성과제는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 50~70% 미만 달성과제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U-health 서비스 확충>

○ 90~100% 미만 달성과제는 6개로 80개 과제 중 7.5%를 차지함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농어촌 가사도우미>,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표 2-88〉 2014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고령사회 분야	2 (2.5)	1 (1.3)	3 (3.8)	4 (5.0)	6 (7.5)	64 (80.0)	80 (100.0)	4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 (4.9)	-	3 (7.3)	4 (9.8)	3 (7.3)	29 (70.7)	41 (100.0)	2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4.5)	-	2 (9.1)	3 (13.6)	2 (9.1)	14 (63.6)	22 (100.0)	1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1 (8.3)	-	1 (8.3)	-	-	10 (83.3)	12 (100.0)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	1 (16.7)	1 (16.7)	4 (66.7)	6 (100.0)	1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	-	-	-	-	1 (100.0)	1 (100.0)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1 (3.7)	-	-	1 (3.7)	25 (92.6)	27 (100.0)	2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	-	-	-	-	1 (100.0)	1 (100.0)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	1 (16.7)	5 (83.3)	6 (100.0)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1 (7.1)	-	-	-	13 (92.9)	14 (100.0)	1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	-	-	-	6 (100.0)	6 (100.0)	1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	-	2 (16.7)	10 (83.3)	12 (100.0)	-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	-	-	-	-	7 (100.0)	7 (100.0)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	-	2 (40.0)	3 (60.0)	5 (100.0)	-

주: 1) 고령사회 분야과제는 시행계획상 총 86개이나,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과제는 분류상 "2-43~46"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제 수는 8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41-①, 2-41-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표 2-89〉 2014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2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2-4)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2-30)
1~50% 미만	1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56)
50~70% 미만	3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2-9)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2)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2-33)
70~90% 미만	4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2-2)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23) -U-health 서비스 확충(2-41-①, 2-41-②)
90~100% 미만	6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10)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20)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40) -기초(노령)연금 내실화(2-47) -농어촌 가사도우미(2-83)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2-85)
100% 이상	64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2-5)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2-6)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8)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2-11)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3)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4)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5-①, 2-15-②)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6)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7)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8)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2-19)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2-21)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2-22)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2-24)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2-25)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6)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7)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8)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9) -개인연금 활성화(2-31)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2-32)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2-34)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2-35)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36)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2-38)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2-39)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42)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2-43)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2-44) -주택연금제도 활성화(2-48)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9) -연기연금제도 활성화(2-50)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2-51) -농지연금 활성화(2-52)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53)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55)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2-57)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2-58)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2-59)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2-60)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2-6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62) -노인 운동 활성화(2-63) -농촌생활 활력 추진(2-64)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2-65)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2-66)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2-67)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2-68)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2-69)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2-70)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72)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2-73)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2-74)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75)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76)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2-77)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2-78)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2-79)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2-80-①, 2-80-②)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81) -독거노인 보호 강화(2-82-①, 2-82-②)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84)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86)

주: 1) 고령사회 분야과제는 시행계획상 총 86개이나,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과제에 분류상 “2-43~46”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제 수는 8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41-①, 2-41-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3) 성장동력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90.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86.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85.7% 순으로 나타남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이 각각 100.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90.0% 순임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0.0% 만 나타남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이 각각 100.0%, ‘순순환적 직

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87.5%,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63.5% 순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소영역)'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100.0%,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66.7%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소영역)'와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이 각각 100.0%, '고령자용 식품 산업 기반 조성(소영역)'은 부재함

〈표 2-90〉 2014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성장동력 분야	1 (1.9)	-	-	-	6 (11.3)	46 (86.8)	53 (100.0)	1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	-	-	5 (13.9)	31 (86.1)	36 (100.0)	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	-	-	3 (37.5)	5 (63.5)	8 (100.0)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	-	-	-	7 (100.0)	7 (100.0)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	-	-	2 (12.5)	14 (87.5)	16 (100.0)	1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	-	-	-	5 (100.0)	5 (100.0)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	-	-	1 (14.3)	6 (85.7)	7 (100.0)	-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	-	1 (33.3)	2 (66.7)	3 (100.0)	-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3 (100.0)	3 (100.0)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	-	-	1 (100.0)	1 (100.0)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 (10.0)	-	-	-	-	9 (90.0)	10 (100.0)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	-	-	-	6 (100.0)	6 (100.0)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	-	3 (100.0)	3 (100.0)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1 (100.0)	-	-	-	-	-	1 (100.0)	-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2)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3-16-①, 3-16-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3) 성장동력 분야 내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에 통합되어 운영

□ 과제별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1개(53개 과제 중 1.9%로 나타남³⁾)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과제로 0% 달성
- 90~100% 미만 달성과제는 6개로 총 53개 과제 중 11.3%를 차지함
 -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

〈표 2-91〉 2014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1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3-54)
1~50% 미만	-	-
50~70% 미만	-	-
70~90% 미만	-	-
90~100% 미만	6	-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3-6-②)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2) -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3-31)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3-39)
100% 이상	46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3-3)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 이주/장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3-10)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3-11) -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①, 3-13-②)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3-16-①, 3-16-②) -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3-17) -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3-18)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3-19) -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3-20)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3-21)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3-23) -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4)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3-25)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26)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28) -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29)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3-32)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33)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34)

3)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2장 3절 내용 참조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35)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36)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37)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3-38)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40)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3-41)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3-42)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43)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44)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3-45)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3-46)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47) -고령친화산업 국가간 표준화 협력강화(3-48)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3-49)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및 향노화산업 육성(3-50)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3-51)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2)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53)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2)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3-16-①, 3-16-②)에는 목표달성률 계산시 개별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2. 예산 평가

가. 예산집행률

□ 전체 평가대상 과제 중 예산사업은 158개, 비예산사업은 68개임

○ 예산사업 중 100% 이상 예산을 집행한 과제는 77개로 48.7%를 차지하며, 90% 이상을 집행한 과제는 총 138개로 87.3%를 차지

○ 예산집행률이 50~90% 미만인 과제는 15개(9.5%),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제는 5개(3.2%)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예산사업 기준)이 100% 이상인 과제의 비율은 성장동력 분야 56.4%, 저출산 분야 47.0%, 고령사회 분야 45.3% 순으로 높음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과제는 성장동력 분야 89.7%, 고령사회 분야 88.7%, 저출산 분야 84.9% 등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3개(4.5%), 고령사회 분야 2개(3.8%), 성장동력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단위: 과제 수, %)

분야	예산집행률						비예산사업	기종료 등 과제
	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5 (3.2)	2 (1.3)	13 (8.2)	61 (38.6)	77 (48.7)	158 (100.0)	68	12
저출산 분야	3 (4.5)	—	7 (10.6)	25 (37.9)	31 (47.0)	66 (100.0)	27	7
고령사회 분야	2 (3.8)	1 (1.9)	3 (5.7)	23 (43.4)	24 (45.3)	53 (100.0)	27	4
성장동력 분야	—	1 (2.6)	3 (7.7)	13 (33.3)	22 (56.4)	39 (100.0)	14	1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1) 저출산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50.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50.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41.7% 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내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1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1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1개 과제로 총 3개 과제가 해당됨
- 예산집행률이 50~70% 미만인 과제는 없음
- 예산집행률이 70~90% 미만인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내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1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1개,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2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2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내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1개 과제로 총 7개 과제임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과제는 전체 과제 중 84.9%(56개)로 나타남

(2) 고령사회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58.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55.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33.3% 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2개, 50~70% 미만인 과제는 1개, 70~90% 미만인 과제는 3개이며 모두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내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에 해당됨

〈표 2-93〉 2014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 수, %)

중·소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종료 등 과제
	(억원)	(%)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저출산 분야	144,889.2	(100.0)	3 (4.5)	—	—	7 (10.6)	25 (37.9)	31 (47.0)	66 (100.0)	27	7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8,823.5	(6.1)	—	1 (10.0)	—	1 (10.0)	3 (30.0)	5 (50.0)	10 (100.0)	13	2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7,575.6	(5.2)	—	—	—	—	2 (50.0)	2 (50.0)	4 (100.0)	3	2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379.7	(0.3)	—	1 (33.3)	—	1 (33.3)	—	1 (33.3)	3 (100.0)	4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868.2	(0.6)	—	—	—	—	1 (33.3)	2 (66.7)	3 (100.0)	6	—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30,487.5	(90.1)	—	2 (6.3)	—	5 (15.6)	9 (28.1)	16 (50.0)	32 (100.0)	12	4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4,468.5	(3.1)	—	—	—	—	2 (100.0)	—	2 (100.0)	5	—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5,541.8	(3.8)	—	1 (10.0)	—	1 (10.0)	2 (20.0)	6 (60.0)	10 (100.0)	1	2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09,587.4	(75.6)	—	—	—	2 (40.0)	—	3 (60.0)	5 (100.0)	3	1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0,889.9	(7.5)	—	1 (6.7)	—	2 (13.3)	5 (33.3)	7 (46.7)	15 (100.0)	3	1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5,578.2	(3.9)	—	—	—	1 (4.1)	13 (54.2)	10 (41.7)	24 (100.0)	2	1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116.0	(0.8)	—	—	—	—	3 (75.0)	1 (25.0)	4 (100.0)	—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2,187.4	(1.5)	—	—	—	—	4 (50.0)	4 (50.0)	8 (100.0)	—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274.9	(1.6)	—	—	—	1 (8.3)	6 (50.0)	5 (41.7)	12 (100.0)	—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	—	—	—	—	—	—	2	1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표 2-94〉 2014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 수, %)

중·소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억원)	(%)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고령사회 분야	98,492.9	100.0	-	2 (3.8)	1 (1.9)	3 (5.7)	23 (43.4)	24 (45.3)	53 (100.0)	27	4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8,888.1	19.2	-	2 (7.4)	1 (3.7)	3 (11.1)	12 (44.4)	9 (33.3)	27 (100.0)	14	2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0,837.1	11.0	-	2 (10.5)	1 (5.3)	3 (15.8)	7 (36.8)	6 (31.6)	19 (100.0)	3	1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5,861.7	6.0	-	-	-	-	2 (66.7)	1 (33.3)	3 (100.0)	9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2,184.4	2.2	-	-	-	-	3 (75.0)	1 (25.0)	4 (100.0)	2	1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5.0	0.0	-	-	-	-	-	1 (100.0)	1 (100.0)	-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76,683.3	77.9	-	-	-	-	7 (41.2)	10 (58.8)	17 (100.0)	10	2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5,763.9	5.9	-	-	-	-	1 (100.0)	-	1 (100.0)	-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	69,513.1	70.6	-	-	-	-	1 (33.3)	2 (66.7)	3 (100.0)	3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1,239.8	1.3	-	-	-	-	4 (57.1)	3 (42.9)	7 (100.0)	7	1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166.6	0.2	-	-	-	-	1 (16.7)	5 (83.3)	6 (100.0)	-	1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921.5	3.0	-	-	-	-	4 (44.4)	5 (55.6)	9 (100.0)	3	-
3-1. 고령친화적 주가교통환경 조성	842.9	0.9	-	-	-	-	2 (33.3)	4 (66.7)	6 (100.0)	1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2,078.6	2.1	-	-	-	-	2 (66.7)	1 (33.3)	3 (100.0)	2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1-1)' 내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는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산출이 불가하여 사업 전체 예산 활용

(3) 성장동력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66.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56.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50.0% 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없음

- 예산집행률이 50~70% 미만인 과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1개 과제임
- 예산집행률이 70~90% 미만인 과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2개,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내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1개 과제로 총 3개 과제임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과제는 전체 과제 중 89.7%(35개)로 나타남

〈표 2-95〉 2014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 수, %)

중소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억원)	(%)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성장동력 분야	17,212.8	100.0	—	—	1 (2.6)	3 (7.7)	13 (33.3)	22 (56.4)	39 (100.0)	14	1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4,392.9	83.6	—	—	1 (3.1)	2 (6.3)	11 (34.4)	18 (56.3)	32 (100.0)	4	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814.2	4.7	—	—	—	—	2 (28.6)	5 (71.4)	7 (100.0)	1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986.2	5.7	—	—	—	—	2 (50.0)	2 (50.0)	4 (100.0)	3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체계 확립	11,391.6	66.2	—	—	1 (6.3)	2 (12.5)	4 (25.0)	9 (56.3)	16 (100.0)	—	1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 용력 손실 방지	1,200.9	7.0	—	—	—	—	3 (60.0)	2 (40.0)	5 (100.0)	—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 제사회 제도개선	2,621.8	15.2	—	—	—	—	1 (33.3)	2 (66.7)	3 (100.0)	4	—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621.8	15.2	—	—	—	—	1 (33.3)	2 (66.7)	3 (100.0)	—	—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	—	—	—	3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	—	—	—	—	—	—	1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98.2	1.1	—	—	—	1 (25.0)	1 (25.0)	2 (50.0)	4 (100.0)	6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98.2	1.1	—	—	—	1 (25.0)	1 (25.0)	2 (50.0)	4 (100.0)	2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	—	—	—	—	—	3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	—	—	—	—	—	—	1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성장동력 분야 내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3-30)’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7)’에 통합되어 운영

나. 과제별 예산

(1) 저출산 분야

-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은 총 8.9조원으로 저출산 분야 총 예산의 61.6% 차지
- 다음으로 양육수당 지원 확대 1.9조원(13.2%),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0.76조원(5.2%),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0.66조원(4.6%),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0.48조원(3.3%),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0.45조원(3.1%) 등으로 나타남
- 상위 6개 과제의 예산이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91.0%로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96〉 2014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저출산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89,195.6	61.56	61.56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19,166.8	13.23	74.79
3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7,575.6	5.23	80.02
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등)	6,624.6	4.57	84.59
5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난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4,815.8	3.32	87.91
6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결혼관련교육, 정보 및 서비스 제공)	4,468.5	3.08	91.00
7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 개발 지원(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1,564.8	1.08	92.08
8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시간연장형,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1,533.3	1.06	93.14
9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225.0	0.85	93.98
10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1,203.1	0.83	94.81
11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201.0	0.83	95.64
12	민간육아시설 서비스개선(평가인증, 공공형 등)	868.2	0.60	96.24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조성(직장보육시설, 가족친화)	868.2	0.60	96.84
14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662.8	0.46	97.30
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652.4	0.45	97.75
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계층아동 인적 네트워크 형성	622.6	0.43	98.18
17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549.9	0.38	98.56
1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463.6	0.32	98.88
1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8.3	0.27	99.14
2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379.7	0.26	99.41
21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316.4	0.22	99.63
2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05.5	0.14	99.77
23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204.6	0.14	99.91
24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133.2	0.09	100.00
	계	144,889.2	100.0	-

주: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

(2) 고령사회 분야

-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무연금 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기초(노령)연금)'에 총 6.9조원이 투입되어 고령사회 분야 총 예산 중 69.7% 차지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1조원(10.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0.58조원(5.9%),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0.58조원(5.9%), ‘사전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0.22조원(2.2%),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0.2조원(2.0%) 등
-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의 경우, 세부 과제인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과제 예산이 중·고령자에 한정된 예산이 아닌 관련 사업(4대 돌봄분야 일자리)의 총 예산이 집계되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상위 6개 과제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2-97〉 2014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고령사회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68,605.3	69.66	69.66
2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10,042.1	10.20	79.85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5,849.3	5.94	85.79
4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5,763.9	5.85	91.64
5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2,184.4	2.22	93.86
6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1,967.9	2.00	95.86
7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907.7	0.92	96.78
8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658.1	0.67	97.45
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529.7	0.54	97.99
10	고령자고용연장	436.2	0.44	98.43
11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344.7	0.35	98.78
12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329.6	0.33	99.11
13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90.8	0.19	99.31
1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84.8	0.19	99.49
15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162.9	0.17	99.66
16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112.2	0.11	99.77
17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110.7	0.11	99.89
1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54.4	0.06	99.94
19	의료비지출 적정화	27.2	0.03	99.97
20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2.4	0.01	99.98
21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8.7	0.01	99.99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도의 조기정착	5.1	0.01	99.99
23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활성화	5.0	0.01	100.00
계		98,492.9	100.0	—

주: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

(3) 성장동력 분야

-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에 1.06조원이 투입되어 성장동력 분야 총 예산 중 62.0% 차지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0.26조원(15.2%),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0.1조원(5.8%),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912억원(5.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631억원(3.7%) 등으로 나타남

○ 상위 5개 과제의 예산이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92% 수준으로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98〉 2014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성장동력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10,671.1	62.00	62.00
2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621.8	15.23	77.23
3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1,004.5	5.84	83.06
4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911.5	5.30	88.36
5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631.0	3.67	92.02
6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502.6	2.92	94.94
7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217.9	1.27	96.21
8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98.2	1.15	97.36
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196.5	1.14	98.50
10	적극적 여성고용정책강화	183.3	1.06	99.57
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74.6	0.43	100.00
계		17,212.8	100.0	-

주: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

제 3 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 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3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일부 중요 과제들을 선정하여 ‘핵심과제’로 관리하고 있음
 - 핵심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음
 - 핵심성과지표는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및 성장동력 분야의 중분류 및 소분류별로 설정하였으며, 각 핵심성과지표는 1개 이상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측정되고 있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총 45개 핵심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저출산 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 성장동력 분야 10개로 본 장에서는 각 분야별로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의 경우 3개 소영역에 대한 5개의 핵심과제 포함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 육아휴직제도 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육아휴직제도 대체 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활성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 유연근로제 확산(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

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에 2개 핵심과제 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가족친화 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등의 정책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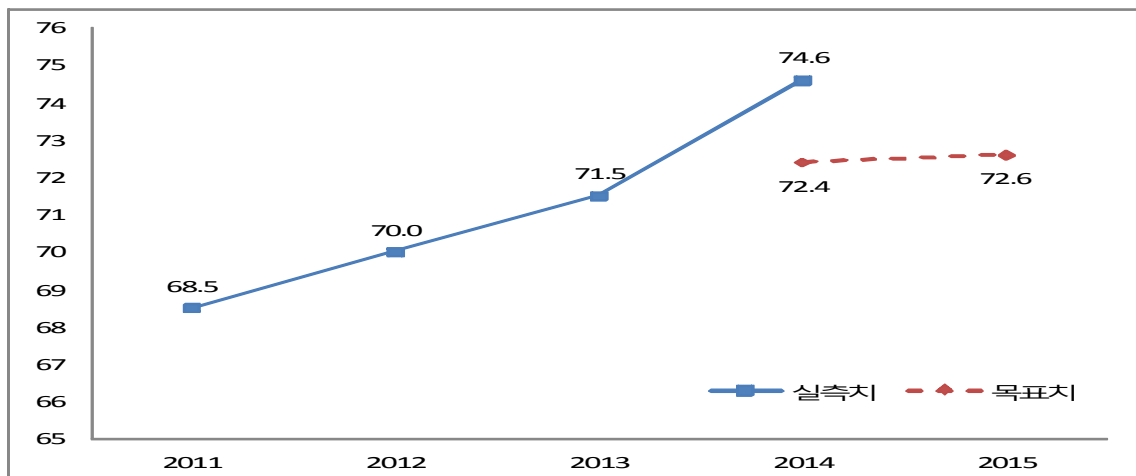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 성과지표	관련 과제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복귀 인센티브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청구제 활성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 강화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소영역)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71.5%에서 ’14년 74.6%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72.4%)를 초과달성(103.0%)
- － 관련 세부과제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원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을 우성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대기업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 2015년도 목표치(72.6%)를 이미 초과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 본 과제는 일반과제(육아휴직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와 동일한 사업이나 일반과제 목표치는 ’14년 72.3%이며 핵심과제 목표치는 72.4%로 상이함. 2015년도 목표치 결정시 일반과제 목표치와의 일관성 고려 필요

[그림 3-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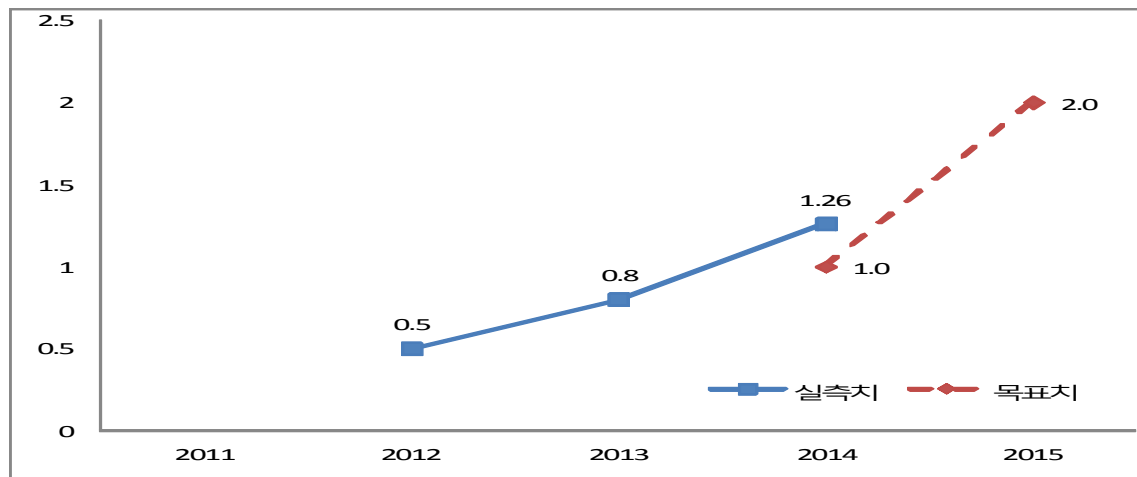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수 ÷ 휴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핵심성과지표)’이 ’13년 0.8%에서 ’14년 1.26%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0%) 초과달성(126.0%)
- －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

- 용대상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14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지만, '12~'14년의 증가율과 '15년도 목표치(2.0)를 고려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보다 장려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그림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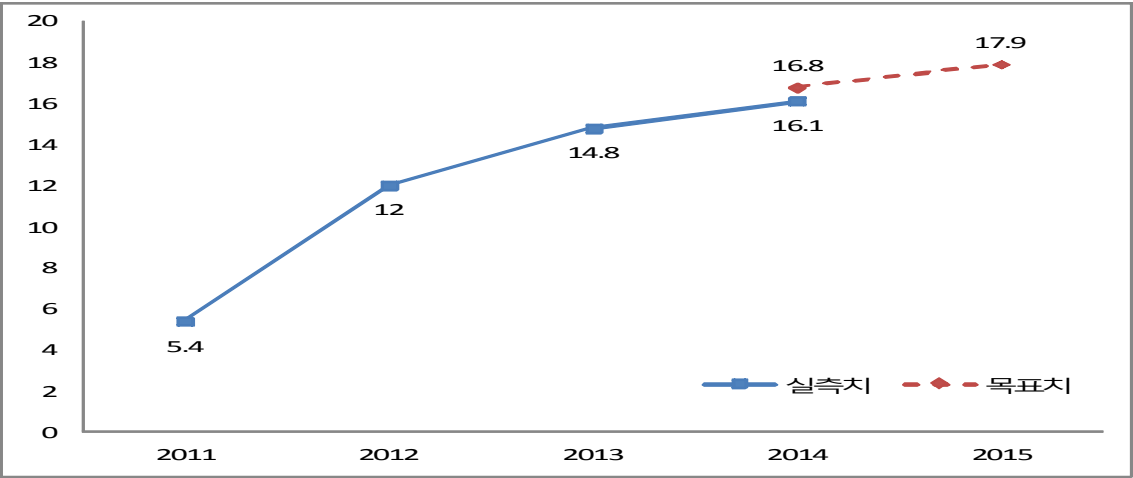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이용자 수 ÷ 산전후휴가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 유연근로제 확산

-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14.8%에서 ‘14년 16.1%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6.8%)의 95.8% 달성
 - 이는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세부정책들이 수행된 결과로 평가 가능
 - 현재의 흐름을 볼 때, ‘15년도 목표치(17.9%)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홍보강화 및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그림 3-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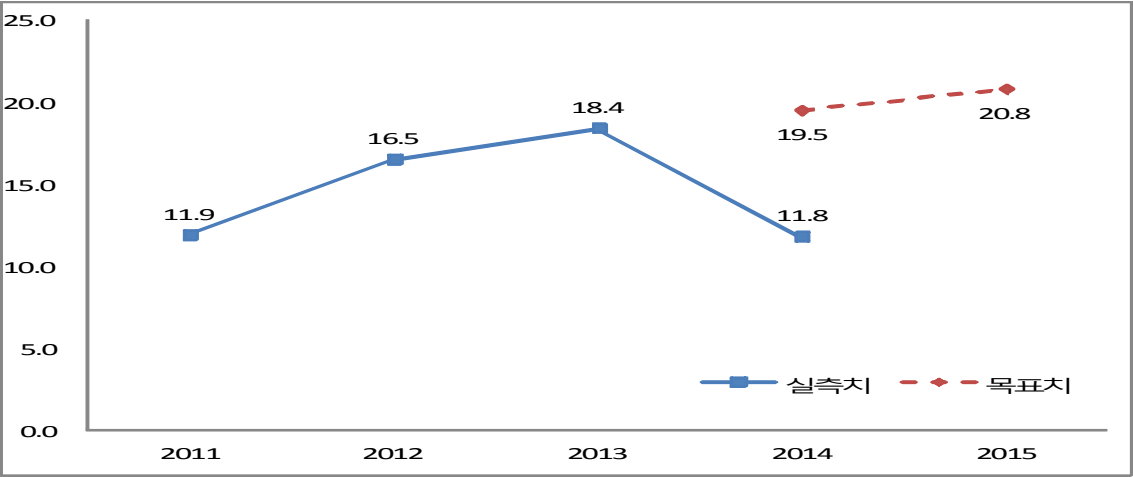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행정기관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대상인원×100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18.4%에서 ’14년 11.8%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9.5%)의 60.5% 달성
 - (목표달성 부진사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업장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성과 부진
 - (향후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16.1월 부터 시행)

[그림 3-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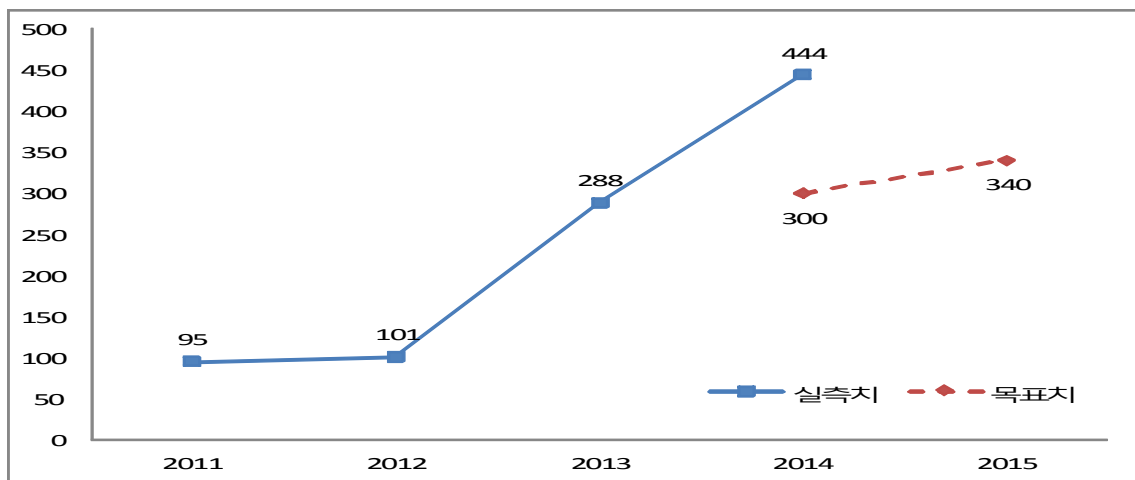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당해연도 설치 개소 수÷전년도 총 개소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288개소에서 ’14년 444개소로 급증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00개소)를 초과달성(148.0%)
- 이는 세부과제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한 성과로 평가 가능
- 이미 ’15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130.6%)하고 있어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9개의 핵심과제 포함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가족 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보육·교육비 지원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의 경우 4개 핵심과제 포함

-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보육시설 평가 인증 유지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아이돌봄 연계 건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 중일 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2〉 저출산 분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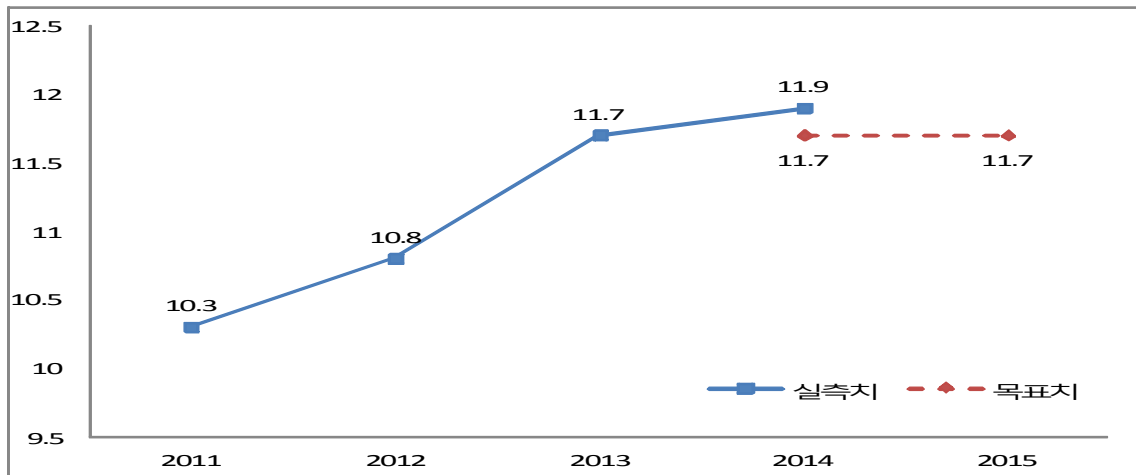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과제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	-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산분만 취약지역 수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새아기 장려금) 도입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	-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돌봄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실 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아이돌봄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미 연계 건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 중일 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11.7%에서 ’14년 11.9%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1.7%)를 초과달성(101.7%)
-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지원이 지속되고,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며,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한 결과로 평가 가능
- 이미 ’15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101.7%)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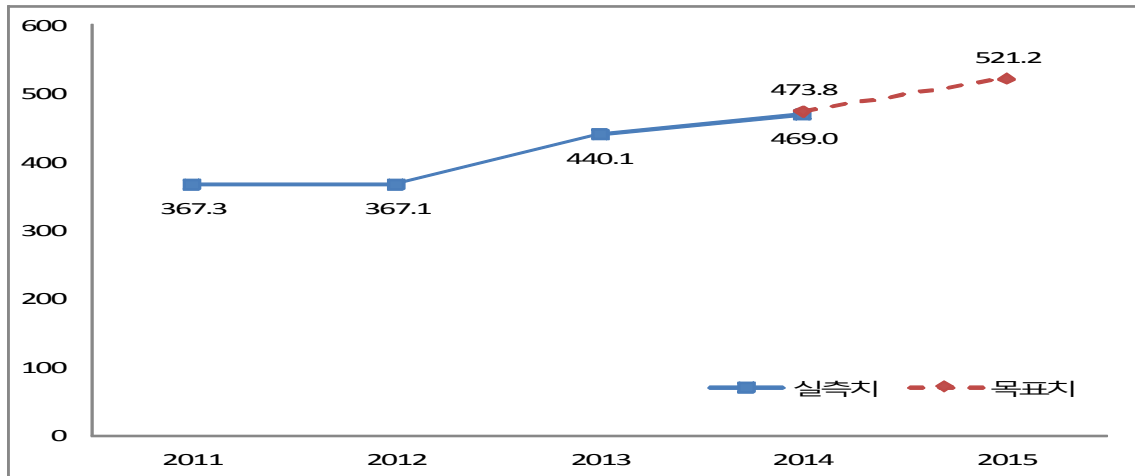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특별공급+임대주택+전세임대)÷연간초혼 건수×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핵심성과지표)’이 ’13년 440.1천명에서 ’14년 469천명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473.8천명)의 99.0% 달성
-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내실화한 세부과제의 성과로 평가 가능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년 138개소에서 ’14년 152개소로 확대됨으로써 결혼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도 ’11년 129만명에서 ’14년 203만명으로 증가함
- 현재 ’15년도 목표치의 90.0%를 달성하고 있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그림 3-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그림 3-8 참조)

○ ‘임신·분만 취약 지역 수(핵심성과지표)’가 ‘13년 46개소에서 ‘14년 37개소로 감소하였지만, 당해연도 목표치(30개소)의 76.7%만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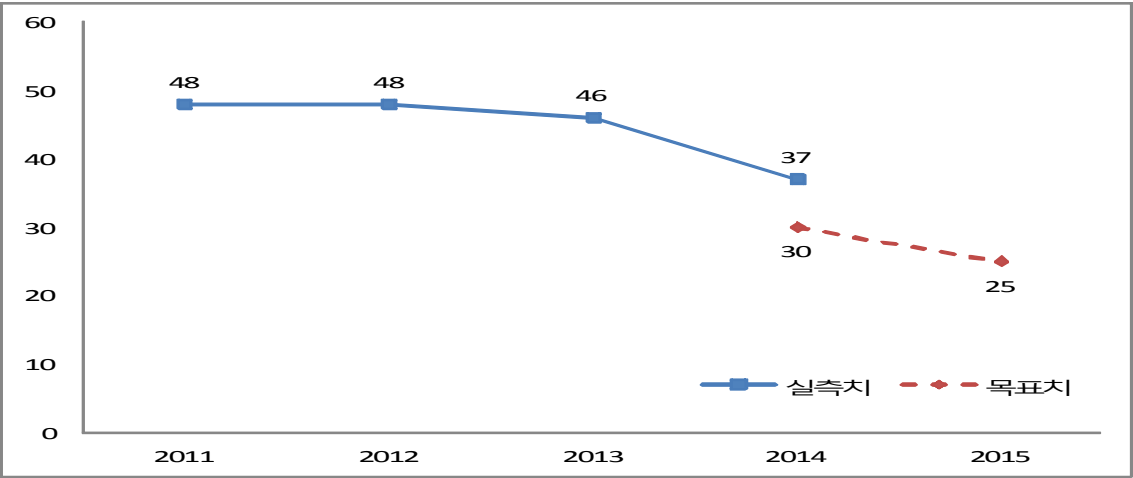
- (목표달성 부진사유) 산부인과 및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감소,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등으로 인해 목표치에 부합하는 분만인프라 확충의 한계
- (향후 계획) 분만 취약지 및 분만 관련 지역 산모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산부인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분만 관련 수가를 인상하고(‘16년), 특히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야간 분만 가산, 취약지 분만가산 등 관련 수가 개선 추진(‘16년) 및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율(‘15년 104%) 제고를 위한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 지속 추진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그림 3-9 참조)

○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13.4%에서 ‘14년 15.1%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6.1%)의 93.8%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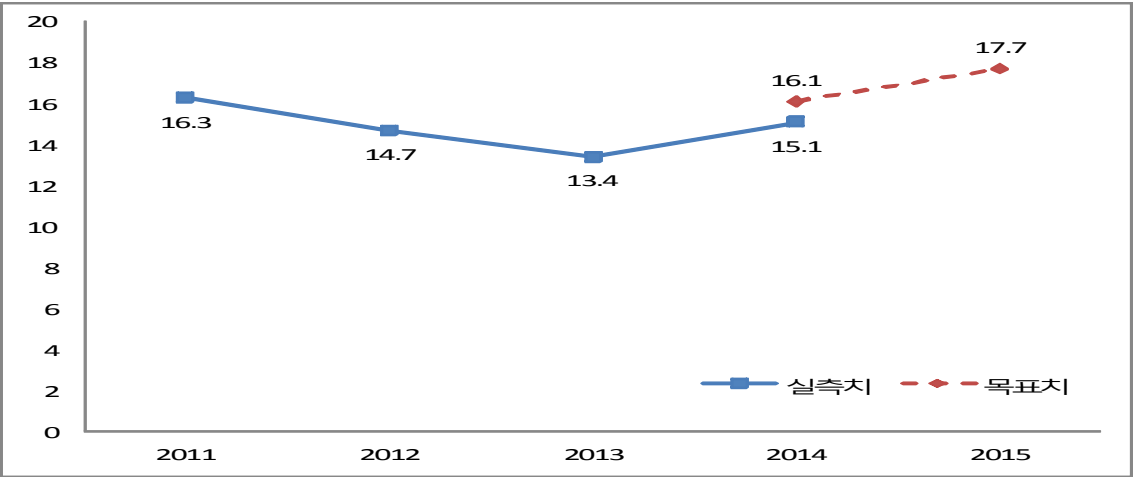
- ‘15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수혜계층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비롯한 ‘15년 목표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그림 3-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 수(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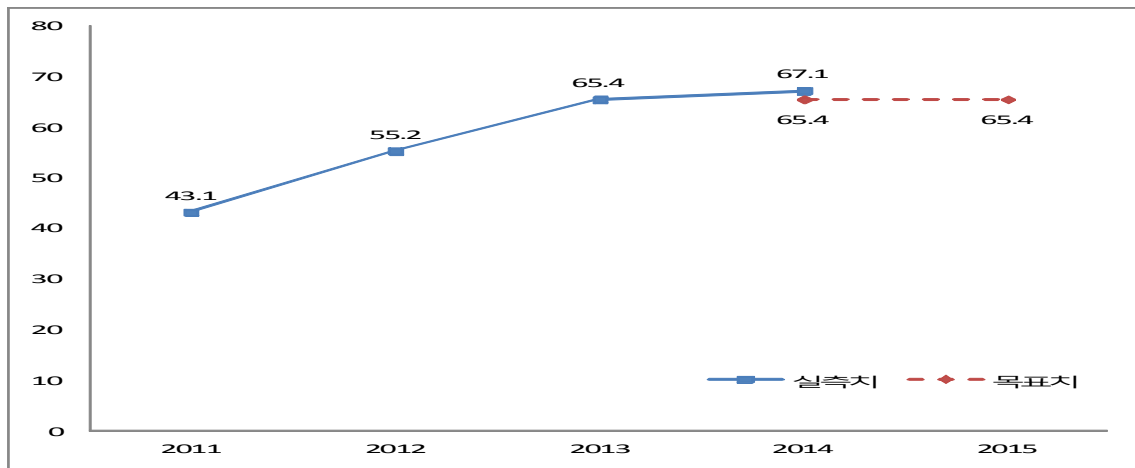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연간수혜자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65.4%에서 ’14년 67.1%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5.4%)를 초과달성(102.6%)
 - 보육료 지원 단가 3% 인상(’14.12월), 지방의 보육료 예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4년부터 국고보조율을 15%p인상함
 - 현재 ’15년도 목표치(65.4%)를 초과달성(102.6%)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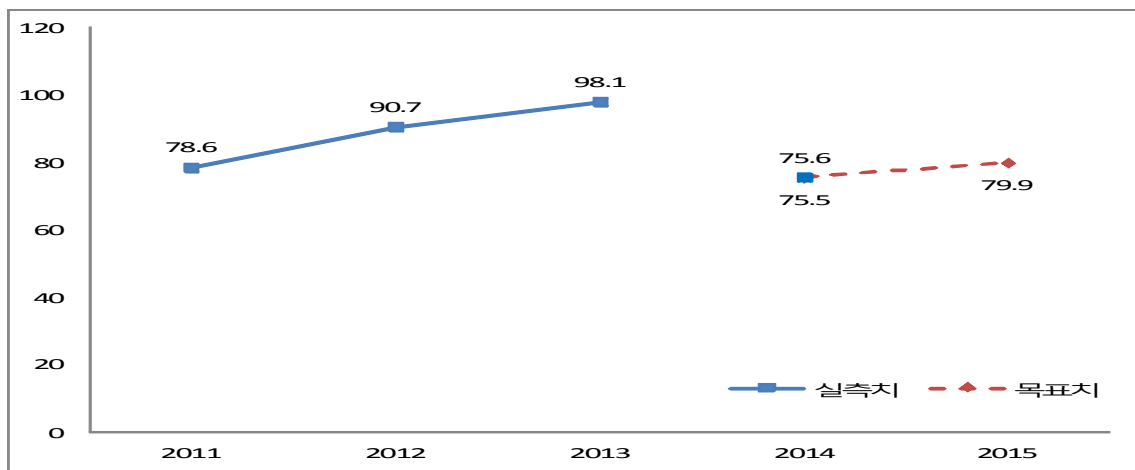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수혜자÷0~5세 아동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부자료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평가 인증 유지율(핵심성과지표)’은 ’14년 75.6%로 당해연도 목표치(75.5%)를 초과달성(100.1%)
- － 현재 ’15년도 목표치(79.9%)의 94.6% 달성하고 있어 ’15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 ’11년에서 ’13년까지 핵심성과지표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이었고, ’14년에서 ’15년까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로 변경됨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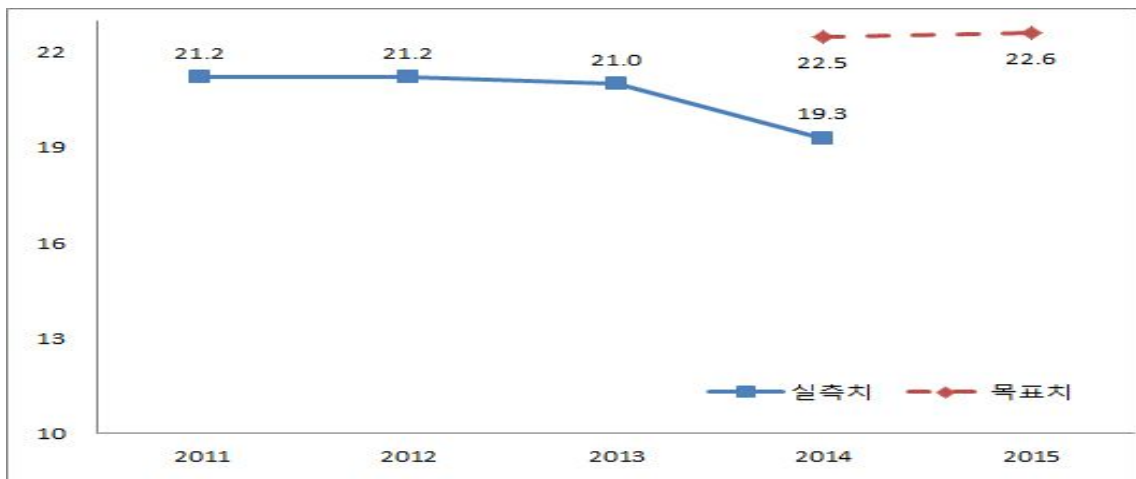


주: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핵심성과지표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전체어린이집×100)이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100)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21.0%에서 ’14년 19.3%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2.5%)의 85.8% 달성
 - ’12년부터 서비스 제공률이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맞벌이 부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시간연장형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5년에는 시간연장 보육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으로 개소수 및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중장기적으로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휴일 등 휴일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 확대 및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지원(’14년 8,295명에게 342억원 지원)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 추진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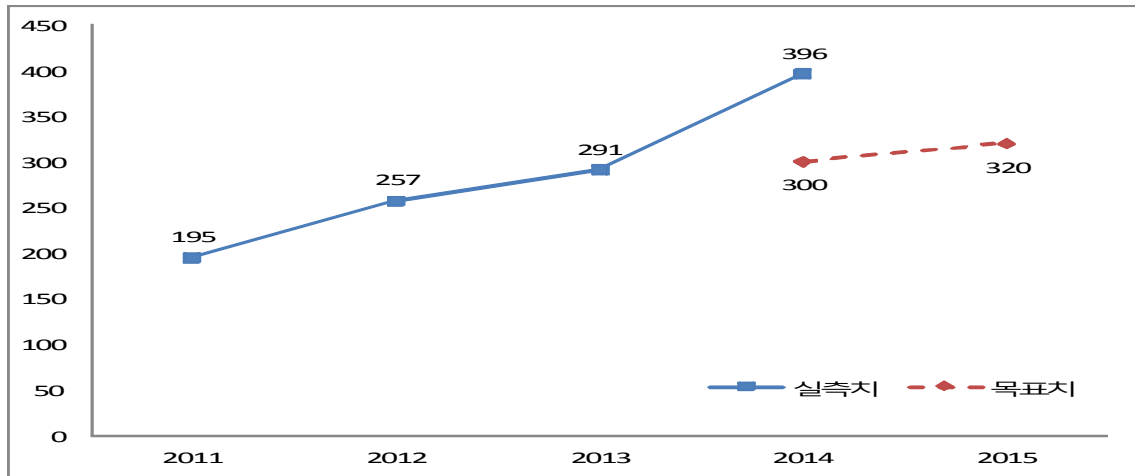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돌봄 유치원 수+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전체 유치원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부자료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연계건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291만건에서 ’14년 396만건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00만건) 초과달성(132.0%)
 -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3년 87.5점에서 ’14년 88.4점으로 증가하였고, 부모의 근로형태 등에 따른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가져온 성과로도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320만건)도 초과달성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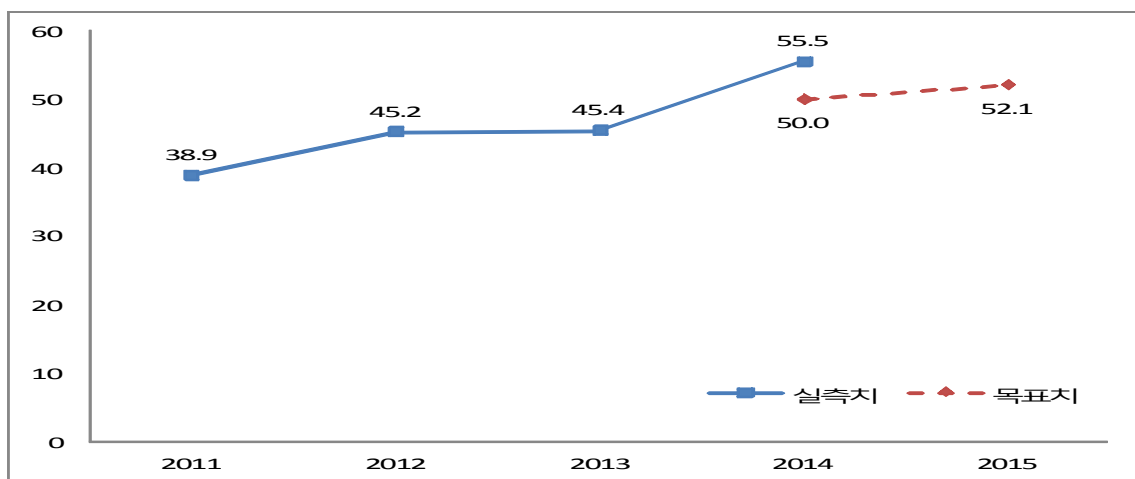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45.4%에서 ‘14년 55.5%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50.0%) 초과달성(111.0%)
- 현재 ‘15년도 목표치(52.1%)를 초과달성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 방과후 돌봄 필요아동 수는 ‘08년 기준 0~15세 기초수급아동 및 중위소득 70% 미만 아동으로 최근 통계치로의 수정이 필요함

[그림 3-1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주: 성과지표 산식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초등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방과후 돌봄 필요아동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부문(중영역)의 경우 3개 소영역에 대해 4개의 핵심과제 포함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실시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에 2개 핵심과제 포함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실시
	-	-	-휴먼네트워크 확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문화바우처 지원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여성부/고용부)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국민안전처/교육부)
	-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 확충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여성부/복지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14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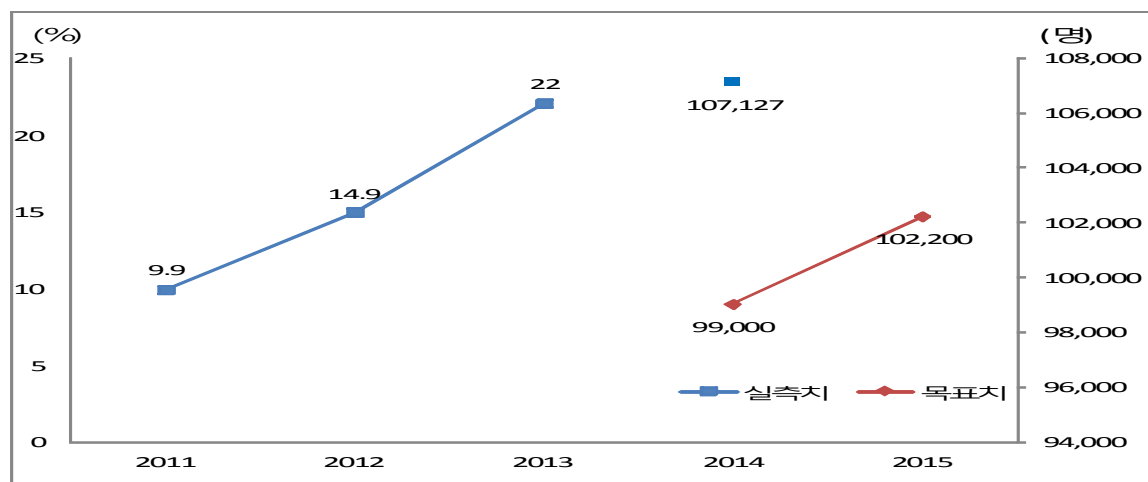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핵심성과지표)’는 ’14년 107,127명으로 당해연도 목표치(99,000명) 초과달성(108.2%)

- 현재 ’15년도 목표치(102,200명)를 이미 초과달성(104.8%)하고 있어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 핵심성과지표는 ’11년에서 ’13년까지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이었고, ’14년에서 ’15년까지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로 변경됨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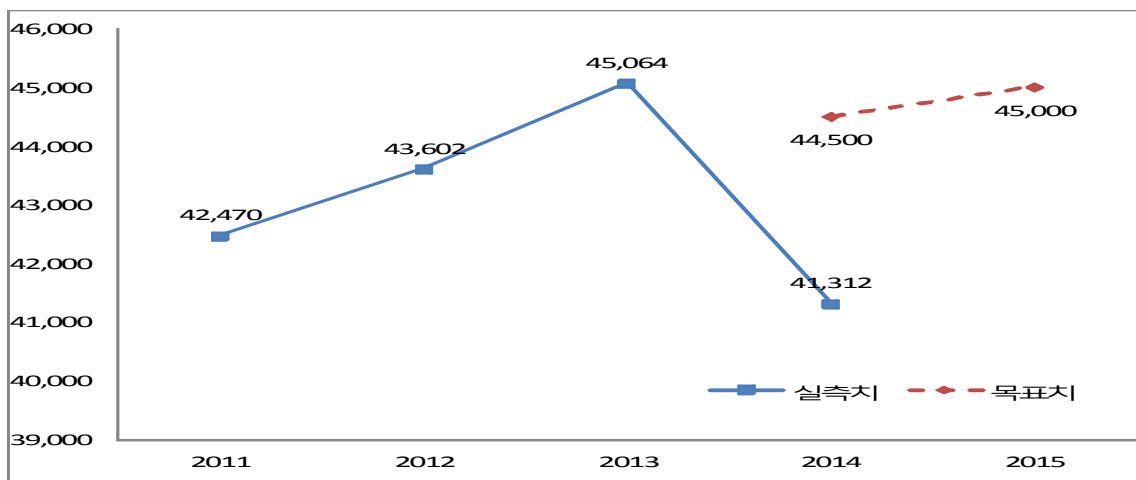
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핵심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수혜율(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취약계층 아동 수×100)이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45,064천명에서 ’14년 41,312천명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44,500천명)의 92.8% 달성
- － ’14년도 목표달성률은 90%를 상회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그간(’11~’13년) 증가하던 추세가 감소추세를 보임.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는 바, ’15년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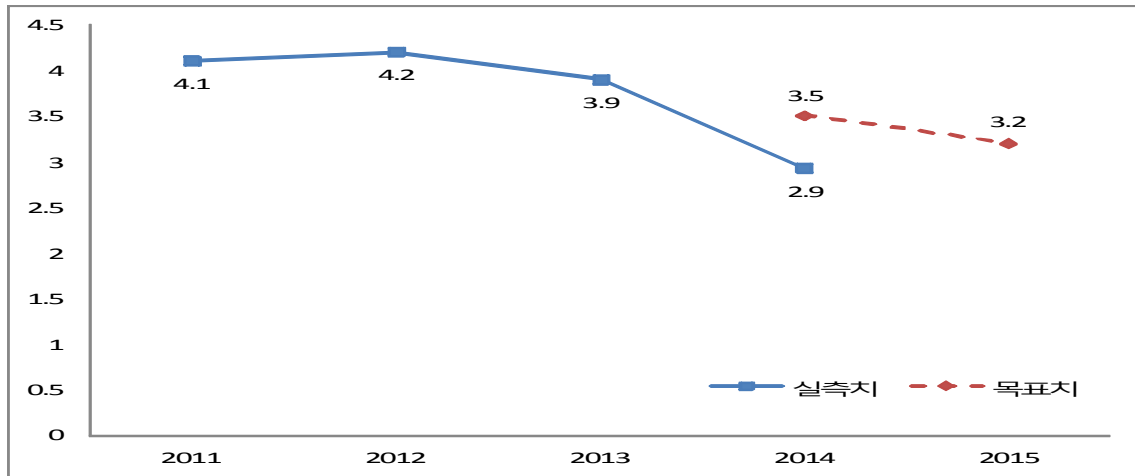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연간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아동 10만명 당 3.9명에서 ’14년 2.9명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5명) 초과달성(117.1%)
- － 아동안전교육 콘텐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취학, 초·중등 아동·교사 대상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실시
- － 17개 시·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369개소 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
- － 현재 ’15년도 목표치(3.2%)를 초과달성(109.4%)하고 있어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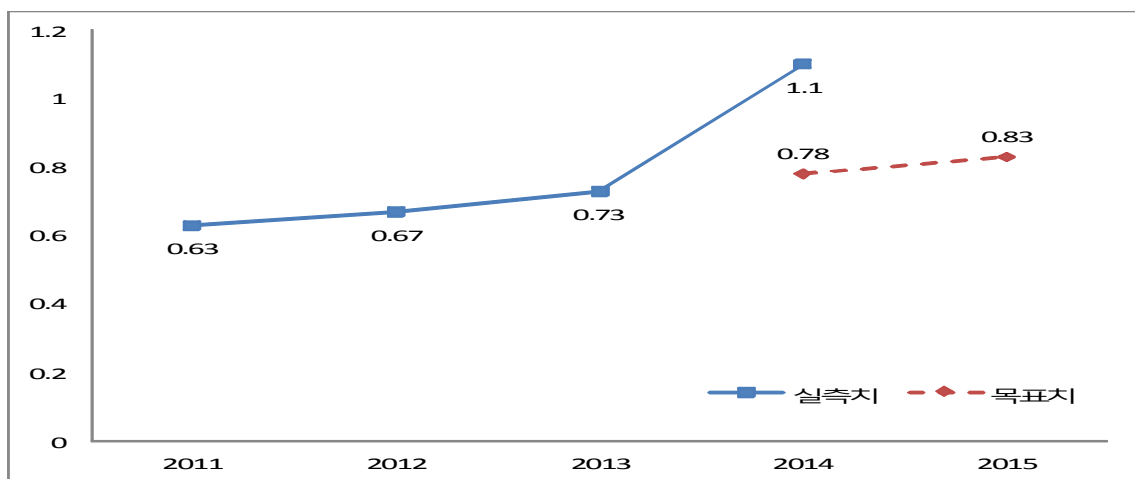


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0~14세 아동 사망자 수 ÷ 0~14세 아동 수) × 100,000 (14세 이하 아동 중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의 수로 질병, 자살, 타살로 인한 사망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통계청(2014), '14년 사망원인 통계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0.73%에서 '14년 1.1%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0.78%) 초과달성(141.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범죄자 형량 강화 및 피해아동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을 시행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결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0.83%)를 초과달성(132.5%)하고 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주: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 (0~17세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0~17세 아동 수) × 1000, 학대피해아동은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가아동학대정보화시스템, 통계청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부문(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6개의 핵심과제 포함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자 고용연장(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를 포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국민연금 가입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퇴직연금 가입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개인연금 활성화,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에서는 1개 핵심과제를 관리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 확충,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에서는 1개 핵심과제 포함

- － 노후설계 기반조성(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적용

〈표 3-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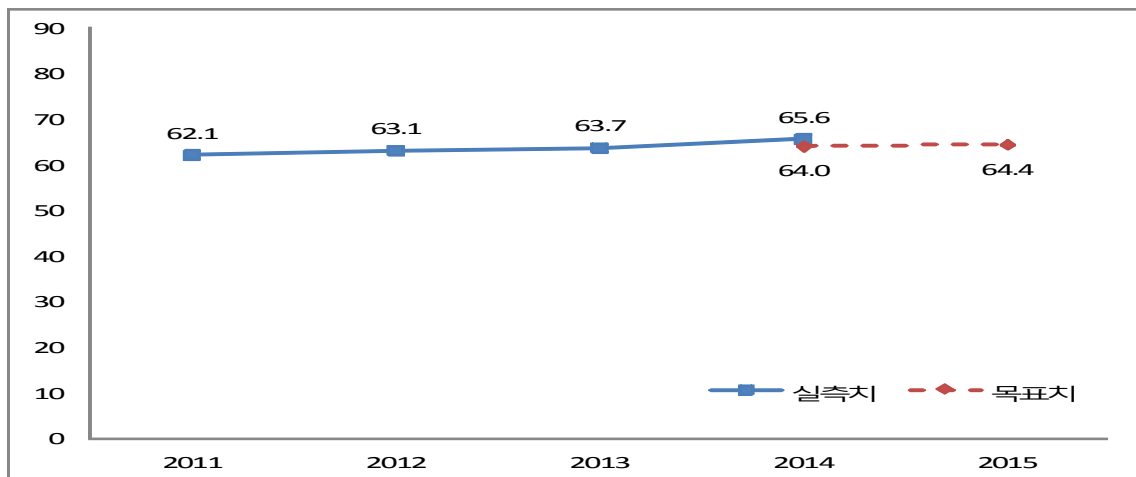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개인연금 활성화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 확충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 고령자 고용연장

-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63.7%에서 ‘14년 65.6%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64.0%) 초과달성(102.5%)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등으로 임금 피크제 적용 근로자수는 ‘13년 2,367명에서 ‘14년 2,712명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3년 8.3%에서 ‘14년 9.9%로 증가하였으며,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 인원 수 역시 ‘13년 9,814명에서 ‘14년 10,527명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그 밖에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리플렛 제작(‘14.3월), 정년연장 정부지원 안내서(‘14.6월)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판단
- ‘14년 실적(65.6%)이 ‘15년 목표치(64.4%)를 이미 초과하고 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 필요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고용률(%)



주: 성과지표 산식 = (55~64세 고용자 수 ÷ 55~64세 인구 수)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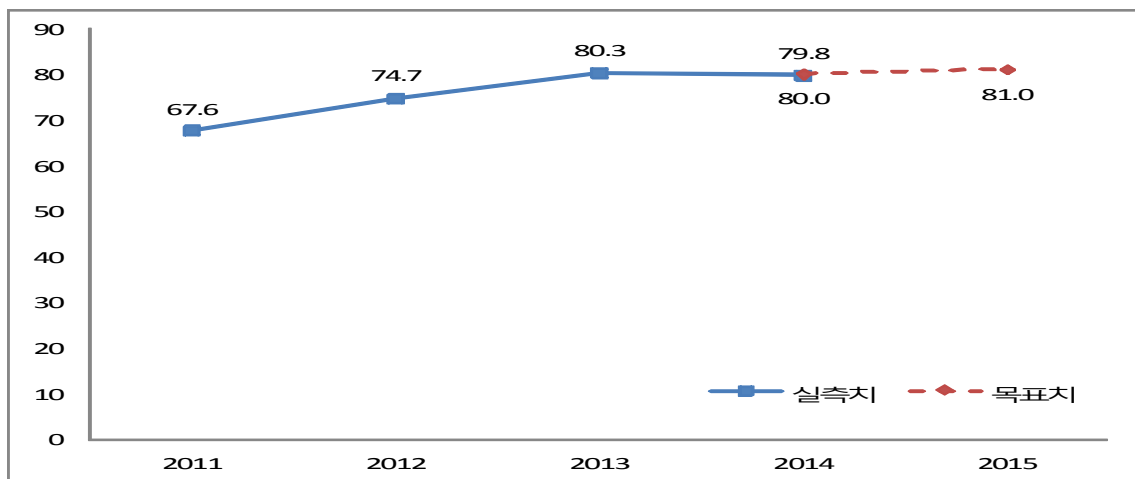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핵심성과지표)’은 ‘14년 79.8%로 당해연도 목표(80.0%)의 99.8%를 달성하였고, ‘13년 80.3%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유사한 수준임
- ‘14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증설(25개소 → 28개소), 고령자 민간취업기관 운영 내실화 및 기능강화(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13년 21개소 84개 과정 → ‘14년 50개

소 83개 과정) 등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사업효과로 판단

- '14년 실적(79.8%)이 '15년 목표치(81.0%)의 98.5% 수준으로 '15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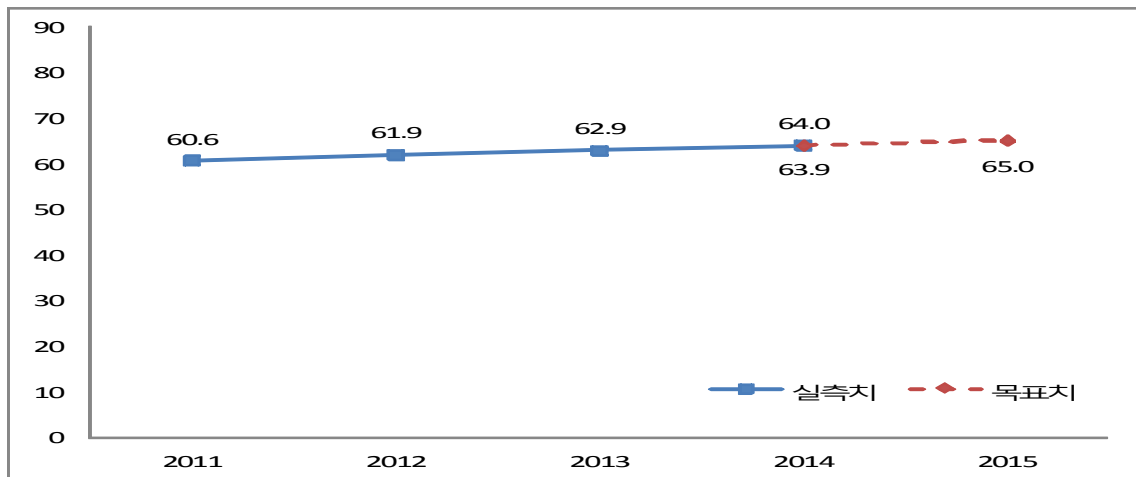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자 ÷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자 수) ×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자료 및 워크넷 실적」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가입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62.9%에서 '14년 64.0%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63.9%) 초과달성(100.2%)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등 제도적 효과에 의한 영향
 - 그 밖에도 노후설계 대외교육 활성화 및 대중교통매체, TV정보 프로그램, 인터넷 등을 활용한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국민연금 이해 증진 등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65.0%)의 98.5% 수준으로 '15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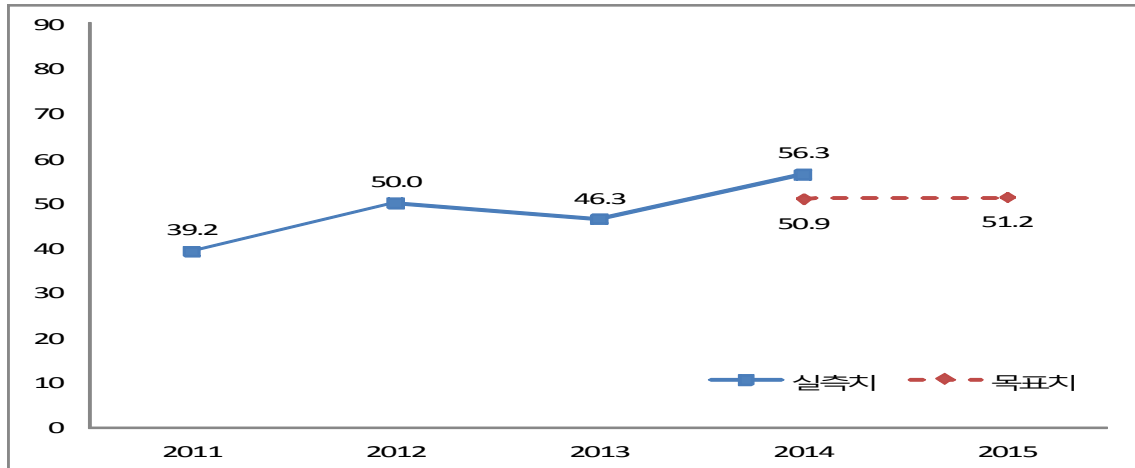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국민연금가입자 수 ÷ 18~59세 인구 수) ×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46.3%에서 '14년 56.3%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50.9%) 초과달성(110.6%)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운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서비스 지원, 퇴직연금 전문가 양성 및 교육·컨설팅 실시(교육 353회/27,903명, 컨설팅 112개소) 등의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노력, 퇴직연금(DC, IRP)에 대한 별도의 예금 보호한도 적용 추진 등의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등의 효과로 판단
 - 현 지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기준이나 '12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쉰 사업장, 상용근로자 대상으로의 기준 재설정에 대한 논의 필요
 - 사용자는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설정·지급할 의무가 있음
 - 현재 '15년도 목표치(51.2%)를 이미 초과하고 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 필요
 - 단, 제도 도입 10년에 따라 대기업의 대부분이 이미 가입된 상황, 제도 도입여부는 선택사항인 것 등을 고려하여 설정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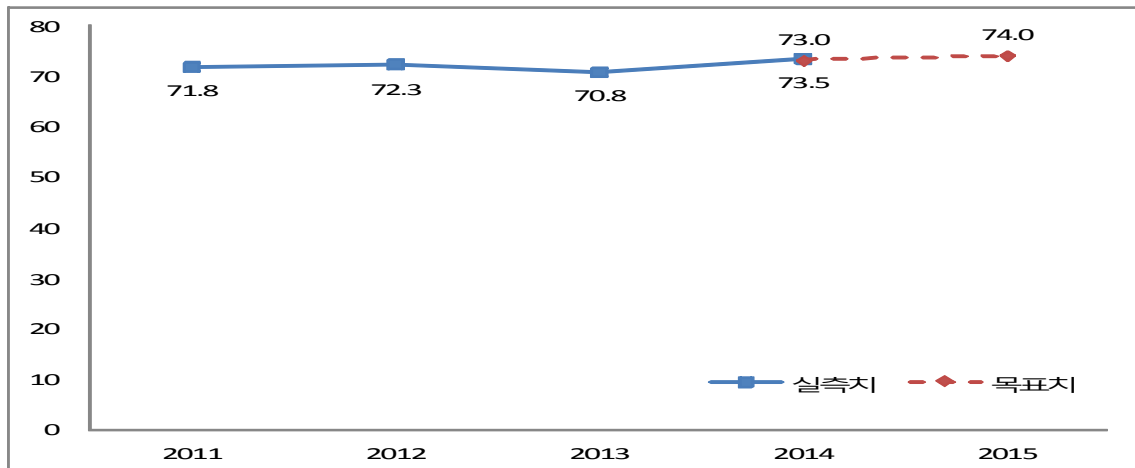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상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자 수 ÷ 상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70.8%에서 ‘14년 73.5%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73.0%) 초과달성(100.7%)
-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등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의 효과로 판단
- 현재 ‘15년도 목표치(74.0%)의 99.3% 수준으로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판단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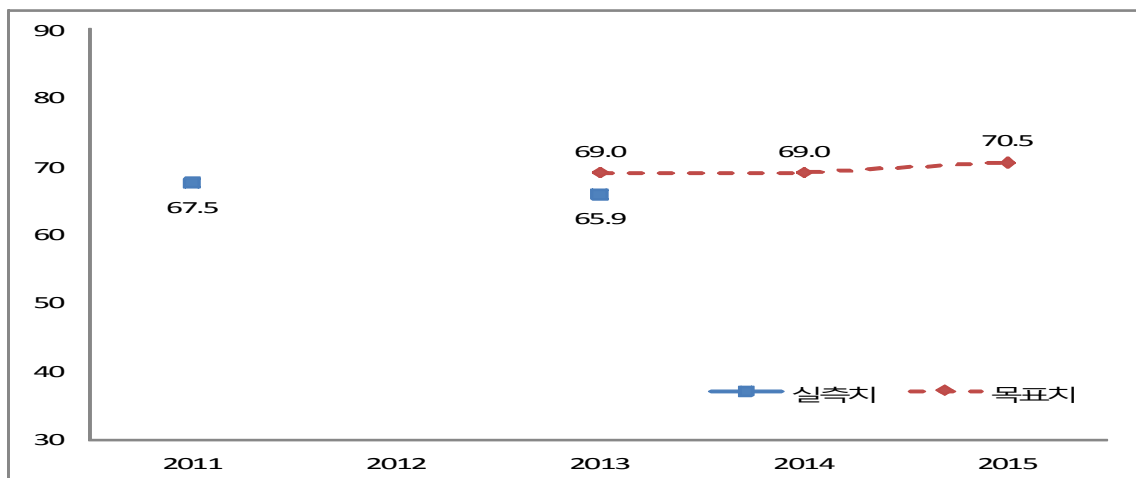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건강검진 수검자 ÷ 건강검진대상자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4.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 노후설계 기반 조성

-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에 65.9% 수준이었으며, ’14년 실적은 기준 자료(통계청 사회조사)가 격년에 한 번씩 산출되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함
- 그러나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연중 추진하여 ’15년 6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이 국회통과하는 등 노후설계 기반 조성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주: 성과지표 산식 = (50대 이상 노후준비응답자÷조사대상자 중 50대 이상 수)×1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부문(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7개의 핵심과제 포함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일자리 창출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공적소득보장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

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에서는 3개 핵심과제 포함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노인운동 활성화, 농촌생활 활력 추진,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에서는 2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 수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농지연금 활성화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절차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노인운동 활성화 -농촌생활 활력 추진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노인일자리 창출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26.2(만명)에서 ‘14년 33.6(만명)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7.5만명) 초과달성(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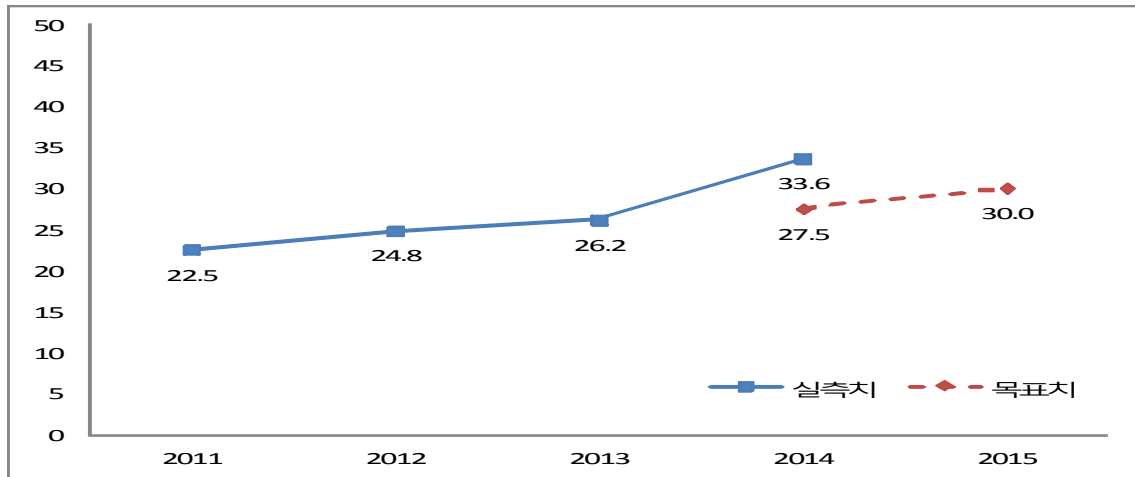
－ 공공분야 일자리 및 시장형(민간)일자리 대폭 확충 및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14년 신규, 3만명) 실시 등에 따른 양적 확충 달성

- 공공형 일자리 확대(212천개 → 248천개), 시장형(민간)일자리 확대(28천개 → 32천개)
- (노인취업교육센터) 4개소 지정·운영을 통해 전문직 퇴직 노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민간 취업 역량 제고

－ 공공형 일자리 중 연중(12개월) 일자리 대폭 확대(3천개 → 25천개), 독거노인 안부전화

- 서비스, 특수아동 학교생활 지원, 제빵, 바리스타 등 공공/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현재 '15년도 목표치(30만건)를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15년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 수(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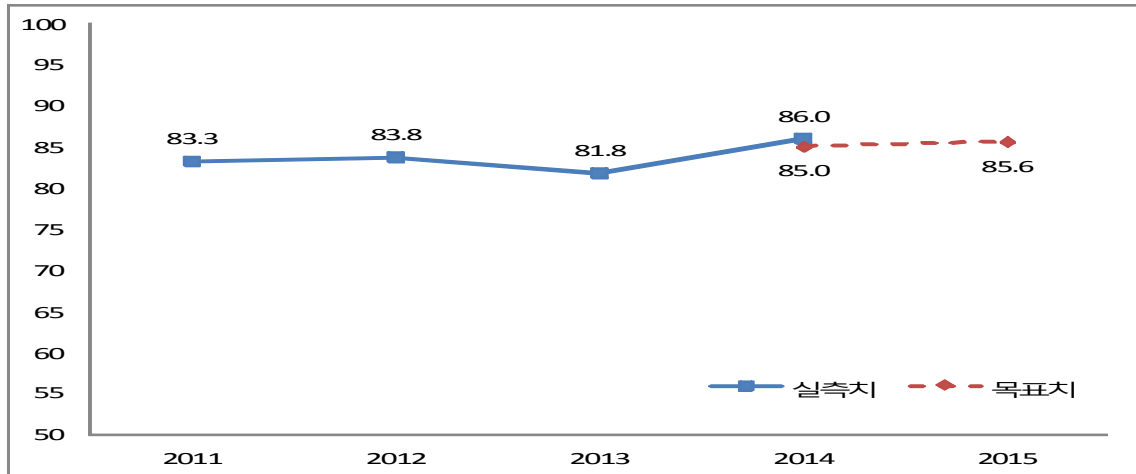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노인일자리 창출 수(공공분야+민간분야)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새누리시스템)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공적소득보장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81.8%에서 ’14년 86.0%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85.0%) 초과달성(101.2%)
 - 특히,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14.7월)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70%에 게 월 최대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급여수준 향상 효과 발생
 - 또한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 하향 조정, 선정기준액 조정, 이력관리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 중
 - 현재 ’15년도 목표치(85.6%)를 이미 초과달성하여 ’15년 목표치의 상향 조정 필요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성과지표 산식 내 용어 수정 필요(‘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소득보장률(%)



주: 성과지표 산식 = (기초연금+공적연금 수급자-기초연금과 공적연금 중복수급자)÷65세 이상 노인인구×100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및 국군재정관리단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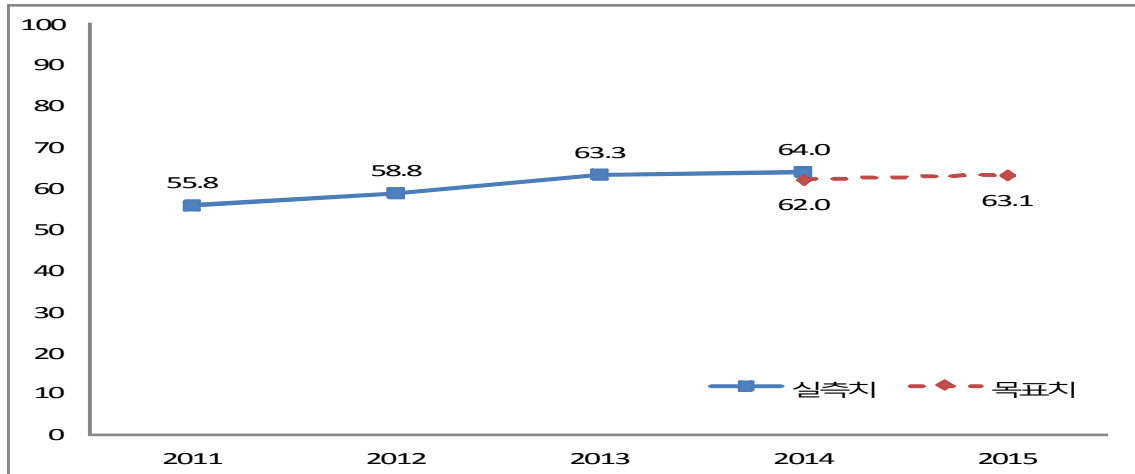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그림 3-27 참조)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63.3천명에서 ’14년 64.0천명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2.0천명) 초과달성(103.2%)
 -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향상 방안 마련 및 노인운동 활성화 등을 통한 조기발견과 예방 강화, 약제비 지급 개선 및 치매거점병원 확대에 의한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전문인력 교육 강화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확립, 치매상담콜센터, 치매정보 365 홈페이지 등 사회적 소통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 현재 ’15년도 목표치(63.1천명)를 이미 초과달성하여 ’15년 목표치의 상향 조정 필요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그림 3-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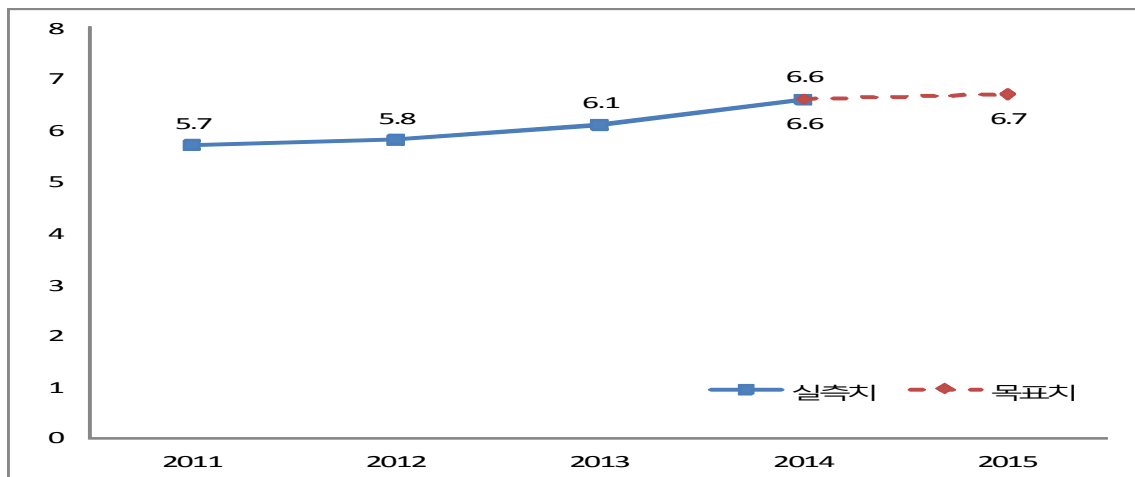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6.1%에서 ’14년 6.6%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6%) 달성(100.0%)
 - － ’14년 7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사각지대 해소(치매특별등급 도입)로 인한 효과로 평가 가능
 -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6.7%)의 98.5%로 향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되며, ’14년 7월 장기요양등급이 개편됨에 따른 산식의 해당 내용 수정 변경이 필요하고(1~3등급 → 1~5등급), 향후 내실화에 대한 지표 개발이 요구됨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4년도 상·하반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실적 보고)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주: 성과지표 산식 = 노인장기요양 등급확정자(1~5등급)÷노인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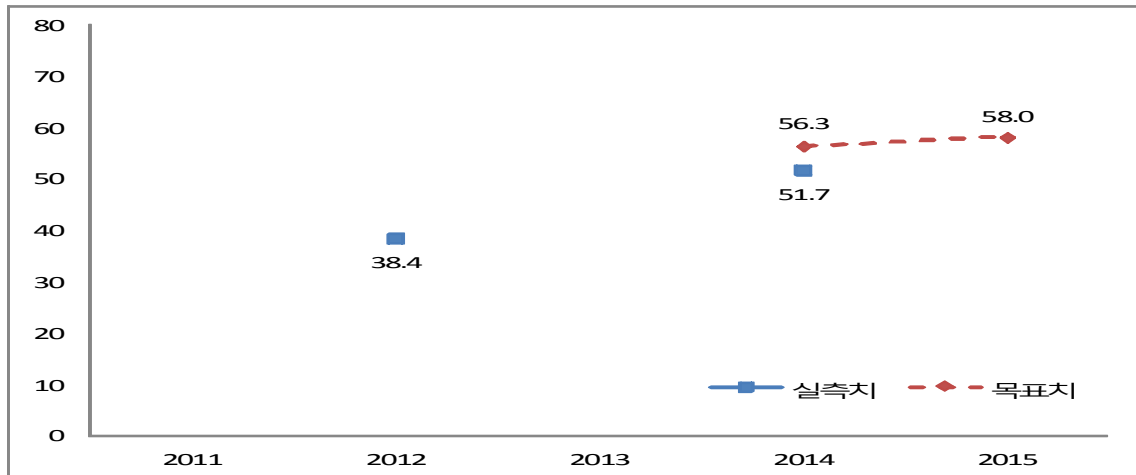
자료: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에는 동 지표가 격년제로 관리되고 있어 실적이 부재하며, ’14년은 51.7%로 ’14년도 목표치(56.3%)의 91.8% 달성(’12년에는 38.4%였음)
- 당초 목표치의 9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15년 목표치(58.0%)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동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8% 수준이나, 70대 이상의 참여율은 45% 수준으로 나타남

- 어르신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령자 생활체육 참여율 외에도 연령증가에 따른 고령인구의 접근성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주: 성과지표 산식 = (생활체육참여 60세 이상 인구 ÷ 60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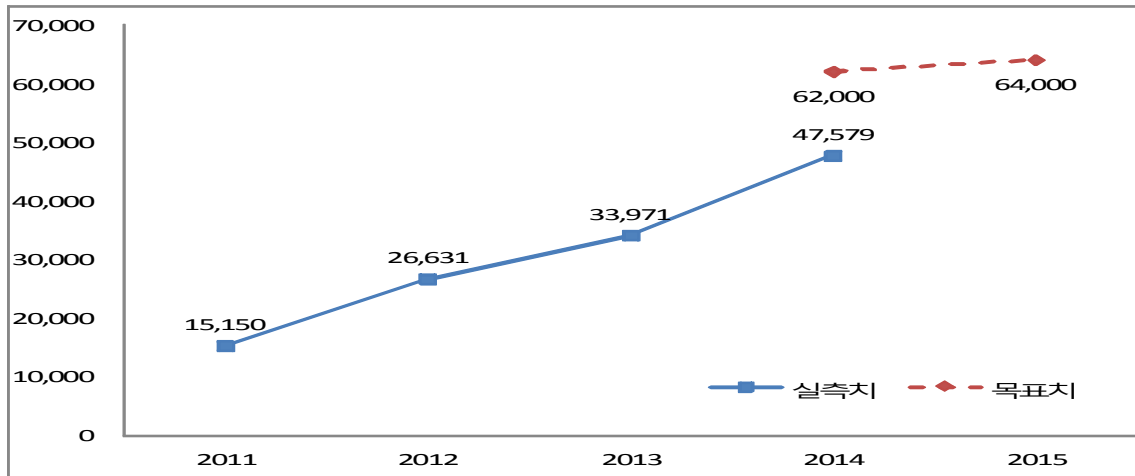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33,971명에서 ’14년 47,57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목표치(62,000명)의 76.7% 달성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고, 노인자원봉사클럽 수 확대(’13년 1,594개 → ’14년 1,802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인프라 부문은 상당부분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1년 ~ ’14년의 경향을 통해 실제 자원봉사자 등록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노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명)



주: 1) 성과지표 산식 =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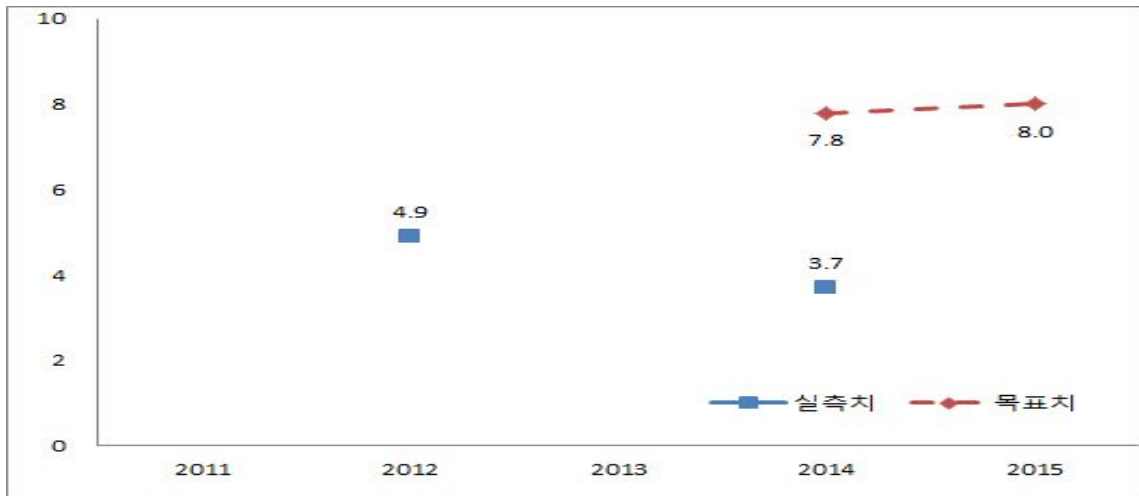
2) 해당산식에 맞는 수치 산출의 불가로 노인자원봉사클럽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누적) 명시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핵심성과지표)’은 관련 실적이 격년으로 산출되어 ’13년 실적이 부재하며, ’12년 4.9%에서 ’14년 3.7%로 감소하였고, 목표치(7.8%)의 47.4%만 달성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들을 지속했으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특히 후기노인의 증가) 및 노인들의 건강수준 및 비용 문제,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접근성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10년 6.7% → ’12년 4.9% → ’14년 3.7%)
- － 특히, 노인 고유의 신체적·경제적 특성 및 노인 수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인프라 및 비용 등 자원 활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경험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함
- － 성과지표는 65세 이상 노인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노인 전반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 수치를 활용함(기준연령: 60대 이상)

[그림 3-3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각년도)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문(중영역)의 경우 2개 소영역에 대해 4개의 핵심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교통사망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혜자’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독거노인 보호 강화, 농어촌 가사도우미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적용
- 동 핵심과제는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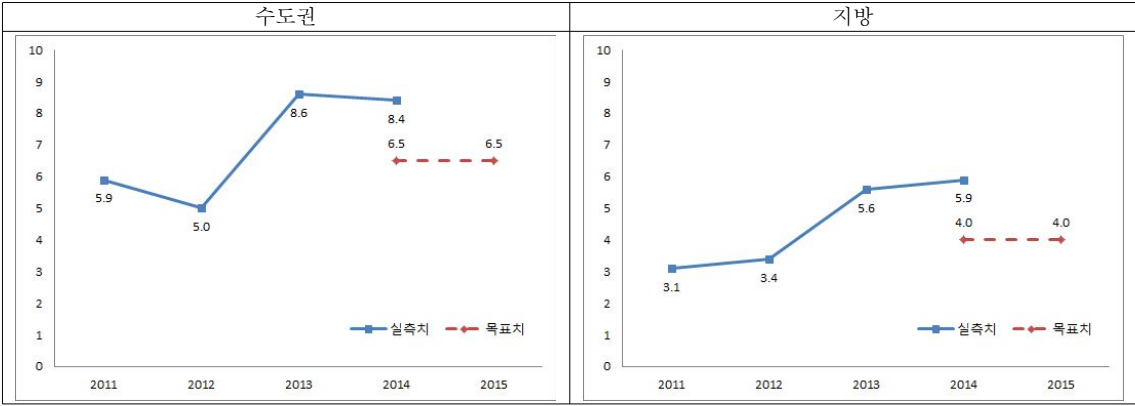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 (총임대주택 대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교통사망률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독거노인 보호 강화 -농어촌 가사도우미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핵심성과지표)’은 수도권의 경우 ’13년 8.6%에서 ’14년 8.4%로 다소 감소하였고, 지방의 경우 동 기간 5.6%에서 5.9%로 증가하였으며, 모두 당해연도 목표치(수도권 6.5%, 지방 4.0%)를 초과달성함(수도권 129.2%, 지방 147.5%)
- 이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공동이용 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이미, 한 차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실적이 이미 ’15년도 목표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 당초: 수도권 5%, 지방 3% → 변경: 수도권 6.5%, 지방 4.0%(’15년 목표치 동일)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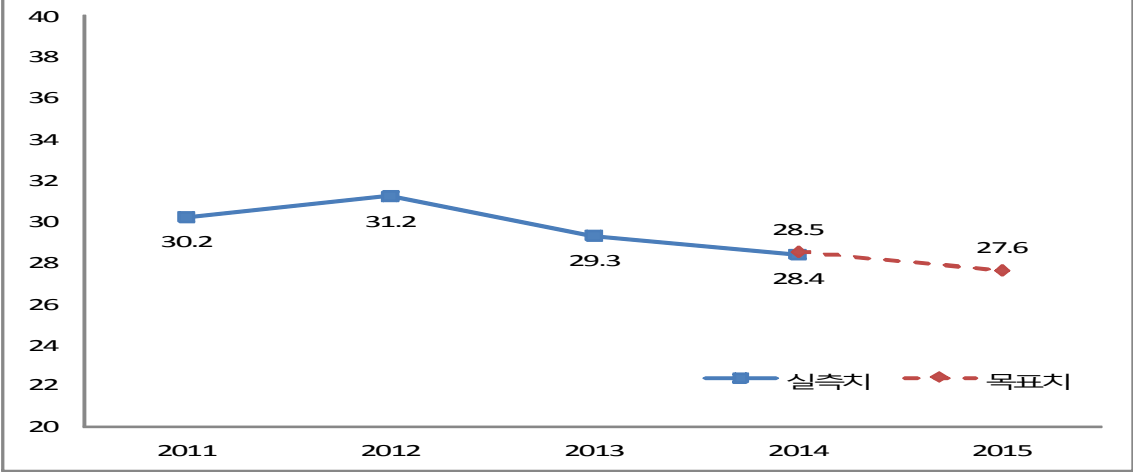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장기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노인교통사망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29.3명(10만 명당)에서 ’14년 28.4명(10만 명당)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8.5명/10만 명) 초과달성(100.4%)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행(’14.1~12월, 15개 시·도 20개 시·군·구 20개소), 노인 보호구역 지속 지정(’14년 71개소 추가지정), 교통안전교육 추진(경로당·노인대학 등) 등에 따른 결과로 평가 가능
-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27.6%)의 97.1%로 ’15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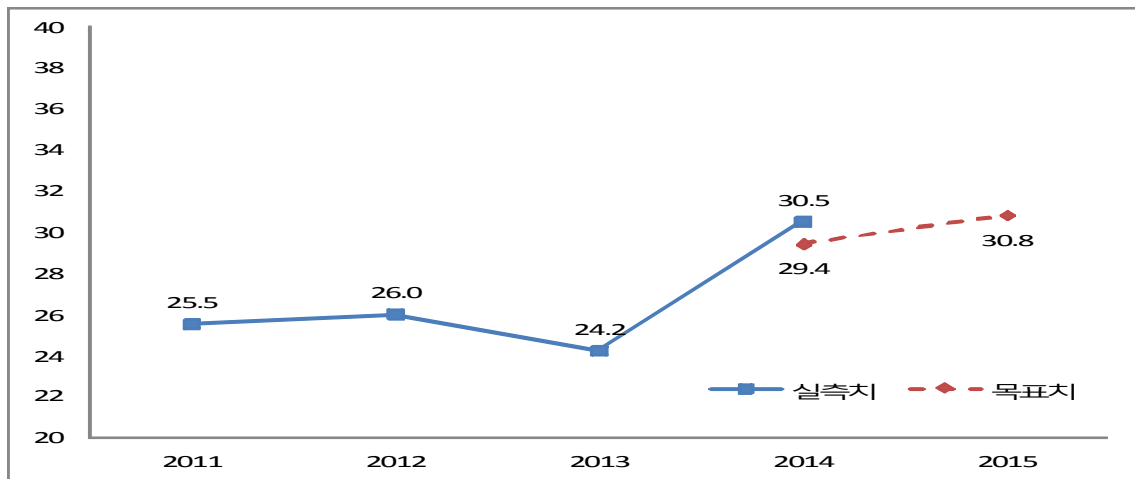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65세 이상 노인 수×10만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소영역)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핵심성과지표)’는 ’13년 24.2만 명에서 ’14년 30.5만 명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9.4만 명) 초과달성(103.7%)
-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8,000명이 독거노인 보호·지원, 요보호 독거노인 8만명 주택에 화재·가스·활동 센서 및 응급호출기 설치, 장기요양 등급 외 A, B자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계속 지원 등 주기적인 안전 확인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에 따른 결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30.8만명)의 99.0% 수준으로 ’15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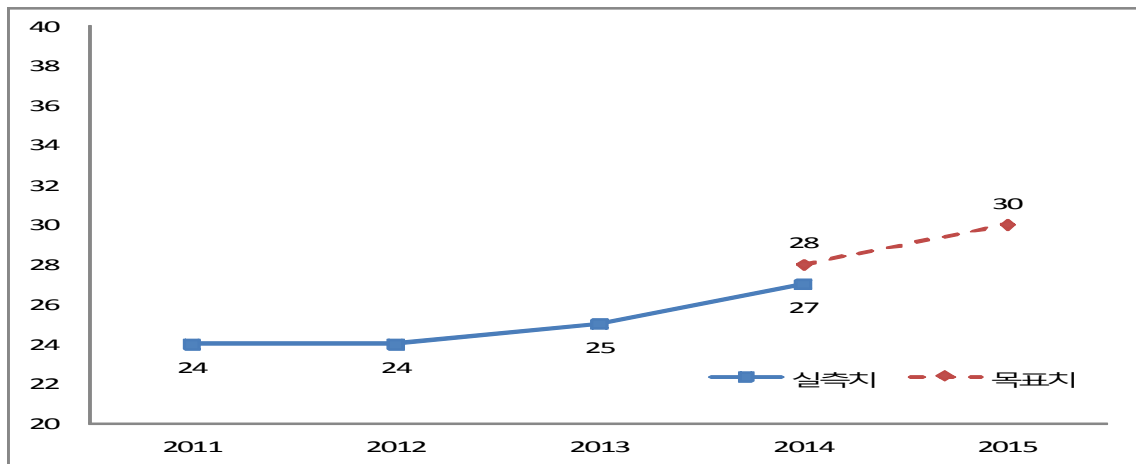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취약노인지원시스템, 바우처시스템전산실적)

□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25개소에서 ’14년 27개소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8개소)의 96.4% 달성
- 지속적인 증설로 인해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볼 때, ’15년도 목표치(30개소)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6개의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평생학습참여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안전문화 확산(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산업재해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국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법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강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	-	-스펙조일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자활치료 및 상담 강화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주: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및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지표는 공식적 절차 및 요청에 의하여 변경된 지표임

* 기준 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그림 3-36 참조)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35.2%에서 '14년 35.5%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6.7%)의 96.7% 달성

- 또한 적극적 여성고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등을 통해 평가가능

- 여성관리자 고용률 증가('11년 16.09%, '14년 18.37%), 4급이상 여성관리자(중앙행정기관) 비율 증가('13년 9.9%, '14년 11.0%),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13년 10.7%, '14년 11.6%),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 증가(교수: '13년 14.1%, '14년 14.5%, 교장·교감: '13년 27.2%, '14년 29.4%)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37.3%)의 95.2% 수준으로 '15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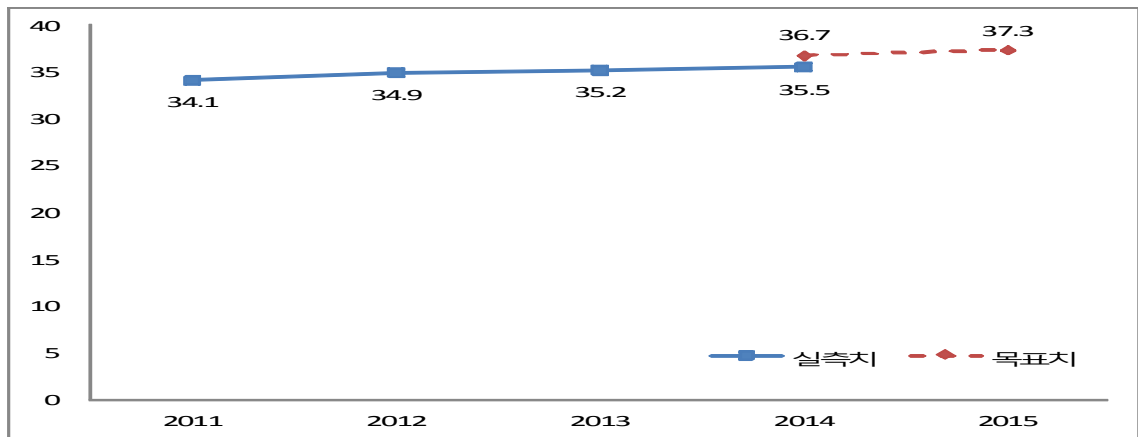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그림 3-37 참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핵심성과지표)'는 '14년 129,632명으로 당초목표치(126,015명) 초과달성(102.9%)

- '13년까지의 성과지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이었으나, 일자리시스템 통합 등 변화된 정책 여건으로 인해 지표가 변경되었으며, '15년 목표치 설정 등의 후속작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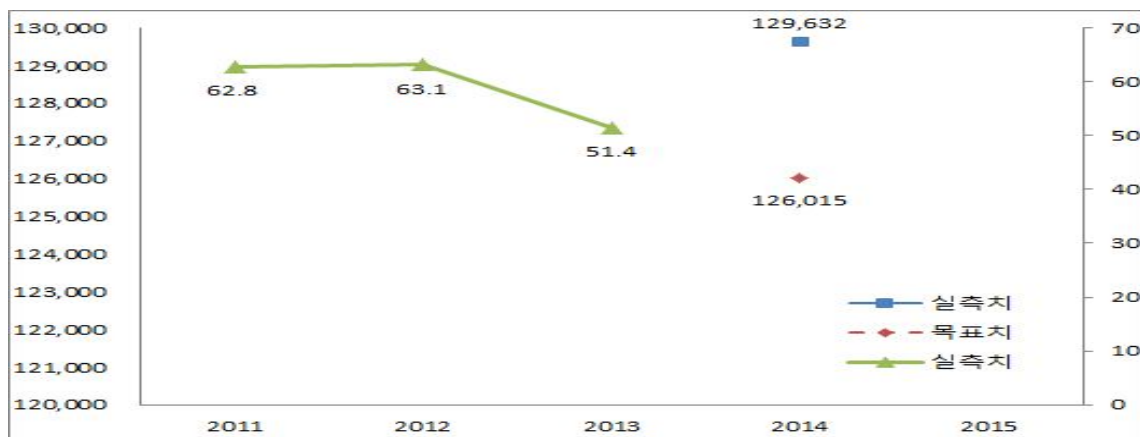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지원 수행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주: 성과지표 산식 =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 수 ÷ AA제도적용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AA net)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주: 지표변경으로 인해, '11~13년은 이전 지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에 대한 실적을 제시함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전산망, e새일시스템)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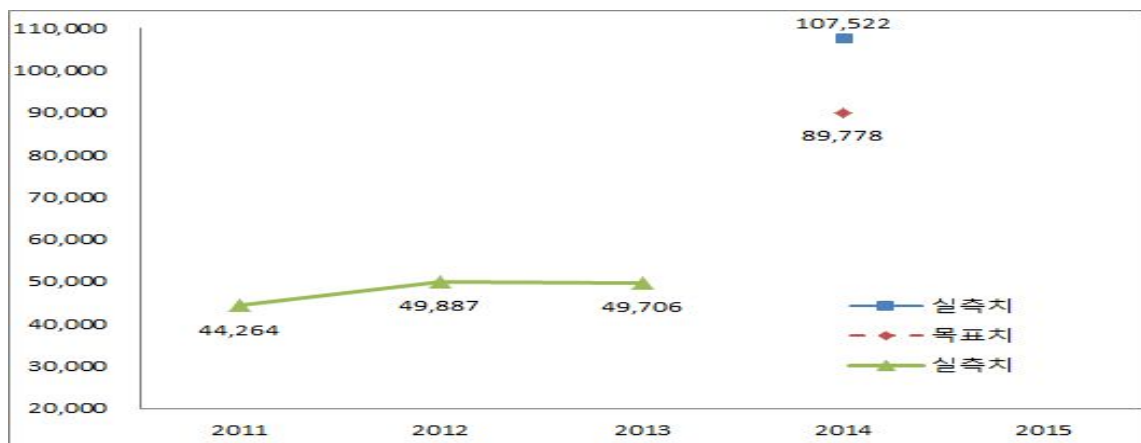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는 ’14년 107,522명으로 당초목표치(89,778명) 초과달성(119.8%)
- ’13년까지의 성과지표는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 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였으나, 재외동포로 전환된 인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4년도는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성과를 평가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승인)
- ’14년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4월), 재외동포(F-4)자격변경 규제

완화 및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9월)로 인한 결과로 평가 가능

-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
- 기존 기술교육 대상자 외에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도 한국의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

－ '15년 목표치 설정 등 후속작업 필요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명)



주: '11~'13년 수치는 변경 전 지표에 대한 실적임(자료: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출입국정보시스템)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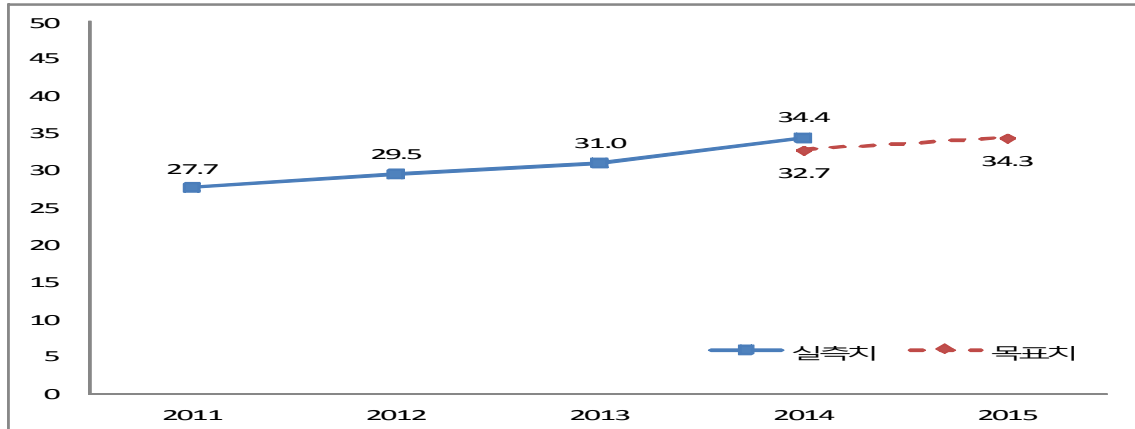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31.0%에서 '14년 34.4%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2.7%) 초과달성(105.2%)

－ 학교 진로·취업지원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학교의 노동시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도모하여 청년 실업문제 사전적 예방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 인사·노무 및 직업상담 경험, 직업상담사 등 일정자격을 가진 이들로 취업지원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학교와 매칭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성과로 평가 가능

- 101개 대학에서 159명의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34.3%)를 이미 초과달성(100.3%)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필요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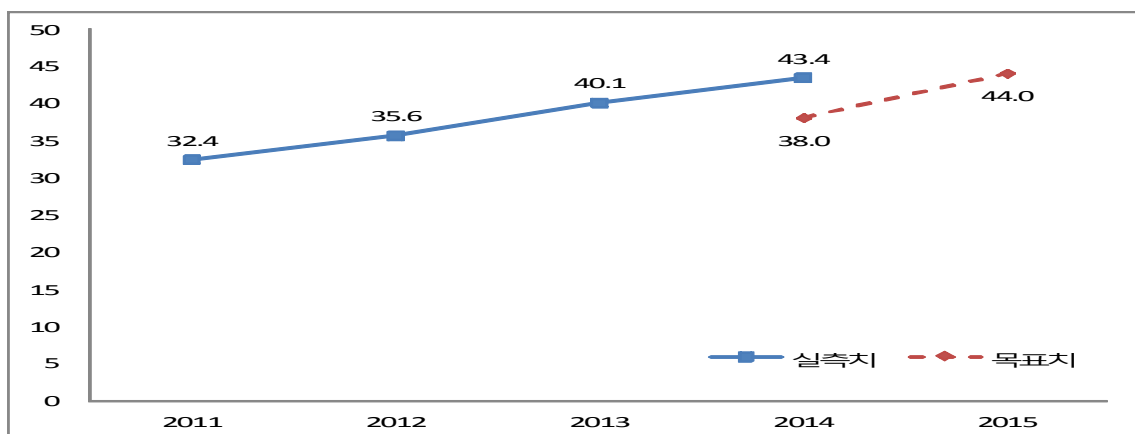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프로그램 참여자수/재학생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참여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40.1%에서 ’14년 43.4%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8.0%)를 초과달성(114.2%)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지원을 통한 시·도 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13년 10개 → ’14년 14개), 시·군·구와 연계한 평생학습도시 건설,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14년 60개 시·군·구, 180개 센터) 등에 의한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44.0%)의 98.6% 수준으로 향후에도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평가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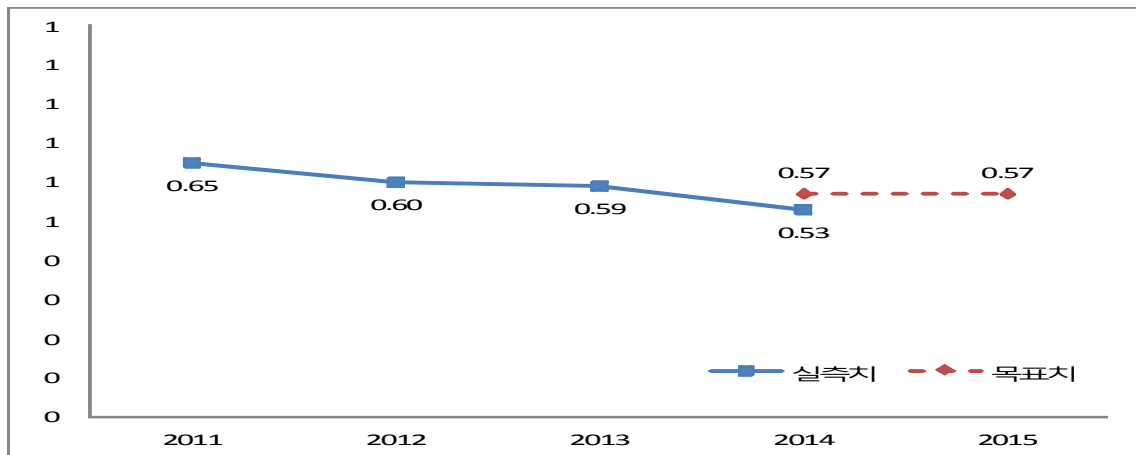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자÷25~64세 성인×100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산업재해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0.59%에서 ‘14년 0.53%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0.57%)를 초과달성(107.0%)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지속 개선, 외국인 및 고령·여성 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 교육,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의한 성과로 평가 가능
 -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사업장 수: 8,721개소, 특수건강 진단비용 지원 근로자 수: 70,363명 등
 - 현 수준이 2015년도 목표치(0.57%)를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목표치 상향조정 필요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주: 성과지표 산식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의 경우 2개 소영역에 대해 2개 핵심과제를 포함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금융분야 제도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적용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과제와 관련성이 있음

〈표 3-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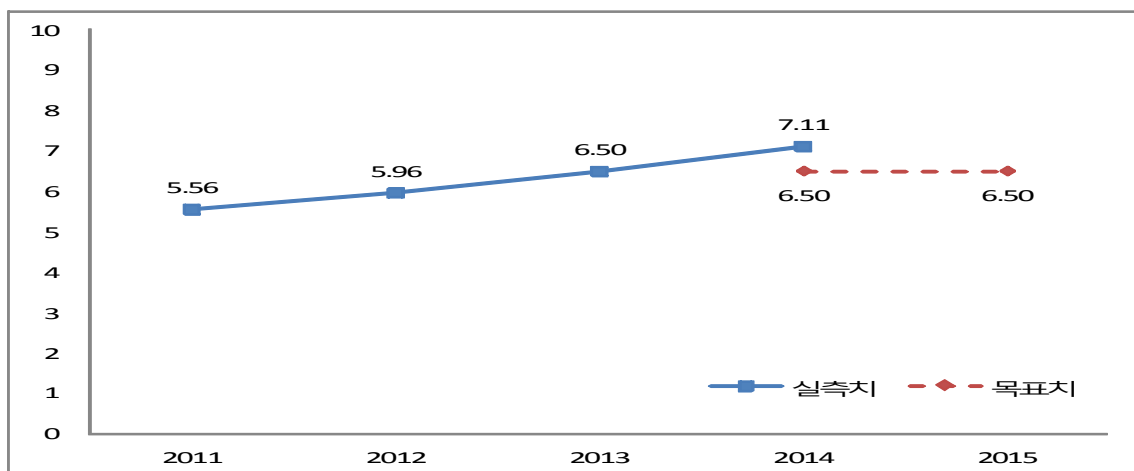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2-1.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 금융분야 제도 개선

-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핵심성과지표) 연수는 '13년 6.50년에서 '14년 7.11년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50년)를 초과달성(109.4%)
-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연수는 '11~'1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시장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6.50년)를 이미 초과달성(109.4%)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필요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2.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소영역)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핵심성과지표)'은 '13년 33.8%에서 '14년 35.9%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0.0% 이하)의 80.3% 달성

- 정부 목표 대비 실적은 90%에 미치지 못하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OECD 평균 115.5%, 표 5-22 참조), 국제 비교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래 재정위험 대비차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보완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국제비교 시 양호하나, 동 과제의 목표치(30.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의 경우 2개 소영역에 대해 2개 핵심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우수 제품 지정 품목 개수’ 적용

○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국내 수요기반 확충(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표 3-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국가간 표준화 협력강화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	-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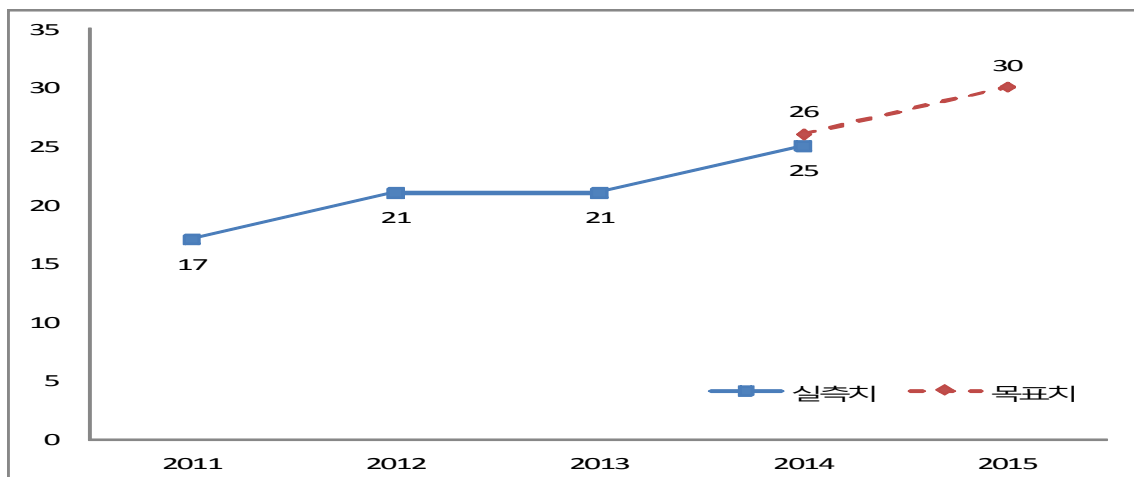
3-1.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소영역)

□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21개에서 ’14년 25개로 증가하여 당해 연도 목표치(26개) 96.2% 달성

- 동 과제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활성화 및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14년 기준, 목표치 대비 96.2%로 달성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제품 지정의 대상품목을 계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음
- ’14년 기준, 26개의 품목 개발을 하였으나, 25개가 고시되었음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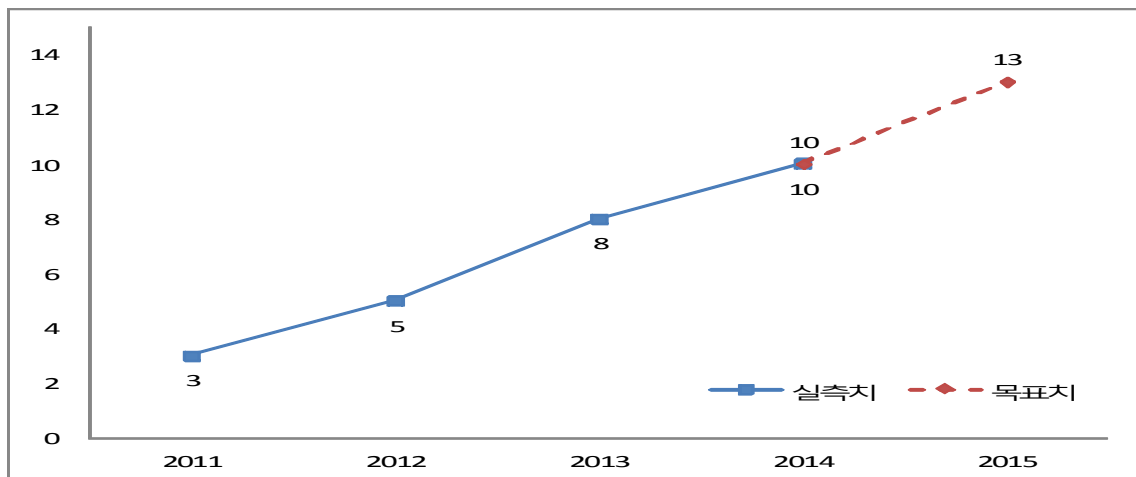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2.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핵심성과지표)’는 ‘13년 8개소에서 ‘14년 10개로 증가하여 당초목표치(10개소)를 달성함
- － ‘11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볼 때, ‘15년 목표치는 원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원센터 수’라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센터를 통해 실제 제품 구매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화 측면에서의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지원센터의 기능이 고령친화용품의 홍보뿐만 아니라 구매로의 연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 ‘14년의 경우, 기존의 8개소를 지속운영하고, 2개소(부산, 광주)에 대하여 이동체험관을 운영하였음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개)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들 중 61.1%는 ‘14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4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로는 유연근로제 확산(95.8%),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60.5%),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99.0%),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76.7%),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93.8%),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85.8%), 아동 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92.8%) 등임

〈표 3-10〉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4년 실적	2014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74.6	103.0	102.8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활성화	1.26	126.0	63.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16.1	95.8	89.9
	가족친화직장·사회 환경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11.8	60.5	56.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444	148.0	130.6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1.9	101.7	101.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469.0	99.0	90.0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37	76.7	52.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5.1	93.8	85.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67.1	102.6	102.6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육아시설서비스 개선	75.6	100.1	94.6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19.3	85.8	85.4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396	132.0	123.8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107,127	108.2	104.8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41,312	92.8	91.8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생활안전 강화	2.9	117.1	91.6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1.1	141.0	132.5

주: 음영은 '14년도 목표 달성, *는 '15년도 목표 달성 과제

□ '14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는 '일가정양립 일상화'(중영역)와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에 1개 과제, '가족친화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에 1개 과제,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에 1개 과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에 2개 과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에 1개 과제,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에 1개 과제 해당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60.5%),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76.7%),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85.8%)는 목표달성률이 90%에 미치지 못하여 과제 추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로제 확산(95.8%),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99.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93.8%),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92.8%)에 대해서도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14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15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 필요

○ '15년도 목표를 기 달성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하여 출산율 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들 중 68.8%는 '14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⁴⁾

○ '14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로는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99.8%),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91.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76.7%),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47.4%), 학대노인 보호강화(96.4%) 등
- 노후설계 기반 조성의 경우, 동 지표의 실적 근거가 되는 '통계청 사회조사'가 격년(홀수 연도)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출 불가

○ '14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의 목표달성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99.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과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외의 대다수 미달성 과제는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으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무난히 '15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

○ 이미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고용연장,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표 3-11〉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4년 실적	2014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65.6	102.5	101.9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79.8	99.8	98.5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64.0	100.2	98.5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56.3	110.6	110.0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73.5	100.7	99.3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	-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33.6	122.2	112.0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86.0	101.2	100.5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64	103.2	101.4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6.6	100.0	98.5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51.7	91.8	89.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47,579	76.7	74.3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3.7	47.4	46.3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수도권(8.4) 지방(5.9)	129.2 147.5	129.2 147.5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28.4	100.4	97.1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30.5	103.7	99.0
		학대노인 보호강화	27	96.4	90.0

주: 음영은 '14년도 목표 달성, *는 '15년도 목표 달성 과제

4) 실적 산출 불가로 '노후설계 기반 조성' 과제 미포함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들 중 70.0%는 '14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4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96.7%),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80.3%),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96.2%)임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외하면 100%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으나, 95%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의 경우, 전 세계적 경제상황 등 외생적인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해당 핵심성과지표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35.9%)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OECD 평균 115.5%, 표 5-22 참조), 국제 비교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국내 수요기반 확충은 '15년 목표치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저조해 보이나, 이는 실적의 단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볼 때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판단

○ 이미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금융분야 제도개선

〈표 3-12〉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4년 실적	2014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35.5	96.7	95.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129,632	102.9	—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107,522	119.8	—
	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34.4	105.2	100.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43.4	114.2	98.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0.53	107.0	107.0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7.11	109.4	109.4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35.9	80.3	80.3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25	96.2	83.3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10	100.0	76.9

주: 1)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과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의 경우, 지표가 변경된 것으로 '15년 목표치는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음영은 '14년도 목표 달성, *는 '15년도 목표 달성 과제

제 4 장

국민 및 전문가 평가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제2절 전문가 참여 평가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1. 개요

□ 국민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실시

○ 조사대상 (총 1,100명)

- 미혼남녀(만 20~39세, 300명), 기혼남녀(만 20~54세, 400명), 중·고령남녀(만 55~74세, 400명)

○ 표집방법

- 시도별 × 성별 × 연령대별 비례할당 (셀별 할당)
 - 할당 근거: 2010년 인구총조사 중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
 - 단, 기혼남녀의 경우 20대의 표본 확보를 위해 40명 임의할당

○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전화조사, 2015년 8월 18일 ~ 28일

○ 조사내용(부록의 조사표 양식 참조)

- 결혼정책 관련 결혼여건(주택마련, 결혼비용, 직장문화, 유연 근무제 등) 변화, 결혼 및 자녀 관련 가치관 변화 등
- 출산정책 관련 결혼 여건(주택마련, 결혼비용 등), 임신·출산 부담(의료비, 돌봄부담 등), 자녀양육비용 및 자녀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일-가정양립(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활용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등
- 고령사회정책 관련 노후준비, 일자리, 건강, 활발한 노후생활, 고령친화적 환경 등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전화조사의 응답자 총 1,100명을 대상자별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⁵⁾

○ 미혼남녀(만 20~39세) 300명

- 남성이 57.9%(174명)로 여성 42.1%(126명)보다 높았음
- 연령대는 20대(만 20~29세)가 71.5%(215명), 30대(만 30~39세)가 28.5%(85명)으로

5) 해당되는 수치는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실제 조사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26.2%(79명), 인천광역시/경기도 27.8%(83명),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9.7%(29명),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8.5%(25명), 대구광역시/경상북도 9.6%(29명),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14.8%(44명), 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 3.4%(10명)의 분포를 보임
- 읍·면·동별로는 ‘동’에 분포하는 비율이(90.4%, 271명) 읍·면(9.6%, 29명)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0.8%(32명), 대학교 재학 이상이 89.2%(268명)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46.5%(140명)으로 가장 높았고, 무직이 30%(90명), 비정규직 13.2%(40명), 시간제 10.2%(31명)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본인 소득수준으로는 199만원 이하가 49.9%(150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299만원이 28.5%(86명), 300~399만원 9.0%(27명), 400~499만원 5.1%(15명), 500만원 이상 4.9%(15명)⁶⁾, 모름/무응답 2.6%(8명)으로 미혼남녀는 대체로 300만원 미만에 많은 분포를 보임

〈표 4-1〉 미혼남녀(만 20~39세) 응답자(300명) 특성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00)	100.0
성별		
남성	(174)	57.9
여성	(126)	42.1
연령		
20~29세	(215)	71.5
30~39세	(85)	28.5
거주지역		
서울	(79)	26.2
인천/경기	(83)	27.8
대전/세종/충청	(29)	9.7
광주/전라	(25)	8.5
대구/경북	(29)	9.6
부산/울산/경남	(44)	14.8
강원/제주	(10)	3.4
읍·면·동		
동	(271)	90.4
읍/면	(29)	9.6
학력		
고졸이하	(32)	10.8
대재이상	(268)	89.2
고용형태		

6) 사례 수는 400~499만원 구간과 같으나,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 수준은 약간의 차이를 보임

구분	사례 수	비율
정규직	(140)	46.5
비정규직	(40)	13.2
시간제	(31)	10.2
일안함	(90)	30.0
본인소득 ¹⁾		
199만원 이하	(150)	49.9
200~299만원	(86)	28.5
300~399만원	(27)	9.0
400~499만원	(15)	5.1
500만원 이상	(15)	4.9
모름/무응답	(8)	2.6

주: 300~399만원 구간과 400~499만원 구간의 사례 수는 동일하지만,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 수준은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기혼남녀(만 20~54세) 400명

- 여성이 53.5%(214명)로 남성 46.5%(186명)보다 높았음
- 연령대는 20대(만 20~29세)가 4.9%(20명), 30대(만 30~39세)가 31.3%(125명), 40대(만 40~49세) 42.9%(172명), 50대 20.9%(83명)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19.1%(76명), 인천광역시/경기도 31.0%(124명),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10.2%(41명),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9.6%(39명),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0.1%(41명),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16.0%(64명), 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 4.0%(16명)의 분포를 보임
- 읍·면·동별로는 ‘동’에 분포하는 비율이(89.8%, 359명) 읍·면(10.2%, 41명)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31.9%(128명), 대학교 재학 이상이 67.6%(270명), 모름/무응답 0.5%(2명)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았음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58.0%(232명)으로 가장 높았고, 무직이 22.8%(91명), 비정규직 12.7%(51명), 시간제 5.3%(21명), 모름/무응답 1.0%(4명)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가구 소득수준으로는 199만원 이하가 5.9%(23명), 200~299만원이 16.0%(64명), 300~399만원 21.2%(85명), 400~499만원 22.1%(88명), 500만원 이상 33.2%(133명), 모름/무응답 1.7%(7명)으로 기혼남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녀수는 2명이 52.7%(211명)으로 가장 높았고, 1명 25.0%(100명), 3명 이상 10.5%(42명), 없음 11.8%(47명)의 순이었음

〈표 4-2〉 기혼남녀(만 20~54세) 응답자(400명) 특성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400)	100.0
성별		
남성	(186)	46.5
여성	(214)	53.5
연령		
20~29세	(20)	4.9
30~39세	(125)	31.3
40~49세	(172)	42.9
50~54세	(83)	20.9
거주지역		
서울	(76)	19.1
인천/경기	(124)	31.0
대전/세종/충청	(41)	10.2
광주/전라	(39)	9.6
대구/경북	(41)	10.1
부산/울산/경남	(64)	16.0
강원/제주	(16)	4.0
읍·면·동		
동	(359)	89.8
읍/면	(41)	10.2
학력		
고졸이하	(128)	31.9
대재이상	(270)	67.6
모름/무응답	(2)	0.5
고용형태		
정규직	(232)	58.0
비정규직	(51)	12.7
시간제	(21)	5.3
일안함	(91)	22.8
모름/무응답	(4)	1.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3)	5.9
200~299만원	(64)	16.0
300~399만원	(85)	21.2
400~499만원	(88)	22.1
500만원 이상	(133)	33.2
모름/무응답	(7)	1.7
자녀수		
없음	(47)	11.8
1명	(100)	25.0
2명	(211)	52.7
3명 이상	(42)	1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중·고령 남녀(만 55~74세) 400명

- 여성이 52.9%(212명)로 남성 47.1%(188명)보다 높았음
- 연령은 만 55~59세가 33.2%(133명), 만 60~69세 48.0%(192명), 만 70~74세 18.8%(75명)의 분포를 보임

- 거주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20.3%(81명), 인천광역시/경기도 23.7%(95명),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10.6%(42명),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12.0%(48명),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1.7%(47명),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17.0%(68명), 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 4.7%(19명)의 분포를 보임
- 읍·면·동별로는 ‘동’에 분포하는 비율이(78.8%, 315명) 읍·면(21.2%, 85명)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67.2%(269명), 대학교 재학 이상이 31.8%(127명), 모름/무응답 1.0%(4명)으로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았음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 33.7%(135명), 시간제 13.8%(55명), 무직 51.4%(206명), 모름/무응답 1.0%(4명)으로 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응답자의 가구 소득수준으로는 199만원 이하가 42.1%(168명), 200~299만원이 13.6%(54명), 300~399만원 14.8%(59명), 400~499만원 8.8%(35명), 500만원 이상 15.9%(64명), 모름/무응답 4.8%(19명)으로 중고령남녀는 199만원 이하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유배우자가 86.5%(346명)으로 무배우자 13.5%(54명)보다 높았음
- 가구형태별로 보면, 부부가구가 52.7%(211명)으로 가장 많고, 자녀동거가구 33.1%(133명), 단독가구 12.7%(51명), 기타 1.5%(6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 중·고령남녀(만 55~74세) 응답자(400명) 특성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0)	100.0
성별		
남성	(188)	47.1
여성	(212)	52.9
연령		
55~59세	(133)	33.2
60~69세	(192)	48.0
70~74세	(75)	18.8
거주지역		
서울	(81)	20.3
인천/경기	(95)	23.7
대전/세종/충청	(42)	10.6
광주/전라	(48)	12.0
대구/경북	(47)	11.7
부산/울산/경남	(68)	17.0
강원/제주	(19)	4.7
읍·면·동		
동	(315)	78.8
읍/면	(85)	21.2
학력		
고졸이하	(269)	67.2
대재이상	(127)	31.8
모름/무응답	(4)	1.0

구분	사례수	비율
고용형태		
전일제	(135)	33.7
시간제	(55)	13.8
일안함	(206)	51.4
모름/무응답	(4)	1.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68)	42.1
200~299만원	(54)	13.6
300~399만원	(59)	14.8
400~499만원	(35)	8.8
500만원 이상	(64)	15.9
모름/무응답	(19)	4.8
배우자		
있음	(346)	86.5
없음	(54)	13.5
가구형태		
단독가구	(51)	12.7
부부가구	(211)	52.7
자녀동거가구	(133)	33.1
기타	(6)	1.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3. 정책체감도 수준 분석

가. 저출산 정책

(1) 일-가정 양립 분야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일-가정 양립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았고, 미혼자와 기혼자의 느끼는 체감도는 큰 차이가 없으나, 대체로 기혼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각 문항별 기혼자 응답의 평균 점수를 보면,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쉬워짐’이 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일과 육아·가사 등 가정생활 병행이 쉬워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활성화’가 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미혼자의 응답결과는 평균 2.3~2.4점의 분포를 보임

□ 문항별 응답빈도를 중심으로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의 차이를 살펴봄

○ ‘직장과 결혼생활(가정생활)의 병행이 쉬워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미혼자는 61.8%, 기혼자는 65.2%로 기혼자의 부정적 답변이 높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의 활성화’ 역시 미혼자 57.1%, 기혼자 66.1%으로 기혼자의 부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혼자는 56.0%, 기혼자 52.9%로 미혼자의 부정적 응답이 약간 높았음

□ 미혼자 및 기혼자 설문문의 공통 또는 유사한 문항을 제외한 기혼자 대상 추가 설문문항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쉬워짐(2.7점)’, ‘출산휴가 이용이 쉬워짐(2.6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됨(2.5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분위기 개선됨(2.3점)’ 순의 경향을 보임

○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은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29.9%,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28.8%,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이 26.0%,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분위기 개선’ 20.5% 수준임

○ 그러나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부정적 답변 비율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일-가정 양립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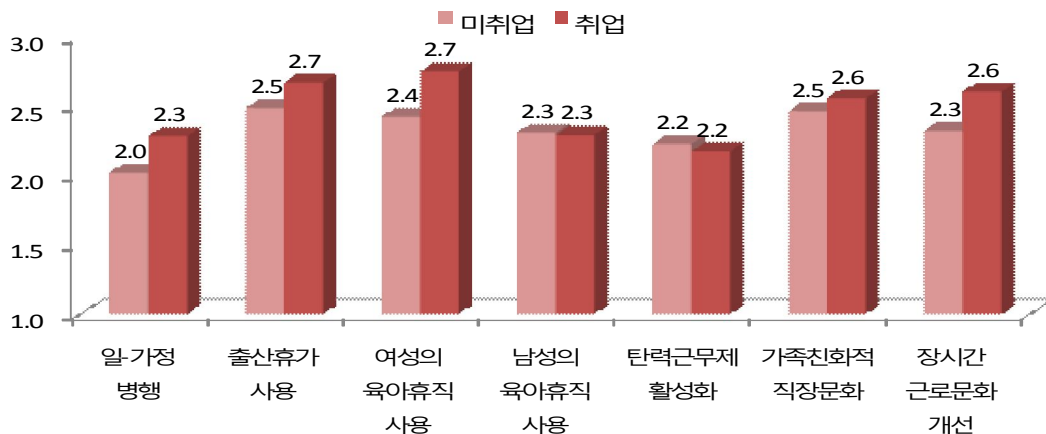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미혼	1) 직장생활과 결혼생활 병행이 쉬워지고 있음	24.5	37.3	26.9	10.6	0.6	100.0	2.3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음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24.6	32.5	27.7	13.5	1.6	100.0	2.4
	3)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19.2	36.8	27.1	15.0	1.9	100.0	2.4
기혼	직장일과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을 병행하기가 보다 쉬워지고 있음	26.5	38.7	21.4	12.8	0.5	100.0	2.2
	1)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21.2	26.6	23.4	26.4	2.4	100.0	2.6
	2)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19.1	27.4	23.6	27.3	2.6	100.0	2.7
	3)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	30.5	31.5	17.5	18.8	1.7	100.0	2.3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활성화되고 있음(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28.6	37.5	21.6	11.1	1.1	100.0	2.2
	5)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16.9	36.0	24.5	21.7	0.8	100.0	2.5
	6)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고 있음	20.6	33.5	19.9	23.6	2.4	100.0	2.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기혼자를 경제활동 참여자와 미참여자로 구분하여 일과 가정 양립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의 수월성이나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탄력 근무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 경제활동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실제 정책대상이 되고 있는 취업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일-가정 정책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4-1] 일-가정 양립제도 변화에 대한 취업 및 미취업자 체감도



(2) 결혼·출산·양육부담 분야

□ 가족형성 여건 조성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가족형성 여건 조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평균 점수(5점 기준)가 3점 이상인 항목은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가 높아짐(미혼자 3.5점, 기혼자 3.3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 시 결혼하기가 쉬워짐(미혼자, 3.3점)’, ‘결혼생활·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얻기 쉽고 편리해짐(미혼자 3.0점, 기혼자 3.1점)’으로 나타남
 - 특히,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 시 결혼하기가 쉬워짐’은 미혼자의 결혼노력이나 결정이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 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결혼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음(2.6점)’,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있음(2.5점)’을 제외하면, 모두 2.5점 이하의 낮은 점수대를 보여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결혼주택 마련이 쉬워짐’ 문항에 있어서는 미혼자 88.4%, 기혼자 85.9%, ‘결혼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은 미혼자 79.5%, 기혼자 75.5%로 미혼자의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문항에서는 미혼자 63.4%, 기혼자 82.2%로 기혼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미혼자와 기혼자가 인지하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여건 수준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미혼자의 경우, 결혼에 대한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용과 전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4-5〉 미혼남녀(만 20~39세) 및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가족형성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미혼	1) 결혼주택 마련이 쉬워지고 있음	59.9	28.5	7.8	2.8	1.0	100.0	1.6
	2)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전세자금, 국민행복주택 등)	19.1	30.0	37.3	12.4	1.3	100.0	2.5
	3) 결혼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 (주택마련을 제외한 혼수, 결혼식 비용 등)	43.5	36.0	10.7	8.7	1.1	100.0	1.9
	4) 결혼생활, 결혼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고 편리해지고 있음 (결혼생활, 결혼준비 등)	9.5	19.9	31.7	34.3	4.6	100.0	3.0
	5)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 시 결혼하기가 쉬워지고 있음	9.6	20.3	19.6	34.7	15.8	100.0	3.3
	6)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25.7	37.7	29.7	6.2	0.7	100.0	2.2
	7) 결혼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음(여성)	20.4	31.8	21.9	22.4	3.5	100.0	2.6
	8)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4.1	10.6	22.7	54.5	8.0	100.0	3.5
기혼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41.3	40.9	15.0	2.8	0.1	100.0	1.8
	1) 신혼부부의 결혼주택 마련이 쉬워지고 있음	54.2	31.7	9.5	4.6	0.0	100.0	1.6
	2) 결혼생활, 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얻기 쉽고 편리해졌음	11.8	19.8	23.6	36.9	7.8	100.0	3.1
	3) 결혼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 (주택마련을 제외한 혼수, 결혼식 비용 등)	39.5	36.0	16.2	8.1	0.2	100.0	1.9
	4) 남성들이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3.1	16.1	30.7	44.5	5.5	100.0	3.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임신·출산·자녀양육 및 육아인프라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1.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의 배려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음’ 이 2.7점으로 임신·출산지원 항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료비 부담 및 산후조리·신생아 돌봄 부담에 대한 체감도는 각각 2.5점과 2.1점으로 나타남
- 특히 ‘산후조리나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보다

‘보통’의 응답비율도 낮아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음(71.7%)

〈표 4-6〉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임신·출산지원 대한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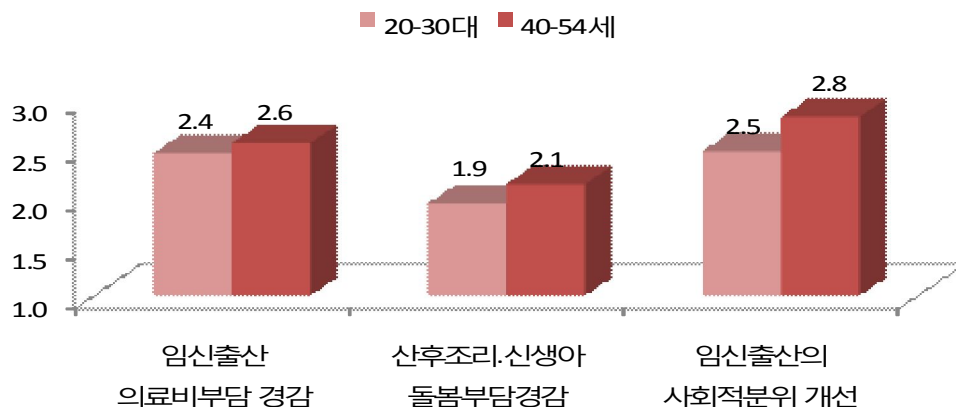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	45.4	32.8	13.4	6.3	2.1	100.0	1.9
1)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보다 줄어들고 있음	21.5	30.2	25.8	20.5	2.1	100.0	2.5
2) 산후조리나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이 보다 줄어들고 있음	35.7	36.0	16.0	11.3	1.0	100.0	2.1
3)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의 배려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음	22.0	23.1	21.0	31.5	2.3	100.0	2.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최근 3년간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0~30대 연령층과 40~54세 집단 간의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
- 임신·출산 관련하여 의료비 부담이나 산후조리/신생아 돌봄부담 감소에 대해서는 연령대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20~30대가 40~54세 연령집단에 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적 배려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체감도는 40~54세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2] 임신·출산지원 변화에 대한 연령군별 체감도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는 1.9점을 기록하였으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워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79.8%)
 -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있음(2.7점)’으로 무상보육정책 효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는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의 감소’가 1.5점(부정 평가 90.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2.4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평균 점수 2.4점인 항목들 중에서 부정적 답변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방과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음(61.6%)’이며, 그 다음으로 ‘필요 시 자녀를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59.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음(58.6%)’,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 혹은 민간베이비시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고 있음(55.9%)’ 순으로 나타남

〈표 4-7〉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40.7	39.1	13.8	5.9	0.5	100.0	1.9
1)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음	20.0	27.4	21.6	27.7	3.3	100.0	2.7
2)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음	22.2	36.4	25.3	14.9	1.1	100.0	2.4
3) 필요 시 자녀를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23.4	35.9	21.6	17.3	1.8	100.0	2.4
4)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 혹은 민간베이비시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고 있음	20.8	35.1	25.5	18.0	0.5	100.0	2.4
5) 방과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음	21.4	40.2	20.1	17.4	1.0	100.0	2.4
6)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있음	61.0	29.2	6.3	3.5	0.0	100.0	1.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야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있어 전반적인 응답은 2.2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음

○ 이 중 ‘아동·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은 1.7점으로 가장 변화

정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교육과열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 그 외의 항목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비율이 50% 미만으로 다른 저출산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음’은 52.0%의 부정적 응답을 보임

〈표 4-8〉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	25.1	41.8	25.6	7.0	0.5	100.0	2.2
1) 아동·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점 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51.2	33.0	11.0	4.5	0.3	100.0	1.7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음	20.9	31.1	25.8	20.8	1.4	100.0	2.5
3)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한 스포츠, 문화활동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음	18.0	25.6	30.4	24.2	1.8	100.0	2.7
4) 아동·청소년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 경으로 개선되고 있음	13.9	30.3	29.3	25.9	0.6	100.0	2.7
5) 아동·청소년이 가족이나 주변사람 들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	11.7	32.1	29.1	26.6	0.5	100.0	2.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4)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결혼에 관한 미혼자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은 평균 점수는 보통(3점)에 가까우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임

○ 이 중,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인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음(23.4%)

○ 한편,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서는 ‘소득,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가 50.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결혼의 제
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혼자들의 희망하는 자녀수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81.0%로 높게 나타나 추가
출산의 의향이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4-9〉 미혼남녀(만 20~39세)의 최근 3년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변화가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결혼에 대한 본인의 인식변화	6.3	31.2	48.4	11.3	2.7	100.0	2.7
2) 본인의 결혼 의향이 높아지고 있음 ¹⁾	10.8	33.1	35.4	15.7	5.0	100.0	2.7
3)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인식변화	6.8	25.9	43.8	18.6	4.8	100.0	2.9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척도 기준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표 4-10〉 미혼남녀(만 20~39세)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된 이유 1가지

(단위: %)

구분	주된 이유 (1가지)						계
	소득, 고용 불안정 때문에	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학업이나 일과 결혼생활의 병행이 힘들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기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	50.2	23.4	3.2	13.3	8.2	1.7	10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표 4-11〉 기혼남녀(만 20~54세)의 최근 3년간 육아 및 자녀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기혼자들이 희망하는 자녀수가 늘어나고 있음	37.1	43.9	10.5	7.9	0.6	100.0	1.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나. 고령사회 정책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분야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 ‘중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음’은 평균 2.7점으로 보통수준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음
-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음’은 평균 2.6점으로 23.6%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또한 ‘노인일자리와 같은 중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음’의 비율은 평균 2.7점으로 28.2%가 긍정적이었음

〈표 4-12〉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중·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음	13.1	33.9	24.6	24.2	4.3	100.0	2.7
1)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음	14.2	42.1	20.1	21.2	2.4	100.0	2.6
2) 노인일자리와 같은 중·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음	9.3	40.4	22.1	24.4	3.8	100.0	2.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한편, 최근 3년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체감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가입 또는 저축을 늘리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음’ 문항에 있어 평균 3.4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긍정적 응답 비율 53.0%)

○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 48.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에 대해 상당부분 체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1)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가입 또는 저축을 늘리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음	5.8	18.1	23.1	39.2	13.8	100.0	3.4
2)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음	5.3	24.2	22.4	39.7	8.5	100.0	3.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은 78.0%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4.0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 역시 62.7%(3.6점)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4〉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1) 사전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0.5	3.3	18.2	54.7	23.3	100.0	4.0
2)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	2.0	12.1	23.1	47.0	15.7	100.0	3.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분야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일자리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소득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4%(3.3점)으로 보통(3점) 이상의 수준을 나타낸 반면, ‘중고령자를 위한 일 자리의 근로조건이 나아지고 있음’은 긍정적 응답비율이 22.6%(2.6점)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15〉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일자리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1)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의 근로 조건이 나아지고 있음(근로시간, 임금 등)	12.4	36.1	29.0	19.8	2.8	100.0	2.6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소득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6.8	17.9	26.0	39.4	10.0	100.0	3.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반면, 건강한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중·고령자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이 3.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 비율 역시 69.5% 수준이었음
- 특히,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인프라의 확대를 살펴볼 수 있음
-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60.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표 4-16〉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중·고령자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	2.2	11.7	16.6	48.8	20.7	100.0	3.7
1)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음	1.7	16.7	20.7	47.4	13.5	100.0	3.5
2)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음	3.0	11.0	15.8	49.6	20.5	100.0	3.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한편,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 제공 역시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61.3%(3.5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여가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남

○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을 응답한 비율은 50.7%,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을 응답한 비율은 50.0%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특히 노년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설계에 해당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17〉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중·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자원봉사, 학습 활동 등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3.0	14.1	21.6	49.3	12.0	100.0	3.5
1) 중·고령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지고 있음	3.1	23.4	23.5	40.3	9.7	100.0	3.3
2) 중·고령자들이 여가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2.2	17.1	18.6	48.0	14.1	100.0	3.5
3) 중·고령자들이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5.0	21.7	22.6	39.5	11.2	100.0	3.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야

□ 최근 3년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볼 때,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변화에 대한 체감도는 3.2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중·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3.1점)’이 40.3%의 긍정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고령자들이 낙상이나 넘어짐 등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3.0점)’이 33.8%, ‘중·고령자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2.9점)’ 33.6%, ‘독거노인 또는 중·고령자 부부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2.9점)’ 32.0% 순으로 나타남

〈표 4-18〉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최근 3년간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러함		
중·고령자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4.3	25.8	26.2	32.3	11.4	100.0	3.2
1) 중·고령자들이 낙상이나 넘어짐 등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6.6	29.6	30.0	27.5	6.3	100.0	3.0
2) 중·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	6.0	25.6	28.1	32.6	7.7	100.0	3.1
3) 독거노인 또는 중·고령자 부부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	7.6	31.7	28.7	23.7	8.3	100.0	2.9
4) 중·고령자들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음	7.6	28.7	30.1	28.8	4.8	100.0	2.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4)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49.7%(3.3점)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향후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58.5%(3.5점)로 더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앞으로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19〉 중·고령남녀(만 55~74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단위: %, 점)

구분	변화 정도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런 편임	매우 그려함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	4.3	19.6	26.5	42.2	7.5	100.0	3.3
향후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함	3.0	16.0	22.5	49.9	8.6	100.0	3.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4. 정책효과성 분석

가. 정책체감도가 결혼 및 출산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미혼남녀(20~39세)의 최근 3년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다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고, 변화 없음 48.4%, 부정적 37.5%으로 변화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긍정적 가치관 보다는 부정적 가치관 비율이 더 높았음

○ 결혼할 의향에 있어서는 긍정적 응답은 20.7%, 부정적 응답은 43.9%로 부정적인 변화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출산의 경우, 변화 없음이 43.8%로 가장 높고, 부정적 답변이 32.7%, 긍정적 답변이 23.4% 수준임

－ 결혼할 의향에 있어 부정적 답변이 43.9%인데 반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변화 없음이 43.8%인 것을 볼 때,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게 되는 결혼의향과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가치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20〉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변화 없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최근 3년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6.3	31.2	48.4	11.3	2.7	100.0	300
2. 최근 3년간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10.8	33.1	35.4	15.7	5.0	100.0	300
3. 최근 3년간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6.8	25.9	43.8	18.6	4.8	100.0	3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이러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함

○ 최근 3년간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고 있는가에 있어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 증가와 전반적 사회적 여건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에 대한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전반적 사회적 여건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결혼 의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결혼생활 및 준비관련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 탄력적 근무형태 확산 등 직접적인 정부정책에서부터 주택 마련 용이성, 결혼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감소 등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 혹은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추가적으로 통용되는 유의수준은 아니지만 취업여부에서 정규직 변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고용의 안정성이 결혼의향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책효과는 시간을 두고 발생한다는 점, 정책의 범위 및 과급성의 한계, 관련정책의 부재 등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4-21〉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결혼할 의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결혼할 의향	상수	0.895	0.562	-	1.593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57	0.133	0.027	0.427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063	0.198	-0.018	-0.315
	연령	0.010	0.016	0.051	0.669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319	0.196	0.097	1.629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369 [†]	0.200	0.179	1.846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028	0.223	0.009	0.125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035	0.225	0.010	0.155
	소득수준(본인)	-0.053	0.050	-0.089	-1.062
	주택 마련 용이성	0.091	0.077	0.073	1.173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0.057	0.065	-0.054	-0.865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 경감	-0.030	0.065	-0.029	-0.458
	결혼생활 및 준비관련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	0.068	0.060	0.070	1.130
	결혼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감소	-0.014	0.055	-0.015	-0.250
	팬층은 일자리 취업 용이	0.019	0.070	0.018	0.278
	직장과 결혼생활 병행 가능성	0.019	0.070	0.018	0.278
	탄력적 근무형태 확산	0.009	0.065	0.009	0.139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개선	0.060	0.065	0.060	0.927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 증가	0.229 ^{**}	0.069	0.210	3.312
	전반적 사회적 여건 개선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0.172 [*]	0.073	0.153	2.352
	$R = 0.364, R^2 = 0.132, \text{Adj } R^2 = 0.072, F = 2.183^{**}, N = 29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최근 3년간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인구사회적 변수인 학력과 주택 마련 용이성,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 증가, 전반적 사회적 여건(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개선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 증가 및 전반적 사회적 여건(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개선은 결혼할 의향에 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기타 다른 정책과 관련된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음
 - 그러나 주택 마련의 용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주택마련이 용이해졌다고 인식할수록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를 가지기 전에 주거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함
 - 그 외에도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정규직은 미취업자에 비해 자녀를 가지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자녀를 가지는 것	상수	1.089 *	0.512	-	2.129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05	0.121	0.003	0.045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079	0.181	0.025	0.436
	연령	-0.002	0.014	-0.009	-0.121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385 *	0.178	0.127	2.157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354 †	0.182	0.186	1.948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234	0.203	0.084	1.155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002	0.205	-0.001	-0.009
	소득수준(본인)	-0.037	0.046	-0.067	-0.815
	주택 마련 용이성	0.142 *	0.071	0.124	2.020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0.092	0.060	-0.095	-1.547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 경감	-0.033	0.59	-0.034	-0.549
	결혼생활 및 준비관련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	0.033	0.055	0.036	0.602
	결혼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감소	0.010	0.050	0.012	0.206
	팬층은 일자리 취업 용이	-0.073	0.046	-0.095	-1.604
	직장과 결혼생활 병행 가능성	0.100	0.064	0.102	1.578
	탄력적 근무형태 확산	0.077	0.059	0.085	1.308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개선	-0.023	0.059	-0.025	-0.396
	남성들의 가사/육아 참여 증가	0.193 **	0.063	0.190	3.059
	전반적 사회적 여건 개선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0.227 *	0.067	0.218	3.403
	R = 0.405, R ² = 0.164, Adj R ² = 0.106, F = 2.810***, N = 292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나. 정책체감도가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 기혼남녀(만 20~54세)가 생각하는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답변(보통 미만: 81.0%)이 많았음⁷⁾

○ 특히, 부정적인 답변 내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그 수준이 더욱 높아짐

－ 전혀 그렇지 않음 비율: 20대 47.4%, 30대 43.5%, 40대 36.8%, 50대 26.5%

○ 30대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의 경우 가장 낮았으나, 긍정적인 답변에 있어서는 50대가 14.5%로 가장 높았음

〈표 4-23〉 기혼남녀(만 20~54세)의 희망자녀수 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최근 3년간 귀하는 기혼자들이 희망하는 자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37.1	43.9	10.5	7.9	0.6	100.0	400
20~29세	47.4	31.6	10.5	10.5	0.0	100.0	19
30~39세	43.5	41.9	9.7	4.0	0.8	100.0	124
40~49세	36.8	45.6	9.9	7.0	0.6	100.0	171
50~54세	26.5	47.0	12.0	14.5	0.0	100.0	8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와 관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제시함

1)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은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분위기는 기혼자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부담 경감은 기혼자의 희망자녀수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7) 단, 20대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4-24〉 임신·출산 지원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	상수	1.042 **	0.349	-	2.991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27	0.107	-0.015	-0.252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18	0.151	-0.072	-1.442
	연령	0.006	0.007	0.045	0.859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051	0.106	-0.026	-0.485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080	0.128	0.043	0.626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029	0.164	-0.010	-0.177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82	0.217	0.046	0.839
	소득수준(가구)	0.002	0.032	0.004	0.069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	0.110 *	0.050	0.133	2.206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부담 경감	0.092	0.056	0.105	1.637
	임산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 분위기	0.130 **	0.040	0.170	3.227
	$R = 0.347, R^2 = 0.120, \text{Adj } R^2 = 0.095, F = 4.673***, N = 38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2) 돌봄 지원

-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 중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그 리고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할수록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희망자녀수 증가는 시간적으로 연속적 돌봄이 가능한 것과 사교육비 등 비용 부담 경감이 주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어린이집·유치원 등 저연령에 해당하는 돌봄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는 조사된 응답자의 상당수가 연령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평균, 41.4세)

〈표 4-25〉 돌봄 지원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	상수	0.917 *	0.355	-	2.587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20	0.109	-0.011	-0.189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68 †	0.153	-0.088	-1.751
	연령	0.006	0.006	0.047	0.891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016	0.109	-0.008	-0.146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080	0.129	0.043	0.619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012	0.164	0.004	0.072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97	0.219	0.050	0.897
	소득수준(가구)	0.008	0.033	0.013	0.240
	돌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부담 경감	0.022	0.043	0.027	0.508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증가	0.019	0.056	0.021	0.340
	이른 아침/늦은 저녁까지 어린이집 이용 용이	0.018	0.056	0.021	0.312
	아이돌봄서비스(가정내돌봄)여건 개선	0.071	0.053	0.079	1.324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	0.139 *	0.054	0.156	2.571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	0.188 **	0.064	0.157	2.933
	$R = 0.352, R^2 = 0.124, \text{Adj } R^2 = 0.091, F = 3.778***, N = 38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3) 일-가정양립 지원

-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장시간 근로환경의 개선은 가정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생기는 것으로 각종 서비스 및 관련 기관, 비용부담 외에도 돌봄에 대한 시간 확보는 희망자녀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유의미하게 통용되지는 않지만,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용이성도 기혼자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표 4-2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	상수	1.133 **	0.342	—	3.311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38	0.105	0.021	0.364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36	0.148	-0.077	-1.595
	연령	0.001	0.007	0.005	0.103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017	0.104	-0.009	-0.164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008	0.126	-0.004	-0.063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147	0.161	-0.053	-0.917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55	0.213	0.039	0.725
	소득수준(가구)	-0.016	0.032	-0.026	-0.506
	일가정양립 지원				
	출산휴가 이용 용이	0.063	0.064	0.079	0.976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용이	0.116 †	0.066	0.144	1.755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분위기 개선	0.018	0.051	0.022	0.354
	탄력적 근무형태 활성화	0.083	0.055	0.089	1.496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로의 개선	0.024	0.053	0.027	0.451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0.118 *	0.048	0.145	2.429
R = 0.407, R ² = 0.166, Adj R ² = 0.135, F = 5.302***, N = 38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4) 저출산 관련 정책

- 상기 세 가지 영역별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응답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감안하고 여러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의 두 가지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부모의 사회적 여건 및 상황이 희망자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즉,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 그 밖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수록 희망자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7〉 저출산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기혼남녀의 희망자녀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기혼자들의 희망자녀수 증가	상수	0.764 *	0.367	-	2.082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09	0.107	0.005	0.080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61 †	0.148	-0.085	-1.764
	연령	0.000	0.007	0.002	0.038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015	0.107	-0.008	-0.142
	취업여부: 정규직(기준: 미취업)	0.026	0.126	0.014	0.204
	취업여부: 비정규직(기준: 미취업)	-0.107	0.162	-0.039	-0.662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089	0.216	0.022	0.411
	소득수준(가구)	-0.008	0.032	-0.013	-0.248
	저출산 관련 정책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	0.090 †	0.049	0.109	1.827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부담 경감	0.022	0.058	0.025	0.384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 분위기	-0.022	0.049	-0.029	-0.463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부담 경감	0.001	0.042	0.001	0.016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증가	-0.018	0.055	-0.020	-0.327
	이른 아침/늦은 저녁까지 어린이집 이용 용이	-0.011	0.055	-0.012	-0.191
	아이돌봄서비스(가정내돌봄)여건 개선	0.030	0.052	0.034	0.571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증가	0.107 *	0.053	0.121	2.032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	0.076	0.063	0.065	1.205
	출산휴가 이용 용이	0.036	0.065	0.045	0.552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용이	0.101	0.067	0.126	1.516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분위기 개선	0.005	0.051	0.006	0.088
	탄력적 근무형태 활성화	0.043	0.056	0.047	0.778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로의 개선	0.035	0.054	0.040	0.649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0.106 *	0.049	0.130	2.166
	R = 0.451, R ² = 0.204, Adj R ² = 0.154, F = 4.052***, N = 38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다. 정책체감도가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중·고령자(만 55~74세)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절반정도(49.7%)는 향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60~69세 53.1%, 70~74세 52.0%, 55~59세 42.8%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대상 정책들의 대부분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70~74세의 경우 ‘보통’의 비율이 32.0%, 부정적 응답이 16.0%로 타 연령군에 비해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4-28〉 중·고령자(만 55~74세)의 중·고령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최근 3년간 귀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4.3	19.6	26.5	42.2	7.5	100.0	400
55~59세	4.5	27.1	25.6	38.3	4.5	100.0	133
60~69세	3.6	18.2	25.0	42.7	10.4	100.0	192
70~74세	5.3	10.7	32.0	46.7	5.3	100.0	7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제시함

1) 노후소득 보장

○ 노후의 소득보장 관련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후소득지원 비중 증가와 근로 시간, 임금 등 중·고령자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니나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학재학 이상 집단보다 고졸이하 집단이, 그리고 고용형태가 전일제인 사람이 삶의 질 향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음

〈표 4-29〉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상수	0.951	0.714	—	1.332
	성별: 남성(기준: 여성)	-0.184 †	0.112	-0.092	-1.653
	연령	0.015	0.010	0.085	1.479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163	0.122	0.066	1.337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207 †	0.113	-0.096	-1.824
	취업여부: 전일제(기준: 미취업)	0.241 †	0.130	0.115	1.863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45	0.148	0.051	0.985
	소득수준(가구)	0.001	0.029	0.003	0.047
	노후 경제적 보장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후준비 기회 증가	0.075	0.049	0.081	1.518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후소득지원 비중 증가	0.103 *	0.051	0.110	2.023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0.016	0.058	0.017	0.284
	노인일자리 등 정부지원일자리 증가	0.078	0.060	0.081	1.299
	근로시간, 임금 등 중·고령자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	0.180 **	0.054	0.184	3.317
	R = 0.404, R ² = 0.163, Adj R ² = 0.135, F = 5.918***, N = 37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2) 노후 건강 보장

○ 노후 건강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기회 증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 시설·서비스 증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여건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사전예방, 만성질환 관리, 운동시설서비스 증가 등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의 측면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의 경우, 여성일수록 중·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서비스 기회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55세에서 74세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직접적인 이용 계층이 아니므로 아직까지는 삶의 질 변화에 미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30〉 노후 건강 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상수	-0.374	0.716	-	-0.522
	성별: 남성(기준: 여성)	-0.211 *	0.106	-0.105	-1.992
	연령	0.019 *	0.010	0.109	2.018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149	0.116	0.061	1.284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124	0.109	-0.058	-1.142
	취업여부: 전일제(기준: 미취업)	0.221 †	0.123	0.105	1.803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212	0.138	0.074	1.529
	소득수준(가구)	-0.015	0.027	-0.031	-0.561
	노후 건강 보장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기회 증가	0.275 ***	0.069	0.208	3.954
	장기요양서비스 기회 증가	-0.013	0.057	-0.012	-0.224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서비스 증가	0.180 **	0.054	0.179	3.347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여건 향상	0.194 **	0.056	0.188	3.498
	R = 0.490, R ² = 0.240, Adj R ² = 0.218, F = 10.519***, N = 37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3) 활발한 노후생활 보장

- 활발한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가 증가할수록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함
- 추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이는 한국사회에서 겪는 현재의 삶의 경험과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치와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됨

〈표 4-31〉 활발한 노후생활 보장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상수	0.370	0.707	—	0.524
	성별: 남성(기준: 여성)	-0.101	0.109	-0.050	-0.934
	연령	0.022 *	0.010	0.127	2.297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133	0.118	0.054	1.129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225 *	0.110	-0.105	-2.047
	취업여부: 전일제(기준: 미취업)	0.196	0.127	0.093	1.547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30	0.143	0.046	0.912
	소득수준(가구)	-0.014	0.028	-0.028	-0.492
	활발한 노후생활 보장				
	봉사활동 참여기회 증가	0.089	0.057	0.092	1.574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 증가	0.323 ***	0.062	0.323	5.170
	노년기 준비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회 증가	0.015	0.054	0.016	0.277
	R = 0.448, R ² = 0.200, Adj R ² = 0.179, F = 9.189***, N = 37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4)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 독거·노인부부 생활환경 안전이 삶의 질 향상 인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환경 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서는 동에 거주하는 중·고령자,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가 삶의 질 향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표 4-32〉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상수	0.169	0.653	—	0.258
	성별: 남성(기준: 여성)	-0.161	0.098	-0.080	-1.646
	연령	0.016 †	0.009	0.091	1.764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71 *	0.109	0.111	2.477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153	0.102	-0.071	-1.498
	취업여부: 전일제(기준: 미취업)	0.231 *	0.116	0.110	1.992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08	0.131	0.038	0.827
	소득수준(가구)	-0.002	0.026	-0.004	-0.069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0.174 **	0.050	0.180	3.479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0.182 ***	0.048	0.191	3.755
	독거·노인부부 생활환경 안전	0.229 ***	0.052	0.245	4.438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환경 개선	0.058	0.051	0.059	1.151
	R = 0.566, R ² = 0.321, Adj R ² = 0.300, F = 15.686***, N = 37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5) 고령사회 관련 정책

- 상기 네 가지 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거주지역이, 정책관련 영역에서는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기회 증가와 여가문화생활 참여 기회 증가, 노년기 준비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회 증가,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독거·노인부부 생활환경 안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도시에 해당되는 동에 거주하는 것이 농촌에 해당되는 읍/면에 거주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의 건강영역 접근, 여가문화생활의 충분성, 삶의 환경 차원에서의 주거/교통환경과 취약계층의 잠재적 집단이 될 수 있는 독거·노인부부의 생활환경이 주요한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음
 - 노년기 준비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회 증가는 부(-)적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3〉 고령사회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상수	-0.918	0.658	-	-1.394
	성별: 남성(기준: 여성)	-0.072	0.099	-0.036	-0.726
	연령	0.014	0.009	0.078	1.568
	거주지역: 동(기준: 읍/면)	0.242 *	0.107	0.099	2.271
	학력: 대재이상(기준: 고졸이하)	-0.083	0.099	-0.038	-0.837
	취업여부: 전일제(기준: 미취업)	0.173	0.113	0.082	1.531
	취업여부: 시간제(기준: 미취업)	0.134	0.128	0.047	1.047
	소득수준(가구)	-0.020	0.025	-0.041	-0.798
	고령사회 관련 정책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후준비 기회 증가	0.024	0.043	0.026	0.556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후소득지원 비중 증가	0.009	0.045	0.010	0.200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0.012	0.052	0.013	0.236
	노인일자리 등 정부지원일자리 증가	0.018	0.052	0.019	0.355
	근로시간, 임금 등 중·고령자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	0.058	0.049	0.059	1.178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기회 증가	0.229 ***	0.063	0.173	3.625
	장기요양서비스 기회 증가	-0.069	0.054	-0.067	-1.268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서비스 증가	0.049	0.053	0.049	0.927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여건 향상	0.063	0.054	0.061	1.174
	봉사활동 참여기회 증가	0.024	0.051	0.025	0.476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 증가	0.178 **	0.059	0.178	3.011
	노년기 준비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기회 증가	-0.110 *	0.052	-0.119	-2.130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0.144 **	0.049	0.149	2.915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0.132 **	0.048	0.138	2.766
	독거·노인부부 생활환경 안전	0.186 ***	0.051	0.199	3.622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환경 개선	0.019	0.050	0.019	0.376
	R = 0.635, R ² = 0.404, Adj R ² = 0.365, F = 10.409***, N = 378				

주: *P<0.1,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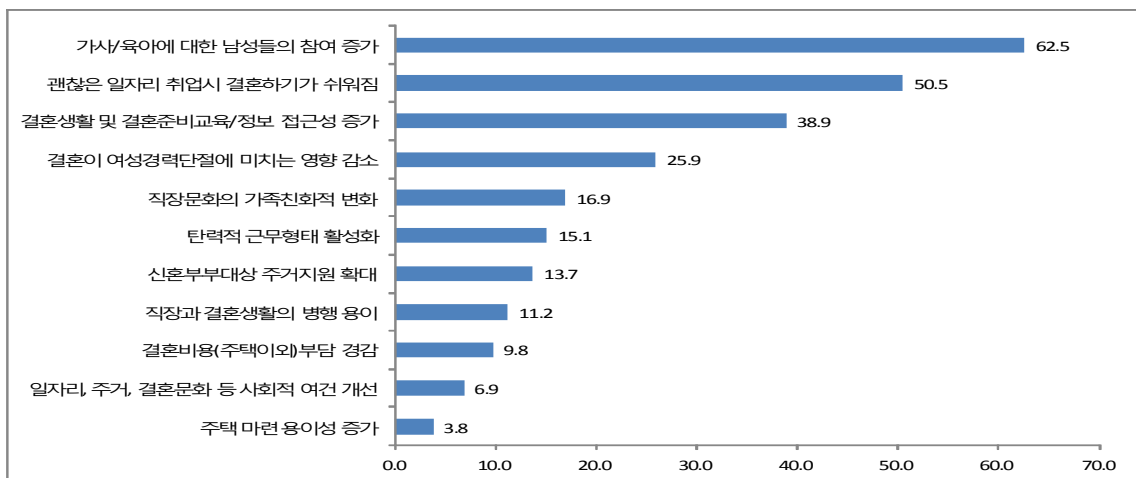
5. 국민 참여 평가 결과 종합

가. 미혼자 조사

- 결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에서는 미혼자들의 인식이나 체감수준은 높지 않음
 - 지난 3년간 결혼과 관련한 미혼자의 체감도 혹은 인식변화에서는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62.5%, 팬찮은 직장을 가져야 결혼하기 쉬워진다는 인식이 50.5%로 상대적으로 긍정변화 비중이 높음
 - － 일-가정 양립이나 주거마련 등이 수월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
- 전반적으로 주거지원 정책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높음. 이로 인해 주거지원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정책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단지,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결혼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는 미혼자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4-3] 미혼남녀(만 20~39세)의 결혼 관련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도

(단위: %)



주: 각 항목별 %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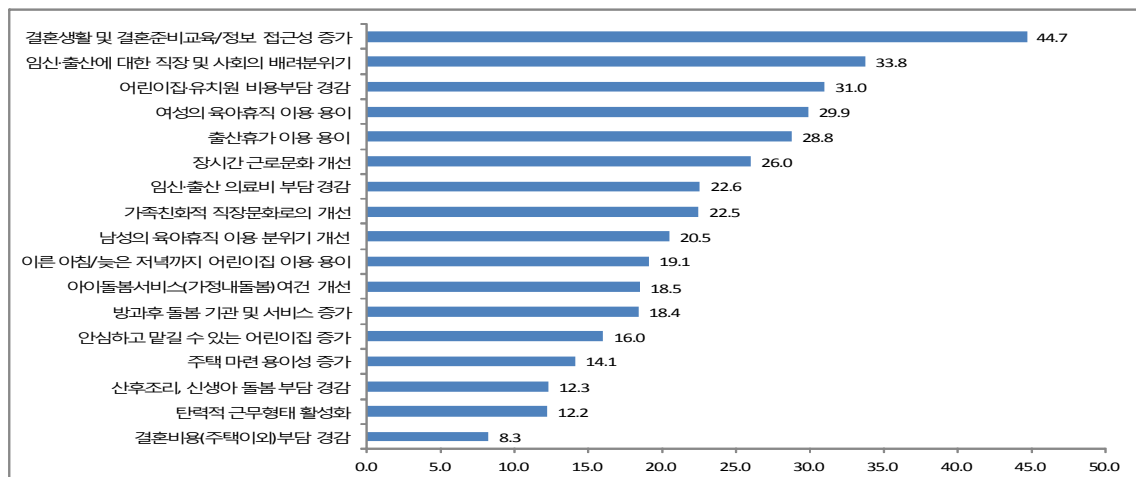
나. 기혼자 조사

- 기혼자의 저출산 분야 정책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생활 및 준비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긍정 변화가 4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부담(33.8%)이 다음으로 높게 분석됨
 - 그 밖에 주택 이외의 결혼비용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8.3%로 가장 낮고, 출산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혼자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수준임
 - 결혼을 위해 필요한 비용(주택 및 기타 경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지난 3년간 크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돌봄기관 및 서비스 증가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 기혼자의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신·출산지원, 보육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기혼자의 출산의향을 높이는데 대부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즉,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저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이 기혼자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4-4] 기혼남녀(만 20~54세)의 저출산 분야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도

(단위: %)



주: 각 항목별 %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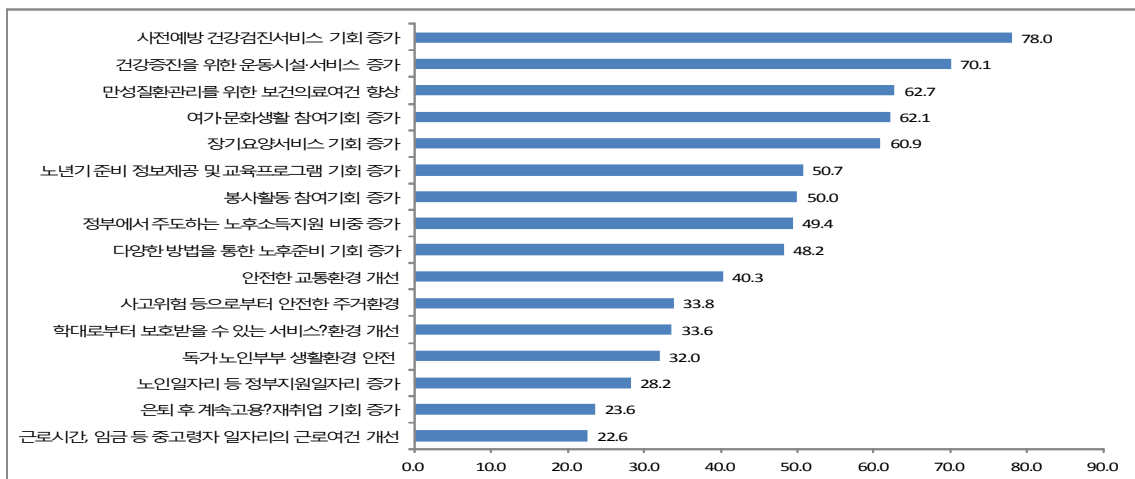
다. 중·고령자 조사

-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 일자리 정책과 노후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과 문화여가 정책, 그리고 주거와 이동의 안전정책이 유의하게 나타남

- 저출산과 달리 고령사회 영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중·고령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건강과 여가문화 접근성의 체감도 변화가 매우 크며, 정부지원 노후소득 비중의 증가나 교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임. 그러나 중·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가장 낮음

[그림 4-5] 중·고령자(만 55~74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도

(단위: %)



주: 각 항목별 %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제2절 전문가 참여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함
- 조사대상(총 78명): 저출산 분야 26명, 고령사회 분야 31명, 성장동력 분야 21명
-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2015.9.1.~2015.10.5.)
- 조사내용: 22개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됨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유연근로제 확산,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정책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100.0% 인지하고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의 인지도는 80.8%로 일·가정양립 일상화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정책의 인지도는 100.0%로 나타남
- 한편,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65.4%) 정책의 인지도는 타 정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고,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84.0%),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84.6%) 등은 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편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68.0%),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80.0%),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84.6%) 순서로 높아 타 영역 대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4-34〉 저출산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단위: %, 명)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저출산정책에 대한 인지도			
			알고있음	모름	계	n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96.2	3.8	100.0	26.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80.8	19.2	100.0	26.0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100.0	0.0	100.0	26.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00.0	0.0	100.0	26.0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100.0	0.0	100.0	26.0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92.3	7.7	100.0	26.0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00.0	0.0	100.0	26.0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65.4	34.6	100.0	26.0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84.0	16.0	100.0	25.0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100.0	0.0	100.0	26.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00.0	0.0	100.0	25.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100.0	0.0	100.0	26.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96.2	3.8	100.0	26.0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84.6	15.4	100.0	26.0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96.2	3.8	100.0	26.0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96.0	4.0	100.0	25.0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00.0	0.0	100.0	26.0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92.3	7.7	100.0	26.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80.0	20.0	100.0	25.0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68.0	32.0	100.0	25.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84.6	15.4	100.0	26.0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88.0	12.0	100.0	25.0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저출산 부문)」

□ 저출산 분야 정책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3.09점(22개 과제별 평균의 단순 평균)으로 보통(3.0점)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됨

- 중영역별로 일·가정양립 일상화 영역은 2.81점으로 보통(3.0점) 이하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3.06점),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3.25점) 순으로 높아짐
- 정책과제별로 최대 4.13점에서 최소 2.08점까지 분포하며 보통(3.0점)이상으로 평가된 과제는 22개 과제 중 13개이고, 나머지 9개 과제는 보통(3.0점) 미만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4.13점)이고 그 뒤를 이어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3.69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3.53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3.48점),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3.35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3.24점), 육아휴직제도 개선(3.23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3.23점),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3.20점) 등이 있음
 - 한편, 평균(3.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2.08점)이고, 유연근로제 확산(2.40점),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2.52점),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2.72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2.64점),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2.91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2.95점),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2.95점) 등이 포함됨

〈표 4-35〉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명,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 점수 (단순평균)
			전혀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전체											3.09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0.0	16.0	36.0	44.0	4.0	100.0	25	3.23	2.8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0.0	60.0	12.0	8.0	0.0	100.0	25	2.08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0.0	28.0	24.0	48.0	0.0	100.0	25	3.2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8.0	48.0	40.0	4.0	0.0	100.0	25	2.40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3.8	19.2	34.6	34.6	7.7	100.0	26	3.23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4.0	32.0	52.0	12.0	0.0	100.0	25	2.7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4.0	40.0	44.0	12.0	0.0	100.0	25	2.64	3.25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0.0	61.9	23.8	14.3	0.0	100.0	21	2.52	
	임산·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산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0.0	15.8	52.6	31.6	0.0	100.0	19	3.16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0.0	3.8	30.8	57.7	7.7	100.0	26	3.6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0.0	16.0	32.0	52.0	0.0	100.0	25	3.36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0.0	0.0	20.8	45.8	33.3	100.0	24	4.13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4.0	8.0	32.0	48.0	8.0	100.0	25	3.48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4.5	31.8	31.8	22.7	9.1	100.0	22	3.00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8.0	24.0	40.0	20.0	8.0	100.0	25	2.96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0.0	13.0	43.5	39.1	4.3	100.0	23	3.35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4.0	20.0	28.0	44.0	4.0	100.0	25	3.2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4.3	13.0	34.8	43.5	4.3	100.0	23	3.30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점수 (단순평균)
			전혀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0.0	5.9	47.1	35.3	11.8	100.0	17	3.53	3.06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10.5	5.3	63.2	21.1	0.0	100.0	19	2.95	
	안전한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9.1	18.2	45.5	27.3	0.0	100.0	22	2.91	
	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14.3	9.5	52.4	14.3	9.5	100.0	21	2.95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전혀 안 되고 있음(1점)~매우 잘되고 있음(5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저출산 부문)」

2.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분야 정책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고령자 고용연장(96.8%)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96.8%), 노후설계 기반 조성(90.3%)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77.4%)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87.1%),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87.1%) 순서를 보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이 영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96.8%), 고령자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96.8%),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93.5%),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93.5%),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90.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90.3%) 순서로 낮아짐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80.6%),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87.1%)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임

○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가구 보호 강화(93.5%)가 가장 높고, 학대노인 보호 강화(83.9%),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80.6%),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77.4%) 순서로 나타남

〈표 4-36〉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단위: %, 명)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인지도			
			알고있음	모름	계	n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96.8	3.2	100	31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77.4	22.6	100	31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87.1	12.9	100	31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96.8	3.2	100	31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87.1	12.9	100	31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90.3	9.7	100	31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93.5	6.5	100	31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96.8	3.2	100	31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87.1	12.9	100	31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90.3	9.7	100	31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90.3	9.7	100	3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80.6	19.4	100	31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93.5	6.5	100	3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96.8	3.2	100	31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77.4	22.6	100	31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80.6	19.4	100	31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93.5	6.5	100	31
		학대노인 보호강화	83.9	16.1	100	31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고령사회 부문)」

□ 고령사회분야 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2.96점(18개 과제별 평균의 단순평균)으로 보통(3.0점)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됨

○ 중영역별로 안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3.09점)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2.90점),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조성(2.80점) 순서로 낮아짐

○ 정책과제별 최대 4.10점에서 최소 2.29점까지 분포하며 보통(3.0점) 이상으로 평가된 핵심과제는 18개 과제 중 8개이고, 나머지 10개 과제는 보통(3.0점) 미만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4.10점)이고,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3.68점),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3.48점),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3.30점),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가구 보호 강화(3.23점), 장기요양보험 내실화(3.09점),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3.00점) 순으로 낮아짐

- － 보통(3.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정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2.29점)이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2.30점), 노후설계 기반 조성(2.52점), 고령자 고용연장(2.68점),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2.70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83점),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2.86점), 학대노인 보호 강화(2.95점)가 포함됨

〈표 4-37〉 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명,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 점수 (단순평균)
			전혀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전체											2.9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0.0	54.8	25.8	16.1	3.2	100	31	2.68	2.9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3.3	46.7	33.3	6.7	0.0	100	30	2.29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6.7	26.7	43.3	20.0	3.3	100	30	2.8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3.3	26.7	46.7	20.0	3.3	100	30	3.04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0.0	3.6	14.3	64.3	17.9	100	28	4.1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13.3	43.3	33.3	6.7	3.3	100	30	2.5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9.7	32.3	48.4	6.5	3.2	100	31	2.58	3.09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0.0	20.0	33.3	36.7	10.0	100	30	3.48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0.0	6.9	27.6	55.2	10.3	100	29	3.68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3.4	10.3	44.8	31.0	10.3	100	29	3.30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0.0	26.7	36.7	36.7	0.0	100	30	3.0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0.0	28.0	44.0	28.0	0.0	100	25	3.00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3.4	44.8	24.1	27.6	0.0	100	29	2.70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0.0	32.1	50.0	17.9	0.0	100	28	2.86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0	68.0	24.0	4.0	0.0	100	25	2.30	2.80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3.8	46.2	42.3	7.7	0.0	100	26	2.65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0.0	20.7	51.7	24.1	3.4	100	29	3.23		
		학대노인 보호강화	0.0	24.0	60.0	16.0	0.0	100	25	2.95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전혀 안 되고 있음(1점)~매우 잘되고 있음(5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고령사회 부문)」

3. 성장동력 분야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성장동력 분야 세부 정책별 인지도는 중상수준을 보임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95.2%),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95.2%),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95.2%),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90.5%)은 모두 9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임
- 한편,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57.1%)는 가장 낮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61.9%),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외국인력 유치(66.7%),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66.7%),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81.0%) 순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분야 제도 개선(100.0%) 정책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주택분야 제도 개선(76.2%),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71.4%), 금융분야 제도 개선(66.7%) 순으로 낮아짐

○ 고령 친화산업 육성

- 이 영역의 인지도는 타 영역 대비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고령친화 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52.4%), 국내수요기반 확충(52.4%)의 인지도가 성장동력 영역에서 가장 낮고,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는 61.9%로 나타남

〈표 4-38〉 성장동력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인지도

(단위: %, 명)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인지도			
			알고있음	모름	계	n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90.5	9.5	100	2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95.2	4.8	100	21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66.7	33.3	100	2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61.9	38.1	100	21
	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95.2	4.8	100	2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81.0	19.0	100	21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95.2	4.8	100	21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66.7	33.3	100	2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57.1	42.9	100	2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100.0	0.0	100	21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주택분야 제도개선	76.2	23.8	100	21
		금융분야 제도개선	66.7	33.3	100	21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71.4	28.6	100	21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61.9	38.1	100	21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52.4	47.6	100	21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52.4	47.6	100	21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성장동력 부문)」

□ 성장동력분야 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3.07점(16개 과제별 평균의 단
순평균)으로 보통(3.0점)수준으로 평가됨

○ 중영역별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3.19점)이 가장 높고, 차례로 인
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3.00점), 고령친화산업 육성(2.69점) 순으로 나타남

○ 정책과제별 최대 3.45점~ 최소 2.54점까지 분포하며 평균(3.0점)이상으로 평가된 핵심과
제는 16개 과제 중 10개이고, 나머지 6개 과제는 평균(3.0점) 미만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3.45점), 학교교
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3.45점), 평생학습인프라 구축(3.45점)이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3.32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3.27점),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기회 확대(3.16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분야 제도 개선(3.15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3.12점), 주택분야 제도 개선(3.06점), 국내 수요기반 확충(3.0
점)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성과가 낮게 평가된 정책은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2.54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표준화(2.57점), 외국국적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2.58점), 미래재정위
험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2.81점),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2.88
점) 등이 있음

〈표 4-39〉 성장동력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명,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점수 (단순평균)
			전혀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전체											3.07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0.0	5.0	55.0	30.0	10.0	100	20	3.45	3.19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0.0	15.0	40.0	45.0	0.0	100	20	3.32	
	외국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0.0	40.0	60.0	0.0	0.0	100	20	2.58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0.0	16.7	61.1	16.7	5.6	100	18	3.12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0.0	19.0	33.3	33.3	14.3	100	21	3.45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0.0	10.0	65.0	25.0	0.0	100	20	3.16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0.0	14.3	33.3	47.6	4.8	100	21	3.45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5.6	16.7	61.1	16.7	0.0	100	18	2.88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0.0	12.5	50.0	37.5	0.0	100	16	3.2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4.8	19.0	38.1	33.3	4.8	100	21	3.15	3.00
		주택분야 제도개선	5.3	5.3	73.7	10.5	5.3	100	19	3.06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0.0	25.0	62.5	6.3	6.3	100	16	2.93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점수 (단순평균)
			전혀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중장기 제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0.0	29.4	58.8	11.8	0.0	100	17	2.81	
고령친화 산업육성	제품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6.7	40.0	40.0	13.3	0.0	100	15	2.57	2.69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0.0	42.9	57.1	0.0	0.0	100	14	2.54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0.0	23.1	53.8	23.1	0.0	100	13	3.00	

주: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전혀 안 되고 있음(1점)~매우 잘되고 있음(5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성장동력 부문)」

제 5 장

국제비교 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제1절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의 경우 3가지 중영역에 속하는 핵심성과지표는 총 18개가 있으나 정확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핵심성과지표인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지표 한 가지에 불과하며, 핵심성과지표와 동일하지 않지만 비교적 핵심성과지표와 유사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 4가지는 다음과 같음

○ (중영역) 일-가정양립 중영역의 ‘연간근로시간’ 지표

○ (중영역)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중영역의 ‘출생아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지표

－ 단,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이라는 OECD 지표는 한국의 핵심성과지표와 지표명이 동일하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지표 간 산식이 상이함

〈표 5-1〉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영역	핵심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비고
1.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연간근로시간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한국의 핵심성과지표와 OECD 지표간 산식 상이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아동 지원강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	
아동 청소년 역량개발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 당 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사망자 WHO자료, 아동 수 OECD자료로 연구진이 직접계산

○ OECD 비교국은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의 추이와 최근 합계출산율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1.3명 이하인 스페인, 약 1.4명에서 수렴이 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약 1.9에서 수렴되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그리고 2.0명에 근접한 프랑스를 포함하여 자료가 존재하는 국가들로 구성하였음

○ 따라서 제1절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OECD 주요국들과의 국제비교를 실시하고자 함

1. 일-가정양립 일상화(중영역)

□ 연간근로시간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에 속하는 핵심성과지표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과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를 대신하여 활용됨

○ 국제비교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주요국가 및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장시간 근로라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저출산에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해 장시간 근로라는 기업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 5-2〉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단위: 시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출산율('13)
한국	2,346	2,306	2,246	2,232	2,187	2,090	2,163	2,071	1.19
미국	1,800	1,797	1,791	1,767	1,777	1,786	1,789	1,788	1.86
영국	1,669	1,677	1,659	1,651	1,652	1,625	1,654	1,669	1.83
호주	1,723	1,719	1,723	1,696	1,695	1,700	1,686	1,676	1.88
독일	1,424	1,422	1,422	1,382	1,405	1,405	1,393	1,388	1.41
프랑스	1,484	1,500	1,507	1,489	1,494	1,496	1,489	1,489	1.98
일본	1,784	1,785	1,771	1,714	1,733	1,728	1,745	1,735	1.43
스웨덴	1,599	1,612	1,617	1,609	1,635	1,632	1,618	1,607	1.89
덴마크	1,464	1,439	1,431	1,434	1,417	1,433	1,431	1,411	1.67
스페인	1,673	1,658	1,663	1,670	1,673	1,679	1,666	1,665	1.27
이탈리아	1,815	1,816	1,803	1,771	1,772	1,772	1,752	1,752	1.39
OECD 평균	1,805	1,799	1,790	1,766	1,774	1,771	1,773	1,770	1.67

주: 201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임

자료: 1) 연간 근로시간: OECD.stat 2015년 12월 자료 추출. 단, 한국 2013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제출자료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출생아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 속하는 핵심성과지표인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를 대신하여 활용됨
-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출생아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2013년 현재 13.37명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수준에 가까우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유사한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가진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현재 한국의 산부인과 관련 인프라의 문제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라기보다는 분만취약지의 예에서 추정해 볼 수 있듯이 인프라 분배에 있어서의 지역별 격차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표 5-3〉 출생아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국제비교

(단위: 명)

구분	산부인과 전문의 수('13)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13)	합계출산율('13)
한국	5,835	13.37	1.21('14)
미국	42,902	10.85	1.86
영국	7,551	9.7	1.83
독일	16,522	24.22	1.41
프랑스	8,090	10.37	1.98
일본	12,708('12)	11.53('10)	1.43
스웨덴	1,323('12)	12.03('12)	1.89
스페인	5,528	13.02	1.27
이탈리아	11,847	23.03	1.39

자료: 1) 산부인과 전문의 수와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OECD Health Care Resources 2015년 12월 검색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에 속하는 핵심성과지표인 ‘보육·교육비 지출율’을 대신하여 활용됨
- OECD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출을 자체 보다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나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등의 지표를 보고하고 있음
 - － 핵심성과지표인 ‘보육·교육비 지출율’은 정부 정책의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이라는 지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통해 한국의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고자 함
 - － OECD의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지표는 0~5세에 대한 보육·교육 공적지출

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적지출은 공식적인(formal)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과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pre-school: day-care center 및 kindergarten)에 등원하는 3~5세 아동이 있는 가정 대한 현금, 현물, 조세 제도를 통한 공적재정지원을 의미함

○ 국제비교 결과, 2011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0~5세 아동의 보육·교육비에 대한 총 공적지출은 0.8%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과 합계출산율이 유사한 스페인과 비교 시 다소 높은 수준임

- 연령별로 살펴볼 때 OECD 국가들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일본과 스웨덴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경우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지출이 3~5세에 대한 공적지출 보다 작거나 같은 수준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지출이 3~5세에 대한 공적지출과 비교했을 때 7배로 월등히 높다는 것임
- 이는 한국의 만 0~2세의 양육 형태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가정양육보다는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보육에 대한 의존이 실제로로 보육·교육비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음

〈표 5-4〉 GDP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2011) 국제비교

(단위: %)

구분	3세 미만 대상	3~5세 대상	총 공적지출	합계출산율('13)
한국	0.7	0.1	0.8	1.21('14)
미국	0.1	0.3	0.4	1.86
영국	0.4	0.7	1.1	1.83
호주	0.3	0.3	0.6	1.88
독일	0.1	0.4	0.5	1.41
프랑스	0.6	0.7	1.2	1.98
일본	0.3	0.1	0.4	1.43
스웨덴	1.1	0.5	1.6	1.89
덴마크	0.7	1.3	2.0	1.67
스페인	0.6	-	0.6	1.27
이탈리아	0.2	0.4	0.6	1.39
OECD 평균(30개국)	0.4	0.5	0.8	1.67

자료: 1)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 last updated Jan. 2014;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 OECD의 해당 지표는 핵심성과지표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과 지표명이 동일하나 산출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이함

- 우리나라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지표는 전체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수 대비 방과 후 돌봄 서비스(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아동수로 산출되는 것에 비해, OECD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지표는 전체 학교 학생 수 대비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등록한 아동으로 산출됨

- OECD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지표에서 의미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학교 시작 전, 점심 시간, 방과 후, 공휴일에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아동에게는 숙제 보조나 특별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 시간과 부모의 근무 시간 간의 시간을 맞추도록(match) 돕기 위해 제공됨
- 국가에 따라 제공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종류, 대상 연령, 기준 연도가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이 낮은 편에 속함
- 연령별로 살펴볼 때 한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에 있어서 OECD 국가들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한국의 미취학 아동의 수혜율과 취학 아동의 수혜율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만 3~5세 미취학 아동의 수혜율이 만 6세~11세 취학 아동의 수혜율의 3배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는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비해 취학 아동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질적 수준도 낮게 평가됨에 따라 보육 및 교육 목적의 방과 후 사설학원의 이용이 훨씬 더 선호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이러한 사설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돌봄 및 교육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

〈표 5-5〉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국제비교

(단위: %)

구분	대상연령	수혜율	연도	합계출산율('13)
한국	3~5	27.6	2011~2012	1.21('14)
	6~11	8.9		
영국	0~14	22.3	2008	1.83
호주	5~8	20.4	2010~2011	1.88
	9~12	16.0		
독일	5~8	9.8	2011	1.41
	9~11	6.8		
프랑스	3~6	20.8	2007	1.98
	7~11	-		
일본	6~11	11.4	2009	1.43
스웨덴	6~8	86.0	2011	1.89
	9~11	40.0		
덴마크	6~8	87.8	2009	1.67
	9~11	54.4		
스페인	3~5	7.4	2006	1.27
	6~11	3.7		

자료: 1)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만 0세~14세 아동 인구 대비 1년 동안 질병, 자살, 타살을 제외한 외부요인(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및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한 해당 연령 아동수의 10만 명당 비율을 의미함
 - OECD 비교국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에 대한 지표 값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연구진이 해당 국가의 만 0세~14세 인구수와 해당 연령 아동 사망자수를 토대로 하여 직접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지표 값은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비교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및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의 합)는 WHO의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였고, 만 0세~14세 아동 수는 OECD.stat의 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함
- 국제비교 결과, 한국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OECD 비교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
 -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의 안전사고 전체 발생 건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만 포함되는 지표이므로 향후에는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뿐만 아니라 아동 안전사고 손상 경험률과 같은 지표를 산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5-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명, 아동인구 10만 명당)

구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합계출산율 (‘1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6.2	6.0	5.4	4.9	4.2	4.3	3.8	2.9	1.21(‘14)
미국	6.21	5.39	5.32	4.99	-	-	-	-	1.86
영국	2.07	1.67	1.46	1.38	-	-	-	-	1.83
호주	3.78	3.49	3.7	3.31	3.57	-	-	-	1.88
독일	2.09	2.07	2.02	2.02	1.75	1.81	-	-	1.41
프랑스	2.89	2.66	2.56	2.39	-	-	-	-	1.98
일본	2.82	2.54	2.28	2.51	2.21	-	-	-	1.43
스웨덴	1.42	1.56	2.52	1.16	-	-	-	-	1.89
덴마크	3.06	2.58	1.29	1.6	1.31	-	-	-	1.67
스페인	3.01	2.77	1.94	2.01	1.24	-	-	-	1.27
이탈리아	2.15	1.91	1.69	1.54	-	-	-	-	1.39

자료: 1)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한국 자료는 e-나라지표 “아동 안전사고 현황”이며, 한국 이외의 국가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ortality Database와 OECD.stat을 이용하여 연구진이 산출하였음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제2절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의 핵심성과지표는 총 17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2개(고령자 고용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에 불과하며, 핵심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는 7개가 있음

- (중영역)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 (중영역)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 빈곤율,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요양시설이용 및 재가서비스 이용률
- (중영역)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가능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고자 함

〈표 5-7〉 고령사회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영역	핵심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 가입률 - 퇴직연금 가입률	-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
노후생활 설계 강화	-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창출 수	-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공적소득보장률	- 노인빈곤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65세 이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비율: 요양시설이용 및 재가 서비스 이용률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 노인교통사고사망률	-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 수	-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고령자 고용률’을 대신하여 활용함
- 2014년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57.3%로 전년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09년을 제외한 중·고령자 고용률은 ‘05년 51.7%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05년과 ‘06년은 60%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7년(60.6%)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4년 65.6%로 전년대비 1.3%p 상승함.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중·고령자 고용률임
 -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14년 65.6%로 OECD 평균 57.3%보다 8.3%p 높음
 - 스웨덴(74.2%)과 일본(68.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스페인(44.3%), 이탈리아(46.2%), 프랑스(47.1%)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중·고령자의 취업 기회가 확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나 노후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 가능함. 이와 함께 중·고령자의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8〉 중·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8.7	59.3	60.6	60.6	60.4	60.9	62.1	63.1	64.3	65.6
미국	60.8	61.8	61.8	62.1	60.6	60.3	60.0	60.7	60.9	61.3
영국	56.7	57.3	57.3	58.1	57.5	56.9	56.8	58.1	59.7	60.8
호주	53.5	55.5	56.6	57.4	59.0	60.6	61.1	61.4	61.4	61.5
독일	45.5	48.1	51.3	53.8	56.1	57.7	59.9	61.5	63.5	65.6
프랑스	38.5	38.1	38.2	38.2	39.0	39.8	41.5	44.5	45.6	47.1
일본	63.9	64.7	66.1	66.3	65.5	65.2	65.1	65.4	66.8	68.7
스웨덴	69.6	69.8	70.1	70.3	70.1	70.6	72.2	73.1	73.7	74.2
덴마크	59.5	60.7	58.9	58.4	58.2	58.4	59.5	60.8	61.7	63.2
스페인	43.1	44.1	44.6	45.6	44.1	43.6	44.5	43.9	43.2	44.3
이탈리아	31.4	32.5	33.8	34.4	35.7	36.6	37.9	40.4	42.7	46.2
OECD 평균 (41 개국)	51.7	52.7	53.5	54.1	53.6	54.0	54.4	55.6	56.3	57.3

자료: 고령자 고용률: Data extracted on 01 Dec 2015 11:00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all persons) and age(55-64) indicators

□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의 차이

- 한국 남성의 2014년 실제은퇴연령이 72.9세로 공식은퇴연령 61세보다 11.9년 더 오래 일하며, 여성의 실제은퇴연령은 70.6세로 공식은퇴연령보다 9.6세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연령은 64.6세로 공식은퇴연령(64.0세)보다 0.6세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같이 실제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남성, 여성), 스웨덴(남성)이지만, 한국의 실제은퇴연령은 이들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식은퇴연령은 빠르지만, 노후소득의 불충분과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인생 후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함

〈표 5-9〉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국제 비교(2014년 기준)

(단위: 세)

구분	남성			여성		
	실제은퇴연령(A)	공식은퇴연령(B)	A-B	실제은퇴연령(A)	공식은퇴연령(B)	A-B
한국	72.9	61.0	11.9	70.6	61.0	9.6
미국	65.9	66.0	-0.1	64.7	66.0	-1.3
영국	64.1	65.0	-0.9	62.4	62.5	-0.1
호주	65.3	65.0	0.3	63.0	65.0	-2
독일	62.7	65.0	-2.3	62.7	65.0	-2.3
프랑스	59.4	61.2	-1.8	59.8	61.2	-1.4
일본	69.3	65.0	4.3	67.6	65.0	2.6
스웨덴	65.2	65.0	0.2	64.2	65.0	-0.8
덴마크	63.0	65.0	-2	60.6	65.0	-4.4
스페인	62.2	65.0	-2.8	63.1	65.0	-1.9
이탈리아	61.4	62.5	-1.1	61.1	62.0	-0.9
OECD 평균	64.6	64.0	0.6	63.1	63.1	0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7.8. Average effective age of labour-market exit and normal pensionable age in 2014)

□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대신하여 활용함
- OECD국가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평균은 54.0%이며, 아래 표에 제시된 비교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가 71.2%로 가장 높고, 영국이 32.6%로 가장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임
 - 한국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은 39.6%로 이탈리아(71.2%), 프랑스(58.8%), 호주(52.3%), 독일(42.0%)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미국(38.3%) 영국(32.6%), 일본(35.6%)보다는 높음
- 한국의 경우 낮은 소득대체율도 문제이지만 공적연금 사각지대 비중이 30~50대 인구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기의 연금가입률이 낮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표 5-10〉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노인인구 비율('13)
한국	39.6	12.2
미국	38.3	14.1
영국	32.6	17.0
호주	52.3	14.4
독일	42.0	21.3
프랑스	58.8	17.5('12)
일본	35.6	25.1
이탈리아	71.2	20.8
OECD평균 (34 개국)	54.0	18.8 ¹⁾

주: 1) EU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원자료: 1)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자료: 이삼식 외(201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p.322.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노인빈곤율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공적소득보장률’을 대신하여 활용함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48.5%로 전체 빈곤율 14.6%의 3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한국 다음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호주 33.5%에 비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 2013년도 노인빈곤율과 비교할 때 미국, 영국, 독일은 노인 빈곤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프랑스 3.8%, 덴마크 4.6% 등임
- 노인빈곤율은 완화하기 위해 공적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은 70%에 조금 미치지 못하며 공적연금 수급노인은 31.9%에 불과함. 노인빈곤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현재 노인의 빈약한 경제상태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문화여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표 5-11〉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전체빈곤율(2012)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노인인구 비율('14)
		2011년	2012년	
한국	14.6	48.6	48.5	12.7
미국	17.9	18.8	21.0	14.5
영국	10.5	10.5	13.4	17.6
호주	14.0	33.4	33.5	14.7
독일	8.4	8.9	9.4	20.8
프랑스	8.1	4.5	3.8	17.7('13)
일본	—	19.4('09)	—	26.0
스웨덴	9.0	10.1	9.3	19.3
덴마크	5.4	7.1	4.6	18.3
스페인	14.0	7.0	6.7	18.4
이탈리아	12.7	10.6	9.4	21.4

자료: 1) 노인빈곤율: Data extracted on 01 Dec 2015 12:58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Poverty rate
 2) 전체 빈곤율: Data extracted on 01 Dec 2015 12:58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Poverty rate
 3) 노인인구 비율: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p.213.

□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 2014년 OECD 평균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13.4%로 '05년 11.1%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도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의 2014년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러한 수준은 일본(20.8%), 스웨덴(16.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소득단절에 대비한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의 불충분성과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여 노후에도 소득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음

〈표 5-12〉 고령자 고용률(65세 이상) 추이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인인구 비율('14)
한국	29.8	30.3	31.1	30.3	29.7	28.7	28.9	30.1	30.9	31.3	12.7
미국	14.5	14.9	15.5	16.1	16.1	16.2	16.7	17.3	17.7	17.7	14.5
영국	6.3	6.7	6.7	7.4	7.6	8.4	8.8	9.1	9.5	10.0	17.6
호주	7.3	7.7	8.7	9.3	10.1	10.6	11.0	11.8	11.9	12.1	14.7
독일	3.4	3.4	3.7	3.9	4.0	4.0	4.6	4.9	5.4	5.8	20.8
프랑스	1.1	1.0	1.3	1.4	1.3	1.5	1.9	2.2	2.2	2.3	17.7('13)
일본	19.4	19.4	19.7	19.7	19.5	21.2	19.3	19.5	20.1	20.8	26.0
스웨덴	9.9	10.1	11.1	12.1	12.5	13.3	13.4	14.9	14.6	16.5	19.3
덴마크	5.5	5.1	5.3	5.3	5.2	5.6	6.2	6.8	6.4	7.1	18.3
스페인	2.0	2.1	2.0	2.1	2.0	2.0	1.9	2.0	1.7	1.6	18.4
이탈리아	3.1	3.2	3.2	3.3	3.1	3.1	3.2	3.4	3.4	3.7	21.4
OECD 평균	11.1	11.3	11.6	11.9	11.9	12.4	12.3	12.8	13.1	13.4	16.2

주: 1) EU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자료: 1) 고령자 고용률: Data extracted on 01 Dec 2015 10:35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all persons) and age(65+) indicators

2) 노인인구 비율: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p.213.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비율)’은 2014년 기준 6.7%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2008년 2.9%보다 3.8%p 증가함. 그러나 사회보험 형태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2010년 13.5%)과 일본(2013년 17.9%)과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수혜율은 낮은 수준임

－ 한국은 독일(1995년)과 일본(200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고, 노인인구 비중도 독일(20.8%), 일본(26.0%)에 비해 낮아 절대적인 비교의 한계가 있음.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대상, 등급판정기준, 운영방식, 재정방식 등의 국가 간 차이도 일부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5-13〉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국가	1995년	2000년	2008	2010 ¹⁾	2013	2014	노인인구비율 (‘14)
독일	8.4	13.5	12.7	13.5	—	—	20.8
일본	—	9.9	16.1	16.6	17.9 ²⁾	—	26.0
한국	—	—	2.9	6.4	6.4	6.7	12.7

주: 1995년부터 2013년 자료는 ‘이삼식 외(201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p.324’의 내용을 참조함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 일본 후생노동성(2014). 개호급부비 실태 조사 월보(헤세이 12월 심사분)

3)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계연보 각년도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을 대신하여 활용함

○ 아래 표에서 제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유급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돌봄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유급서비스에는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현금급여나 비전문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포함됨⁸⁾

－ 요양시설에는 요양원(nursing home)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돌봄과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시설도 포함하며, 재가서비스에는 일시적으로 집 밖에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6.5%(2013년 기준)로 요양시설은 2.4%, 재가서비스는 4.1%임. 2013년과 비교하여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0.2%p 가량 증가함

－ 최근 자료 부족과 미국과 일본의 재가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보고되지

8)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p.200

- 않아 전체적인 국가 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스웨덴('13, 16.3%), 덴마크('14, 15.8%), 호주('13, 15.0%)의 장기요양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우리나라 역시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시설서비스보다 약 1.7%p 높지만, 시설 이용률과 재가서비스 이용률 간의 차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수준임

〈표 5-1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65세 이상 인구 중 이용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1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요양시설	—	—	—	1.1	1.1	2.0	2.2	2.4	2.4	—	12.2
	재가서비스	—	—	—	1.7	2.1	4.5	4.2	3.9	4.1	—	
	이용률 합계 ¹⁾	—	—	—	2.8	3.2	6.5	6.4	6.3	6.5	—	
미국	요양시설	3.8	3.8	3.7	3.5	3.4	3.3	3.3	—	—	—	14.1
	재가서비스	—	—	2.7	—	—	—	—	—	—	—	
	이용률 합계 ¹⁾	3.8	3.8	6.4	3.5	3.4	3.3	3.3	—	—	—	
호주	요양시설	5.5	5.4	7.2	7.1	7.0	7.0	6.9	6.7	6.6	—	14.4
	재가서비스	5.7	6.0	6.7	6.8	7.0	7.1	7.3	8.4	8.4	—	
	이용률 합계 ¹⁾	11.1	11.4	13.8	13.8	14	14.1	14.5	15.1	15.0	—	
독일	요양시설	3.7	3.7	3.7	3.7	3.8	3.8	3.9	4.0	4.0	—	21.3
	재가서비스	6.8	6.6	6.8	7.0	7.5	7.6	7.8	8.1	8.4	—	
	이용률 합계 ¹⁾	10.5	10.3	10.5	10.7	11.3	11.4	11.7	12.1	12.4	—	
스웨덴	요양시설	6.5	6.3	6	6	5.8	5.4	5.2	4.9	4.9	—	19.0
	재가서비스	10.2	10.4	11.5	11.4	—	12.2	12.0	11.7	11.4	—	
	이용률 합계 ¹⁾	16.7	16.7	17.5	17.4	5.8	17.6	17.2	16.6	16.3	—	
덴마크	요양시설	—	5.4	5.1	4.9	4.7	4.6	4.4	4.2	4.0	3.9	17.8
	재가서비스	12.8	13.0	9.6	14.1	13.7	13.0	12.1	11.6	—	—	
	이용률 합계 ¹⁾	12.8	18.4	14.7	19	18.4	17.6	16.5	15.8	4.0	3.9	
스페인	요양시설	—	—	—	—	1.3	1.5	1.7	1.7	1.8	1.8	17.9
	재가서비스	—	—	—	—	3.8	5.3	5.3	5.3	5.0	6.3	
	이용률 합계 ¹⁾	—	—	—	—	5.1	6.8	7	7	6.8	8.1	
프랑스	요양시설	3.8	3.9	4.1	4.2	4.3	4.4	—	—	—	—	17.7
	재가서비스	5.3	5.9	6.4	6.7	6.8	6.9	—	—	—	—	
	이용률 합계 ¹⁾	9.1	9.8	10.5	10.9	11.1	11.3	—	—	—	—	
일본	요양시설	3.0	3.0	3.0	2.9	2.9	2.8	2.8	2.8	2.8	2.7	25.1
	재가서비스	9.5	9.8	—	—	—	—	—	—	—	—	
	이용률 합계 ¹⁾	12.5	12.8	3	2.9	2.9	2.8	2.8	2.8	2.8	2.7	
이탈리아	재가서비스	3.0	3.0	3.3	3.4	3.7	4.1	4.1	4.3	4.8	—	20.8

주: 1) 이용률 합계는 요양시설 이용률과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합산하여 연구자가 계산한 수치임. 이 때 자료가 개인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로 집계된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 서비스를 다 받았을 때에는 이용률 합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용률 합계가 늘어나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 OECD (2015), "OECD Health Data: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Data extracted on 01 Dec 2015 23:37 UTC (GMT) from OECD iLibrary

2) 노인인구 비율: 20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자료가 많지 않아 노인인구비율은 2013년 자료를 사용함. 출처: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p.213.

-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형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2005년 10.5%에서 2013년 12.4%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후기노인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요양시설 이용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인구 비율(특히, 80세 이상 후기노인인구 비중)과 국가별 장기요양서비스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대응)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을 대신하여 활용함
- 2012년 기준, OECD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19.1%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34.5%로 일본(52.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16.7%)이며, 한국은 미국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임

〈표 5-15〉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 국제비교

(단위: %)

구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								노인인구 비율('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26.7	27.4	29.0	29.6	31.3	31.8	33.0	34.5	12.7
미국	15.0	14.1	14.5	14.8	15.6	16.7	16.7	16.7	14.5
영국	18.5	17.3	18.8	18.9	18.5	20.2	22.4	23.4	17.6
호주	16.3	14.2	15.3	16.2	15.0	16.1	18.1	18.8	14.7
독일	21.7	22.7	23.3	23.8	26.6	24.9	26.0	27.6	20.8
프랑스	18.7	19.1	19.1	19.0	18.6	19.1	19.1	20.4	17.7('13)
일본	43.3	45.0	48.4	49.0	51.2	51.7	50.3	52.5	26.0
스웨덴	23.6	21.3	22.3	25.7	25.7	24.1	28.5	24.9	19.3
덴마크	21.1	23.5	23.4	23.9	20.1	26.3	28.6	26.3	18.3
스페인	16.1	16.3	15.7	17.8	18.5	21.3	21.3	26.6	18.4
이탈리아	20.7	-	-	-	26.2	25.9	26.9	18.5	21.4
OECD 평균	20.1 (27개국)	19.3 (26개국)	19.7 (26개국)	20.2 (26개국)	21.5 (29개국)	22.3 (29개국)	22.6 (29개국)	19.1 (28개국)	16.2

주: 1) EU 17개국 노인인구비율: 18.8%

자료: 1)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는 이삼식 외(2014), p.326의 자료를 활용함

2) 2012년도 자료는 ‘도로교통공단(2014). 2014년판(2012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p.36’ 자료 활용

3) 노인인구 비율: OECD(2015).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p.213.

- 노인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교통사고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한국 노인이 2013년 29.88명으로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음

○ 이는 미국의 12.69명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가 가장 높았던 일본(노인 10만 명 당 8.70명)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은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노인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2.5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높다고 할 수 있음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한 결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고령자에 여전히 위험한 환경으로 보여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고령친화적인 교통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가능함

〈표 5-16〉 인구 10만 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00	2010	2011	2012	2013
한국	54.58	32.70	30.48	31.66	29.88
미국	19.11	13.65	13.11	13.00	12.69
영국	7.30	3.67	4.20	3.89	3.67
호주	12.44	7.30	7.48	7.61	8.21
독일	9.82	5.38	6.20	5.99	5.98
프랑스	14.23	7.25	7.11	6.79	6.10
일본	17.00	10.25	9.31	8.94	8.70
스웨덴	10.05	3.79	5.24	3.98	4.16
덴마크	16.95	7.42	6.75	4.55	5.30
스페인	12.57	6.77	6.06	6.24	5.83
이탈리아	13.94	8.81	8.53	8.63	7.98

자료: Data extracted on 02 Dec. 06:26 UTC(GMT) from OECD.Stat. Data Theme: Transport(IRTAD database)

제3절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지표는 총 10개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2개(국가 고채 평균잔존 만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에 불과함

○ 핵심성과지표와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간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는 3개가 있음

－ (중영역)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고용률,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 업무성사고 사망만인율

〈표 5-17〉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영역	한국 핵심 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비고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수	-여성고용률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채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 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평생학습참여율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 여율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산업재해율(%)	-업무성 사고 사망만인율	-국가별로 통계 산출 방법, 용어 정의 등이 다름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여성고용률(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 수 대응)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을 대신하여 활용함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14년 54.9%로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14, 58.0%)보다는 낮은 수준임

-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스페인(52.0%)이나 이탈리아(47.5%)보다 높지만 그 외의 국
가들은 모두 6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

○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노동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선진국가에 비해 여성의 가정 내 역할 강조, 일-가정 양립
의 어려움, 사회 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유지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고 있음

〈표 5-18〉 여성고용률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여성고용률					전체 고용률					합계출산율 (‘1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52.6	53.1	53.5	53.9	54.9	63.3	63.9	64.2	64.4	65.3	1.19
미국	62.4	62.0	62.2	62.3	63.0	66.7	66.6	67.1	67.4	68.1	1.86
영국	65.3	65.3	65.7	66.6	67.8	70.3	70.4	70.9	71.3	72.6	1.83
호주	66.1	66.7	66.6	66.4	66.1	72.4	72.7	72.4	72.0	71.6	1.88
독일	66.1	67.7	68.0	68.8	69.5	71.2	72.6	72.8	73.3	73.8	1.41
프랑스	59.7	59.7	59.9	60.4	60.9	63.9	63.8	63.9	64.1	64.2	1.98
일본	60.1	60.3	60.7	62.5	63.6	70.1	70.3	70.6	71.7	72.7	1.43
스웨덴	69.7	71.3	71.8	72.5	73.2	72.1	73.6	73.8	74.4	74.9	1.89
덴마크	71.1	70.4	70.0	70.0	69.8	73.3	73.1	72.6	72.5	72.8	1.67
스페인	53.5	53.3	51.8	51.0	52.0	59.7	58.8	56.5	55.6	56.8	1.27
이탈리아	46.8	47.2	47.8	47.2	47.5	57.7	57.8	57.6	56.4	56.5	1.39
OECD 평균	56.6	56.8	57.2	57.5	58.0	64.6	64.8	65.1	65.3	65.8	1.67

자료: 1) 여성의 고용률, 전체 고용률: OECD.stat 2015년 12월 01일 자료 추출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5년 12월 검색

□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대응)

○ 해당 지표는 소영역인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에 속하는 핵심지표인 ‘평생학습참여율’을 대신하여 활용함

○ 우리나라의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은 50%로 OECD 평균 5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은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5-19〉 국가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 현황(2012)

(단위: %)

구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
한국	50
미국	59
영국	56
호주	56
독일	53
스웨덴	66
덴마크	66
스페인	47
이탈리아	25
OECD 평균	51

원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http://dx.doi.org/10.1787/eag-2014-en>

자료: 이삼식 외(2014), p. 329.

□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대응)

- 우리나라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 사망하는 인구비중은 근로자 만 명당 0.58명으로 2006년 0.96명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일본이나 독일,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국가별로 통계 산출방법, 용어 정의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고 사망률 감소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노동인력 상실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성과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20〉 사고성 사망만인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0.96	0.91	0.87	0.82	0.78	0.79	0.73	0.71	0.58
일본	—	—	—	—	0.22	—	0.20	—	—
독일	—	—	—	—	0.18	—	0.17	—	—
미국	—	—	—	—	0.38	—	0.35	—	—
영국	—	—	—	—	0.05('10/'11)		0.04('12/'13)		—

주: 1)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frac{\text{업무상사고 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2)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어 단순 비교 곤란

자료: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홈페이지 내용(www.index.go.kr)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우리나라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연수

- 우리나라는 '13년 6.50년으로 독일(6.52년), 프랑스(6.75년), 일본(6.38년) 등과 유사한 수준임
- 우리나라보다 짧은 국가는 미국으로 5.47년이며, 영국은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가 14.48년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남

〈표 5-21〉 국가별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단위: 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4.68	4.85	4.96	5.33	5.56	5.96	6.50
미국	—	—	—	4.4	—	—	5.47
영국	—	—	—	12.8	—	—	14.48
독일	—	—	—	6.0	—	—	6.52
프랑스	—	—	—	6.4	—	—	6.75
일본	—	—	—	5.2	—	—	6.38

원자료: 1) 한국: 기획재정부(2014).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

2) 그 밖의 국가: 2010년 자료는: 황세운 외(2010). 장기국고채 발행 및 유통 확대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3년 자료는 기획재정부(2014), 국채 2013.

자료: 이삼식 외(2014), p.330.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3년 34.3%에서 '14년 35.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에 호주('14, 42.1%)와 스웨덴('14, 54.8%) 등이 있음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재정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22〉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중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29.3	28.7	28.0	31.2	31.0	31.6	32.2	34.3	35.7
미국	64.4	64.9	78.6	93.5	102.7	108.3	111.4	111.4	111.6
호주	20.7	20.4	21.2	26.7	30.0	34.1	37.3	38.2	42.1
영국	55.3	55.6	68.3	81.7	93.0	106.9	111.1	116.8	116.4
독일	68.3	64.2	68.2	75.6	84.2	83.6	86.3	81.4	82.1
프랑스	76.8	75.6	81.6	93.2	96.9	100.8	110.5	110.1	119.1
일본	166.8	162.4	171.1	188.7	193.3	209.5	215.4	220.3	226.1
스웨덴	51.3	45.9	46.0	47.7	45.3	45.7	45.4	47.6	54.8
덴마크	40.5	34.6	42.0	49.5	53.8	60.6	61.5	58.0	60.6
스페인	45.7	41.7	47.1	61.9	66.7	77.7	92.0	103.8	117.7
이탈리아	116.4	111.7	114.5	127.3	126.0	119.4	138.1	145.0	158.7
OECD 평균	76.3	74.5	83.0	94.9	101.1	105.9	111.7	112.1	115.5

주: 국가 간 비교 자료는 부채요소에 대한 정의나 포함 여부 등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음
 자료: 한국 자료는 e-나라지표, 그 외 국가 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98 database(Economic Outlook Annex Table 32)

제 6 장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 제1절 총괄
- 제2절 저출산 분야
- 제3절 고령사회 분야
- 제4절 성장동력 분야

6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성과 종합평가 <

제1절 총괄

□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행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전체 평가대상 과제(총 238개, 과제완료 및 성과지표 없는 과제 등 14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185개로 전체의 82.6%를 차지하며,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는 203개(90.6%), 90% 미만인 과제는 21개(9.4%), 70% 미만인 과제는 13개(5.8%)임
 - (저출산 분야) 총 100개 과제 내 기 종료 등 과제 9개를 제외한 91개 과제 중 90% 이상 달성 과제는 75개 과제(82.4%)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10개(11.0%), 70% 미만 달성 과제는 6개(6.6%)로 나타나 2014년도 저출산 정책 추진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고령사회 분야) 총 84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완료되어 평가대상 과제는 80개이며,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는 70개(87.5%)이고, 90% 미만 달성 과제는 10개(12.6%), 70% 미만 달성 과제는 6개(7.6%)로 2014년도 고령사회 정책 추진 역시 양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성장동력 분야) 총 53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는 52개(98.1%)로 매우 양호하며, 90% 미만 달성과제는 1개(1.9%)로 타 영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핵심성과과제의 추진실적은 2013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이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년도에 이르면서 핵심과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함

- 전체 핵심성과과제(44개, 실적 산출불가 과제 1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9개(65.9%),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38개(86.4%)이며, 90% 미만 달성과제는 6개(13.6%)로 나타남
 -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5개(83.3%)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3개(16.7%)로 나타남. 저출산 분야의 핵심과제 추진실적은 타 영역의 핵심과제에 비해 목표달성도가 다소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매년 개선되고 있음
 - (고령사회 분야) 16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14개(87.6%)이며, 이 중 11개(68.8%)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2013년(90% 이상 목표달성률이 13개, 76.5%)에 비해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장동력 분야) 10개 과제 중 9개 과제가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으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1개(10.0%)에 불과함. 2013년도의 경우, 3개(30%) 과제가 90% 미만을 달성한 것과는 달리 2014년 성장동력 핵심과제 추진실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일반과제 및 핵심과제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됨. 그러나 국민과 전문가의 정책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수행의 노력이나 결과가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정책의 방향성이나 내용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표 6-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일반과제 및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분야	일반과제 추진실적(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13 (5.8)	8 (3.6)	18 (8.0)	185 (82.6)	224 (100.0)	6 (13.6)	9 (20.5)	29 (65.9)	44 (100.0)
저출산 분야	6 (6.6)	4 (4.4)	6 (6.6)	75 (82.4)	91 (100.0)	3 (16.7)	4 (22.2)	11 (61.1)	18 (100.0)
고령사회 분야	6 (7.6)	4 (5.0)	6 (7.5)	64 (80.0)	80 (100.0)	2 (12.5)	3 (18.8)	11 (68.8)	16 (100.0)
성장동력 분야	1 (1.9)	—	6 (11.3)	46 (86.8)	53 (100.0)	1 (10.0)	2 (20.0)	7 (70.0)	10 (100.0)

주: 1) 핵심과제 수는 45개이나 '노후생활 설계 강화(고령사회 분야)'의 과제 실적 산출 불가로 평가대상 과제는 총 4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41-①, 2-41-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일반과제 158개(238개 중 완료과제, 비예산과제 등 80개 제외) 과제 중 예산집행률이 100% 이상인 과제는 77개(48.7%), 90% 이상인 과제는 138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함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저출산 과제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 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 과제이며, 고령사회 과제에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임

〈표 6-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반과제 예산집행률

(단위: 과제 수, %)

분야	예산집행률						비예산사업	기 종료 등 과제
	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5 (3.2)	2 (1.3)	13 (8.2)	61 (38.6)	77 (48.7)	158 (100.0)	68	12
저출산 분야	3 (4.5)	—	7 (10.6)	25 (37.9)	31 (47.0)	66 (100.0)	27	7
고령사회 분야	2 (3.8)	1 (1.9)	3 (5.7)	23 (43.4)	24 (45.3)	53 (100.0)	27	4
성장동력 분야	—	1 (2.6)	3 (7.7)	13 (33.3)	22 (56.4)	39 (100.0)	14	1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제2절 저출산 분야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정부 자체의 일반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 및 핵심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을 통해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90% 이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정책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그리고 핵심성과지표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로 나타남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과제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의 세부과제인 상용형 시간선택제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15년부터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사업의 간접 노무비 형태로 지원할 계획임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가 전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증가율로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민의 최근 3년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체감도로 평가한 결과, 대체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는 효과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고, 미혼자와 기혼자 간의 체감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체로 기혼자가 약 2% 정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정책의 효과로 최근 일-가정 양립이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1.2%(미혼자), 13.3%(기혼자)만이 긍정적으로(매우 변화함+변화 있는 편) 응답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산휴가 이용의 수월성 28.8%, 육아휴직 이용의 수월성 29.9%, 다양한 형태로 근무(미혼 15.1%, 기혼 12.2%), 직장이 가족친화적 변화 16.9%(미혼), 22.5%(기혼),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6.0%(기혼) 등임
-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과제에서 OECD 국가와의 비교 결과 연간 근로 시간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의 정책 성과에 관한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 역시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육아휴직제도 개선(48.0%)과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48.0%),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42.3%) 정책은 타 과제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해오면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직장 문화나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8.0%), 유연근로제 확산(4.0%),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12.0%)는 성과가 낮은 정책으로 평가됨.
-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과제에서 국민 및 전문가가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것은 경직된 기업 문화와 유연근무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데서 기인함
 - 이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제 등 제도는 존재하나 직장의 여건에 따라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민간에서 적용가능한 유연근로 모형을 개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국민 및 전문가 평가가 부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노동시장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나 문화가 상대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변화와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화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설치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임
 - 특히, 직장어린이집 공동설치 및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시키고, 직장어린이집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립학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진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참여기업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인증 후 인센티브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문화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제도 개선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연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표 6-3〉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가정양립(중영역) 평가 종합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일-가정양립(중영역)	(국민인식) 일-가정 병행 수월(매우 변화+있는 편)	11.2(미혼) 13.3(기혼)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국민인식) 1)출산휴가 이용의 수월성 2)육아휴직 이용의 수월성	1)28.8 2)29.9
	(전문가) 육아휴직제도 개선(매우+대체로 잘됨)	48.0
	(전문가)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48.0
	(일반)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핵심)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103.2 103.0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일반)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103.2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일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원(명)	126.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	(일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126.0
	(핵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전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8.0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일반) 근로기준법 개정 ¹⁾	0.0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일반)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제도 도입	100.0
가족돌봄 휴직제 활성화	(일반) 가족돌봄휴직 실행상황 점검	10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일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 활성화	105.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국민인식)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의 활성화	15.1(미혼) 12.2(기혼)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일반) 유연근무제 이용률(%)	107.3
	(핵심)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95.8
	(전문가) 유연근로제 확산	4.0
시간제 근무 활성화	(일반)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명)	171.0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일반)	1)111.8 2) 8.0
	1)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인원(명)	
	2)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인원(명)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일반) 스마트워크 및 대체인력뱅크 설치 개수(개소)	100.0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일반) 1)스마트워크 이용자 만족도(점)	1)102.9
	2)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2)165.7
육아연계형 스마트 워크 센터 모델개발	(일반)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제시(건)	100.0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일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컨설팅 기업 수(개소)	234.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일반)	1)116.3 2) 50.0 3)109.5 4)128.6
	1)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수(개소)	
	2)직장어린이집 용지지원 사업장 수(개소)	
	3)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장 수(개소)	
	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사업장 수(개소)	
	(핵심)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60.5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및 운영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	(전문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42.3
	(일반)	1)100.0 2)100.0
	1)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회)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 마련 지원	2)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회)	1)200.0 2)141.7
	1)가족친화 포럼 활동 횟수(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2)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횟수(회)	340.0
	(일반) 인센티브 추가 제공 건수(건)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일반) 가족친화 인증 신청기업 수(개소)	149.5
	(핵심)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148.0
	(국민인식) 직장 문화의 가족친화적 변화	16.9(미혼) 22.5(기혼)
	(전문가)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12.0
	(일반)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시간)	98.7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국민인식)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6.0(기혼)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국제비교) 연간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음	111.1
	(일반) 가족사랑의 날 시행률(%)	

주: 1) 근로시간단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하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등 제도개선 세부사항 등에 이견이 있어 법 개정이 지연됨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정부 자체의 일반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 및 핵심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을 통해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에서 목표치의 90%에 미치지 못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한 과제로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등임
-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에 있어서는 농어촌 자녀 양육 가정의 대부분이 농번기에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양육수당 받는 시스템 선호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추진 실적이 낮게 나타남
 - 맞춤형 방과후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사업비의 감소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인한 교과관련 프로그램의 감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교실이나 교사 확충이 필요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으로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대학 수) 75.0%),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에 있어서 90% 이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과제는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교육이수 인원 79.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 87.1%)임
 - 해당 과제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 대상자인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이수 인원 및 출산비용 지원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임
- 핵심성과지표로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는 81.1% 목표치에 도달하였고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은 85.8% 목표치에 도달하여 비교적 낮게 평가됨
 - 이를 위해 2015년에는 시간연장 보육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증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시간연장형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보고됨
 - 중장기적으로는 휴일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 단가의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 한편, 추진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으로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등임

- 이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수가 부족하여 의료진에 대한 처우, 시설 유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민의 긍정적 평가(매우 변화함+변화 있는 편)는 많은 영역에서 30% 이하로 낮게 나타남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에 있어서 최근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미혼자 대상 국민의 평가는 6.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이 확대됨 13.7%(미혼자), 신혼부부 주택 마련 쉬워짐 9.1%, 결혼생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9.8%(미혼자), 8.3%(기혼자), 임신·출산 비용 부담 줄어듦 8.4%(기혼자),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줄어듦 22.6%(기혼자),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부담 줄어듦 12.3%(기혼자),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16.0%(기혼자),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이용이 수월해짐 19.1%(기혼), 필요시 일시적으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쉬워짐 18.5%(기혼),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가 많아짐 18.4%(기혼자) 등임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정책의 평가가 낮은 이유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고소득 맞벌이부부에게는 제한적이며, 결혼비용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지원 규모는 크지 않아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보육교육비 지원의 확대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31.0%으로 비교적 낮은 이유는 보육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out-of-pocket cost)으로서 특별활동비 등의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실제 국제비교 평가 결과, 2011년 현재 한국의 GDP대비 0~5세 아동의 보육·교육비에 대한 총 공적지출은 0.8%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과 합계출산율이 유사한 스페인과 비교 시 다소 높은 수준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0~2세 지출 비율이 공적 지출이 3~5세에 대한 공적지출과 비교했을 때 7배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에 대한 시설보육이 과잉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한편, 남성이 가사·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62.5%(미혼자), 50.0%(기혼자)로 나타나 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출생아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13.37명('13년)으로 독

- 일, 이탈리아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수준에 가까우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유사한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가진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임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비록 국가별 제공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종류, 대상 연령, 기준 연도가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나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6~11세 방과후 돌봄의 경우, 한국 8.9%('11~'12), 일본 11.5%('11), 스웨덴 40.0%('11, 9~11세), 덴마크 54.4%('09, 9~11세)
 - 전문가들의 정책 성과에 관한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 역시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에 대해 50% 이상 높게 평가된 정책은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65.4%),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52.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79.1%)로 나타난 반면, 다른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50% 이하로 낮게 나타남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2.0%,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14.3%,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31.6%,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23.0%,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43.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48.0%,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47.8% 등
 - 국민 및 전문가 평가가 부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결혼, 임신·출산, 육아에 이르는 보다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결혼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작은 결혼식 문화조성이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바람직한 결혼식에 대한 공익 캠페인 추진
 - 신혼 부부 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
 - 난임 부부 지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서적 지원(상담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체계 필요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는 산모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갈등완화를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

〈표 6-4〉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평가 종합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국민인식)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좋아짐	6.9(미혼)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일반)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100.0
	(핵심)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01.7
	(국민인식) 1)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1)13.7(미혼)
	2)신혼부부 주택마련 쉬워짐	2) 4.6(기혼)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전문가)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2.0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행복주택 공급)	(일반) 신혼부부 우선입주 시행	100.0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일반) 행복주택 공급률(%)	101.0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 순위 부여	(일반) 1)시설사업 기본 계획 및 고시(대학수)	1)100.0
	2)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대학수)	2) 75.0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일반) 기혼자 가구 장학금 우대 제도개선 시행사업(건)	100.0
	(일반) 1)결혼준비교실 이용자 수(명)	1)103.4
	2)남성대상교실 이용자 수(명)	2)103.2
	(핵심)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99.0
	(국민인식)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결혼생활, 결혼준비교육/정보 잘 얻을 수 있게 됨	1)38.9(미혼)/44.7(기혼)
	2)결혼 비용 부담 감소	2) 9.8(미혼)/8.3(기혼)
	(전문가)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14.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일반) 1)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명)	1)117.3
	2)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수(개소)	2)100.0
	(국민인식)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높아짐	62.5(미혼)/50.0(기혼)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국민인식) 임신·출산 비용부담 줄어듦	8.4(기혼)
	(전문가)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65.4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일반) 분만 산부인과 누적설치 개소 수(개소)	110.0
	(핵심)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개소)	76.7
단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전문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31.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일반) 계획 대비 실제 설치 병상수 비율(%)	100.0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일반)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건)	110.1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새아기장려금) 도입	(국민인식)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줄어듦	22.6(기혼)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일반) 영유아 완전 접종률(%)	101.9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일반) 개정안 마련	100.0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일반) 지원 아동 수(%) ¹⁾	0.0
영유아 건강관리	(일반) 1)교육이수 인원(명)	1)79.7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2)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	2)87.1
	(일반)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 건수	114.4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일반) 신청성 대사이상(PKU)환아 장애 예방률	100.1
	(일반) 1)해당년도 수혜받은 모든 대상자 수	1)93.5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2)사업참여자 만족도 점수(점)	2)98.8
	(일반)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07.9
	(핵심)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93.8
	(국민인식)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부담 줄어듦	12.3(기혼)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전문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2.0
	(일반)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113.2
	(핵심) 보육·교육비 지원율(%)	102.6
	(국민인식)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 줄어듦	31.0(기혼)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전문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79.1
양육수당 지원 확대	(일반) 3~5세 누리과정 연수 교사 수(명)	107.6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일반) 만 3~5세아 취원율(%)	101.5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일반)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100.0
	(일반) 국내입양비율(%)	105.4
	(일반) 제도 개선 사업 개수(개)	100.0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일반)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업무매뉴얼 개정	100.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일반)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 여부(회)	100.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 수(개소)	100.0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일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30.0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일반) 평가인증율(%)	105.6
	(핵심)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100.1
	(국민인식)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16.0(기혼)
	(전문가)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28.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일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명)	111.4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일반) 보수교육 이수 인원(명)	161.9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일반) 사립유치원 평가 실시율(%)	57.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일반) 시간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수(개소)	99.1
	(핵심)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85.8
	(국민인식)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이 수월해짐	19.1(기혼)
	(전문가)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43.4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일반)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	100.1
실수요 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	(일반)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적용	100.0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일반)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개소 수	194.0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일반) 1)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개소)	1)110.5
	2)이용자수 확대 (명)	2)127.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일반) 1)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건)	1)181.2
	2)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점)	2)100.1
	(핵심)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132.0
	(국민인식) 일시적으로 자녀를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 쉬워짐	18.5(기혼)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문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48.0
	(일반)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 수(명)	119.7
	(국민인식) 방과후 돌봄 기관 및 서비스가 많아짐	18.4(기혼)
	(전문가)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47.8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일반)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인원(명)	120.7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일반) 방과후 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10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일반) 1)청소년 만족도(점)	1)100.0
	2)학부모 만족도(점)	2)100.0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일반)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실)	99.7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일반)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만개)	89.7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핵심)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111.0
	(일반)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108.2

주: 1) 예비타당성 결과가 '14.11월에 통보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협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5.10.30일부터 사업 시행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정부 자체의 일반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 및 핵심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을 통해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90% 이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정부 자체의 일반 과제 사업별 추진 실적은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의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79.2%로 나타남

－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 개선방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전수조사를 통해 미비현황에 대한 시설 확충하고, 교직원 및 관련단체 등을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스쿨존 내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함
-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의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과제의 경우는 미달성되었는데 관련하여 최종 정책과제 확정을 위한 부처 간의 조율 등 전체 진행이 다소 지연이 되어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정책의 효과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매우+대체로)는 7.5%만이 응답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 증대됨 22.2%, 아동·청소년 스포츠, 문화 활동 여건 등이 개선 26.0%,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음 26.5%, 아동·청소년의 학대 보호 서비스 및 환경 개선 27.1%, 아동·청소년이 학습스트레스를 덜 받음 4.8% 등임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비교 국가들 중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아동 십만 명당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한국 2.9명('14), 독일 1.8명('12), 일본 2.2명('11), 덴마크 1.3명('11) 등임)
- 전문가들의 정책성과에 관한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 역시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비교적 성과가 높게 평가된 정책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47.1%뿐이며,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21.1%,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7.3%, 아동 학대 예방·보호 강화 23.8%로 낮게 평가됨
- 국민 및 전문가 평가가 부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체계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응급처리 방법 등의 교육과 홍보
 -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및 보행안전지도 확대, 안전지킴이 기능 및 위상 강화
 - 아동 학대 예방·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활동이 필요
 -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전략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6-5〉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국민인식)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	7.5(기혼)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국민인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 증대됨	22.2(기혼)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일반)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110.9
	(핵심) 드림스타트 수혜아동 수	108.2
	(전문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47.1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일반)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위기수준변화정도(p)	100.4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일반) 퇴소아동 자립율(%)	10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일반)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115.0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92.8
	(전문가)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21.1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일반) 취약계층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아동 수(명)	100.0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일반) 취학전 아동 도서바우처 이용자 수(명)	97.5
휴먼 네트워크 확대	(일반)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협력기관 수(개소)	126.0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일반)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명, 연인원)	107.3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일반) 동아리 지원사업 수혜 청소년 수(명, 연인원)	147.8
	(일반)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인원(명, 연인원)	112.1
	(국민인식) 아동·청소년 스포츠, 문화활동 여건 등이 개선	26.0(기혼)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만족도(점)	98.6
문화 바우처 지원	(일반) 문화 바우처 이용자 수(명)	106.0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일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4.6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 아동안전사고 사망률(명, 10만 명 당)	117.1
	(국민인식)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음	26.5(기혼)
	(전문가)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7.3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일반) 1)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1)164.2
	2)예방사업 전후 인식도 점수(점)	2)122.1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일반) 1)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국비 집행률(%)	1)99.0
	2)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건)	2)79.2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일반) 1)14년도 CCTV 설치율(%)	1)119.1
	2)통합관제센터 구축률(%)	2)105.0
성범죄자 제범방지 조치 강화	(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자 수(명)	170.0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 확충	(일반) 1)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수(명)	1)116.3
	2)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2)107.6
	(일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률(%)	183.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핵심)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141.0
	(국민인식) 아동·청소년 대상 학대 보호 서비스 및 환경 개선	27.1(기혼)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23.8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일반) 학교폭력예방교육 만족도(%)	111.2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일반) 아동안전지킴이 확대배치(명)	100.0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지원강화	(일반)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	100.3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일반) 1)흡연·음주 청소년 교육 및 치료 지원 건수(명)	1)198.6
	2)청소년 흡연율(%)	2)117.1
	3)청소년 현재 음주율(%)	3) 98.0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일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	103.0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일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	221.0
	(국민인식) 아동·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점차 감소	4.8(기혼)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일반)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¹⁾	0.0

주: 1) 최종 정책과제 설정을 위한 부처 간 조율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며, '15.5.12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함

- 저출산 분야의 정책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국민 인식 조사, 전문가 조사, 국제비교 등을 통한 평가 결과 간에 격차가 큼을 알 수 있음
- 대체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정책의 효과로 국민의 체감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매우+대체로)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문가의 인식에도 유사하게 투영되어 나타남
- 또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부 지표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분야 대책의 성과가 낮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정부가 수립한 정책 목표를 90%이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결혼,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못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문가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는 과제와 지표가 상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성과지표 상으로는 달성률이 100%를 상향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평가의 한계가 있다는 점임
 - 그러므로 저출산 분야의 세부 정책들이 국민의 욕구를 토대로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상관성이 있는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재검토하여 목표 설정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후에 각 세부 정책들의 목표가 달성되어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와 연동될 수 있도록 정책별로 종합 점검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음

제3절 고령사회 분야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과제의 추진실적 및 핵심과제의 목표 달성률을 종합한 결과, 대체로 계획한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일부 몇 개의 과제에서는 평가결과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도 과제추진정도가 미흡한 과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중·고령자 유아 교육 인력풀 구축,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U-health 서비스 확충 등임

○ 일부 과제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2014년도 사업 추진과정 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장애 요인으로 인한 지연되는 경우임.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거나 조문수정 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U-health 서비스 확충 과제의 경우, 진료정보 교류 관련 KS 표준 확정을 위한 신청하였으나,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계획했던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작업이 필요해져 사업추진이 지연된 과제도 발견됨. 예를 들면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의 경우, 취급 대상 상품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 마련이 연기되고 있음
- 그 밖에는 해당 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홍보부족 등이 부진이유로 제기됨

□ 핵심과제에서는 거의 모든 정책과제에서 100% 달성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정부정책의 목표달성도와 국민들의 정책평가와 전문가 평가와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용과 노후소득에 관한 국민 및 전문가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고령자 고용연장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은퇴후 고용기회 증가에 대한 긍정평가는 23.6%이며, 전문가의 정책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가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에 대한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23.3%으로 제도적 확충과 이에 따른 정책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체감도나 전문가의 평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함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 고령자 고용률은 65.6%로 OECD 평균 57.3%보다 약 8%p 높음. 이는 독일(65.6%)과 덴마크(63.2%)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스웨덴(74.2%)과 일본(68.7%)보다는 낮음
- 우리나라 중·고령자 고용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외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은 열악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중·고령자가 고용상의 불만족 사항으로는 낮은 임금,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등으로 나타났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2), 2011년 기준 55~64세 임시직 비중은 39.4%로 OECD 평균 9.1%보다 매우 높음(OECD, 2013b)

-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과제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경우, 전문가의 약 82.2%가 잘되고 있다(매우 잘됨+대체로 잘됨)고 평가하였으며, 건강검진 기회확대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체계에 대한 국민의 정책평가도 각각 78.0%와 62.7%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50.7%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반면, 전문가는 10.0%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정부정책의 목표달성률-국민인식-전문가 평가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평가에서는 노후설계지원법이 제2차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에 제정되고, 노후설계지원과 관련한 전달체계구축이나 세부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정책 차원의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대가 미흡하다고 평가됨
- 국민 및 전문가 평가가 부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시범사업 및 모델 확산(시간선택제 일자리,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등)
 -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 전담부서 및 기관 확충
 -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고령자를 실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수요를 토대로 직업훈련 계획 수립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및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일용직, 시간제,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확대 방안 마련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민간 기업들의 연금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확충 필요
 - 퇴직금보다 퇴직연금 형태의 급여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법을 확대 적용하여 안전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하며, DB(확정급여형)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필요
 - 퇴직·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세제혜택(세액공제)에 대한 인식부족, 낮은 수익성(사업자의 관리비용 과다 및 운용의 비효율성) 등의 개선 필요

- 퇴직 및 개인연금은 주로 정규직 및 중·고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제고 방안마련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 노후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홍보 필요
- 노후설계전담센터 운영확대,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표 6-6>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종합평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 고령자(55~64세) 고용률	102.5
	(국민인식) 은퇴후 고용기회 증가(매우+대체로 잘됨)	23.6
	(전문가) 고령자 고용연장(매우+대체로 잘됨)	19.3
	(국제비교) 한국 고령자 고용률 65.6%, OECD 평균 57.3%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후 고용보험가입률	99.8
	(전문가)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6.7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일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근로자수 증가율(%)	73.0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일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87.7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일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제작 여부	100.0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일반) 개정안 시행령 마련 ¹⁾	0.0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	(일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자 수(명)	180.8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일반) 고령자특화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128.0
중고령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반) 사업완료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일반) 4개 돌봄분야 일자리 합계	108.4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일반) 1)지원예산, 2)전문인력확보	1)31.8 2)95.0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지원	(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중 고령자 채용률(%)	98.8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	(일반) 지속가능일자리 수 창출률(%)	128.0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일반) 귀농·귀촌가구증가율	67.7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반) 시니어창업 활성화	135.5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일반)	
	1)분석물다운로드 수	1)109.5
	2)과학관전시주제심층해설이용자 수	2) 81.3
	3)산/학/연교류횟수	3)100.7
	4)참여자/이용자만족도	4)111.8
	5)좋은일자리창출비율	5)117.9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서비스 제공	6)중소기업기술개발역량확충실적	6)159.3
	(일반) 명예상담원 채용인원(명)	105.0
	(일반) 커리어 코치 선발	429.9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일반) 상인조직 역량강화	119.0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일반) 전문인력 채용지원자 수	131.1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일반) 50대 이상 여성멘토(명)	106.7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일반) 사회참여 실습 연계율	110.3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일반)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명)	96.5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일반) 1) 일자리수집확대율	1) 100
	2)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명)	2)177.1
정년(고령자) 고용 캠페인	(일반)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운영	100.0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일반) 모니터링 실시	85.9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국민인식) 경제적 노후준비 기회 확대(매우+대체로 잘됨)	48.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 국민연금가입률	100.2
	(전문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매우+대체로 잘됨)	23.3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 퇴직연금 가입률	110.6
	(전문가)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매우+대체로 잘됨)	23.3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일반)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 및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제도평가 연구용역 실시	0.0
	(국제비교) 한국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은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미국, 영국, 일본보다는 높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일반) 홍보효과도 조사	100.0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추진	100.6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일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102.5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반)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128.6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일반) 1)퇴직연금가입률, 2)교육실시횟수	1)105.8 2)235.3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일반) 제도개선추진 ²⁾	0.0
개인연금 활성화	(일반) 개인연금가입률·유지율제고방안마련	100.0
공·사연금 연계 종합포털 구축	(일반) 노후준비 인식도	105.7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일반)	
	1)금융상품개방형판매채널구축	1)100.0
	2)금융상품자문업도입	2), 3) 0.0
	3)독립투자자문등록요건단위신설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일반) 1)위험률할증관련제도개선, 2)노후실손의료보험출시	1)100.0 2)100.0
	(일반) 1)연금의료비저축도입, 2)고령층보험금청구지원	1)100.0 2)100.0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소영역)		
	(핵심)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100.7
	(전문가)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매우+대체로 잘됨)	82.2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일반)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만족도(점)	101.1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일반) 해당사항 없음(사업종류)	-
	(국민인식) 건강검진 기회 확대(매우+대체로 잘됨)	78.0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일반)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체감도(%)	100.6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일반) 건강관리서비스 만족도	108.9
	(일반)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율(%), 실시지역)	95.6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국민인식)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여건 개선	62.7
	(일반) 1)취약지역 원격의료 이용자 만족도 조사	1)102.2
U-health 서비스 확충	2)진료정보 교류 관련 KS 표준 확정	2) 0
	(일반) 지원금액 10억원 당 특허건수(건)	100.0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일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100.0
	(일반)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17.1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핵심)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³⁾	-
	(국민인식)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교육프로그램 증가	50.7
	(전문가) 노후설계 기반 조성(매우+대체로 잘됨)	10.0

주: 1) '13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정년연장 관련 사항만 통과되고, 본 과제 관련 내용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령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2) 법제처 심사과정 중 조문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조율 등에 상당기간 소요

3) 해당 지표 산출을 위한 데이터가 격년으로 생산되어(통계청 사회조사) '14년도 실적 파악 불가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과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90% 이상 목표 달성)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과 핵심과제에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의 목표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수는 계획 대비 100% 이상 달성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이 평가한 중·고령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긍정평가 22.6%)
 -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으로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등이 제시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는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와 전문가의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공적 노후소득지원의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문가 역시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양호한 수준임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기회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60.9%), 전문가는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에 대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전문가의 낮은 평가 원인으로는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부족, 영세 및 영리사업자의 과다공급, 요양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문제, 서비스 질적 수준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는 국민의 정책체감도는 70.1%로 가장 높지만, 정책의 목표달성률과 전문가의 긍정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고령자 자원봉사와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정책평가는 타 과제에 비해 긍정적인 수준이나 전문가의 평가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남(고령자 자원봉사 긍정평가 27.6%, 고령자 여가문화 향유기반 긍정평가 17.9%)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중영역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정책추진 실적과 국민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 전문가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음
- 국민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기회 증가(60.9%), 운동가능한 시설이나 서비스 확대(70.1%), 중·고령자의 여가나 문화생활 참여기회 증대(62.1%) 등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중·고령자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22.6%), 공적 노후소득지원 비중 증가(49.4%)에 대한 평가는 저조함
 - 전문가 평가는 고령자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17.9%), 고령자 자원봉사활성화(27.6%),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28.0%)에서 낮은 평가를 이에 반해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의 내실화(46.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41.3%)는 타 과제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 및 전문가 평가가 부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양적확충 및 질적 고도화

- 참여자의 인센티브 강화 및 평가체계 개편
- 수행기관 및 직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서비스 질 제고모델 개발 필요
- ‘Person-centered care model’의 적용으로 노인 중심의 집 같은 편안한 환경, 자기주도적 생활관리, 통합적 서비스제공 등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재가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의료서비스-복지 통합서비스의 시범적 도입 필요
(사례) 미국 PACE 모델: 요양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PACE 기관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의료, 영양, 작업 및 작업치료, 영양상담, 약처방 프로그램, 식사배달, 의사 상담전화, 주거환경개선, 교통서비스, 돌봄제공자 지원 등)
- 재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이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강화 필요

○ 고령자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고령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유급의 사회참여와 무급의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정립 및 차별적인 정책설계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대하고, 경로당의 경우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능강화 및 평가관리방안 마련 필요
- 노인여가, 문화바우처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며, 농촌지역은 문화바우처 외에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과 같은 대안적인 서비스 개발 필요

<표 6-7>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종합평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 노인일자리 창출 수	122.2
	(국민인식) 중·고령자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	22.6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일반) 1)노인일자리창출 수,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1)108.4 2)100.5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 공적소득보장률	101.2
	(국민인식) 공적 노후소득지원 비중의 증가	49.4
	(전문가)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46.7
	(국제비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유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일반) 기초노령연금지급	97.3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일반) 1)일시적 2주택자 가입 허용, 2)복합용도 주택보유자 가입허용 3)초기보증료 인하	1)100.0 2)100.0 3)100.0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일반) 국민연금법 개정	100.0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일반) 국민연금법 개정(부분연기연금 제도화)	100.0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일반)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	207.3
농지연금 활성화	(일반) 농지연금 가입률(%)	115.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국민인식) 중·고령자 건강증진	69.5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일반)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전문가)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100.0 65.5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일반)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	100.0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일반)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39.5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일반) 보건소 의치사업 수혜인원	100.3
치매관리체계 구축	(핵심)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전문가)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103.2 41.3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일반) 치매조기검진사업	159.4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	(일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적	130.6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국민인식) 장기요양서비스 기회 증가 (전문가)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100.0 60.9 36.7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일반) 장기요양 질 평가 체계 마련	100.0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00.0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일반) 치매등급 도입 (국제비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편임	100.0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국민인식) 운동가능한 시설이나 서비스 확대 (전문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91.8 70.1 28.0
노인 운동 활성화	(일반) 노인건강운동교실	101.8
농촌생활 활력 추진	(일반)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	108.5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일반) 1)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지도자 배치 2)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	1)100.0 2)100.0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일반)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132.7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일반)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	105.6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일반) 1)베이비부머봉사단참가자 수 2)자원봉사참여인원 (핵심)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국민인식) 중·고령자의 봉사활동 참여도 혹은 기회 증대 (전문가)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1)400.0 2)132.1 76.7 50.0 27.6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마련	(일반) 1)대한노인회 자원봉사활동화 지원 2)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	1)100.1 2)100.0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일반) 1)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횟수 2)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참가자수 (핵심)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112.2 2)158.1 47.4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국민인식) 중·고령자의 여가나 문화생활 참여기회 증대 (전문가) 고령자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62.1 17.9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일반)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108.2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일반) 노인복지관 신축	100.0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일반) 1)프로그램 수(개) 2)수혜자 수(명)	1)113.1 2)110.5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목표달성률)는 대부분 목표 대비 90% 이상을 달성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일반 과제에서는 농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의 목표달성률은 97.5%로 100%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으며,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마련(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수) 9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한 4개의 핵심과제 중에서 학대노인 보호강화(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96.4%)를 제외하고 모두 100% 이상을 달성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의 주관적인 평가나 전문가의 정책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에서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는 33.8%만 긍정적이었으며, 전문가는 4.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 －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이 아직까지는 주택공급에 치중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적 관점에서 주거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도 노인교통사고 사망률의 정부 목표는 달성함.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운전 안전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40.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 역시 7.7%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함
 - － 여전히 높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2012년 기준, 한국 34.5%, 미국 16.7%, 영국 23.4%, 호주 18.8% 등), 실버존 지정 및 관리운영의 한계, 인구고령화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가구에 대한 보호강화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독거노인이 살기편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32.0%, 전문가는 27.5%임
 - 국민의 주관적 인식평가에서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비중은 33.6%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의 긍정적인 평가는 16.0%로 낮은 수준임
 - － 노인학대 건수는 '09년 2,674건에서 '14년 3,532건으로 약 32% 증가하였으며(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 특히 시설학대와 노-노 학대 등이 새로운 노인인권의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국민 및 전문가 평가가 부진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조성

- 고령자 전용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고령자(특히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본의 실버하우징과 같은 다양한 고령자 임대주택개발 및 보급
-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주택 내 추가적인 생활지원서비스 도입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관련 정책의 사회적 인식 제고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고령운전자(개인/영업) 안전 교육 의무화 및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스템 개선
- 보행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재검토 및 운전면허 반납 권고 방안 검토
- 도시계획 및 교통인프라 확충사업단계에서 국가의 예산집행시 고령친화계획의 반영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추진 필요

<표 6-8>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종합평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수도권 129.2 지방 147.5
	(국민인식) 낙상이나 넘어짐 등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으로의 개선	33.8
	(전문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4.0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일반)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비용 지원	111.1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일반)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100.0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일반) 사업추진실적(개소)	108.7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일반) 참여자 생활만족도	105.7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핵심) 노인교통사망률	100.4
	(국민인식)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 환경으로의 개선	40.3
	(전문가)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7.7
	(국제비교)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는 OECD 평균보다 높고, 10만 명 당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역시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일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00.0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일반) 교통약자보행환경 여건 개선	133.3
	(일반)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¹⁾	-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일반) 고령자 교육인원	100.5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핵심)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103.7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 강화	(국민인식) 독거노인 또는 중고령자 부부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32.0
	(전문가)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가구 보호 강화	27.5
독거노인 보호 강화	(일반) 수혜노인 수	101.7
	(일반) 조손가족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104.1
농어촌 가사도우미	(일반) 만족도	97.5
	(핵심)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96.4
학대노인 보호강화	(국민인식)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으로 개선	33.6
	(전문가) 학대노인 보호 강화	16.0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일반) 1)노인학대사례 종결률(%)	1)109.9
	2)학대피해노인 정서적 안정 비율(%)	2)104.0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일반)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명)	94.2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일반) 우수 프로그램 포상 수(개)	111.8

주: 1) 해당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달성도 산출 어려움

□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평가의 목표달성률과 국민 및 전문가, 국제비교 평가 결과와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과제 및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로 평가한 정부의 결과는 매우 양호한 반면, 국민의 체감도 평가와 전문가 정책평가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용과 일자리,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낮은 반면, 건강보장과 관련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2013년도 평가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라 할 수 있음

－ 국민의 주관적 평가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운동관련 프로그램, 인프라 강화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 정책, 그리고 고령자 문화여가 기회 증진에 대해 높게 평가함

－ 전문가의 경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며(긍정적 평가 10% 미만), 그 외 노후설계 기반마련, 학대노인 보호 강화, 고령자 여가 문화 향유기반 확대에 대한 긍정평가도 20% 미만으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목표달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 균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중·고령자의 고용과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 고령사회 전문가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노인보호, 그리고 고령자 여가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정책 추진정도와 국민의 변화체감도와와의 관련성이 낮은 정책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기에 충분한지를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성장동력 분야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성장동력 분야 중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일반과제의 추진 실적을 보면, 모든 과제에서 목표의 90%를 상회하고 있어 매우 양호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핵심과제 6개 중 5개 과제가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1개 과제(적극적 여성 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 사업장 여성 고용률)도 목표달성률이 96.7%에 이르고 있어 핵심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정책추진 실적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여성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평가는 약 40%가 긍정적이었으며,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전문가 평가에서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와 관련된 지표에서 약 50% 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과제에서는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 과제 목표달성률과 전문가 평가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낮게 나타남, 그 이유로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개념이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주여건도 개선되지 못한 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도 16.7%만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고용정책이 일자리창출이나 취업률 제고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함
 - 국제 비교에서는 평생교육 참여율을 25~64세 형식 및 비형식 교육참여율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업무상 사고 사망률에서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평가가 부진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여성고용정책
 - 정책 내용이 이미 여성 진출이 활발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직, 현장직 등 여성 진출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제기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 상담, 직업 교육훈련 제공에 앞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무유연화(시간제 근무) 확대

○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을 위한 상담기능의 공신력 강화
- 법적 제도는 많이 개선되어 제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에 대한 지원 필요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지원주체 및 지원영역의 명확화 및 홍보 강화

<표 6-9>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종합평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96.7
	(전문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매우+대체로 잘됨)	40.0
	(국제비교)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14년 54.9%로 OECD 평균(58.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핵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 수(%)	102.9
	(전문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매우+대체로 잘됨)	45.0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일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률(%)	96.9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일반)	
	1)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관리자비율 2)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1) 100.9 2) 92.1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	(일반)	
	1)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비율 2) 여성교장/교감임용비율	1) 102.8 2) 103.5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일반)	
	1) 여학생 이공계 인식 개선도(점) 2) 정부지원금 1억원 당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수(건)	1) 253.8 2) 110.7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일반)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110.8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일반) 참여자 만족도(점)	99.6
	(일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제고	94.6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일반)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강화	102.9
아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일반) 결혼이민여성 인턴연계실적	110.5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일반) 중국, CIS지역 재외동포 자격 체류자 수	131.8
	(핵심)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인력 유치	119.8
	(전문가)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매우+대체로 잘됨)	0.0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	(일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을 통한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건수	102.1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일반)	
	1)외국인력도입 계획수립	1)100.0
	2)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실적제고(건)	2)127.8
	3)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개소)	3)101.7
	(전문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매우+대체로 잘됨)	22.3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일반) 1)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명)	1)139.5
	2)특별한국어 시험 실시 국가 확대(국가수)	2)100.0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반) 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천명)	1) - ¹⁾
	2)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천명)	2)150.0
	(일반) 1)다문화예비학교(개교)	1)100.0
	2)교원연수참여인원(명)	2)717.2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일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응답 건수	106.3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일반) 1)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학교 수	1) 93.0
	2)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사업 참여학교 수	2)135.7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강화	(핵심)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105.2
	(전문가)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강화(매우+대체로 잘됨)	47.6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일반) 1)미래의 직업 세계 책자 개발	1)100.0
	2)진로적성검사이용실적	2) 91.2
	(일반) 직업심리검사 개발 검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건수	112.5
학교 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일반)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수혜비율	114.7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	(일반) 취업지원관 채용 규모	158.7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 관행 확산	(일반)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	120.0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일반) 1)산학협력 중점교수 수	1)100.0
	2)산업체우수강사채용규모	2)334.4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일반) 계좌발급 대비 참여율(%)	102.3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일반)	
	1)재직자직업훈련참여율	1) 91.5
	2)사업주훈련참여자만족도	2)101.1
	3)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참여 근로자 만족도	3)102.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	(일반)	
	1)핵심 직무능력 향상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1) 97.3
	2)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2)106.7
	3)학습조직화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3)106.0
	4)중견중소기업 현장 훈련지원 사업 참여 소기업만족도(점)	4) 95.4
	5)핵심직무능력향상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자 수료율(%)	5)103.8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일반)	
	1)체계적 현장훈련 지원(모듈개발건수)	1)160.0
	2)산업현장 교수지원(지원기업수)	2) 74.2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일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인력(명)	104.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일반) WFK 봉사단 파견인원	105.7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 평생학습참여율(%)	114.2
	(전문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매우+대체로 잘됨)	52.4
	(국제비교)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참여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일반) 전문/희소계열 분야 지원 수	25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일반) 지원대학의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개)	164.0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일반)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114.2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일반) 전문/희소계열 분야 지원 수 (3-27과제와 내용 중복)	- ²⁾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	(일반) 1)학습계좌개설인원 수(명) 2)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평균 접속 수(건)	1)105.2 2) 78.0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일반) 1)NCS개발개수 2)활용패키지개발개수 3)국가기술자격출제기준 정비종목수	1)120.0 2)120.0 3) 99.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핵심) 산업재해율(%)	107.0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전문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매우+대체로 잘됨)	16.7
	(국제비교) 업무상 사고사망률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일반)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	109.0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일반) 취약계층 근로자지원(명)	174.8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일반) 1)작업환경 측정비용지원 2)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3)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1)124.6 2)100.5 3) 99.6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일반) 사회심리재활만족도(%)	102.9
	(전문가)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매우+대체로 잘됨)	37.5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일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102.7

주: 1) '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추진 중이므로 이용자 산출이 어려움

2)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통합되어 실적 산출 어려움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경제 제도 개선의 성과에 대한 정부부처의 자체 및 핵심성과 결과는 계획 대비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핵심과제에서는 미래재정위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는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제비교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개선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11.8%와 금융분야 제도 개선 12.6%에서 낮게 평가함. 이들 과제는 작년에도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2014년에는 더 낮은 수준으로 향후 인구 고령화로 야기되는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장기 금융시장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 등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국민연금자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고, 이후 효율성에 대한 노력 필요
 - 국민연금 자산운용관련 전문가 영입과 독립기능 강화
 - 장기금융시장 상품의 다양화(다양한 상품 개발과 보급)

<표 6-10>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경제제도 개선(중영역) 종합평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일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만족도(점)	108.6
	(전문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분야 제도 개선(매우+대체로 잘됨)	38.1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개선	(일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90.3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일반) 학교시설 적정규모	1) 98.0 2) 156.3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	(일반)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100.0
	(전문가) 주택분야 제도 개선(매우+대체로 잘됨)	15.8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일반)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	100.0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일반) (해외, 대체투자액/금융부문 기금투자액)*100	110.0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일반) 장기재정전망	100.0
금융분야 제도개선	(핵심)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109.4
	(전문가) 금융분야 제도개선(매우+대체로 잘됨)	12.6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80.3
	(전문가)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매우+대체로 잘됨)	11.8
	(국제비교)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정부부처의 목표달성정도는 2개 과제를 제외하고(고령친화용 식품 제도화 마련,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100% 이상 달성하여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집계됨.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평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낮았으며,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13.3%만이 긍정으로 평가함
- 고령친화제품 육성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낮은 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기반이 미흡하고 고령친화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등이 제시됨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는 국제적인(ISO) 기준이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KS 기준도 거의 없으며 단체표준으로 일부 개발되어 있는 실정임
- 아직까지 소비 니즈가 뚜렷하게 없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KS나 단체표준 등은 임의인증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도 영세산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어 확대에 애로가 있음
- 고령친화제품 육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제품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업의 참여 독려,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됨

<표 6-1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종합평가

과제명	평가유형	평가결과(%)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일반) 사용성평가 품목 수	100.0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	(일반) 1)고령친화제품실태조사, 2)고령친화제품개발연구	1)100.0 2)100.0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일반)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118.8
	(전문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매우+대체로 잘됨)	13.3
고령친화산업 국가간 표준화 협력강화	(일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112.7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일반) 우수제품 확대를 위한 기준 개발 품목 수	100.0
	(핵심)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96.2
	(전문가)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매우+대체로 잘됨)	0.0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및 항노화산업 육성	(일반) 1)피부특성은행구축 국가수 2)연간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건수	1)100.0 2)167.1
	(일반) 1)유공자(기업)발굴, 2)지역사회밀착형체험관 운영	1)109.1 2)160.0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일반) 체험관 참관객 수(명)	166.6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일반) 1)해외시장개척단 운영, 2)수출정보 DB구축건수	1)100.0 2)100.0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	(일반) 고령친화용식품 제도화 마련(건수) ¹⁾	0.0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개)	100.0
	(전문가) 국내 수요기반 확충(매우+대체로 잘됨)	23.1

주: 1) 고령친화용 식품의 시장성 부족, 고령식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다른 규제가 발생가능하다는 식품 관련 학계,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고령친화용식품 유형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제 7 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제1절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선방안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 발전방안 <

제1절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선방안

1. 일반과제 성과지표 진단과 개선사항

□ 과제명과 성과지표 간의 불일치

- 과제명에 내포되어 있는 과제목표나 내용과 성과지표간의 관련성이 낮은 과제가 상당수 발견됨
 - － 예를 들면, 과제명은 ‘특정 사업의 확대’이지만 성과지표는 ‘관련 종사자 교육’이며, ‘대책추진’과 관련한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는 ‘조사 실시 및 발표’로 측정함. 또한, 과제명은 ‘인프라 확대’ 또는 ‘지원 확대’이지만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로 제시하는 등 불일치가 발견됨
- 이러한 과제명과 성과지표간의 불일치로 인해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변경 필요

□ 목표치 설정의 보수성

- 저출산·고령사회 추진실적이 100%를 달성한 과제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과제 경우, 연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목표달성률이 300%, 400%를 초과하는 과제도 발견됨
 - － 성과지표를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한 경우에도 사업에 따라 목표가 70점대에서 80점대로 다양하며, 목표설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 이로 인해 100% 목표달성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통한 대상계층이나 일반국민들의 정책체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
- 목표 설정단계에서 목표달성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의 수요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급 중심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가 건수, 명수로 제시된 일부 과제의 경우, 전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일부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의 실적이 수만 건에서 수백만 건이 되지만, 이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지원건수나 명수 중심의 성과지표보다는 전체 수요 대비 이용률이나 수혜율, 전년 대비 증감률 등으로 변경하여 해당 과제의 규모나 포괄성, 변화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과제 안정화 및 성숙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 필요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년째 진행되어 오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안정화와 성숙이 이루어져 제2차 기본계획 초기에 설정한 성과지표나 목표치가 적절하지 않는 과제도 발견됨
 - －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를 ‘사업 확대’를 기준으로 선정함. 그러나 사업이 4년차를 거치면서 ‘사업확대’는 일정 부분 달성되었고, 앞으로 ‘내실화’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성과지표는 여전히 ‘사업확대’에 맞춰져 있음
- 기본계획 이행 후반기 사업의 경우, 달성이 완료되거나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의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함

□ 단순·편의적인 성과지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일반과제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나 목표치가 일회성 행사나 수행 여부로 평가되고 있음
 - －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활성화’의 성과지표가 ‘지도점검 실시 여부’로 되어 있거나, ‘사업추진’의 성과지표로 ‘매뉴얼 제작’ 등으로 명시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옴
- 여타 일반과제 성과지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 실적이나 수요 대비 공급, 전년도 대비 증감률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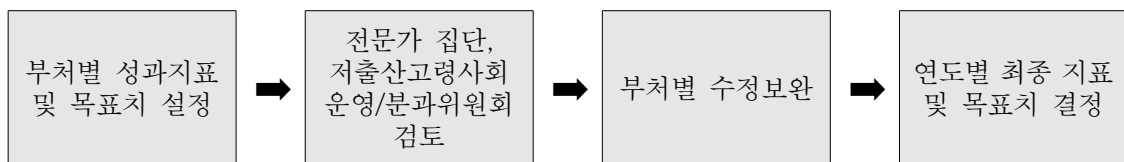
□ 목표치 설정과 성과지표 개선의 제한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240여개 일반과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과제의 성과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로 인해 각 부처가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지표를 결정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
- 이와 함께 대부분 과제의 목표설정이나 목표달성도는 예산확보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초기에 목표를 설정해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반면에 추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초과 확보되는 경우 추진실적은 증가하는 등의 유동적인 측면이 발생함

□ 연차별 과제명-과제내용-성과지표-목표치 간의 정합성 점검시스템 마련

- 위와 같이 각 부처별 일반과제의 성과지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과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준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즉, 목표 설정 단계에서 전문가집단,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목표설정의 적절성을 스크리닝하는 단계가 필요함
- 과제별 검토 작업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각 부처에 전달하여 과제별 수정·보완 작업을 걸쳐 최종확정
 - 매년 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점검과정 실시

[그림 7-1]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점검과정



2. 핵심과제 성과지표 개선사항

가. 저출산 분야

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핵심과제: 육아휴직제도 개선)

- 단순한 육아휴직 이용률보다 고용유지율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장 형태에 따라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어느 정도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고용이 안정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반면,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향의 지표설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핵심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성화를 평가하기에 비교적 적절한 지표로 평가됨

③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핵심과제: 유연근로제 확산)

- 유연근로제 확산을 위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일정 규모 이상)에서 활용하는 유연근무자 이용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민간 회사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국가 공식통계를 생산하여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현재 평가되는 유연근무제는 대부분 시간제 출퇴근제를 의미하는 것임
 - 시간적인 측면의 유연근무만을 포함하지 말고 공간의 유연성(예: 재택근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음

④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핵심과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설치 증가율 보다는 의무이행률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함
 - 설치 의무대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다소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설치대상 기업 중 설치 비율로 이해되는 의무이행률로 대체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⑤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핵심과제: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절대적인 기업 수보다는 전년대비 증가율이나 전체 기업 수 대비 가족친화인증 기업수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과제 취지에 맞을 수 있음
 - 즉, 전체 기업 수 대비를 감안했을 때 현재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수는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증가율이나 전체 기업 수 대비 인증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⑥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핵심과제: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대상을 결혼 기간에 대한 기준(예, 결혼 후 5년 이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 총 가구소득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정책대상 대비 주택지원 수혜자 비율은 대안적으로 검토 가능

⑦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핵심과제: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정책 대상자의 수요 규모가 반영 될 필요가 있음
- 전체 참여인원보다는 지역별 해당 인구수 대비 참여인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Ⅷ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핵심과제: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취약지역의 수라는 지표 자체는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라는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즉, 임신 분만 취약지역의 감소라는 것이 반드시 임신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지원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현재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이 되는 관내 분만율, 가임여성 인구비율, 그리고 60분 내 도달가능한 분만 산부인과의 유무에서 더 나아가 출산결과에 해당되는 모성사망, 저체중 출산, 조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곳을 분만취약지역으로 규정하여 관리(monitoring)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정책대상자의 욕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관점에서는 거주지에 분만인프라가 설치되는 것 자체보다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취약지역에 분만인프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해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계망의 구축 정도도 정책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음

Ⅸ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핵심과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음

Ⅹ 보육·교육비 지원율(핵심과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복지부의 보육비 지원아동과 복지부의 누리과정 지원 취원아 수(3~5세)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아동 기준은 각년도 12월인 반면, 교육부의 취원아 수는 각년도 4월임. 이로 인해 복지부 자료와 교육부 자료 산출시점의 차이가 발생하여 두 부처의 추진실적을 통합하여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게 됨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양육수당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서 자리잡은 상황에서 보육·교육비 지원율의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음

Ⅺ 보육시설 평가인증률(핵심과제: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률이 높기 때문에 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평가인증률보다는 평가인증 유지율이 평가인증 관리에 있어서 중요함

12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핵심과제: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보다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고려할 수 있음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수는 많으나 실제 운영률은 낮은 상태이므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정책대상자인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 있음

13 아이돌보미 연계건수(핵심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단순한 연계건수보다는 아이돌보미 신청자 대비 연계건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 연계한 ‘건수’보다는 연계된 ‘아동’이나 ‘가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14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핵심과제: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책대상자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실수요자 대비 서비스 수혜율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15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핵심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핵심과제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는 적절함. 그러나 해당 지표는 저출산과 상관없이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장시간 존재해 온 정책이므로 저출산대책의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로서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음

16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핵심과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 청소년 이용시설 이용 청소년 수는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성과와는 연관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청소년 여가문화 참여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바람직할 것임

1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핵심과제: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도 적절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지표로서 아동안전사고 사고율도 고려 가능함
 - 사망 이외의 사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모니터링하기에 적절하며, 예방적 측면에서 생활안전 실천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도 있음

18 학대피해아동 보호율(핵심과제: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 아동학대 예방 측면의 지표가 포함될 필요 있음
 - 아동학대 신고율,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 관련 교육 등의 지표 검토 필요

- 학대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학대신고 아동 수) 또는 (학대신고 아동 수÷아동 수) 등으로 산출식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나. 고령사회 분야

①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핵심과제: 고령자 고용연장)

- 고령자 고용연장의 하나의 지표로 보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있으나 중·고령자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한 근로활동을 유지·연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지표임
- 고령자 고용률은 외국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향후 고용률보다는 생애주된일 자리의 유지가능성이나 가교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 필요

②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핵심과제: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의 측면에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후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한 중·고령자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50세 이상자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세 이상 실업자 대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비중도 높지 않을 것임. 이로 인해 본 지표가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과지표와 산출식 간의 불일치: 성과지표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이지만, 산출식은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자/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자 수×100'임
 - (변경안1) 성과지표명을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로 수정
 - (변경안2) 산출식을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자/50세 이상 참여자×100'으로 변경

③ 국민연금 가입률(핵심과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절함
-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을 할 경우, 미납자 등을 포함하게 됨으로서 사각지대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연금 납부율도 대안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특수직역에 가입한 인구를 포함하여 공적연금 가입률 등도 고려 가능

④ 퇴직연금 가입률(핵심과제: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2010년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적인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져 과다 추정의 위험이 높음
 - 정확한 퇴직연금 가입률 산출을 위해서는 전 사업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자로 수정할 필요 있음

⑤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핵심과제: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⑥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핵심과제: 노후설계 기반 조성)

- 노후준비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년기 진입 이전(65세 미만)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노후준비 시작연령도 50세보다는 낮은 연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변경안) 중·고령자(45세~65세 미만) 노후준비율
- 노후준비가 재무적 노후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명확화 필요

⑦ 노인일자리 창출 수(핵심과제: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충은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답보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유급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과의 구분을 위해 참여자 선정기준이나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⑧ 공적소득보장률(핵심과제: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공적소득보장률에 공적연금 수급자를 포함하고 있음. 즉, 빈곤 혹은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비빈곤 노인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중영역 지표와 성과지표와의 괴리가 발견됨

⑨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핵심과제: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치매조기 검진 참여자 수는 다소 지엽적인 지표로 판단됨. 치매조기검진 참여자 수는 관리체계 지표라기보다는 예방과 조기발견의 의미가 큼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보다 치매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아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노인 수, 치매고위험군 대비 치매상담센터 등록노인 등으로 변경 필요

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핵심과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성과지표명을 ‘수혜율’보다는 ‘인정률’로 변경 필요
 - 산출식이 전체 노인 대비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정자(=인정자)이므로 수혜율이 아닌 인정률이 타당함. 실제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이용하지 않는 노인도 상당수 있음
 -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방식이므로 운영되므로 수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정률이나 이용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⑪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참여율(핵심과제: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은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신체적 혹은 인지적 기능 상태에 있음
 - 모집단을 60세 이상 인구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혹은 장기요양등급 3급 이상자를 제외하여 계산할 필요 있음

⑫ 노인자원봉사 등록자 수(핵심과제: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등록자수로 한정하기 보다는 타 부처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자도 포함하여 지표를 생산할 필요 있음
- 보다 적극적인 지표로 ‘등록자 수’보다는 ‘참여율(참여자 수, 활동건수 등)’ 또는 ‘명수’보다는 전체 노인 대비 등록자 수나 참여자 수 등 ‘비율’ 지표로 변경 검토

⑬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핵심과제: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고령자 문화여가 향유기반 지표로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고령자’는 ‘노인’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핵심과제와 성과지표 간 용어 통일 필요

⑭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비율(핵심과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공급 비율보다는 노인인구 대비 임대주택공급률, 노인인구 대비 임대주택 이용자 비율 등으로 평가 필요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에 대한 성과지표는 고령자의 건강이나 생활패턴에 맞는 주거환경으로 변화하는 지표로 변경 필요
 - 해당 지표인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라기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라는 한계가 있음

15 노인교통사망률(핵심과제: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에 대한 지표로 노인교통사망률을 활용하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교통사망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는 교통사고율 등을 고려 가능

16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핵심과제: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로 산출하기 보다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수혜자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혜자 증가율이 새롭게 진입하는 노인인구 증가율이나 후기노인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핵심과제의 대상층이 독거노인 혹은 노인부부가구인 점을 반영할 때, 전체 노인 1인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 대비 서비스 이용률을 측정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17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핵심과제: 학대노인 보호강화)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기관수 증가는 의미가 있는 지표일 수 있으나 다소 지엽적인 지표임
- 학대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한다면, 학대노인쉼터 개소 수, 학대노인 대비 쉼터 보호 노인 수 등을 활용 가능
-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 대비 상담 건수, 학대 조치 건수, 학대노인대비 서비스 제공률, 담당직원 1인당 학대노인 수 등으로 변경 가능

다. 성장동력 분야

1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핵심과제: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 수(핵심과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새일센터가 유일한 현실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현실성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성의 직업능력개발보다는 취업지원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새일센터의 주 대상계층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3 체류외국인 중 체류외국인 중 외국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핵심과제: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의 성과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이삼식 외, 2014, p.388)
 - E7에는 비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적동포 중 F4나 F5비자로의 전환은 동포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F4나 F5비자 소지자가 모두 전문인력이라 할 수 없음
 - 전문인력 규모와 전문인력 중 정주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만으로 외국 고급인력 유치 및 외국 인력의 활용 정도를 제시하기 어려움

④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수혜비율(핵심과제: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재학생 중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율은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평가함에 있어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용률로 평가하는 것은 지엽적인 지표임
 -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⑤ 평생학습참여율(핵심과제: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참여율은 평생교육을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지만,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반영하는 지표로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평생학습 제공기관 개소 수, 기관 증가율 등이 과제명에 부합하는 지표임
-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상 계층을 25~64세 인구로 제한하였지만,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노인근로인구를 감안한다면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⑥ 산업재해율(핵심과제: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방지라는 중영역 하에서 본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면 산업재해율이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강화, 건강중심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지표 변경도 고려 가능
 -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문화에 취약한 사업장은 주로 영세사업장이므로 영세사업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강화를 위한 지표 마련도 필요함

⑦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핵심과제: 금융분야 제도개선)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금융분야 제도개선 지표로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⑧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핵심과제: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현실적으로 제시 가능한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는 있음(이삼식 외, 2014, p.390)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한다면 각년도의 국가 채무비중보다는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채무비중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
 - 국가채무 외에 지방정부, 공기업 채무를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
 - 국가채무 비중 이외에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고려 필요

⑨ 우수제품 지정품목 개수(핵심과제: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및 표시제도 확대의 성과지표로는 적절함

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핵심과제: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지원센터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개수로 국내수요기반을 확충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으로 고령친화제품의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은 낮음
- 기존의 지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다음의 지표를 참고할 수 있음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방문객 수, 제품 구매 등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
 - 지원센터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원센터 개소 수 확충 관련 지표
 - 국내 수요를 제고하기 위한 예비노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등에 대한 지표 개발

3. 성과평가 개선사항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의 추진실적은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집행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당해연도 12월이 아닌 다음 연도 6월이므로 추진 실적이 취합되고 평가되는 시점은 사업수행 다음 해의 하반기가 됨.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추진실적이 보고되어 심의되는 시기는 사업이 수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사업수행시점과 평가시점, 그리고 심의시점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남
 - － 예를 들어 2014년도 수행된 사업은 2015년도에 평가되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2016년 상반기에 보고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성과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관계 부처에서도 사업수행 담당자와 평가서류 제출하는 담당자가 일치하지 않아 평가과정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시점과 평가 시점의 격차를 줄이고, 평가결과가 다음 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별로 당해연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실적은 당해연도 연말에 취합되어 다음 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설정에도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핵심지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심층평가가 필요함.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사업수행과정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목표달성상의 애로사항이나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업수행과정상의 자문이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각 사업수행과정상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각 부처 사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1.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성과평가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이와 함께 매년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실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를 동시에 평가함
- 그러나 2009년부터 각종 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행정자치부(前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음(이삼식 외, 2014, p.398)
- 2015년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평가분야는 총 9개 분야로 일반행정, 복지·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1개 지표, 238개 세부지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은 ‘2.복지사회 분야’의 ‘2-1.지역복지기반 확충’ 시책의 세 개(지역복지기반 확충,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법질서 확립)의 세부 시책 중의 하나임
- 총 91개 지표 중 하나이며, 저출산·고령화 추진의 세부 지표는 1개(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로 구성됨
-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추진’ 지표의 평가방식은 시도별로 우수사업을 추천받아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에서는 시도별로(시군구 포함)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2건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정성평가를 실시함
- 2015년과 2016년 평가지표 변화는 없으며, 2014년도에는 저출산 영역이나 고령사회 영역 관계없이 우수사례 2건을 제출하여 심사받았으나, 2015년 실적 평가에서는 저출산 우수사례 1건 및 고령화 우수사례 1건을 각각 제출하도록 변경됨

<표 7-1> 20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복지·사회」 분야 평가지표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가중치
합계		20	100%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6)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3	14.7
	2-1-2 자활사업 활성화	2	9.8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1	7.6
	㉞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8)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4	21.4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	5.8
	2-2-3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㉞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처리기한 준수	2	14.4
	㉞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2-3 법질서 확립 (6)	2-2-4 요보호아동 보호	1	4.1
	2-3-1 과태료 징수 실적	2	8.9
	2-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실적	2	6.7
	2-3-3 섹테드 운영 실적	2	6.6

참고: 2016년 ‘2-3-1. 노인·장애인서비스’ 세부지표: ㉞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㉞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자료: 안전행정부(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p.41

- 평가 기준은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자체사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의 적합성과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고려함
-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 및 전파가능성의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평가하게 됨

<표 7-2> 저출산·고령화 정책 세부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통기준 (100%)	독창성(3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30%)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출생 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 (2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 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가능성 (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자료: 안전행정부(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p.49

-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지표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과제로 4개 분야, 5개 평가지표, 12개 세부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복지·사회분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추진,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요보호아동 보호 등 3개 세부지표
 - 문화·여성 분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보호서비스, 양성평등 추진 실적 등 4개 세부지표
 - 보건·위생 분야의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정신보건 관리, 예방접종 실적률 등 3개 세부 지표
 - 중점과제 분야로 여성취업지원의 1개 세부지표가 포함됨

<표 7-3> 저출산·고령화 관련 '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과제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지표수
4개 분야	5개 평가지표	27
복지·사회	<복지서비스>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추진	1
	2-2-3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2
	2-2-4 요보호아동 보호	1
문화·여성	<여성·가정복지>	
	6-3-1 일과 가정의 양립	3
	6-3-2 여성권익증진	2
	6-3-3 청소년 보호서비스	3
보건·위생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4
	<건강증진>	
	3-2-1 건강증진사업 운영실적	3
	3-2-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1
중점과제	3-2-3 정신보건 관리	3
	<감염병 관리>	
	3-3-2 예방접종 실적률	2
	<일자리창출>	
	9-2-2 여성취업 지원	2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p.80

□ 자치단체 합동평가 영역 중 ‘일과 가정의 양립’과 ‘청소년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및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의 일부 과제와 유사하며, 청소년 지원 지표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의 세부 과제와 유사함

<표 7-4> 2015년('14년 실적) 및 2016년('15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 「문화·여성」 분야 평가지표

평가지표 (2015)	2015년('14년 실적) 평가지표	평가지표 (2016)	2016년('15년 실적) 평가지표
「문화·여성」 분야 6-3 여성·가정 시책강화	6-3-1 일과 가정의 양립 ㉔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㉕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㉖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비율	「문화·가족」 분야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12)	6-3-1 일과 가정의 양립 ㉔ 육아휴직 인력대체 실적률 ㉕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율 및 예산 집행률 ㉖ 지자체의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정성) ㉗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㉘ 산단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자체 노력도(정성평가)
	6-3-2 여성 권익증진		6-3-2 청소년 지원 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㉕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㉖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㉗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정성평가)
	6-3-3 청소년 보호서비스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자료: 안전행정부(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행정자치부(2015).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2014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사회 자체사업은 총 2,920여개가 실시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예산은 4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전라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저출산정책에 대한 예산과 사업 개수가 고령사회정책이나 성장동력정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화정책 예산 총액을 비교하면, 광주광역시가 18,63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63,100백만원, 대전광역시 101,170백만원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2,320백만원, 경상남도 89,908백만원으로 타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7-5> 광역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화정책 자체사업 현황(2014년)

(단위: 개수, 백만원)

구분	예산				과제 수			
	합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합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서울특별시	257,402	171,303	86,059	40	59	29	28	2
부산광역시	161,206	145,007	12,296	3,903	415	286	83	46
대구광역시	171,670	99,662	70,147	1,861	143	81	43	19
인천광역시	281,343	249,334	29,782	2,227	122	80	32	10
광주광역시	18,635	14,722	2,777	1,136	88	53	31	4
대전광역시	101,170	47,583	45,823	7,764	148	81	50	17
울산광역시	158,725	135,698	18,901	4,126	139	90	31	18
세종특별자치시	63,100	57,900	5,000	200	97	59	28	10
경기도	1,391,064	1,142,448	236,816	11,800	76	40	17	19
강원도	72,320	42,296	27,311	2,712	213	113	76	24
충청북도	232,364	179,615	49,987	2,762	269	150	78	41
충청남도	303,230	233,328	48,153	21,749	331	193	106	32
전라북도	164,754	45,512	97,812	21,430	200	91	101	8
전라남도	235,520	211,764	14,372	9,384	219	141	42	36
경상북도	369,087	327,688	36,141	5,258	86	44	25	17
경상남도	89,908	61,776	25,869	2,263	257	157	66	34
제주특별자치시	125,812	67,778	16,541	41,493	58	40	9	9
합계	4,197,310	3,233,414	823,787	140,108	2,920	1,728	846	346

자료: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2014년도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저출산·고령화 정책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저출산 정책에서는 출산장려 홍보 및 인식개선, 어린이집이나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같은 인프라 지원, 출산육아지원서비스, 각종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제출됨

- 고령정책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은 일부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노인의 문화여가지원, 혹은 예비노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분가능함
- 광역시 혹은 도 단위의 사업과 일부 중소도시나 군, 구 단위의 자체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혹은 우수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업도 발견됨. 해당 우수사업을 통해 저출산이나 고령사회 극복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표 7-6> 2014년도 시도별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현황

시도구분	사업명1	사업명2
서울특별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	중장년층 희망 붐 업! 50+ 인생이모작 시작(인생이모작센터 추가 개소, 시니어포털 50+ 오픈, 베이비부머 일자리엑스포 및 은퇴설계 토크 콘서트, 서울시)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아빠 함께해요 파더링!” (창작 뮤지컬,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파더링캠프/부산시)	부산실버영상제 개최(부산 강서구)
대구광역시	아이 & 맘 편한 출산친화도시(일가정양립지원센터, 보육고충상담센터, 출산친화기업 우대/대구시)	기억학교(치매노인인지재활/대구시)
인천광역시	논스톱 무료분만 및 모자동실 운영을 통한 출산장려 (인천시)	1社 1敬老堂 자매결연을 통한 CSR 구현(인천시)
광주광역시	시민공감형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기업체 업무협약, 시네마 데이, 행복만남/광주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광주 동구)
대전광역시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홍보, 태교음악회, 다둥이-송 제작/대전시)	상황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노인복지(대전 서구)
울산광역시	마음놓고 아이 낳아 보육하는 울산프로젝트(홍보, 출산비용 확대, 다자녀우대/울산시)	행복한 황혼 ‘어르신 기억 지킴이; 프로젝트(치매지원센터, 선별검사, 관리등록, 예방/울산 북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육아의 달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남성 육아 서포터즈 양성 및 활동)	전국 최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세종형 실버타운’운영(밀마루복지마을)
경기도	출산인식제도 및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출산률 go! go! (장난감도서관, 돌봄품앗이, 인식개선/경기도, 시흥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경기도)
강원도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을 위한 ‘임산예지’ 서비스 (산모모탈서비스/원주시)	민간주도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강원도)
충청북도	가정방문 맞춤형 보육바우처 특수시책(청주시)	노인일자리 구축을 위한 9988 행복지킴이(충북도)
충청남도	함께 키우고, 함께 나누는 명품육아(청소년 육아체험, 공동육아나눔터, 남성육아/서산시)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홍성군)
전라북도	남원시의 사랑도시 출산육아 친화도시 만들기(교통약자편의증진, 출산가정 방문간호서비스/남원시)	‘천년누리’한옥체험민박(고령자친화기업) 및 전주 뽕카데 운영(전주시)
전라남도	맞춤형 출산장려정책(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행복카드제, 분만취약지역 산모 U-119 안심콜 등 록제, 홍보/전라남도)	9988 쉽터 운영으로 고령화 문제 및 고독사 예방(순천시)
경상북도	아이맘 앱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센터 운영(영덕군)	할매~ 할매~ 우리 왔어! 전국 최초 할매 할매의 날(경상북도)
경상남도	육아원스톱서비스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운영(진주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사천시)
제주특별자치시	소중한 임신,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출산육아용품 대여센터, 한의학적 치료법 시행, 출산양육수당 확대/제주도)	활기찬 노후 최고의 선물! 건강&안전 도우미(틀니, 보청기 지원, 치매노인 위치추적단말기 보급/제주도)

-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합동평가의 극히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연도별 정책수행의 모니터링과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 저출산·고령화 정책 지표와 관련하여 지자체 예산 수준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사업의 성과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보다는 저출산 혹은 고령화 극복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와 같은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대체할 필요성을 제기함(안혁근 외, 2015)
- 본 절에서는 현행 합동평가를 통한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자치단체 성과평가 관련 학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전문가적 그리고 실무적 입장에서 기존 성과평가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함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노력을 촉진하고,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개선방안

가. 현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 우수사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전파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즉, 각 평가기준에 제시된 평가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세부 평가내용 중 어느 세부항목에 보다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침 부족
- 우수사례 제출 양식의 비통일성 및 평가항목과 보고서 내용간의 연관성 부족
 - 우수사례 보고서 제출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시도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함
 - － 보고서 목차가 ‘추진배경-주요내용-추진성과’, ‘추진배경-추진과정-추진성과-향후 발전 계획’, ‘사업개요-추진내용-추진성과’ 등 시도마다 각기 다른 양식으로 제출
 - 시도별 우수사례 보고서마다 각 평가항목(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전파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지역의 저출산 혹은 고령화 극복에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내용도 거의 부재하

며, 주로 해당 사업의 실적만 제시

- ‘지자체 노력도’로 평가내용인 시책개발 노력, 자치단체 역량 투입정도, 기관장 관심도 및 민관 협력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매우 드문 실정임

□ 일부 평가항목간의 상충성

- 평가 항목은 총 네 개의 지표(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전파가능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독창성과 활용·전파가능성간의 개념적 충돌이 발생함
- 독창성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독특한 사업을 의미하며, 전파가능성은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의미함
 -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어려울 수도 있음
 - 현재 항목별 배점이 독창성 30%, 활용·전파가능성 20%이므로 전파가능성보다는 독창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광범위성

- 저출산·고령사회라는 광범위한 영역 내에서 특정 우수사례를 제출하기에 선택적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에서 몇 가지 중점영역(예: 산모지원)이나 특정 대상계층(예: 치매노인, 유아)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내 정책 범위와 지자체 정책간의 불일치성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의 범위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영역이나 고령친화적인 주거나 교통·환경 영역 등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는 거리가 먼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함
 - 예를 들면 출산율 제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방지 관련 사업은 저출산정책으로 인식하지 않음
-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큰 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연결고리로 다양한 사업을 종합화하여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출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렵다는 의견임

□ 매년 신규사업 제출에 대한 압박과 피로감 누적

- 저출산·고령화 지자체 사업 개발시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신규 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기초연금 예산부담으로 신규사업 발굴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다는 중앙부처의 지침 및 환경에서는 신규사업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기존의 우수사업을 얼마나 확대하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 저출산 영역과 고령사회 영역을 묶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영역별 평가 점수를 알 수 없음
- 이와 함께 각 사업이 어떠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어떠한 점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해당사업의 추진이나 차기년도 합동평가 준비 등에 참고할만한 사항이 없음

나. 개선방안

1)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

□ 평가항목의 개선

- 지역적합성 관련 지표 보완
 - 지자체 합동평가에 제출되는 우수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변화와 가족구성,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고려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독창성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적합성, 지역특성 반영도, 욕구반영도 등의 항목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독창성과 활용·전파가능성의 배점 비중 약화
 - 독창성은 우수사례 평가에 적합한 평가항목이나 자칫 매년 독특한 신규사업 개발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야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전파가능성은 타 지역에도 적용가능한 사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으로 지역적합성(특화성)을 저해하는 평가기준임
- 우수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기반 구축 등 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 필요
- 매년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효과적이고 우수한 사업의 지속수행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기존에 제출한 사업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우수사례로 제출가능하다는 지침 마련

□ 우수사례 보고 양식의 개선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우수사례 보고 양식을 통일하되, 각 평가항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 추진 배경에 지역의 인구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제시하여 해당 사업의 그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를(지역적합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명시하거나, 추진성과 부분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나 지역사회 변화 등(효과성)을 제시하도록 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균형있는 평가체계 마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평가체계 필요
- (정량평가의 필요성) 정성평가의 모호성으로 인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량지표의 필요성도 제기됨
 - 전체 예산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비중, 해당사업 수요층 규모 대비 이용(수혜) 규모 등
- (정성평가의 필요성) 모든 지자체에 적합 정량지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 혹은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평가는 현재의 정성평가가 바람직하는 의견도 제기됨
 - 지자체 사업이 출산력이나 고령사회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자체 사업과 국가사업의 방향성은 일치하나, 특히 출산력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선도하여 정책 수행 필요
 - 정량지표로만 평가할 경우, 제시된 지표에만 집중하게 되고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나 고려가능한 영역은 지자체 관심사업에서 제외되는 역효과 발생 가능
- 현재의 정성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평가 방식을 도입 필요

2) 지자체 합동평가 차원의 개선방안

□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하나의 ‘대지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세부지표로 재구조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중점 혹은 핵심 사업을 세부평가지표로 배치하여 평가에 반영
- (한계)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지자체별 담당 부서가 있어 부서별 평가를 준비하고 평가를 받는 시스템임. 기본계획의 여러 분야의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 평가분야로 통합되게 되면, 현재의 시·도 조직구조 안에서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방안임
- (방안) 지자체에 ‘저출산·고령사회과’ 등과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과적 및 효율적 정책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저출산·고령화정책 평가에서도 원활하게 대응 가능

3) 지자체 평가 및 정책수행 지원방안

□ 저출산·고령화정책 영역 및 평가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범위와 역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지자체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정책 대비 일부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면 보완 필요(저출산 청년 취업 등, 고령자 교통, 안전 등)
 - 이와 함께 중앙 차원에서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점 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지자체가 정책실행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 노인사업이나 저출산 사업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지자체별 대동소이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저출산·고령화정책 영역의 광범위성이나 모호성과도 연관이 되며, 저출산·고령사회의 핵심과제 중심으로 지자체 사업도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평가와 컨설팅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자체 평가대상 우수사례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제공 필요
 - 현재 지자체에서 설립한 연구원이나 재단의 경우, 저출산 정책이나 인구정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중앙차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문이나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음
 - 평가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여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구축
-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전반에 걸친 컨설팅 실시
 - 지자체의 독자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의 한계, 그리고 집행과 평가단계에서의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 등으로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의 정책수립을 개발 및 지원, 지역 내 주민 욕구나 통계 분석,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

<표 7-7>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개선

문제진단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일부 평가항목간의 상충성 - 매년 신규사업 제출에 대한 압박과 피로감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반영도, 욕구반영도 등의 평가 항목 추가 - 독창성과 활용·전파가능성 항목 배점 약화 - 평가대상 사업에 계속(기존)사업 허용 지침 마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결합한 평가방식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평가 내 타 평가지표와의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하나의 '대지표'로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제출 양식의 비통일성 - 평가항목과 보고서 내용간의 연관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보고 양식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광범위성 - 기본계획 내 정책 범위와 지자체 정책간의 불일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정책 범위 및 평가와 관련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컨설팅단(자문단)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2012). 노인고용현황실태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건강검진통계연보.
- 국민연금연구원(각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기획재정부(2014).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
- 대한민국정부(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p.80
- 대한민국정부(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4).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안전행정부(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안혁근, 박중훈, 이광희, 황혜신, 조세현, 이광훈(2015). 20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통계.
- _____(각년도). 사회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 행정자치부(2015).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OECD Health Care Resources
- OECD(2013a).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 _____(2013b). *OECD Thematic follow-up review of policies to improve labour market prospects older workers: Korea*.
- _____(2014a). *"OECD Health Data: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 _____(2014b).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_____(2014c).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4 Issue 2.
- <인터넷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 e-나라지표 (<http://index.go.kr>): 산업재해현황, 아동 안전사고 현황
- OECD.stat (<http://stats.oecd.org>)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http://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
- OECD Pensions at a Glance (<http://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ortality Database (<http://who.int/gho/en/>)

부록 1.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결혼정책 관련>

2015. 08.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결혼 정책 관련 (Type-A) -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면접원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결혼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S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시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세종 0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SQ1의 1, 5, 6은 '1. 동'에 자동으로 표시) 귀하께서는 살고 계신 주소지는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4.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만20~39세가 아닐 경우 설문 중단)
1. 19세이하 → 설문 중단
2. 20~24세
3. 25~29세
4. 30~34세
5. 35~39세
6. 40세이상 → 설문 중단

SQ5.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か? 아니면 미혼이십니까?
1. 결혼했다(이혼, 별거, 사별, 사실혼 포함) → 설문 중단 2. 미혼이다

결혼 여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최근 3년간의 본인이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2. 최근 3년간, 귀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국민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할 때 주택마련을 제외한 혼수, 결혼식 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생활이나 결혼준비 등에 관한 교육이나 정보를 얻기가 쉽고 편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5.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으로 인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6. 최근 3년간, 귀하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면 결혼하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7. 최근 3년간, 귀하는 직장내와 결혼생활을 병행하기가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8. 최근 3년간, 귀하는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9. 최근 3년간, 귀하는 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0. 최근 3년간, 귀하는 가사나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1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소득, 고용 불안정 때문에 ☐② 결혼 비용 부담 때문에 ☐③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④ 학업이나 일과 결혼생활을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⑥ 기타()

12.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의 사회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13.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②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4. 최근 3년간, 귀하는 결혼할 의향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5. 최근 3년간, 귀하는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②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고 있음(정규직 전일제) ☐② 일하고 있음(비정규직 전일제) ☐③ 일하고 있음(시간제)
☐④ 일하고 있지 않음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3. 귀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결혼정책 설문지(Type-A)에서는 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묻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근로, 금융, 사적, 공적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합니다.)

- ☐① 소득 없음 ☐② 1~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599만원 ☐⑧ 6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출산정책 관련>

2015. 08.	2015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저출산 정책 관련 (Type-B)-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면접원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저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S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시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세종 0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SQ1의 1, 5, 6은 '1. 동'에 자동으로 표시) 귀하께서는 살고 계신 주소지는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4.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만20~54세가 아닐 경우 설문 중단)

1. 19세이하 → 설문 중단
 2. 20~24세 3. 25~29세 4. 30~34세 5. 35~39세
 6. 40~44세 7. 45~49세 8. 50~54세 9. 55세이상 → 설문 중단

SQ5.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か? 아니면 미혼이십니까?

1. 결혼했다(이혼, 별거, 사별, 사실혼 포함) 2. 미혼이다 → 설문 중단

※ 최근 3년간의 본인이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년간, 귀하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결혼문화 등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1-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결혼생활, 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얻기가 쉽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결혼할 때 주택마련을 제외한 혼수, 결혼식 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3년간, 귀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2-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산후조리나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이 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임신·출산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의 배려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최근 3년간, 귀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필요 시 자녀를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 혹은 민간베이비시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방과 후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3년간, 귀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한 스포츠, 문화 활동 여건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아동이나 청소년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3년간, 귀하는 직장일과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을 병행하기가 보다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5-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직장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최근 3년간, 귀하는 남성들이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7. 최근 3년간, 귀하는 기혼자들이 희망하는 자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_____년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2.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① 미취학 자녀 : _____명

☐② 초·중·고등학생 자녀 : _____명

☐③ 고등학교 졸업 이상 : _____명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4.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일하고 있음(정규직 전일제) ☐② 일하고 있음(비정규직 전일제) ☐③ 일하고 있음(시간제)

☐④ 일하고 있지 않음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5.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저출산정책(Type-B)에서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묻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수입(근로, 사업, 금융, 사적, 공적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며,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합니다.)

☐① 소득 없음

☐② 1~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599만원

☐⑧ 6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령사회정책 관련>

2015. 08.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고령사회 정책 관련 (Type-C)-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면접원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S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시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세종 0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SQ1의 1, 5, 6은 '1. 동'에 자동으로 표시) 귀하께서는 살고 계신 주소지는 동입니까? 아니면 읍·면입니까?

1. 동 2. 읍·면

SQ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4.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만55~74세가 아닐 경우 설문 중단)

1. 54세이하 → 설문 중단 2. 55~59세 3. 60~64세
 4. 65~69세 5. 70~74세 6. 75세이상 → 설문 중단

SQ5. 실례지만 현재 배우자 분이 계십니까?

1. 있다(사실혼, 비동거 포함) 2. 없다(이혼, 사별, 이혼 전제한 별거 등 포함)

※ 최근 3년간 본인이나 가족 및 주위의 인식이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가입하거나 저축을 늘리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1-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후소득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3년간, 종교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2-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인일자리와 같은 중고령자를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고령자 일자리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최근 3년간, 귀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 의료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3년간, 귀하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자원봉사, 학습활동 등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중고령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중고령자들이 여가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고령자들이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3년간,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5-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노인들이 낙상이나 넘어짐 등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노인들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는 앞으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단독가구(1인가구) ☐② 부부가구
☐③ 자녀동거가구 ☐④ 기타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고 있음(전일제) ☐② 일하고 있음(시간제) ☐③ 일하고 있지 않음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DQ4.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고령사회정책(Type-C)에서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묻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수입(근로, 사업, 금융, 사적, 공적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며,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합니다)

- ☐① 소득 없음 ☐② 1~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599만원 ☐⑧ 600만원 이상 ☐⑨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2014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 조사표
<저출산 부문>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저출산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문의 : 기재량 연구원 ☎ 044-287-8199

저출산정책의 인지도, 성과, 부진이유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2015년 10월 8일(목)까지 회신 요청드립니다.

회신처(E-mail) : jaeryang@kihasa.re.kr (기재량 연구원)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계좌번호(은행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연구원은 계좌이체를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이체를 위하여 수집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저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illegible]

<고령사회 부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고령사회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사회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문의 : 기재량 연구원 ☎ 044-287-8199)

고령사회정책의 인지도, 성과, 부진이유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2015년 10월 8일(목)까지** 회신 요청드립니다.

회신처(E-mail) : jaeryang@kihasa.re.kr (기재량 연구원)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계좌번호(은행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연구원은 계좌이체를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이체를 위하여 수집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고령사회와 관련한 정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경도와 정책성숙도에 대한 의견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illegible]

<성장동력 부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성장동력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장동력 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문의 : 기재량 연구원 ☎ 044-287-819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인지도, 성과, 부진이유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2015년 10월 8일(목)까지** 회신 요청드립니다.

회신처(E-mail) : jaeryang@kihasa.re.kr (기재량 연구원)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계좌번호(은행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연구원은 계좌이체를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이체를 위하여 수집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